ISSN 1225-6633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대한지리학회지

Volume 54, Number 2 (Series No. 191), April 2019

Articles

The Historical Landscape Change of Jeju Mid-mountain Area and Human Activities, and Implications of Oreums for the Environmental History of Jeju Island ..... Jungjae Park · Jongheon Jin (153)

Analysis of Local Variables' Influence on the Conversion Rate to the Monthly Rent of Key Money Deposit of Apartments in Seoul ..... Hyemi Kim · Jinhong Park · Jinmu Choi (165)

Politics of Affects in Shipbuilding Industry Cities - Focusing on Affective Urbanism - ..... Jinsook Shin (177)

'Security-Economy Nexus' and Geo-political Economies of Territorization and De-territorializatin in the Border Regions of the Korean Peninsula ..... Bae-Gyoon Park · Yilsoon Paek (199)

The Semantic Encounter between Representationess and Non-representationess of Landscape: Cultural Geography of *Ahn'gŏ'ri-Bak'gŏ'ri* Folk Housing Landscape of Jeju Island ..... Wonseob Song (22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ntents Framework for Elementary Geography Education Applying The Five Big Ideas of Geography Education ..... Eui-Sun, Jang (251)

Estimating Housing Prices through a Spatial GAMLSS Modeling Approach ..... Changro Lee · Keyho Park (271)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사 단 법 인 대 한 지 리 학 회

대한지리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Vol. 54, No. 2 April 2019 대한지리학회

ISSN 1225-6633

대 한 지 리 학 회 지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제54권 제2호 (통권 191호) 2019. 4

논 문

제주 중산간 지역의 과거 경관 변화와 인간 그리고 오름의 환경사적 의미 ..... 박정재 · 진종헌 (153)

서울시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지역변수 영향력 분석 ..... 김혜미 · 박진홍 · 최진무 (165)

조선산업을 통해 본 산업도시의 정동 정치 – 정동적 도시론을 중심으로 – ..... 신진숙 (177)

한반도 접경지역에서 나타나는 '안보
–경제 연계'와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지정–지경학 ..... 박배균 · 백일순 (199)

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의 의미론적 조우(遭遇):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 사례를 중심으로 ..... 송원섭 (229)

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를 적용한 초등 사회과 지리 영역의 내용 체계 개발 ..... 장의선 (251)

공간 GAMLSS 모형을 활용한 주택가격 추정 ..... 이창로 · 박기호 (271)

사단법인 대 한 지 리 학 회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대한지리학회지 제54권 제2호 2019(153~163)

제주 중산간 지역의 과거 경관 변화와 인간 그리고 오름의 환경사적 의미

박정재* · 진종헌**

The Historical Landscape Change of Jeju Mid-mountain Area and Human Activities, and Implications of Oreums for the Environmental History of Jeju Island

Jungjae Park* · Jongheon Jin**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물영아리 습지 퇴적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과거 중산간 지대와 오름의 경관 변화 과정을 밝혔다. 인간의 농경이나 목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제주도의 중산간지역은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대부분 산림지대였다. 당시에는 일부 오름에만 초지가 산재하여 분포하고 있었다. 이후 제주도로 들어온 본토의 농경민들은 척박한 토양 탓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작물농경에서 초지 오름을 이용한 목축으로 관심을 돌리게 된다. 이는 제주도에서 원점령기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집약적인 우마 사육이 이루어진 과정의 시작이었다. 화분과 세립탄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오름 주변의 중산간지역에 목축을 위한 초지 확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탐라국이 고려의 군현 체제로 편입된 AD 1100년경부터이다. 13세기 말에 이르면 원나라가 제주도의 초지 위에 탐라목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미 현재와 유사한 크기 및 형태를 갖춘 광활한 초지가 조성된다. 중산간의 이러한 인위적 경관은 고려 및 조선시대에 걸친 지속적인 목축 활동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대부분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제주도에서 독특한 목축문화가 전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오름이 있었다. 현재 제주도의 거주민들과 방문자들이 오름을 제주도의 대표경관으로 인식하듯이, 과거 원주민들에게도 오름은 그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던 주요 지형이었다.

주요어 : 제주도, 중산간, 오름, 과거 경관 변화, 목축, 화분, 세립탄편

Abstract : Based on paleolimnological records from Mulyeongari swamp, Jeju Island, we reconstructed the history of landscape change in Jeju mid-mountain area. Before agriculture, the mid-mountain area of Jeju Island was mostly forested land, unlike the present situation. At that time, grasses were scattered only on some oreums (small volcanic cones in Jeju dialect). Because barren soils of Jeju did not allow immigrant farmers from the peninsula to produce enough food for household, they seem to have turned their attention to the livestock farming using oreum grasses. Since then, intensive horse raising continued through the period of Goryeo and Joseon Dynasties in Jeju Island. Our pollen and charcoal records indicate that the size of pastures began to increase rapidly ca. AD 1100 when the Goryeo Dynasty annexed the Tamra Kingdom. By the end of the 13th century, pastures of Tamra Ranch established by the Yuan Dynasty, were extensively expanded to have a similar size to the present grassland. These artificial landscapes of the mid-mountain area have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2A03068730).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국토문제연구소 겸무연구원(Professor, Deparmtent of Geography/ Adjunct Researecher, The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jungjaep@snu.ac.kr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Gongju National University), jhjin@kongju.ac.kr

remained largely unchanged until now due to continuous livestock activities during the Goryeo and Joseon Dynasties. Thus, it is likely that the presence of grassy oreums led to a unique herding culture in Jeju Island. As the current residents and visitors of Jeju Island perceive the oreum as the representative landscape of Jeju Island, to the past residents the oreum was a major landmark that had a great influence on their real life.

Key Words : Jeju Island, mid-mountain area, oreum, landscape change, livestock farming, pollen, charcoal

1. 서론

제주 중산간 지역은 면적의 절반 정도가 평평한 초원지대로 이루어져 있다(국토지리정보원, 2013). 제주의 온난습윤한 기후를 무색하게 하는 초지 경관이 매우 특징적이다. 이곳에 점점이 분포하고 있는 오름이나 곶자왈과 같은 독특한 지형 또한 중산간 지대의 이국적 풍취를 더한다. 넓게 분포하고 있는 초지는 오랜 기간 목축의 결과 인위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곶자왈에서 빽빽이 자라는 난대성 수목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은 해안지역과 한라산 산지를 나누는 중간 지대로, 대체로 해발고도 200–600m 사이에 위치한다. 투수성이 높은 지질 특성으로 영구 하천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반면 지하수는 풍부하게 분포한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지하수를 이용한 생수 개발이 활발하다.

중산간 지대에는 제주도를 상징하는 수많은 오름들이 분포한다. 긴 세월을 거치면서 오름들의 형태도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전체가 초지로 덮인 오름들도 있고 정상부에 습지나 화구호가 위치한 오름들도 있다. 내외부인을 막론하고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 오름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름과 중산간 지대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된 것인지 여전히 잘 모른다. 중산간 지대에 대한 환경사 연구가 미진한 점은 그래서 아쉬움을 준다.

중산간 지대의 초지가 언제부터 조성되었는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인된 바 없다. 원나라가 제주도를 점령하고 목장을 설치한 이후부터 이곳에서 본격적인 목축활동이 전개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우마 사육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김남영 등, 2018). 제주도는 독특하고 고유한 역사와 문화 탓에 학계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은 곳이다. 그럼에도 (역사문헌에서 찾기 어려운) 거시적인 측면의 인간 교란사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제주도에서 농경이나 목축이 언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시작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주변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본 글에서는 물영아리 오름에서 채취한 퇴적물 시료의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해 과거 중산간 지역의 환경 변화를 복원해 보고 이를 역사적 사실과 연결시켜 당시 상황을 유추하고자 한다.

2. 연구지역 및 연구방법

연구지역인 물영아리 오름이 위치한 제주도는 해양성 기후에 많은 영향을 받아 한반도 내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화하며 기온의 연교차가 적게 나타난다. 물영아리와 근거리에 있는 제주도 남부 서귀포시의 경우 지난 30년간 1월 평균 기온이 5.4℃, 8월 평균 기온이 26.3 ℃ 정도였다. 서귀포시의 연평균 강수량은 1967 mm로 국내 74개 관측지역 중 두 번째로 높다(기상청, 2018). 제주도의 동부 및 남부 지역은 특히 비가 많이 내리고 습한데, 이는 쿠로시오 난류의 지류인 쓰시마 난류와 관련이 깊다. 쓰시마 난류는 제주의 겨울 몬순을 약화시켜 내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화하고 습한 겨울을 가져온다. 반면, 제주도는 태풍과 같은 열대성 저기압의 이동 경로에 위치해 있어 하계에는 수해를 자주 겪는 편이다. 제주도 기후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중앙부에 높은 한라산이 위치해 있어 지형성 강우의 영향으로 고도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고도에 따른 기온의 강하와 강수량의 증가로 제주도의 식생은 고도별로 독특한 분포를 보인다. 이로 인해 절대적 면적에 비해 한라산의 식물다양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물영아리 오름이 위치한 동부 사면의 고도별 식생을 간단히 기술하면, 해안에서 해발고도 500m까지는 상록활엽림이, 500–1350m까지는 낙엽활엽림이, 1350–1500m까지는 낙엽활엽수와 침엽수의 혼합림이, 1500–1800m까지는 침엽림이, 1800–1950m까지는 고지대 관목림과 초원이 주된 경관을 형성한다. 그러나 저지대의 경우 계곡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랜 기간 밭농경이나 과수 재배 그리고 목축 등이 이루어져 자연적인 식생을 찾아보기 어렵다(차종환, 1969; 오구균 등, 2007).

제주도의 물영아리습지는 현재 람사습지로 선정된 보호지역으로 경사가 가파르고 접근하기 힘든 여건 탓에 관광지로 개발되기 전까지는 인간의 영향이 거의 없었던 곳이다. 인근 거주민들이 오름 주변에 방풍림 용으로 삼나무와 소나무를 심기 시작했던 190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사람으로 인한 교란이 나타난다. 따라서 과거 기후변화를 복원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으며 한반도에서는 찾기 어려운 후기 홀로세의 고기후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다. 본 연구진은 러시안 이탄 코어러를 이용하여 4m 길이의 퇴적물 코어를 물영아리(33°22′09″N, 126°41′36″E; 그림 1)에서 채취하였고, 이 퇴적물로부터 2cm 간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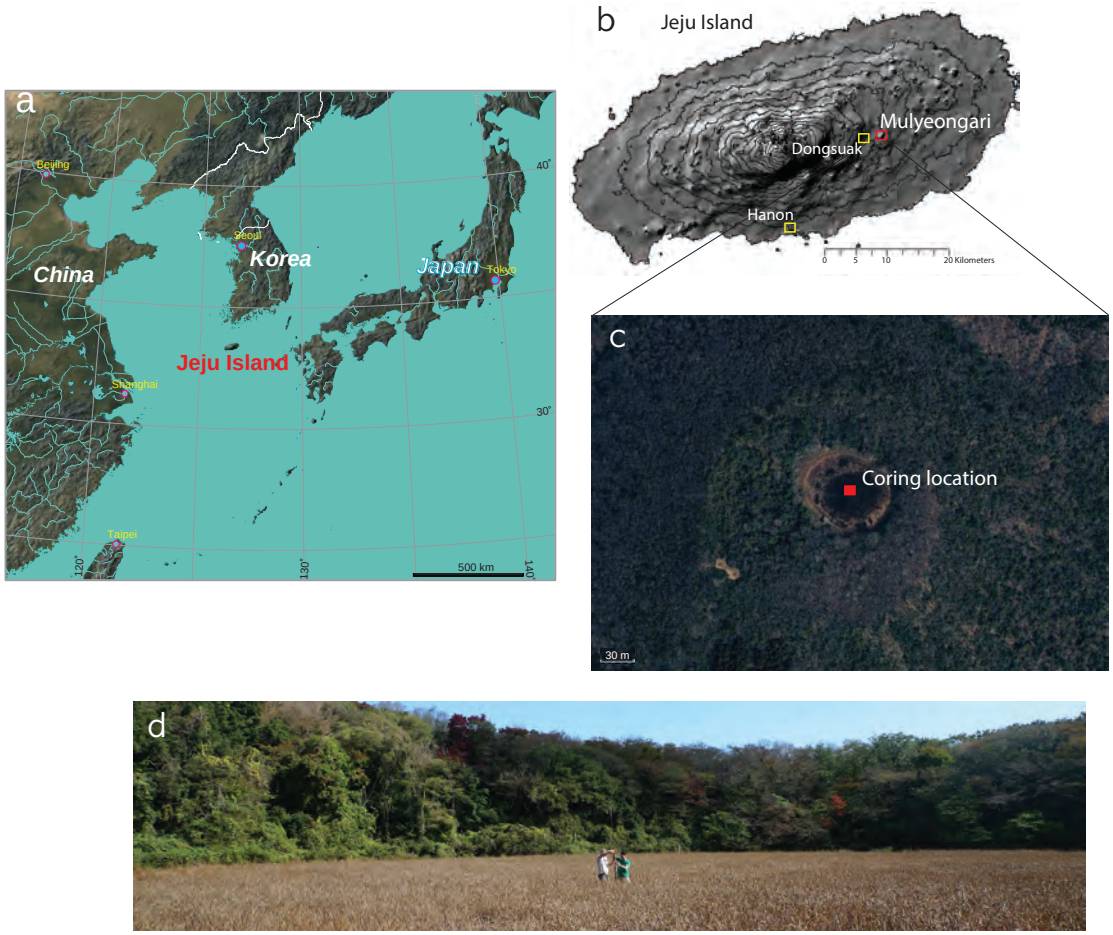


그림 1. a와 b: 연구지역 (제주도 물영아리, 동수악, 하논), c: 퇴적물 코어 채취 지점, d: 분화구 내에서 코어링하는 모습

의 화분 자료, 14개의 AMS 탄소 연대치, 여타 기본적인 지화학적 분석(입도, LOI, 대자율, 규조류, 탄소안정동위원소, TS, C/N) 자료들을 확보한 바 있다(Park *et al*., 2016, 2017).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고기후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환경 교란 역사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 퇴적물 코어의 상단부(10−120cm 깊이)에 세립탄편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대략 AD 900−AD 1930년 동안의 세립탄편 연간 유입량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포인트 카운팅 방법(point counting technique)으로 화분 슬라이드 속의 탄편을 분석하여 탄편 농도(mm^2/cm^3)를 산출한 후, 이에 퇴적율(cm/year)을 곱해서 탄편의 연간 유입량을 얻었다(Clark, 1982). 이 탄편 자료와 이전 연구에서 확보한 화분 자료를 토대로 동 시기 인간의 환경 교란사를 복원하였다.

연구결과를 논할 때 재차 언급하겠지만, 물영아리의 모든 프록시 자료는 대부분 기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자료를 통해 인간의 영향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쉽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새롭게 본 연구를 통해 확보된 세립탄편 자료 외에 (기존 자료 중에서는) 소나무 화분 자료만을 활용하였다. 소나무 화분은 양 측에 달려 있는 공기주머니 덕에 상대적으로 먼거리의 이동이 가능하여 대체로 넓은 지역의 환경변화를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Schwendemann *et al*., 2007). 크기가 작은 세립탄편 또한 바람 혹은 강물에 의해 화재 지점에서 상당히 멀리 위치한 곳까지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Whitlock and Larsen, 2001). 세립탄편과 소나무 화분이 갖는 장거리 비산의 특성 상, 이들 두 프록시 자료가 인간의 영향이 적었던 물영아리 오름의 국지적 식생 변화를 보여주기 보다는 제주도 전역에 걸친 인간의 환경 교란 양상을 보여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두 자료만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3. 연구결과 및 논의

1) 중산간과 오름의 원식생

인간의 농경과 목축 행위가 주변 환경을 변화시켰던 과정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원식생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화분 분석을 통해 시기별 식생이 복원되면 인간의 영향을 받기 전 원식생을 밝히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화분 분석 결과가 과거 식생을 100%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못한다. 식물별로 상이한 화분 생산량과 비산 거리 그리고 탁월풍의 영향과 종 수준의 동정이 어려운 점 등 화분 자료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분을 이용한 고생태학 연구의 오랜 역사에서 보듯이 대략적인 식생 변화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퇴적물 속의 화분은 꽤 신뢰할 만한 프록시(proxy)이다. 최근의 학계에서는 고해상 화분 자료로부터 식생 변화 뿐 아니라 과거 기후 변화의 추이와 메커니즘까지 함께 밝히려 하고 있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화분 자료를 활용하여 고환경을 정확하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자료에서 탐지되는 식생 변화가 과연 인간의 영향에 의한 것인지 기후 변화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화분 자료에만 의지하여 홀로세 후기 특정 지역의 식생변화를 일으킨 주된 동인을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한 퇴적물 시료로부터 화분을 포함한 멀티프록시(multiproxy)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제주도 중산간과 오름의 원식생을 파악하기 위해 하논과 물영아리 연구결과를 활용하고자 한다. 두 연구에서 저자들은 다양한 멀티프록시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화분 자료들을 보다 면밀하게 해석한 바 있다(Park *et al*., 2014a, 2014b; Park *et al*., 2016)

제주 서귀포 인근의 하논 화분 자료의 경우, 아쉽게도 농경활동으로 인해 퇴적물의 상단부가 교란되어 약 7000년 전(이하 BP) 이후의 정보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홀로세 초중기 식생 변화 정도만 파악이 가능하다. 수목 화분 위주로 자료를 살펴보면, 영거드라이

어스기가 끝나고 홀로세가 시작된 12,800BP경부터 8000BP경까지는 팽나무(Celtis)가 크게 우점하였으나 이후 난대성 수종들인 상록성 참나무(Cyclobalanopsis)와 구실잣밤나무(Castanopsis)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8000BP는 한반도가 위치한 위도 대에서 홀로세 기후 최적기(Holocene Climate Optimum)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Zhou *et al*., 2016). 우점 수목이 팽나무에서 상록성 참나무와 구실잣밤나무로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제주도 남부 지역 또한 당시 지속적인 온난습윤화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Park *et al*., 2014b). 이와 같이 홀로세 기후 최적기에 제주도 해안지역은 대부분 난대성 수종으로 덮여 있었다. 현재 제주도 저지대의 계곡에서만 일부 관찰되는 식생 모습과 유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중산간 지대의 과거 식생은 어떠했을까? 현재 제주도에서 중산간(해발고도 200–600m)으로 간주되는 지역의 절반 정도는 초지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를 농경 행위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본다(김상호 1979). 중산간의 과거 원식생은 최근에 보고된 물영아리 습지의 화분 자료로부터 일부 추정이 가능하다(Park *et al*., 2016). 이 자료의 홀로세 후기(2000BP 이후) 화분 군집들을 볼 때, 과거 중산간 지대는 대부분 참나무(Quercus), 서어나무(Carpinus), 느릅나무(Ulmus) 등으로 구성된 원시림으로 덮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영아리 자료는 하논 자료와 달리 홀로세 중후기의 식생변화와 기후변화를 지시한다. 물영아리 오름은 해발고도 380m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비고가 128m로 정상부의 고도는 508m 정도이다. 물영아리 화분 자료는 대략 4800BP–0BP 간 물영아리 분화구 내의 식생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그림 2). 그런데 제주도의 전반적인 기후 특성을 고려할 때, 4800BP–1900BP까지의 물영아리 분화구의 식생은 그야말로 매우 독특했다. 다시 말하면, 당시 기후에 적합하지 않은 식생들이 주로 서식하고 있었다. 참나무와 소나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토의 화분자료와는 달리 물영아리 화분 자료에서는 이 시기에 쑥속(Artemisia) 화분과 벼과(Paaceae) 화분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물영아리 오름에 초본류가 많이 서식했던 이유는 오름이 갖는 지형적, 토양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오름 사면은 수목들이 정착하기 어려운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오름은 사면의 경사가 매우 급하다. 또한 오름을 구성하고 있는 스코리아는 가벼워 잘 흘러내린다. 식생 유입이 어려우므로 유기물의 공급은 부족하고 지속적인 침식에 노출된다. 오름이 형성되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라도 수목이 정착하고 성장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다. 중산간의 원시림 사이 사이로 솟아 있는 수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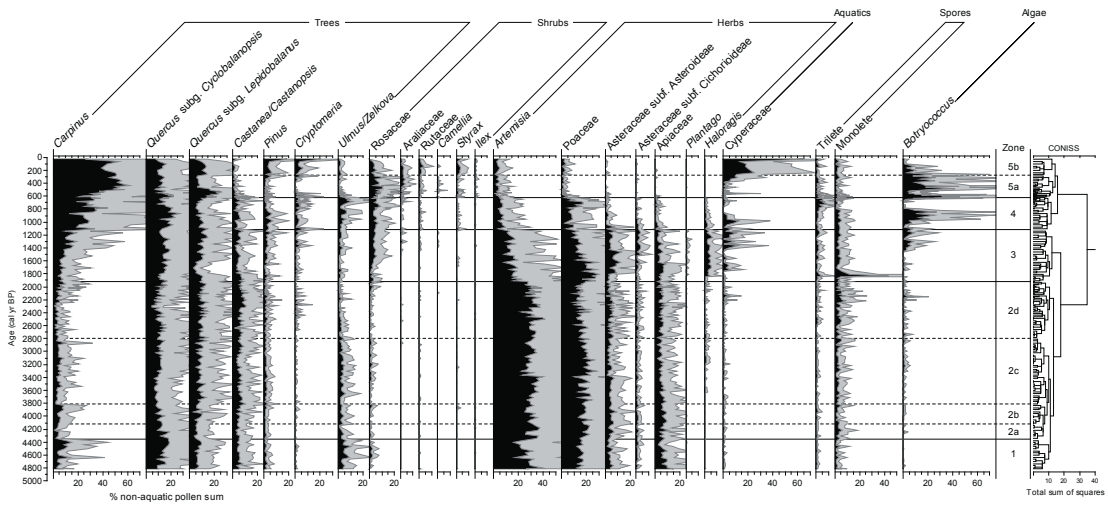


그림 2. 물영아리 습지 화분 분석 다이어그램 (Park *et al*., 2016)

은 초지 오름들은 보기에도 매우 독특했을 것이다.

물영아리로부터 멀지 않은 동수악의 화분 자료에서도 약 2000BP까지 초본류가 우점하는 모습이 잘 나타난다. 동수악 오름의 형성 시기는 퇴적물 연대측정 결과에 따르면 7000BP 정도이다(Lim and Fujiki, 2011). 이와 가까이 위치한 물영아리 또한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온난습윤한 기후환경에도 불구하고 두 오름 모두 생성 후 5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초지 오름으로만 존재했다. 그만큼 수목들이 들어오기 힘든 환경이라는 점을 방증한다. 2000BP에 들어서야 서어나무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내측 사면이 빽빽한 산림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 2000BP는 태평양에 면해있는 동아시아 해안 지역에서는 대동소이하게 습윤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척박했던 오름에 서어나무숲이 정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Park, 2017).

2) 소나무 화분과 세립탄편

원시림과 오름으로 구성된 제주도 중산간 지대의 독특한 경관은 농경의 전래와 함께 바뀌기 시작한다. 제주도로 농경이 언제 전래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벼농경 전파 시기를 약 2800–2300BP로 잡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임을 고려할 때 제주도 또한 유사한 시기에 본격적인 농경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추측할 뿐이다. 최근의 고고학 연구 또한 제주도에서 송국리 문화의 전파로 벼농경이 시작된 시점을 2500–2000BP로 추정하고 있다(Kim *et al*., 2018). 그러나 벼농사가 적합하지 않은 제주도에서 쌀은 주식으로 기능하지 못했다. 오랜 기간 지역 엘리트들의 권위를 공고히 하는 과시용의 먹거리에 불과했다(Kim *et al*., 2018). 벼농사 자체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으므로 농경에 따른 생태 교란은 크지 않았다. 제주도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송국리 문화 취락들은 해안에 위치한다. 섬으로 이주한 후에는 어로와 채집이 중요한 생활 수단이었음을 방증한다. 제주도의 송국리 문화 농경은 주로 보리나 잡곡류의 밭농사 위주였으며 이조차 생업경제의 보조 역할에 머물렀다(김민구·권경숙, 2010).

물영아리 화분 자료에서 관련 정보를 약간이나마 찾아볼 수 있다. 물영아리 자료가 대부분 기후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 과거 인간의 교란을 정확히 복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소나무 화분과 세립탄편 자료는 광범위한 지역의 환경 변화를 지시하고 있어 이들을 통해 대략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우선 소나무 화분 비율은 4800BP부터 1700BP까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그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한다(그림 2). 그리고 1200BP부터 800BP 사이에 소나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자료로부터 당시 해안지대 일부에서만 서식하고 있던 해송(곰솔)이 (인간의 교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700BP부터 중산간 지대 쪽으로 전진해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200BP–800BP에 이르면 꽤 넓은 지역에 해송이 서식하게 된다. 밭농경이나 목축 활동을 위한 화입에 의해 공간이 생기고 이 곳으로 햇빛을 좋아하고 빨리 성장하는 소나무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초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산간 지역에서 해송이 서식하고 있음을 임상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이는 과거 제주도에서 인간의 교란행위가 있었을 때 해송의 점유면적이 넓어졌다는 추정을 논리적으로 뒷받침 해준다.

세립탄편 자료는 보다 면밀한 분석을 가능케 한다(그림 4). 세립탄편 유입량은 AD 1150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AD 1250–AD 1300에 정점에 이르고 그 후로 급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탐라국은 AD 1105년(숙종 10년)에 고려의 군현 체제로 편입되었고, AD 1153년(의종 7년)에는 본격적으로 현령관이 본토에서 파견되면서 고려 정부가 제주를 직접 관할하기 시작한다. 당시 늘어난 조공의 압박 등으로 주민들의 화입이 더욱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제주현에서는 양수의 난(AD 1168) 등 본토에서 부임한 관리의 침탈에 반기를 든 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전영준, 2017). AD 1250년 이후로 세립탄편의 유입량이 최정점에 이르는데, 이는 몽골 군대가 제주도를 점령한 후 말 목장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화입 작업을 수행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세립탄편 자료에는 인간의 영향과 함께 기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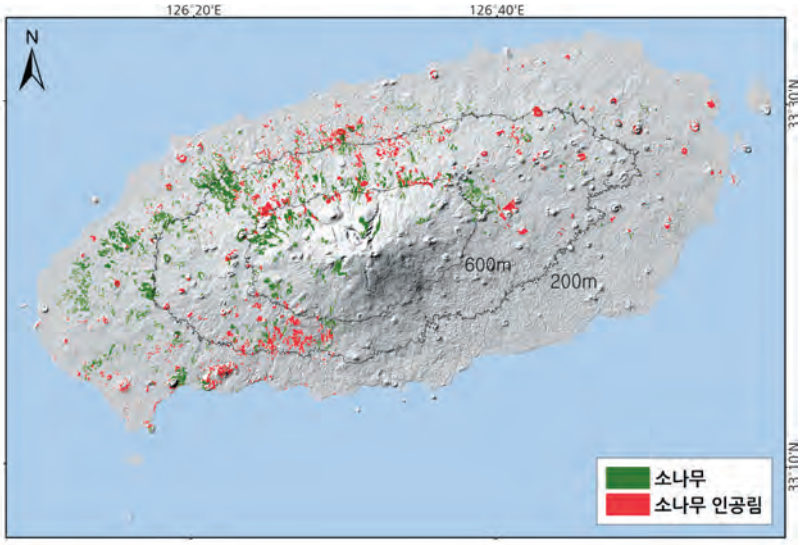


그림 3. 제주도 소나무림 분포(산림청, 2015). 제주도의 해송은 해안에서 해발 1,100m까지 분포하며 적송은 600m 이상 고지대에만 분포(이임영, 2013). 지도에서 보듯이 중산간지대(특히 북사면)에 많은 해송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의 영향도 함께 반영되어 있어 보다 세심한 해석이 요구된다. 물영아리의 멀티프록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경우 AD 1150에서 AD 1300까지는 대체로 건조했고 이후로는 대체로 습했다(Park *et al*., 2017). 이러한 기후 변화에 따라 세립탄편의 유입량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장이 대규모로 조성되던 시기와 기후적으로 건조했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당시 인간의 화입에 따른 환경 변화가 더욱 극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탐라목장기의 후반기에 들어서면 세립탄편의 유입량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습윤한 기후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목초지를 새로이 조성하기 위해 많은 나무를 제거할 필요가 있었던 전반기와는 달리, 후반기에는 이미 조성된 초지를 유지하는 정도면 목축 활동을 영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후반기에 세립탄편 양의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은 이 시기에 광범위한 목초지의 형태가 거의 갖춰졌음을 의미한다. 이후 15세기 중반 즈음에 10개의 작은 목장(십소장)으로 구성된 제주한라산목장이 중산간 지역에 설치된다(김동전·강만익, 2015). 뚜렷하지는 않지만 동시기에 세립탄편 양이 증가하는 모습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영목장을 설치하면서 초지의 범위가 약간 더 확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조선시대의 세립탄편 양이 매우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 점령기에 넓은 목초지가 이미 조성된 덕에 이후에는 대규모 화입이 필요 없었던 것 같다. 당시 습윤했던 기후도 산불을 어느 정도 억누르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다시 소나무 화분 자료로 돌아가 보면, AD 1100년 즈음부터 소나무 화분의 비율이 급감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4). 고려의 군현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소나무의 개체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후와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인간의 교란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전술했듯이, 해송들은 인간의 농경/목축 행위 덕에 열린 중산간 지대의 일부 공간으로 빠르게 유입되었다. 인간의 간접적인 도움을 받아 서식 영역을 넓혔던 해송들은 그러나 목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반대로 인간에 의해 직접 제거된다. 대형 목장이 설치되었던 원 점령기부터 대략 AD 1650까지 소나무 화분 비율은 매우 낮은 수치를 유지한다. 이는 그 기간 동안 중산간 지대에서 목축 활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16세기 후반부터 소나무 화분 비율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 목축지 면

적이 기존에 비해 감소했거나 목장 관리가 부실해졌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제주도에서 18세기 후반까지 사육 마필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기록에 비추어 볼 때(김동전·강만익, 2015) 전자의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십소장이 설치된 15세기 경부터 우마가 해안지대의 농지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중산간지대의 아랫부분에 잣성이 축조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작업은 17세기 중반까지 이어졌다(강만익, 2009). 잣성의 축조를 통해 전체적인 목축 면적은 감소했지만 보다 집약적인 목축 활동이 가능해졌다. 해송의 개체수는 목축활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진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다시 증가했을 것이다. 효율적이면서 집약적인 목축 활동은 사육 마필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는 조선시대 후기 여타 지역에서 마필의 수가 감소했던 상황과는 달랐다. 당시는 임진왜란 이후 화포 등이 전래되면서 말의 가치가 하락하던 시기로, 실제 조선시대 목장들 중 상당 수가 폐지 또는 축소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선조 27년(1594)에는 40여개의 목장이 폐지되기도 하였고 숙종 연간에는 목장전이 농민들에게 분배되면서 7개의 목장이 경작지로 바뀐 경우도 있었다(박찬식, 1993).

한편, 20세기 초에는 소나무 화분의 비율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일제강점기 때 해송과 삼나무 등을 다수 식재하면서 제주도의 식생에 큰 변화가 일어난 상황을 지시한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많은 해송들이 고사하고 있어 심각한 생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주도의 현 기후가 소나무들의 생육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천이되는 과정에서 병충해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보기도 한다(제주특별자치도, 2014). 실제 해안지대나 중산간지대의 해송들은 목축으로 교란된 공간에 유입되었거나 일제강점기 때 인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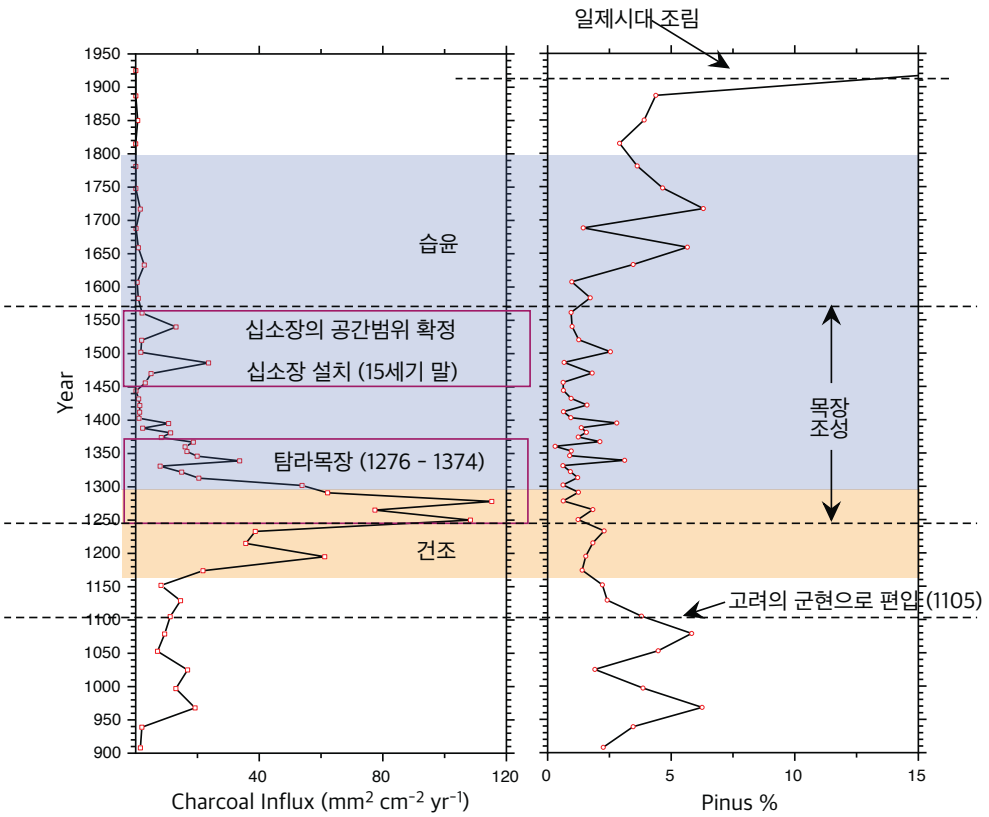


그림 4. 물영아리 습지 퇴적물의 세립탄편 유입량(왼쪽)과 소나무화분 비율(오른쪽)

으로 식재된 것들이기 때문에 천이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삼나무 화분 또한 흥미로운 사실을 시사한다. 제주도의 삼나무들은 모두 일제강점기 때 식재된 일본삼나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물영아리의 화분 자료를 보면 제주도에 삼나무가 원래부터 존재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가져온 삼나무들을 주로 심은 것은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당시 제주도에서도 삼나무는 서식하고 있었다.

3) 목축과 중산간의 경관 변화

이전 장에서, 인간의 교란에 의해 유발된 중산간 지대의 식생 변화 과정을 살펴봤다. 이러한 식생 변화가 인간의 목축 행위로 파생된 결과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본토와 달리 제주도에서 목축활동이 특히 활발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제주도의 광범위한 초지는 목축의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다. 2300년 전 즈음해서 벼농경 문화와 함께 제주도로 이동해 온 농경민들은 당시 어로와 수렵채집을 생활 기반으로 하는 원주민들과 섞였을 것이다. 그러나 화산섬인 제주도는 지질적인 이유로 농경에 적합하지 않아 벼농경은 물론 밭농경도 힘든 곳이었다. 지금도 중산간 지대에서 밭 면적은 6%에도 미치지 못한다(국토지리정보원, 2013). 따라서 제주도에 초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는 근본 원인을 주로 화전농경에서 찾았던 김상호(1979)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는 화전 농경으로 기조성된 초지가 목축에 적합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우마 사육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제주도의 낮은 인구밀도, 해안 중심의 인구분포, 농경에 부적합한 토지 등을 고려할 때 중산간 지대에서 저밀도의 밭농경을 통해 광활한 초지가 조성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상호(1979)는 화전농경에 의해 조성된 초지를 몽골인이 목장으로 이용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원점령 이전에 이미 제주도에서는 목축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김일우, 2005). 원점령 이전부터 존재했던 초지는 일부 화전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나 주로 목축의 결과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반도나 일본에서 벼농경이 전파되면서 식생이 뚜렷하게 변화하는 과정은 여러 고환경 연구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제주도는 예외였다. 농경 문화가 제주도에서는 뿌리내리지 못했다. 추측건대, 당시 농경민들은 화전농경을 통해 충분한 양의 식량을 확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상당수가 농경 기술을 버리고 대신 어로나 수렵채집으로 생활을 영위했을 가능성이 크다. 농경을 포기한 이들 가운데 일부가 중산간 지대에 점점이 분포하고 있는 초지 오름들을 보면서 목축의 가능성을 발견했을 수 있다. 이후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가축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름 뿐 아니라 중산간 전체에서 방목을 하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꼈을 것이고, 이는 인위적인 대형 화입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몽고인이 목장을 설치한 이후 중산간 지대의 초지화가 더욱 가속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몽고인이 처음 진입했을 때 이 지역은 이미 고려인들의 목축으로 교란이 상당히 진행된 후였다(김일우, 2005). 몽고인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목장을 설치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제주도의 초지 경관이 자기네들의 고향 땅과 엇비슷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결국 오름이 존재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독특한 목축 문화가 전개될 수 있었다고 본다. 제주도는 아열대성 기후 때문에 전체적으로 초지가 발달하기 힘든 곳이다. 그러나 경사가 급하고 토양이 쉽게 흘러내려 침식에 취약한 오름 지형은 나무에게는 거칠었지만 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이로웠다. 오름의 초지는 척박한 섬 땅에 들어온 본토의 농경민들에게 작물농경에서 목축으로 관심을 돌리도록 했고, 이는 원점령기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집약적인 우마 사육으로 이어진 과정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오름에 대해 갖는 느낌이 특별하듯이 과거 제주도의 사람들에게도 오름은 특별했다. 과거 오름이 직간접적으로 제주도 사회와 자연에 미친 영향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었다.

4. 결론

제주도 중산간에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초지와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오름들은 우리에게 독특한 영감을 준다. 이 독특함은 본토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으로 어딘지 모르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느낌과 연결되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중산간/오름 경관이 형성된 과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연구결과가 제시된 적은 없었다. 중산간과 오름은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을 뿐 아니라 지리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연구 소재임에도, 지금까지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학술적인 논의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 연구의 의의는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습지 퇴적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과거 중산간 지대와 오름의 경관 변화 과정을 추정하였고 그 내용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농경이나 목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제주도의 중산간지역은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대부분 참나무, 서어나무, 느릅나무 등의 나무들로 이루어진 산림지대였다. 단, 당시에도 중산간의 일부 오름에는 지형적/토양적 특징 탓에 초지가 산재하여 분포하고 있었다. 본토에서 이동해 들어온 농경민들은 오름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초지를 활용하였다. 그들은 척박한 섬 환경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경에 매달리기 보다는 이곳에서 우마를 사육하는데 힘을 쏟은 것으로 보인다. 화분과 세립탄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산간지역에 목축을 위한 초지 확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탐라국이 고려의 군현 체제로 편입된 AD 1100년경부터이다. 이후 13세기 말에 원나라가 제주도의 초지 위에 탐라목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미 현재와 유사한 크기와 형태의 광활한 초지가 조성된다. 중산간의 이러한 인위적 경관은 고려 및 조선시대에 걸친 지속적인 목축 활동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대부분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제주도의 독특한 목축문화가 전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오름이 있다. 중산간과 오름은 과거 원주민들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현재에도 제주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된 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이들의 환경사는 되돌아 볼 가치가 충분하다. 앞으로 중산간의 식생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생각으로, 이 지역의 과거 경관 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복원하여 중산간과 오름이 갖는 환경사적 의미를 확장하고 정교화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강만익, 2009, “조선시대 잣성 연구,” 탐라문화, 35, 205-246.

국토지리정보원, 2013, 한국지리지-제주특별자치도.

기상청, 2018, 국내기후자료, http://www.kma.go.kr/weather/climate/average_30years.jsp.

김남영·양병철·손준규·신상민·우제훈·신문철·유지현, 2018, “제주마의 기원 및 모색 특성에 대한 고찰,”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지, 2, 28-31.

김동전·강만익, 2015, 제주지역 목장사와 목축문화, 경인문화사.

김민구·권경숙, 2010, “제주도 송국리문화의 석기조성과 생업경제 -호남지역과의 비교,” 호남고고학보, 36, 63-95.

김상호, 1979, “한국농경문화의 생태학적 연구,” 사회과학논문집, 4, 81-122.

김일우, 2005, “고려시대 탐라 주민들의 생업활동과 그 유형,” 국사관논총, 106, 1-41.

박찬식, 1993, “17·8세기 제주도 목자의 실태,” 제주문화연구: 현지김영돈박사화갑기념, 제주문화, 461-478.

산림청, 2015, 임상도_제주, http://data.nsdi.go.kr/dataset/15178.

오구균·고정군·김태환, 2007, “한라산 돈내코 계곡의 해발고별 식물 군집 분포,”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1, 141-148.

이임영, 2013, 해송림 종합관리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전영준, 2017, “고려의 탐라 수탈과 양수의 난,” 역사와 교육, 25, 111-140.

제주특별자치도, 2014, 방재 희망백서 - 8개월간 소나무

재선충병 총력방제 현장기록, 디자인 열림.

차종환, 1969, "한라산 식물의 수직 분포," 한국식물학회지, 12, 19–29.

Clark, R.L., 1982, Point count estimation of charcoal in pollen preparations and thin sections of sediments, *Pollen et spores*, 25, 523-535.

Kim, M., Oh, R., Bang, M., Rha, J.-W., and Jeong, Y., 2018, Rice and Social Differentiation on a Volcanic Island: An Archaeobotanical Investigation of Yerae-dong, Korea, *Cambridge Archaeological Journal*, 1-17.

Lim, J. and Fujiki, T., 2011, Vegetation and climate variability in East Asia driven by low-latitude oceanic forcing during the middle to late Holocene, *Quaternary Science Reviews*, 30, 2487-2497.

Park, J., 2017, Solar and tropical ocean forcing of late-Holocene climate change in coastal East Asia, *Palaeogeography, Palaeoclimatology, Palaeoecology*, 469, 74-83.

Park, J., Han, J., Jin, Q., Bahk, J., and Yi, S., 2017, The link between ENSO-like forcing and hydroclimate variability of coastal East Asia during the last millennium, *Scientific Reports*, 7, 8166.

Park, J., Lim, H.S., Lim, J., Park, and Y.-H., 2014a, High-resolution multi-proxy evidence for millennial-and centennial-scale climate oscillations during the last deglaciation in Jeju Island, South Korea, *Quaternary Science Reviews*, 105, 112-125.

Park, J., Lim, H.S., Lim, J., Yu, K.B., and Choi, J., 2014b, Orbital-and millennial-scale climate and vegetation changes between 32.5 and 6.9 k cal aBP from Hanon Maar paleolake on Jeju Island, South Korea, *Journal of Quaternary Science*, 29, 570-580.

Park, J., Shin, Y.H., and Byrne, R., 2016, Late-Holocene vegetation and climate change in Jeju Island, Korea and its implications for ENSO influences, *Quaternary Science Reviews*, 153, 40-50.

Schwendemann, A.B., Wang, G., Mertz, M.L., McWilliams, R.T., Thatcher, S.L., and Osborn, J.M., 2007, Aerodynamics of saccate pollen and its implications for wind pollination, *American Journal of Botany*, 94, 1371-1381.

Whitlock, C. and Larsen, C., 2001, Charcoal as a fire proxy, in Smol, J.P., Birks, H.J.B. and Last, W.M.(eds.), *Tracking environmental change using lake sediments. Volume 3: terrestrial, algal, and siliceous indicators,* Kluwer Academic Publishers, 75-97.

Zhou, X., Sun, L., Zhan, T., Huang, W., Zhou, X., Hao, Q., Wang, Y., He, X., Zhao, C., and Zhang, J., 2016. Time-transgressive onset of the Holocene Optimum in the East Asian monsoon region, *Earth and Planetary Science Letters*, 456, 39-46.

교신: 박정재,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이메일:jungjaep@snu.ac.kr, 전화: 02–880–6140)

Correspondence: Jungjae Park,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Korea (e-mail: jungjaep@snu.ac.kr, phone: +82-2-880-6140)

최초투고일 2019. 3. 21
수정일 2019. 4. 18
최종접수일 2019. 4. 18

대한지리학회지 제54권 제2호 2019(165~176)

서울시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지역변수 영향력 분석

김혜미* · 박진홍** · 최진무***

Analysis of Local Variables' Influence on the Conversion Rate to the Monthly Rent of Key Money Deposit of Apartments in Seoul

Hyemi Kim* · Jinhong Park** · Jinmu Choi***

요약 :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보증부월세 비율이 증가하면서 전월세전환율 지표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월세전환율 상한선 관련 법률이 신설되면서 상한선에 대한 법적 준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전월세전환율 구조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전역변수에 국한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수의 연구에서 지역변수를 포함한 전월세전환율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전월세전환율 구조에 대해 지역변수를 추가로 고려하고, 공간 단위에 따른 전월세전환율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결정요인 분석을 위하여 고정효과모형과 GWR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각 모형과 공간 단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전월세전환율 지역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지역변수를 활용하면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주요어 : 전세, 월세, 전환율, 고정효과모형, GWR, 패널 데이터, 지역변수

Abstract : As the low interest rate trend is maintained and the guaranteed rent ratio increases, the importance of research on the conversion rate of key money deposit to monthly rent is increasing. In addition, the law on the upper limit of the conversion rate is expected to increase the legal compliance with the upper limit. However, previous studies on the conversion rate structure have analyzed only with the global variables and emphasized the necessity of the conversion rate structure including local variables in many studies. Therefore, in this study, local variables are additionally considered for the conversion rate structure, and the determinants of the conversion rate by spatial unit are analyzed. The fixed effect model and the GWR analysis were used for the determinants analysis. The influence of the local variable of the conversion rate, which varies according to each model and spatial unit, was confirmed. Using the local variables for the conversion rate confirmed in this study, it will be possible to set the conversion rate of key money deposit to monthly rent at local areas.

Key Words : Conversion Rate, Key Money Deposit, Monthly Rent, Fixed Effect Model, GWR, Panel Data, Local Variable

본 연구는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석사, lucy0817@khu.ac.kr

** 경희대학교 소셜네트워크과학과 박사수료, shoopjh@khu.ac.kr

***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cjm89@khu.ac.kr

1 서론

전월세전환율을 한국감정원에서는 “전세로 지불하는 임대비용 대비 보증부월세로 지불하는 임대비용의 부담비율”로 정의한다(한국감정원, 2014). 전월세전환율이 높으면 전세로 지불하는 임대비용에 비해 보증부월세로 지불하는 임대비용 부담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시중의 대출금리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은 임차인의 주거비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9조에 따르면 전월세전환율 상한선 적용은 기존 전세 계약이 만료된 이후 이를 월세로 전환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활용되는 전월세전환율 통계는 동일단지, 동일 면적의 전세 계약과 월세계약을 결합하여 산출되므로 이전 계약과는 상관없이 해당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김지훈, 2018).

이러한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성은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임차인과 임대인의 균형 상태를 위한 지표로 활용됨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월세전환율은 지역 내 보증금대비 월세의 부담수준과 향후 흐름을 판단하는데 활용되며, 임차 선택 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뿐만 아니라 전월세전환율을 구성하는 전세 그리고 월세와 상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폭등했을 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전월세전환율 연구를 통해 파악하여, 정책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 두 번째, 전월세전환율 상한선 법규가 신설되면서 부동산 거래에 있어 전월세전환율 상한선 준수에 관심도가 높아졌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를 통하여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을 산정하는 등 정부 측에서도 이를 주요 정책과제로 여기고 있으며, 2013년 8월 13일 부터는 산정률을 초과한 경우 보증금의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도 신설되었다. 이러한 전월세전환율의 역할에 따라 정부, 임대인, 임차인 각각의 관점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황이다. 세 번째, 2008년 이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전세 비율이 감소하고 보증부월세의 비율이 증가하는 변화가 발생하면서 전세와 보증부월세의 연결고리인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해석과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고 있다(이창무, 2009; 한석만·최민석, 2013; 김민영, 2014; 류강민·서명교, 2016; 윤종만·정의철, 2017; 황관석, 2018).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2009년 2.5%에서 2011년 3.5%에 도달한 이후, 2016년 6월의 1.25%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6년간 9차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년 주기로 갱신되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주거점유형태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세비율은 약 6.5%감소, 보증부 있는 월세의 비율은 약 2.8% 증가하였고, 보증금 없는 월세의 비율 또한 약 1.7% 증가했다. 이러한 월세전환 추세는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장기적인 현상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서승환, 2015).

2002년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과 보증부월세의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월세를 대신하여 지불한다고 판단하여 전월세전환율을 시장이자율과 동조화되는 개념으로 간주했다(김경환·손재영, 2000; 이현석, 2001). 하지만 2002년 이후 연구들에서는 향후 5년간 시장이자율과 전월세전환율 간에는 약 1~7%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면서 전월세전환율과 시장이자율의 동조화 개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이창무, 2009). 또한 전세의 월세화 전환과정에서 전월세전환율 결정요인을 분석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전월세전환율을 온전히 설명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대해 많은 연구들에서 전역변수 이외에도 지역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해야 전월세전환율을 적정 상한선을 지정하고 전월세전환율 구조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진기 외(2017)의 연구에서는 해당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역별 영향력을 판단하는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지역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가 전월세전환율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최성호 외(2015)의 연구에서는 지역시장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전월세전환율이 각 지역시장의 영향을 받는 구조임을 인정하며

시장이자율에 근거한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이 가진 한계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자가 지역적인 요인을 고려한 전월세전환율 연구를 시도했으며,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이창무 외, 2009; 김상진 외, 2016; 이석준·김경민, 2016; 주충열·김형주, 2016; 김진기 외,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전월세전환율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인 기제 및 연구들을 살펴보고 전월세전환율의 지리적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기존 전월세전환율의 결정요인과 그 구조를 종합하여 살펴봄으로써 대부분의 연구에서 중요시 여기고 있는 핵심적인 전역변수를 파악하고 사회, 경제적 변수와 센서스 데이터를 추출함으로써 새롭게 살펴볼 지역변수를 구성하였다. 둘째, 전역변수와 지역변수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에 대해 시간적 측면을 고려한 고정효과모형 분석을 통해 전월세전환율에 영향을 주는 지역변수를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셋째, 공간적 측면에서 전월세전환율 관련 지역변수들의 국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지리가중회귀모형 분석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모형의 결과를 종합함으로써 추후 연구에 필요한 유의한 지리적 결정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한계점인 지리적인 요인의 누락을 수정함으로써 전월세전환율의 구조를 새롭게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어 지역별로 차등이 있는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이 마련된다면 적정 전월세전환율 상한선 산정과 같은 주요 정책과제에도 활용되어 향후 주거비부담 측면에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이다. 전월세전환율은 매달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의해 조사되는데, 2011년부터 주택유형이 구분되어 통계자료가 공표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이 2014년을 기준으로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에 해당 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과 미래 3년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이며, 분석은 자치구 단위로 진행하였다. 한국감정원에서 공표되는 전월세전환율 데이터의 단위가 시군구단위이며, 대다수의 정책이 시군구 단위로 적용된다는 점에 의거하여 이와 같은 공간적 단위를 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월세전환률 분석의 대상 주택 유형은 아파트로 선정하였다. 국토교통부 자료[1]에 따르면, 2016년 서울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1.6%로 나타났다. 전체 주거주택유형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시장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한 도시생활권으로 서울 대도시권을 주로 고려한다는 대표성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3. 고정효과모형 분석

1) 패널 데이터

패널 데이터 분석은 횡단면과 시계열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으며,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지만 관찰할 수 없는 공간의 내재된 속성을 제거하여 과대추정 및 과소추정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개체의 미관찰된 내재성을 오차로 개별 추출하여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패널 데이터 분석의 여러 유형 중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 분석을 선택하였다(민인식·최필선, 2012). 고정효과모형은 상수항이 패널 개체별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변수에 대한 기울기는 모든 패널 개체에 대해 동일하다고 가정한 모형을 말한다.

고정효과모형 분석에서 활용할 데이터는 종속변수인 전월세전환율과 16개의 지역변수, 2개의 전역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6개년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균형패널 데이터로 가공하였다. 지역변수 16개는 인구, 총세대수, 세대 당 인구, 65세 이상 고령자, 사업체수, 종사자수, 공원면적,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수, 사설학원 수, 문화공간수, 초등학교 수, 중학교 수, 고등학교 수, 평균연령, 지방세, 전철역 수로 구성되었다. 전역변수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대표성을 띄는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주택매매소비심리지수를 선택하였다(황관석, 2018).

2) 고정효과모형 구축

전월세전환율 결정구조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다수의 논문에서 전역변수를 활용한 패널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잠재적 지역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역변수를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개별 자치구의 지역 시장에 잠재적으로 미치는 고정적인 지역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지역변수가 전월세전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지역변수를 투입했을 때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전역변수만을 고려한 패널모형 분석을 시행한 후, 지역변수와 전역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패널모형 분석을 진행하였다. 패널모형 분석은 R version 3.5.1을 사용하였으며, 타 모형과의 비교를 위하여 다섯 가지 패널모형 분석을 진행하였다. 네 가지 패널모형은 기본패널모형(pooled), between effect 모형, 고정효과모형(within 추정), 확률효과모형이다.

3)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

선행연구의 전월세전환율 구조 분석과 동일하게 전역변수만을 반영한 고정효과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구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택매매시장-소비심리지수는 해당 모형에서 영향력은 미미하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약 90%정도로 나타났다.

전역변수와 지역변수를 모두 고려한 전월세전환율 구조 분석(표 2)에서는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주택매매시장-소비심리지수가 모두 유의하지 않는 결정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16개 지역변수 중 종사자 수(worker), 사설학원 수(academy),

표 1. 전역변수를 활용한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전월세전환율			
	기본패널 모형(pooled)	Between Effect 모형 (BE)	**고정효과모형 (FE: within추정)**	확률효과모형(RE)
주택담보대출금리(jdd)	0.941***		0.941***	0.941***
소비심리지수(ss)	−0.011		−0.011	−0.011
Constant	6.045***	6.045***		6.045***
Observations	150	25	150	150
R^2	0.855		0.917	0.902
Adjusted R^2	0.853		**0.899**	0.901
F Statistic	431.882*** (df=2;147)	−Inf.000 (df = 0; 24)	675.378*** (df = 2; 123)	675.378*** (df = 2; 147)

*p<0.1; **p<0.05; ***p<0.01

출처: 김혜미, 2019

문화공간 수(culture), 초등학교 수(ele), 평균연령(age)의 5개 지역변수가 전월세전환율 구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평균연령으로 −1.515의 음의 계수를 보였다. 이는 평균연령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전월세전환율이 1.515단위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월세전환율 구조에서 지역변수의 중요도를 표 2의 Adjusted R^2로 확인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의 결정계수가 0.961로 도출되어 설명력이 96%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전월세전환율 구조에서 지역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고정효과모형 검증

패널모형을 선택함에 있어 관찰되지 않은 개체 간 개별적 특이성(individual heterogeneity)인 μ_i를 어떤 방식으로 정의할 것인지에 따라 추정방법이 달라진다(민인식 · 최필선, 2012). 고정효과모형에서는 μ를 패널 개체별로 고정되어 있는 시간불변 내재성이라는 모수로 해석하고, 확률효과모형의 μ는 확률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로 해석한다. 두 모형 중 적합한 모형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기준은 패널 데이터의 개별적 특이성인 μ_i에 대한 추론이다. 패널

표 2. 전역변수와 지역변수를 모두 고려한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전월세전환율			
	pooled	BE	FE	RE
세대수(households)	1.910***	2.186	−1.071	0.172
인구(pop)	−2.297***	−2.744	0.052	−0.504
세대당 인구(house_pop)	0.567***	0.593	0.008	0.147
고령자 수(senior)	0.152	0.208	0.292	0.059
사업체 수(company)	0.015	0.045	−0.038	0.192
종사자 수(worker)	**0.097**	**0.261**	**−0.722****	**−0.322**
공원면적(park)	−0.105*	−0.107	0.476	0.014
사설학원 수(academy)	**−0.243**	**0.037**	**−0.416****	**−0.428****
오염배출시설 수(env_pol)	−0.037	−0.027	−0.075	−0.073
문화공간 수(culture)	**0.124****	**0.038**	**0.290*****	**0.201****
초등학교 수(ele)	**0.249***	**0.433**	**−0.950****	**−0.248**
중학교 수(mid)	−0.252**	−0.455	−0.096	0.145
고등학교 수(high)	0.156	0.238	−0.189	0.088
평균연령(age)	**−0.011**	**0.312**	**−1.515*****	**−0.825*****
지방소득세(income)	0.126	−0.163	−0.113	0.212
전철역 수(subway)	−0.122**	−0.101	0.023	−0.089
주택담보대출(jdd)	1.005***		−0.019	0.446***
소비심리지수(ss)	0.042		−0.055	−0.011
Constant	6.045***	6.045***		6.045***
Observations	150	25	150	150
R^2	0.889	0.672	0.972	0.941
Adjusted R^2	0.873	0.017	**0.961**	0.933
F Statistic	58.101*** (df=18;131)	1.025 (df=16;8)	205.284*** (df=18;107)	116.879*** (df=18;131)

*p<0.1; **p<0.05; ***p<0.01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어느 모형이 적합한지 알기 위해 하우즈만 검정을 사용하여 판단한다.

하우즈만 검정은 고정효과모형이 확률효과모형보다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도출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분석이다(민인식 · 최필선, 2012). 하우즈만 검정(Hausman Test)을 통해 $cov(x_{it}, u_i)=0$이면 귀무가설이 성립하여 확률효과모형을 선호하게 되지만, 반대인 $cov(x_{it}, u_i)\neq 0$인 경우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고정효과모형이 더 적합한 분석이 된다. 하우즈만 검정 결과 $\chi^2=80.025(df=18)$, $p<.000$이고 p값이 0.05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고정효과모형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고정효과모형에 대한 선택이 적합하다는 것을 하우즈만 검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4. 지리가중회귀모형 분석

1) 지리가중회귀모형 구축

앞선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지역별로 내재된 오차가 공간적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리적가중회귀(GWR)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고정효과모형의 데이터와 동일한 패널 데이터이다. 패널 데이터는 종속변수인 전월세전환율과 18개의 독립변수인 인구, 총 세대 수, 세대 당 인구, 65세 이상 고령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공원면적, 환경오염배출시설 수, 사설학원 수, 문화공간 수, 초등학교 수, 중학교 수, 고등학교 수, 평균연령, 지방세, 전철역 수, 주택담보대출금리, 주택매매시장소비심리지수, 그리고 분석에 필요한 자치구, 년도, index, 경도, 위도 총 24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데이터의 표준화 과정을 거친 뒤, GWR 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서울시 행정구별 지리가중회귀식을 도출하였다. GWR 4.0 프로그램에는 독립변수를 지역변수와 전역변수로 구별한 모형을 구축할 수 있는 S-GWR 분석이 가능하므로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하였다.

좌표의 유형은"Spherical"유형으로 선택하여 분석하였고, 모델 유형은 'Gaussian'형태를 사용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지리적 가중치를 고려한 지역 coefficients와 bandwidth, selection criteria 측정을 위해 커널 함수를 지정하는데, 이때 커널함수의 유형은 관찰 개체인 서울시 구별 위치가 모두 불규칙하게 분포하므로 'Adaptive' 방식을 채택하였다. 대역폭(bandwidth)은 사전적으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자동 계산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대역폭을 결정하는 반경 설정은 AIC_c[2]를 사용하였다(Demšar *et al*., 2008).

2) 지리가중회귀모형 결과

GWR 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개의 전역변수와 16개의 지역변수를 모두 고려한 전월세전환율의 지리가중회귀모형(Demšar *et al*, 2008) 분석 결과는 전역모형(OLS)보다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역모형 결과의 AIC_c는 약 150.53으로 도출되었지만, 표 3에서 지리가중회귀모형(S-GWR) 분석 결과의 AIC_c는 약 107.54로 약 42.99만큼의 차이를 보였다. 정확도 판단의 또 다른 지표인 결정계수를 비교해본 결과, 선형회귀 모형은 약 0.87의 설명력을 보였지만 지리가중회귀모형 분석 결과는 약 0.92의 설명력을 보이며 개선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특정변수가 모든 공간에서 일정하다고 전제하는 전역모형에서 다룰 수 없는 공간적 요인을 포함한 분석인 지리가중회귀모형 분석이 더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OLS와 GWR의 잔차에 대한 공간적자기상관을 비교하기 위해 Moran's I를 살펴보면 OLS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던 잔차의 공간적자기상관이 GWR을 통해 많이 해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Global OLS 모형 잔차의 Moran's I는 −0.051($p<.000$)로 모형 잔차의 공간적자기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반해, GWR모형의 Moran's I는 −0.002($p<.389$)로 귀무가설을 수용하여 모형 잔차의 공간적자기상관 문제가 없음을 보여준다.

표 3. 전월세전환율관련 지역변수들에 대한 OLS와 GWR 결과

OLS 결과		GWR 결과	
Residual sum of squares:	17.570	Residual sum of squares:	9.688
Number of parameters:	19	Degree of freedom (model: n − trace(S)):	115.790
Classic AIC:	144.018	Classic AIC:	85.134
AICc:	150.530	AICc:	107.542
CV:	0.152	CV:	0.106
R square:	0.889	R square:	0.939
Adjusted R square:	0.872	Adjusted R square:	0.917
Moran's I of residuals:	−0.051(p<.000)	Moran's I of residuals:	−0.002(p<.389)

출처: 김혜미, 2019

지리가중회귀모형의 전체적인 결과가 도출된 이후 지역별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지역별 회귀식에 포함된 각 지역변수의 계수를 통해 개별 자치구의 전월세전환율에 16개의 지역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은 각 지역변수의 계수 추정치인 'parameter estimates'에 대하여 유의한 지역만을 단계구분도로 시각화한 것이다.

지역모형에서 인구 변수는 −9.2169부터 1.0728의 범위에서 계수 값을 보였다. 총 세대 수는 지역모형에서 −1.7177에서 8.0950의 범위를 보이며,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에서 가장 큰 양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개의 자치구를 중심으로 총 9개의 자치구에서 전월세전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지역변수로 확인되었다. 인구 변수 또한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총 세대 수와는 반대인 음의 영향력임을 확인하였다. 세대 당 인구 수는 지역모형인 GWR에서 계수의 범위가 −0.6813부터 1.8653 사이에서 나타났으며, 해당 변수 또한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를 중심으로 한 12개의 자치구에서 양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총 세대 수 변수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단계구분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65세 이상 고령자 수는 −0.69454부터 0.60380사이의 범위에서 계수 분포를 보였으며, 다소 적은 자치구에서 유의한 변수로 적용되었다. 강북구와 도봉구에서는 양의 영향을, 광진구와 강동구에서는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쳤다.

사업체 수 변수는 −0.04025부터 0.41221 사이에 추정 계수가 값이 분포했으며,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에서 가장 높은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였다.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은평구, 서대문구, 중구,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총 10개의 자치구에서 사업체 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종사자 수 변수는 사업체 수와 다소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GWR 모형에서의 해당 변수 계수는 −0.86201부터 0.16073 범위 사이에서 분포했으며,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받는 자치구는 노원구, 중랑구, 강동구를 중심으로 총 7개의 자치구가 이에 해당되었다.

공원면적의 경우 지역모형인 GWR 모형에서 −0.39787부터 0.05364에 해당되는 범위에서 계수 분포를 보였으며, 서초구, 강남구, 성북구에서 가장 큰 음의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로 종로구, 중구, 강북구, 도봉구에서도 공원면적이 넓을수록 전월세전환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설학원 수는 지역모형에서 각 자치구별로 −0.64594부터 0.31379까지의 범위에서 계수 값을 보였으며, 도봉구와 은평구에서 가장 높은 음의 영향을 받았다. 이외의 지역으로는 강북구,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가 사설학원 수의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환경오염배출시설 수에 대한 계수는 지역모형에서 −0.91642부터 0.17984까지 분포했다. 그중 유의한 영향력을 받는 자치구로는 대표적으로 광진구, 강동구가 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송파구,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에서도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지만, 서초구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환경오염배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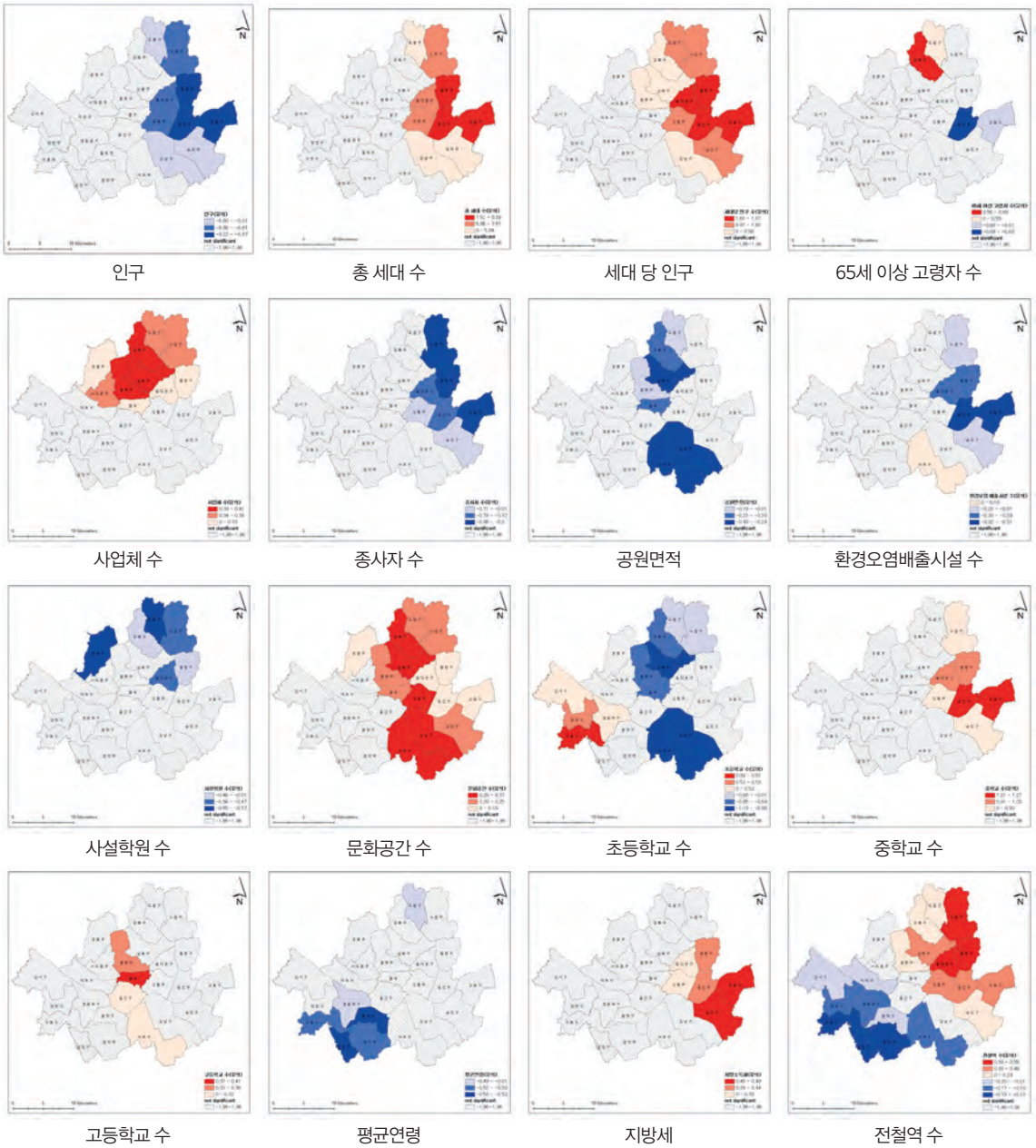


그림 1. 지역변수 계수 추정치에 대한 단계구분도 (김혜미, 2019)

수로부터 유의한 양의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화공간 변수의 경우 계수 값이 지역별로 0.02268부터 0.37033의 범위에서 나타났으며, 총 15개의 자치구에서 유의한 양의 영향력을 받는 것을 단계구분도를 통해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그 중, 서초구, 강남구, 성동구, 성북구, 강북구에서 큰 유의한 양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이라는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변수들이지만, 각 지역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동시에 확인하였다. 가장 먼저 초등학

교 수 변수의 경우 계수 값이 지역별로 −1.1277부터 0.6072 사이에서 분포하였다.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에서는 양의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 서초구, 강남구, 성북구, 중구, 종로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에서는 해당 변수로부터 전월세전환율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중학교 수 변수는 강동구, 광진구를 중심으로 송파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에서 유의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고등학교는 −0.13847에서 0.41449의 범위에서 계수 값이 분포했으며,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초구에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평균연령 지역변수는 GWR 모형에서 −0.53143부터 0.01011의 범위에서 계수 값 분포를 보였으며, 동작구와 금천구에서 가장 큰 음의 영향을 행사하였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0.17409부터 0.48616의 범위에서 계수가 분포하였고, 강동구, 송파구를 비롯한 6개의 자치구에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철역 수 변수는 가장 많은 자치구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변수의 지역별 계수 값 범위는 −0.18838부터 0.54896까지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동북권에서는 유의한 양의 영향을, 서남권에서는 유의한 음의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국지적 분석 방법인 S−GWR을 통해 지역별로 개별 지역변수가 전월세전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 전월세전환율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에 대하여 군집이 발생하는 경향을 시각화된 지도를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5.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시계열을 고려하고 지역의 내재된 특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패널 데이터에 대해 고정효과모형을 분석하여 전역변수를 추출하고 지역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전역적인 분석을 통해서 서울특별시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에 영향을 주는 지역변수들은 문화공간 수, 평균연령, 종사자 수, 초등학교 수, 사설학원 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공간 수가 많은 지역은 전월세전환율이 높게 나타났는데(표 2 참조), 이는 문화공간 수가 많은 지역이 문화와 더불어 상업이 발달한 곳이고 이에 대한 편리함을 추구하는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할 수 있으므로 월세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종사자 수, 사설학원 수, 초등학교 수,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지역은 대체로 중장년층이 거주하게 많이 거주하는 주거중심 지역으로 판단되며 이런 경우 월세보다는 전세를 더 선호하게 되므로 전월세전환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변수들에 대해 지역별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역변수를 고려할 수 있는 지리가중모형인 S−GWR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S−GWR은 전역변수와 지역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전월세전환율 구조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며, 공간 좌표를 고려하여 주변 지역의 특성에 영향력을 반영한 국지적 회귀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S−GWR을 서울시에 적용한 결과 지역별로 전월세전환율 결정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는 공간 단위 차이에 따라 전월세전환율 결정요인이 차별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4에 기재된 지역변수의 '+', '−' 부호는 해당 변수가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에 양과 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살펴보면 전월세 전환율에 각 변수가 미치는 영향이 권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선 그림 1과 표 4를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서울의 전월세전환율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이 크게 동서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북권과 동남권은 사업체 수, 사설학원 수를 제외한 인구, 교육, 직업, 문화여가, 공공 변수 군에서 비슷한 방향의 효과를 보인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 동쪽 권역에서 총 세대 수, 세대 당 인구, 문화공간 수, 중학교 수, 지방세, 전철역 수가 전월세 전환율에 양의 효과를 주고 있다. 반면 인구, 종사자 수, 환경오염 배출시설 수, 초등학교 수는 음의 효과를 주고 있다.

표 4. 고정효과모형 및 S-GWR 결과 전월세전환율에 영향을 주는 지역변수

모형	권역	공간단위	전월세전환율 결정요인															
변수			인구	총 세대	세대당 인구	고령자 (〉65)	사업체	종사자	공원 면적	환경 오염 시설	사설 학원	문화 공간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평균 연령	지방세	전철역
고정효과모형	–	서울시						–			–	+	–			–		
GWR	도심권	종로구			+		+		–			+	–		+			+
		중구					+		–			+	–		+			
		용산구													+			
	동북권	강북구			+	+	+		–		–	+	–					+
		광진구	–	+	+	–		–		–		+		+			+	+
		노원구	–	+	+		+	–		–	–	+	–	+				+
		도봉구	–	+	+	+	+		–		–	+	–			–		+
		동대문구	–	+	+		+	–		–	–	+		+			+	+
		성동구	–	+	+			–				+		+			+	+
		성북구			+		+		–			+	–					+
		중랑구	–	+	+		+	–		–	–	+		+			+	+
	서북권	마포구																–
		서대문구					+											
		은평구					+				–	+						
	동남권	강남구	–	+	+			–	–			+	–					
		강동구	–	+	+	–				–		+		+			+	+
		서초구							–	+		+	–		+			–
		송파구	–	+	+			–		–		+		+			+	+
	서남권	강서구											+					–
		관악구														–		–
		구로구											+			–		–
		금천구														–		–
		동작구														–		–
		양천구											+					–
		영등포구											+			–		–

여기서 교육 변수들을 따로 살펴보면 역시 동서의 세로축을 기준으로 서울 서남권역은 초등학교 수, 중간권역은 고등학교 수, 동부권역은 중학교 수가 전월세 전환율에 양의 효과를 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의 효과가 대체로 동부권역에 일정한 영향을 준다. 예외적으로 사설학원 수는 동북권에서 음의 효과를 주나, 이 역시 동쪽 지역의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서울의 동쪽 지역은 대체로 몇 가지 변수를 제외한 많은 변수에서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서북/서남권은 동북/동남권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보인다. 특히 서남권은 동부권과는 반대로 초등학교 수가 전월세 전환율에 양의 효과를 보이며 평균연령과 전철역 수는 음의 효과를 보인다. 특히 서남권역의 초등학교 수와 전철역 수는 동부권역에 비해 정반대의 효과를 주고 있다. 또한 표 4를 보면 동부권역에서 보이던 많은 변수들의 효과가 서부

권역에서는 대체로 관측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전월세전환율을 설명하는 다양한 변수들의 효과는 서울의 동서축을 중심으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어 월세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막기위한 정책이다. 만약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을 전체 지역의 평균적인 값으로 규제한다면, 양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높은 값을 띄는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전월세전환율이 높게 계산될 것이므로 낮게 책정된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이 현실에 맞지 않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매우 높게 설정하게 되는 부작용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이것보다는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을 지역 변수들에서 도출된 값에 의해 차등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전월세전환율을 현실화하여 그 상한선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정책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 지역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값이 크다면, 해당 지역의 전월세전환율은 낮아지게 되어 그 상한선을 낮게 설정해도 되므로 이 지역은 일괄적인 전월세전환율 설정에 비해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전월세전환율을 지역별로 설정할 수 있게 되면, 특정 지역의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을 주변 지역에 비해 적절히 낮추는 정책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저개발 지역에 대해 외부인구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6. 결론

전월세전환율 지표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전월세전환율 구조 및 결정요인 관련 연구의 한계점인 지역변수의 누락이 여전히 고려되지 않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월세전환율 구조에 대해 지역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고정효과모형 분석과 S-GWR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해당 데이터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분석에 활용할 대표적인 전역변수 2개와 지역변수 16개를 추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균형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고정효과모형 분석과 GWR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 번째로 고정효과모형 분석에서 전역변수만을 고려했을 때의 모형 설명력보다 전역변수와 지역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모형의 설명력이 높게 도출되어 전월세전환율 구조에서 지역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역변수만 고려한 경우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전월세전환율 구조에 유의한 변수로 적용되었지만, 16개의 지역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분석 결과 문화공간 수, 평균연령, 종사자 수, 초등학교 수, 사설학원 수가 전월세전환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향후 각 자치구별 유의미한 전월세전환율 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GWR 모형을 분석하였다. 전역변수와 지역변수를 모두 고려하는 S-GWR 분석은 자치구의 공간 좌표를 고려했을 때 주변 지역의 특성에 영향을 받아 OLS에 비해 설명력이 높게 도출되었다. 이는 개체의 공간적 분포와 주변 지역의 변수 값을 고려한 모형 분석이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독립변수는 자치구마다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와 유의성이 상이했으며, 각 변수가 자치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군집이 발생하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월세전환율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변수는 공간 단위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향후의 전월세전환율 연구에서는 반드시 지역변수를 고려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전월세전환율 상한선 관련 법률이 신설되면서 국민의 상한선 준수도 및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역별 적정 상한선 선정에도 본 연구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 지역변수가 활용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지역별 적정 상한선을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다 세분화된 공간단위(읍면동 등)의 데이터 취득이 가능하다면 전철역과의 거리, 편의시설과의 거리 등 접근성 관련 지표를 포함한 보다 정밀한 정확도의 분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향후에 진행할 연구의 대상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주

1)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2) AIC_c는 지리 가중 회귀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부합도 측정치이며, 동시에 동일한 종속변수에 대해 다양한 독립변수로 구성된 모형을 비교할 때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전역모형과 지역모형을 비교하기 위해서도 AIC_c를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김경환 · 손재영, 2000, "서울시 오피스 시장의 시계열 분석," 주택연구, 8(2), 5−20.

김민영, 2014, 서울시 아파트 전월세서울시 아파트 전월세전환율 결정구조 및 실증 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김상진 · 이강용 · 정준호, 2016, "아파트 전월세전환율과 시장금리와의 동조화 및 지역별 차이," 경제연구, 34(4), 51−77.

김지훈, 2018, "전월세 전환율의 의미와 활용," KB경영정보리포트 2018−2,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김진기 · 이현탁 · 장봉규, 2017,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영구적 · 일시적 요인 분석," 부동산학연구, 23(1), 1937.

김혜미, 2019, 지역변수를 활용한 아파트 전월세전환율 분석−서울시를 사례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류강민 · 서명교, 2016, "서울시 주택유형별 임대시장 특성에 관한 연구," 주택도시연구, 6(1), 1−15.

민인식 · 최필선, 2012, STATA 패널 데이터 분석 = STATA Panel Data Analysis, 지필미디어, 서울.

서승환, 2015, "월세화 추세와 전월세 대책," 지역연구, 31(2), 63−77.

윤종만 · 정의철, 2017, "전월세전환율 결정 요인과 주택금융정책이 미치는 영향,"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1), 125−140.

이석준 · 김경민. 2016, "전세의 월세전환과정에서 전월세전환율 결정요인 분석," 서울도시연구, 17(3), 91−104.

이창무, 2009, "아파트임대시장의 전월세전환율 결정구조," 주택연구, 17(2), 213−229.

이창무 · 정의철 · 최소의, 2009, "아파트임대시장의 전월세전환율 결정구조," 주택연구, 17(2), 213−229.

이현석, 2001, "공간시장과 자본시장의 관계 및 예상자본수익률," 국토계획, 36(2), 163−175.

주충열 · 김형주. 2016. "서울시 주택임대차 계약구조 전환의 시공간 분석," 부동산학보, 66, 130−144.

최성호 · 배상열 · 이창무, 2015, "전월세전환율의 지역별 편차와 공실률," 주택연구, 23(4), 5−21.

한국감정원, 2014, "실거래정보 활용 아파트 전월세전환율 산정 발표," 한국감정원 보도자료, http://www.kab.co.kr/

한석만 · 최민섭, 2013, "실거래가격을 활용한 아파트 전월세전환율 실증 분석," 주거환경, 11(3), 225−236.

황관석, 2018, "구조적 VAR 모형을 이용한 전월세전환율의 영향요인 분석," 국토연구, 96, 3−19.

Demšar, U., Fotheringham, A., Charlton, M., 2008, Exploring the spatio-temporal dynamics of geographical processes with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and geovisual analytics, Information Visualization, 7(3-4), 181-197.

교신: 최진무, 02447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회기동) 경희대학교 스페이스21 이과대학 지리학과(이메일: cjm89@khu.ac.kr)

Correspondence: Jinmu Choi,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Korea 02447 (e-mail: cjm89@khu.ac.kr)

최초투고일 2019. 2. 13

수정일 2019. 4. 28

최종접수일 2019. 4. 30

대한지리학회지 제54권 제2호 2019(177～198)

조선산업을 통해 본 산업도시의 정동 정치
- 정동적 도시론을 중심으로 -

신진숙*

Politics of Affects in Shipbuilding Industry Cities
- Focusing on Affective Urbanism -

Jinsook Shin*

요약 : 이 글은 조선산업 도시 사회의 변화를 정동(affects), 느낌, 감정과 같은 비재현적 요소와 글쓰기, 상징, 이미지 등과 같은 재현적 요소의 매개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선산업 도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정동과 감정을 '정동적 도시론'으로 고찰했다. 구체적인 분석 사례는 현재 한국의 남해안에 위치한 조선산업 도시에 대한 재현을 중심으로 살폈다. 조선산업의 위기 이후 조선산업 도시에서 생산된 감정과 정동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현재의 도시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지를 분석했다. 특히, 이 글에서는 과거 한국의 산업도시에서 형성된 전통적인 노동 공동체가 해체 또는 변형되는 과정에 주목했는데, 이를 근대적인 산업도시 공동체로부터 그 경계를 초과하는 새로운 정동 공동체로의 이동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산업도시 사회에서 발산하고 있는 다양한 정동과 감정들은 단순한 위기의식을 넘어 집합적 정동으로서의 '유동하는 공포'와 결합되어 있었다. 이러한 정동적 분위기는 향후 언제든 제기될 수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지역정책에 대해 산업도시 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미시적이지만 중요한 참조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결론에서는 산업도시에서 어떤 공간적 정동 정치가 구성되고 있는지도 고민했다.

주요어 : 산업(조선업)도시, 정동, 유동하는 공포, 정동 공동체, 정동적 도시론, 공간적 정동 정치

Abstract : This article discusses the way in which affects as transpersonal bodily capacities and changes become a invisible part of constituting landscapes, focusing on representations of shipbuilding industry cities. Emphasizing on the fact that affects can mediate and be mediated by apparatuses, encounters and conditions, this paper traces a specific forms in which affective life is imbricated with representations. The questions of this paper is how the various sensory modes of being in the industrial area is imbued with relations of social/geographical power, but is irreducible to power's effect and how affects and emotions act as part of assemblage constituting and landscaping industrial cities. Especially, it highlights the industrial affective community associated with the liquid fears. By developing the perspective of affective urbanism,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understand the spacial politics of affect within industrial cities in post-industrial era.

Key Words : Shipbuilding industry cities, Affects, Liquid fears, Affective community, Affective urbanism, Spatial politics of affects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62-H00001).
이 논문은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 HK국제학술회의(2019.4.27)에서 발표한 후 수정하여 제출함.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HK교수(HK Professor, Institute of Global Affairs, Kyung Hee University, kkamsse@khu.ac.kr)

1. 산업도시의 정동적 삶

이 글은 한국의 조선산업 도시에서 구성되고 있는 특별한 감정과 정동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정동의 공간적 정치와 연결되는지 고찰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지리학에서 감정과 정동(affects)[1]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확대되어왔다. 그동안 감정과 정동은 객관적, 그리고 합리적인 설명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지리학적 지식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었다. 거시적인 제도와 이데올로기를 통해 공간을 분석하는 접근 방식들은 감정과 정동을 주변부의 또는 부수적인 주제로 평가 절하해 왔다. 이른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도시를, 감정이나 정동을 통해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미 감정과 정동은 도시와 환경, 인간들을 관계적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유의미한 문제 틀로서 부상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조선산업 도시를 산업환경과 인간, 그리고 사물들 사이의 감정적/정동적 관계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물론 정동과 감정은 그 지향성에서 큰 차이를 지니는데, 간단히 말해 정동이 초개인적인 상태라면, 감정은 이러한 정동이 주관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둘 다 비재현적이지만, 재현 가능성에 있어서 감정은 정동과 다르게 재현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 이 글은 이러한 감정과 정동을 포괄하되, 기본적으로는 도시의 정동적 삶(affective life)을 논의의 중심에 놓고 구성하였다. 즉, 산업도시를 도시와 사람 사이의 관계와 마주침 속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정동적 등록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그것은 산업도시 자체를, 스리프트(Thrift, 2004)가 말한 바와 같이, 정동의 소용돌이, 그러나 모호하고 흐릿한 정동들로 이루어진 도시 공간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시와 정동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왜 도시는 정동적 삶으로 재사유되어야 하는 것인가? 스리프트(Thrift, 2004)는 정동과 도시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동은 활력적인 도시의 한 요소로서 도시 전체에 편재해 있다. 도시에서의 활동은 저마다 장소를 정동적 색조로 물들이는 정동적 등록 과정을 수반한다. 따라서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정동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스리프트는 도시에서의 정동의 생산 과정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첫째, 정동의 창조와 이동에 관한 체계적 지식들은 일상적인 도시 경관의 일부로 통합되었다. 정동은 도시의 정동적 삶에 더 많은 철학적 개입들을 허용하는 성찰적 고리이다. 둘째, 그러나 이러한 지식들은 의도적으로 전개되는 것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으로 전개된다. 도시에 미학적 색조를 드리우는 일은 점점 더 정치적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셋째, 정동은 도시를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지의 방식들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도시에서 소란을 만드는 것, 창조적인 것, 보다 일반적으로 직관과 창조의 힘을 창출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경제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스리프트는 도시의 정동적인 등록에 관한 공학(engineering)을 이야기하면서, 이를 정동 정치의 관점으로 수렴해간다. 정동을 어떻게 조정하고 변형하고 전시할 것인가가 도시의 주요한 정치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콘라드슨과 라담(Conradson & Latham, 2007)은 도시를 정동의 유형학(typology)으로 고찰한다. 이들은, 특정한 장소들과 연합된 정동적 공간을 정동적 장(affective field)라고 부른다. 그것은 고정된 건축물이 아닌, 특별한 지리적 배경들 안에서 비인간적 삶의 다양한 형식들과 기술, 건축물, 사람들이 마주침을 통해 구성되는 정동화 과정을 포괄하여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장소를 단 하나의 정동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모든 장소에는 다양한 정동적 가능성이 존재한다. 도시의 정동을 특정 도시 또는 지리학적 공간들에 한정되는 혹은 귀속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이러한 물리적 세계와 정동적 세계가 병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도시는 사람들이 살고, 그것을 구성하고, 또 이동하는 자연적, 물질적, 사회적 구성물이다. 이것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동의 역동성을 통해 도시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적 경험들이 딸려 나온다. 따라서 감정과 정동적 장의 특별한 역동성을 통해 도시를 감싼 모든 것을 다시 이해하려는 시도

는 도시와 살아 있는 삶 사이의 관계성을 이해하려는 실천적, 이론적 의미를 지닌다.

이 글은 바로 이와 같은 인식 틀을 공유하면서, 산업도시를 형성하고 또 그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정동적 삶을 분석해 볼 계획이다. 특히, 산업 지리학적 관점에서 명확한 공간적 지리적 경계를 지닌 조선산업 도시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조선산업은 다른 산업 유형들과 달리 노동과 자본의 공간적 집적률이 매우 높다. 조선산업와 같은 중공업 중심 도시들은 대부분 기업도시로서 산업에 대한 도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난다. 때문에 조선산업 도시와 같은 중공업 도시들에서는 산업의 성장과 쇠퇴가 곧 도시의 성장과 쇠퇴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가령, 한국의 근대화 초기 대표적인 산업도시라고 할 수 있는 탄광도시들의 성쇠가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석탄산업의 발달과 함께 형성된 탄광촌이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쇠락하면서 폐허로 변해버린 바 있다. 이후 탄광도시에 건설되었던 탄광시설들은 근대 산업유산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택 아파트와 같은 도시 시설은 최근까지도 폐허로 남겨져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특정 산업 중심의 도시들은 국내외 산업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정산업으로 전문화된 도시가 안정적 성장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론적, 경험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장철순 외, 2014).

한국의 조선산업 도시들 역시 최근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해 사업 수주가 현격히 줄어들면서, 이러한 산업의 위기가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다. 특히, 대표적인 조선산업 도시 지역을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은 중소조선소가 위치한 도시에서 가장 먼저 현실화됐다. 예를 들어, 경남 통영에는 당시 지역총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중형 조선소가 5개(성동조선해양, 삼호조선, 21세기 조선, 신이에스비, SPP조선)나 있었으나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현재 매각을 기다리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을 포함하여 모두 폐업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중형조선소가 위치한 부산(대선조선), 해남(대한조선), 진해(STX조선해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진중공업이 필리핀에 세운 수빅조선소 역시 현재 폐업 절차를 받고 있다. 물론 대형 조선소가 위치한 거제(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조선소 규모를 막론하고 조선산업의 쇠퇴는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2] 조선산업의 위기는 조선업과 연계된 제조업의 쇠락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대량 실업과 비정규직화, 집값 하락, 서비스업종의 경기 부진 등 도시의 위기로 쉽게 전이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산업도시의 단기적 성장보다는 중장기적이고 지역 성격에 맞는 다양한 지역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정철순 외, 2014; 배규식 외, 2016). 실제로 합리적인 대책들이 모색 중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내놓는 지역재생 계획들은 지역을 관광상품으로 재개발하려는 전략들이 많다(세계일보, 2019.4.3). 이는 산업도시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도시민들의 감정 구조와는 사뭇 불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번진 위기의 사건은 그곳을 터전으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조선소 폐업이 실행된 지역뿐 아니라 거제와 같이 조선산업이 존속하는 지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경기가 조선산업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삶의 불안과 위기, 공포감은 현실적이고 존재론적인 분위기가 되어 퍼져나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감정적, 정동적 삶의 내용들은 잠재적이다. 명확한 실체를 지닌 객관적 지표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정적 감정과 정동들은 도시 주변을 그리고 도시를 가로질러 이동하고, 집적되고, 순환하면서, 강화되어가고 있다. 조선산업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정동과 감정은 현재는 물론 미래를 현재화하여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한 것은, 도시에서 감정과 정동이 그 자체로 도시를 구성하는, 아직 재현되지 않은,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물질적 힘 혹은 에너지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힘(역량)들은 송원섭(2015, 315)이 말한 것처럼 정동적 과정들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공간–몸적인 자기적 관계'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것은 아직 사유되지 않았거나, 충분

히 인식되지 않은 상태의 어떤 모호한 정동적 분위기들을 형성시키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무엇으로 변화하거나 전이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하지만 다양한 문학작품과 영화에서 이러한 변화의 전조들은 이미 특별한 분위기 속에서 재현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정동과 감정이라는 요소들이 생산되는 과정을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더욱이 정동은 그 자체로 재현 불가능하며, 가시화할 수 없는 신체적 감응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동과 산업도시 사이의 공간들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글은 이 점에서 정동적 삶의 영역이 지닌 비재현적 측면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보다 폭넓은 콘텍스트와 연계하려 한다. 도시를 둘러싼 정동과 감정의 연합, 즉 신체-감각-세계 사이의 보다 덜 정치화된 현상학적 영역(정동)과 지속적인 실천과 주체성의 수행(재현적 실천) 사이를 연결해 산업도시의 정동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것은 정동이 어떤 재현적 장치(apparatuses)들과 절합하고, 어떻게 새로운 조합(아상블라주, assemblage)들을 형성하면서 상호 매개되는지, 그리고 나아가 어떤 공간적 정동 정치로 발전해 갈 것인지를 추론해 볼 수 있는 유의미한 관점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이 글은 산업도시의 특정한 감정이나 특이한 정동들의 생산 과정에서 재현적 요소와 비재현적 요소들이 매개되는 지점들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조선산업 노동자들의 증언이 수록되거나 거주민의 일상이 담긴 다큐멘터리에 주목했다. 이들 영상물에는 도시에 사는 노동자, 학생, 주민들의 감정적/정동적 반응들이 녹아들어 있다. 그것들은 표면적으로 이 도시의 삶을 서사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언의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전체적인 서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것으로부터 누락된, 비재현적 차원들이 발견된다. 증언의 행위 속에 내포된 재현적 한계들을 추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민속지적 방법론은 감정/정동 지리학의 공통된 기반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Pile, 2010).

다음 장에서는 앞의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하는 사례 분석에 앞서, 1)정동과 감정에 대한 지리학 접근법이 무엇이고, 2)재현과 비재현적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 매개되며, 3)이를 근거로 하는 정동적 도시론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2. 정동적 도시론(affective urbanism)의 물음들

1) 정동과 감정

정동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감정적 질(quality) 사이에는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심지어 정동과 감정은 언제든 상호 교환될 수 있다(Thrift, 2004). 하지만 이 둘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하나의 명확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동은 어떤 사물이나 환경, 사람들과의 우연하고 일시적인 마주침 속에서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져 버리는 신체적 반응 또는 그것의 역량적 힘(bodily capacities)을 의미한다. 그것은 개인이나 주관을 초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초개인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감정은 이러한 정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느낌(feeling)의 주관적 상태를 의미한다(Anderson & Holden, 2008, 145).

반디(Bondi, 2005)는 이러한 감정과 정동의 차이를 기반으로 하는 감정 지리학(emotional geography)과 정동 지리학(affectual geography)을 설명한다. 그는 이 두 지리학이 기존의 세 가지 지리학적 문맥들과 중첩된다고 말한다. 즉, 이 두 지리학은, 감정을 환기하고 주관적 실체를 전경화해온 인문 지리학의 전통과 중첩된다. 장소와 공간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 경험의 풍부함에 참여해온 인문지리학의 관점들은 정동/감정 지리학의 중요한 자원이다. 둘째, 페미니스트 지리학이 보여준 이성적/감정적 그리고 자아/타자 이분법을 해체하는 전통들은 정동/감정 지리학과 가장 관련이 깊다. 후기 구조주의적 관념들을 포용하면서 페미니스트 지리학은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 범주에 대한 가정들에 도전해왔다. 즉, 남성성을 합리성, 정신, 객관성에, 여성성은 감정성, 신체, 주관성에 연결시키는 관점들에 저항해왔다. 같은 맥락에

서 정동/감정 지리학은 감정을 주관적 경험보다 넓은 사회적 관계들의 표현인 관계적 감정 지리학(relational emotional geographies)으로 이해한다. 셋째, 정동/감정 지리학은 담론과 인식을 넘어서려는 비-재현 지리학과 호응한다. 즉, 비재현 지리학은 체화된 감정이 재현을 초과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비절합적인 실천들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스리프트는 그 중에서도 재현 가능한 감정과 구분되는 재현 가능성을 초과하는 정동의 생산을 또 다른 지성으로 강조해왔다. 감정/정동 지리학은 이와 같이 담론 이전 혹은 담론 외적인 비개별적인 삶의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비재현 지리학과 토대를 같이 한다. 따라서 감정지리학과 정동 지리학은 둘 다 공통적으로 '의식되지 않은 것의 사이 공간'을 사유하고 탐구하는 데서 출발한다.

같은 맥락에서 파일(Pile, 2010, 9)은 이 두 개의 지리학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 기반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즉, 두 지리학은 감정과 정동이 생산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1) 관계성, 개방성, 유동성을 특권화하는 관계적 존재론에 입각하고, (2) 신체를 중심으로 조우하는 과정의 근접성과 친밀성을 가치화하며, (3) 방법적 차원에서, 자서전에 대한 텍스트 분석, 문학과 영화의 재현의 실패, 부정의와 고통에 대한 증인들의 이야기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는 민족지적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파일은 감정과 정동은 분명한 차이를 지닌다는 점도 명확히 한다. 즉, 많은 사람이 인정하듯, 감정은 사람의 경험과 표현 안에서 구현되지만, 정동은 그럴 수 없다. 감정/정동 지리학 모두 감정적 상황들과 정동적 사건들을, 실재의 살아 있는 생명의 토대로부터 소외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삶의 경험적 서사들에서 진실을 찾으려 하며, 그것을 여는 열쇠가 곧 신체라는 것에서도 일치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두 지리학은 신체에 있어서 분리된다. 감정 지리학에서 신체는 느낌과 경험의 장소이다. 경험들과 느낌들은 사회적으로 배태되어 있다. 그것들은 신체 그리고 신체들 사이의 관계들 안에 자리를 잡는다. 감정적 신체는 사회관계 안에 착근되어 있음에도 궁극적으로는 개인적이다. 그것은 심리적 주체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감정의 표현은 사회적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의 형식들 뒤에 진정한 개인적 경험들이 있고, 그것들은 재현되고 있는 중이다(Pile, 2010, 11). 반면 정동 지리학은 신체를 개인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신체는 초-개인적이다. 심리적 장소는 더욱 더 아니다. 그것은 비록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회적 삶을 기초하고 구성하는 초-인간적, 비-인지적,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서, 정동 지리학은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드러내고자 한다. 따라서 정동 정치는 신체의 특이성을 바탕으로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관심을 지속해간다. 신체와 정동의 흐름(의 조정)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Pile, 2010, 11).

예를 들면, 조선산업 도시를 재현한 다큐멘터리들에서는, 도시 특유의 정동적 분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거제시의 쇠락하는 도시 분위기 속에서 거제여상의 댄스 동아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땐뽀걸즈》(2017)에서, 발랄하고 명랑한 소녀들의 신체적 움직임들(댄스)은 그것의 배후에 존재하는 정동적 분위기로부터 이질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둘(댄스와 산업도시) 사이의 차이와 긴장이 이 다큐멘터리의 서사적 주제인 휴머니즘적 가치를 보다 극적으로 만드는 조건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춤을 추는 소녀들의 감정과 정동, 그리고 도시 사이에는 복잡한 얽힘이 존재한다. 산업도시를 둘러싼 초개인적인 정동적 분위기와 그것의 주관적 감정 상태가 혼용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정동적 분위기는 기존의 시각, 즉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구현해온 노동 공동체 안에서는 충분히 언어화되지 못한 부분들이다. 이처럼 언어화되지 못한 부분들에 주목하여, 이것이 어떻게 차이성을 지우지 않은 채 정동적 공동체의 일부로 자리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통적 개념의 공동체에 균열을 내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2) 재현과 비재현

이 글은 산업도시의 정동적 분위기를 사람, 환경, 사물 사이의 관계적 감응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는 정동 생산 과정 자체를 정동의 공간화라는 관점에서 사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들뢰즈는 정동이 자율

적인 신체적 변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사유 형식이라고 말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리학에서는 정동적 전환을 수용하되, 정동 자체를 지정학적, 혹은 지리-역사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Thrift, 2004; Hemmings, 2005; Tolia-Kelly, 2006; Anderson, 2014). 특히, 스리프트(Thrift, 2004)는 본질적으로 재현될 수 없는 신체적 감응성과 변화, 그리고 그 흐름들인 정동이 공학적 과정을 통해 생산되고 조정되는 정치적 가능성, 정동의 공간적 정치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톨리아-켈리(Tolia-Kelly, 2006) 역시 정동 지리학이든 감정 지리학이든, 지리학이 다른 정동적 역량을 가진 다른 신체들의 정치적 사실들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사회적 삶을 구성하는 권력의 기하학이라는 콘텍스트 안에서 정동적 등록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동적 흐름과 리듬을 추동하고 그것에 형태를 부여해온 권력의 기하학 및 그 역사적 기억들로부터 정동적 글쓰기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이다. 그녀는 이러한 논증 과정에서 아메드의 '정동적 경제'를 예로 든다. 아메드(Ahmed, 2004)는 정동이 우연히 생산되고, 순환되면서, 한 순간 어떤 대상에 달라붙어 강화되고, 다른 감정으로 전이하거나 대체되는 전 과정을 정동적 경제(affective economy)라고 명명한다. 따라서 정동이란 특별한 순간 우연히 마주치고, 사랑하고, 느끼고, 감각하는 대상들이 아니다. 그것은 다양한 신체들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역량들 및 역사적 개념들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의미화된 상태로 정의되고 순환한다. 톨리아-켈리(Tolia-Kelly, 2006, 214)는 어떤 신체이건 간에 정동적 역량은 존재와 느낌의 사회적 공간들 안에 불평등하게 의미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정동 자체는 비재현적이지만 재현과의 절합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정동은 재현 장치들과 결합하면서 표적-대상들을 만들어내곤 한다. 예를 들어, 식민지적 우울과 육체적 절망과 같은 식민지적 정동은 식민 통치를 위해 정치적으로 배치된 혹은 매개된 재현 장치들과 의미화의 조건들에 의해 발생한다(Anderson, 2014, 81). 식민지적 통치를 강화하는 다양한 재현들이 신민지적 신체와 그 역량, 정동적 조건들들 구성하고, 정동적 세계에 개입한다. 또한 정동의 역량은 다양하게 변주되면서 신체적 기질들, 습관, 관습 안에서 반복하는 과거와의 마주침을 통해 형성된다(Anderson, 2014, 85). 즉, 식민지 정동을 만드는 다양한 마주침(encounters)들 역시 지리-역사성(geo-historicity)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동을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것 이하의 현상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동에 개입하고 재현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정동은 생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보다 중요한 것은, 정동의 흐름과 강도적 삶의 영역들은 재현에 연결되고 매개됨과 동시에 그것들을 초과하여 흘러넘친다는 점이다. 정동적 역량들은 그것을 생산하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장치들로 환원되지 않는다(Anderson, 2014, 78). 즉, 정동은 역설적으로 말해, 언제나 이미 재현의 초과라는 형식으로 재현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처럼 초과된 부분, 재현 불가능한 부분이 곧 정동이 세계에 틈입해 균열을 내는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정동은 재현의 언어 바깥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비-담론적인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언제나 이미 담론적인 것을 끌어들임과 동시에 그것을 초과하는 형식으로 정동적 삶에 개입한다(Anderson, 2014, 85). 따라서, 앤더슨의 관점을 따르면, 재현은 반드시 기존 질서의 복사로만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계를 창조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세계의 구조에 활력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장치들 안에서 다른 담론적/비담론적 요소들과 통합된다.[3)]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산업도시를 둘러싼 정동과 그것에 대한 다양한 재현들을 서로 연결되고 동시에 분리되는 이중의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산업도시의 우울과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후회 등의 감정은 실재 노동자와 거주민들이 보이는 신체적 반응 및 정동적 삶에 연결되어 있다. 조선산업 도시의 분위기를 재현한 다큐멘터리와 소설들은 이러한 정동적/감정적 삶을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콘텍

스트 안에 정위시키는 실천이다. 새로운 배치와 조합으로서의 아장스망(agencement)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이 글은 재현됨과 동시에 재현 틀 자체를 초과하는 조선 산업 도시의 '유동하는 공포'에 주목한다. 조선산업 도시의 공포감은 복잡한 재현 과정을 통해 변형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정동과 재현의 매개 과정을 향후 산업도시를 둘러싼 정동 정치의 중요한 동력으로 고찰한다.

3) 정동적 도시론(affective urbanism)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문제의식으로 되돌아가, 도시와 도시적 삶, 그리고 그것들을 구성하는 정동적/감정적 조건은 어떻게 상호 구성적인 관계를 형성하는가. 그것은 '정동적 도시론'의 관점에서 도시를 다시 이해하고자 하는 물음이다. 정동적 도시론은 합리적인 것을 넘어서 혹은 그 이하인 것으로서 규정되어 온 정동과 감정을 통해 도시적 삶을 재구성하는 사유방식이다(Anderson & Holden, 2008). 여기서 정동과 감정은 도시적 삶의 부수적인 차원이 아니라 바로 이 도시적 삶에 '참여'하는 주요한 삶의 방식으로 이해된다(Anderson & Holden, 2008).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정동 도시론을 토대로 산업도시의 특정한 감정적/정동적 삶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조선산업 도시의 삶의 의미와 변화, 그 지향들이 감정과 정동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갈 것인지 등을 살펴보려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개된 지리학에서의 정동적 도시론은 아직 특정한 논리적 정체성과 방법론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예컨대 한국 도시 연구에서 감정/정동과 지리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것에 비해서는 충분한 연구과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연구 이론과 방법론 등의 정립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정은 비단 국내 지리학계만의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특정 도시에서 형성되는 정동의 구현 과정을 분석한 글들을 통해 정동적 도시론의 관점을 접근해 보는 방식이 대다수이다. 예를 들면 특정 도시의 정동적 가능성(Conradson & Latham, 2007), 정동 정치(Thrift, 2004), 정동의 공학(Thrift 2004; Macormack, 2008), 정동적 분위기(Edensor, 2012; Anderson, 2014; Michels, 2015) 등의 논의들이 제출되었다. 도시를 감정적/정동적 삶의 과정으로 이해하려는 이러한 노력들은 실증적, 철학적 차원에서 계속해서 제안되고 있다. 그런 만큼, 하나로 통일된 방법론이나 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양한 논의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감정/정동 지리학이라는 보다 큰 범주 안에서 도시의 감정/정동을 이해하려는 문제의식은 비교적 분명한 하나의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앤더슨과 홀든(Anderson & Holden, 2008)은 의미 있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논문은 이들이 제시한 연구관점을 아래에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도시의 감정/정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들의 논점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도시에서는 매일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 감정, 정동, 느낌이 발생한다. 도시는 다양한 미분화된 정동들, 느낌들, 그리고 감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들은 구성되거나 구성될 수 있다. 고유하고 정체화된 정동적 등록을 가정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예컨대, 조선산업의 경기 침체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구조조정은 조선산업 도시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도래한다. 그것은 불신과 분노의 감정으로 표현되며, 그 아래로 미래에 대한 공포와 도시의 쇠퇴에 대한 어떤 예감과 움츠러듦, 무기력감 등 재현하기 어려운 정동들이 출현한다. 조선산업 도시의 본질은 이러한 정동/감정과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조선산업 위기에서 촉발된 '공포'가 산업도시의 경관에 달라붙는다. 그리고 그것은 경관의 의미를 변화시킨다. 일상적인 삶의 공간 안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강렬한 부정적 감정들이 도시를 둘러싼다. 공포의 정동들은 물질적이면서 동시에 비물질적인 분위기로서, 조선산업 도시를 구성하는 환경적 조건 혹은 인프라스트럭처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른 의미에서는 정동의 공간화 과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둘째, 도시는 존재들의 '함께 있음'의 공간이다. 즉, 도시를 정동과 감정, 느낌들, 그리고 하나의 환경, 콘텍스트 사이의 조합(아상블라주)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도시를 안정적 상태가 아닌,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을 조정하고, 조직하고, 함께 조율하는 '과정'으로 사유하기 위한 조건이다. 사실, 도시적 삶은 개별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모두에 걸쳐진 약한 인지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정동은 물질적이면서 동시에 비물질적인 흐름으로서, 도시에서 제도화되고, 도시를 구성한다. 이러한 시각은 도시를 잠재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의 관계적 위상학으로 사유하도록 유도한다. 이를테면, 유동하는 공포는 조선산업 도시 전체를 다른 방식으로 다시 느끼게 만든다. 조선 산업 도시의 생물학적, 기술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것들 사이에서 정동과 감정이 매개되고 매개되어지면서 새로운 조합, 아상블라주를 형성해 가고 있다.

셋째, 도시에서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감정과 정동의 미분적 개별화가 발생한다. 도시는 특이한 정동들과 특수한 감정들이 출현하는 개별화의 진정한 극장이다. 그것은 아메드(Ahmed, 2004)가 제기한 정동의 축적과 강렬화(intensification) 과정과 비슷한 개념이다. 정동적 도시론은 정동의 생산 과정을 '감응'과 '변형'의 메커니즘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도시가 개별적인 것이라거나 명확한 실체를 지닌다는 생각들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정동과 감정들이 하나의 살아 있는 물질처럼 도시를 감응시키고 동시에 도시를 변형시키는 복잡한 '과정'으로 설명하려 한다. 특히, 개별화의 과정은 결코 완성될 수 없다. 개별화 이후에도 전-개인적인 잠재적인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예컨대, 조선산업도시에서 산업의 위기는 해결 가능한 리스크가 아니라 재난에 가까운 것으로 느껴지고 있다.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는 도시의 모든 것에 달라붙어 강렬함을 형성해가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강도적 힘들이 어떻게 산업도시를 변형시킬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넷째, 정동과 감정은 도시 안에서 불균등하게 분배된다. 그것은 고통, 상실, 소멸, 쇠퇴의 도시 지리학과 관련이 깊다. 공공 공간의 사유화를 둘러싼 논쟁은 정동과 감정들의 불균등한 분배 과정을 잘 보여준다. 공포의 감정/정동은 종종 포함, 금지, 통제의 논리와 결합해 도시를 분열시킨다. 공포가 특정한 신체들에 달라붙게 되면, 그것은 공간적 조직화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정동과 감정의 불균등한 분배는 임의적이고 공간적 뉘앙스를 지닌 권력의 위상학으로 변해간다. 산업도시의 정동화 과정은 이러한 불균등한 분배의 과정을 보여준다. 불균등한 정동의 분배는 원청과 사내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균열하고 있는 조선산업 도시의 현재 모습을 탐색하는 데 의미 있는 시각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는 특히, 넓은 의미의 산업 공동체 내부에 자리하고 있는 노동 공동체 안에 균열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정동적 도시론은 정동의 출현, 개별화, 변형, 분배의 네 과정으로 고찰할 수 있다. 이 각각의 과정은 사실상 분리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련의 정동화 과정이 조선산업도시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일일 것이다.

3. 조선산업 도시의 위기를 통해 본 정동적 도시론

1) 조선산업 위기와 '유동하는 공포'

조선산업 도시의 위기론은 2010년대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등장한 이슈이다. 이상우(2016)는 한국 조선산업 호황기(2004~2012)를, 글로벌 경기 호황에 따른 발주증가기(2005~2008)와 리만쇼크 이후 실적호조기(2009~2012)로 구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호황기 이후에는 불황의 기조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 원인은 무리한 저가 수주와 해양플랜트 사업의 경험 부족 등이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세계 조선산업은 신규수주나 건조량 규모나 점유율을 기준으로 1970년대까지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었으나, 1990~200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한국으로 주도권이 넘어왔고, 2000년대 후반 이후 중국으로 넘어갔다(배규식 외, 2016, 23). 그 결과 2013년 이후 한국에서는 조선산업 위기론이 현실화되기 시작한다. 조선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구조조정과 함께 대량의 실직자들이 발생한 것은 바로 이 시기이다.[4] 그리고 대부분의 중소형 조선소가 폐업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이 과정에서 조선소를 중심으로 짜여진 도시 구조

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상가들은 물론 숙박 임대 사업의 몰락이 현실화됐으며, 폐업한 조선소는 오랫동안 산업폐허로 방치됐다. 조선산업의 위기는 단지 조선산업만의 위기로 그치지 않았다. 조선소의 구조조정의 여파는 관련 외주 업체는 물론 도시 전체로 퍼져, 조선산업 도시 전반의 위기론으로 확산됐다. 나아가 이러한 조선산업의 위기는 한국의 전체 산업도시의 분위기를 반영하였으며, 그것은 여전히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됐다. 조선산업의 호황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조선산업의 위기로 변하게 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쉽게 예측하지 못했다. 조선산업의 위기는 그야말로 하나의 '사건'이었다.

조선산업 및 조선산업도시의 위기를 하나의 사건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위기의 본질이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규모와 지표로만 온전히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조선산업과 연계된 산업도시 전반의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들과 연계되어, 그것들을 변형시켜왔다. 특히 조선산업 호황기에 구성된 이른바 '블루칼라 중산계층'의 희망, 혹은 수십 년 간 구축되어온 '중공업 가족 공동체'(양승훈, 2019)를 뒤흔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 한국의 조선산업이 그야말로 탈산업화시대로의 변화 속에서도 단단하게 지켜낸 산업도시 사람들의 정체성은 물론 자부심으로 자리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조선산업의 위기는 도시의 외적 질서를 변화시킨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도시 사람들의 내적 질서에까지 영향을 주었으며, 그것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람들의 내면에서 일어난 균열은 산업도시 위를 흘러 다니는 감정, 바우만이 말한 '유동하는 공포'(바우만, 2009)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조선산업의 위기를 경제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명확한 도시적 사건이며, 나아가 정동적 사건(an affective event)으로 규정한다. 조선산업이 배치된 도시들에서 발생하고, 축적되어, 조선산업 도시 자체를 특정한 감정으로 정동화하고 있는 과정에 주목이 필요하다. 산업도시의 쇠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제 구조의 변화 혹은 업종 자체의 위기가 산업도시 전체를 붕괴시키는 사건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감정적 그리고 정동적 삶으로서 도시의 삶에 대한 이해는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정치적, 경제적 사건으로 인식하면서도 정작 그것을 구성하는 정동적 흐름들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동적 사건이 지리-역사성을 지닌다는 점일 것이다. 우선, 2010년대 들어 조선산업에 발생한 위기의 시점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은 대량 실업으로 이어졌다. 이는 개인의 실존적 위기는 물론 산업도시 전체의 구조적 위기를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인간관계 및 사회관계들의 위기가 발생한다. 조선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노동인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공사 기간 역시 다른 산업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조선소 노동자들은 조선소 부근에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살아간다. 이 과정에서 가족구조, 주거환경 등 하나의 공통된 삶의 패턴을 공유하는 주거 공동체가 구성될 수밖에 없는데,[5] 조선소 노동집단은 어떤 의미에서 산업도시 공동체로 묶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해왔다. 양승훈(2019)이 조선소 도시 공동체를 '중공업 가족 공동체'로 부르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따라서 조선소의 위기는 도시 공동체의 위기로 인식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감정과 정동적 삶의 변화를 추적하지 않고는 조선산업도시의 시공간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이 조선산업의 위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동적 사건인가? 이를 이해하는 데, '유동하는 공포'를 우리 시대 고유의 정동으로 규정해왔던 바우만의 논의가 참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바우만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위험, 그리고 그것에서 파생되는 공포를 세 가지로 분석한다. 첫째, 우리의 신체와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차원에서 사회질서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소득이나 고용 등의 환경에 영향을 줌으로써) 위협하며,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위험(질병 또는 노쇠에 따르는 위험이 그런 예다)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각이 통하지 않고, 정신이 산란해지는 회색의 영역

이다. 바우만은 이를 우리가 사는 집을 무너뜨리고, 직장을 없애고, 우리 생명마저 위협하는 재난이라고 말한다. 바우만은 이를 문명화된 삶의 세계 전체의 위험으로 이해한다(바우만, 2009, 16). 그가 말하는 문명화란 곧 조직화된 삶의 요소다. 즉, 정규적이고, 예측가능하고, 균형이 잡혀 있고, 일정한 행동방식을 지시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혼자만의 추락, 또는 여럿이 함께 하는 추락이겠지만 어떤 경우에든 삶의 기본 요소들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믿을 만한 의지처가 존재하는 세계로부터 추방되는 경험이다(바우만, 2009, 35). 이처럼 우리가 오늘날 겪는 공포와 위험은 개인, 사회, 세계 세 층위에서 발생한다. 조선산업도시를 감싸고 있는 특이한 정동적 분위기는 바로 이러한 세 층위의 공포와 위험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선, 실존적 차원에서 조선산업도시의 분위기는 조선산업 위기 자체를 위기, 즉 계산할 수 있고 그러므로 언제든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리스크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실존적 '위험'으로 느껴진다. 조선소 노동자들, 가족들, 공생하는 중소업체들, 도시 상인들은 사태 자체의 해결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삶의 심층에까지 스며든 어떤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한다.[6] 특히 노동자의 경우에는, 조선소 특유의 환경에서 기인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실존적 차원에서 이미 실재하고 있었다. 실수가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지는 노동 환경에서, 노동자들은 공포를 일상적으로 경험한다.[7] 그들의 삶에서는 실재하는 죽음이 현실적 위험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의 여파는 오랫동안 개인의 느낌 속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긴다. 그들의 노동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행해진 것인 만큼, 이러한 공포감은 노동자들 개개인의 억울함과 분노라는 감정으로 주체화된다.[8] 공포가 새로운 '미래'의 위험을 끊임없이 현재화하도록 만든다. 공포는 위기 속에서 개인의 신체는 물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강도(强度)를 형성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실존적 공포는 단순히 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전체 산업도시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과 공포로 변형되어가고 있다. 개인 내면에서 출현한 공포의 감정 혹은 정동적 떨림은 계속적으로 축적되어 도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서 출현하는 한 개인의 신체적 흔적들은 한 개인의 삶을 초과한다. 그것은 집단적인 도시 분위기로 형성되어 가는데, 도시를 구성하는 '파이프와 케이블'(Thrift, 2004)처럼 도시의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로 변형돼 간다. 이처럼 집단화된 감정들과 정동은 그 자체로 조선도시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간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들이 발의되어도, 그것은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더 큰 위험과 공포의 감정들에 의해 불신된다.[9] 예컨대 거제의 눈물, 옥포만의 눈물, 통영의 눈물 등, 스웨덴 말뫼에 위치한 조선소가 폐업하면서 도시 전체가 슬픔에 잠긴 사건을 표현하는 말이었던 이른 바 '말뫼의 눈물'이 끝없이 인용되었다. 바로 도시에 드리운 공포의 감정과 정동들이 하나의 구체적인 도시 이미지로 강화된 결과였다.

이제 실존적 공포는 집합적 분위기로 변형되어가고 있음이 관찰된다. '구조조정'이라는 말 자체를 도시민들은 개인과 집단 전체의 안정성 파괴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산업의 쇠퇴가 곧 도시 전반의 몰락이라는 집단적 공포가 형성된 것이다. 그것은 이미 통영의 중소형 조선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하나의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도시들에서는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현재 안으로 끌어들여 공포감을 경험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회 기반의 붕괴에 대한 공포는 조선도시 전체를 지탱해온 한 세계의 몰락으로 인식되어가고 있다. 사람들에게 위험은 매우 파괴적인 재난으로 느껴지고 있다. 산업도시 사회를 구성해왔던 세계 전체가 파괴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낀다. 바우만은 이러한 공포감을 타이타닉 신드롬으로 표현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문명의 종잇장처럼 얇은 외피를 뚫고 문명화된 삶의 기본 요소들이 여지없이 제거된 무(無)의 한복판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다(바우만, 2009, 35). 물론 아직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도시 전체에 퍼진 공포가 어떤 형태로 변형될 것인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조선산업 도시 사회에서 공포의 감정이 객관적인 것

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24년 근무한 조선소 정상헌(43세)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4년 전 구조조정을 떠올렸다. 당시 그는 동고동락한 동료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했다. 그는 24년간 함께 일했던 부서원 중 절반이 해고되거나 희망퇴직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신도 해고된 선후배들처럼 해고될 것을 불안해하고 있다"(중앙일보, 2019.3.14). 한때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일컬어졌던 산업역군들은 이제 과거의 환영이 되어가고 있다. 성실히 일하면 누구든 중산층의 삶을 누릴 것으로 기대했던 조선소의 꿈은 여지없이 부서진다. 조선소가 폐허로 변해간 것을 그들은 이미 목격한 바 있다. 그 많은 조선소의 노동자들은 이른바 사내하청이 되어 또 다른 일자리를 따라 끊임없이 떠돌아다닌다. 따라서 이러한 정동의 강렬화 과정은, 조선도시 사람들에게 조선산업의 위기가 리스크가 아니라 위험이며, 그것은 그들의 삶 전체를 붕괴시키는 '재난'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포감이 무기력감으로 번져간다면, 어떤 위험도 희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점쳐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재난이 될 것이다. 바우만은 무기력감이 공포가 가져오는 가장 두려운 영향이라고 말한다. 조선도시에 형성되고 있는 유동하는 공포가 무기력감으로 변형되고 있는지 잘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10] 개인적 불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공동체 차원의 보장정책마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조선도시 사회의 무력감은 무방비하게 확산될 것이다. 공포가 무엇으로 변해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포의 감정이 강화되면 될수록, 바우만이 말했던 것처럼 집단에 대한 열의와 연대성은 사라지고 만다. 그것은 산업의 위기가 아니라 도시의 감정 구조를 침식해 들어가고, 마침내 도시 사회 전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소설이 있다. 김숨의《철》(2008)이 그것이다. 이 소설은 실제 조선산업 도시의 구조조정과 대규모 실직자가 양산되었던 2010년대 이전에 발표된 작품이다. 아직 조선산업의 위기론이 부활하기 전이다. 그럼에도 이 소설에서는 끊임없이 죽는 노동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마을 전체가 녹으로 뒤덮이는 광경들이 매일 같이 반복된다. 물론 그것은 산업도시 일반의 풍경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가가 국가 주도의 산업화 전체를 재난으로 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 철선을 만드는 조선소가 있는 도시가 선택된 것이다. 이 소설 속에서 철선의 모습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다. 다만 끊임없이 철선을 만들기 위해 '쇠'가 필요하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조선소에서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조선소에서는 날마다 녹이 날아와 마을 전체를 뒤덮는다. 쇠에서 녹이 되기까지 긴 세월이 걸리지 않는다. 생을 유지해왔던 노동은 이제 죽음의 노동으로 변환된다. 여기서 '녹'은 어떤 정체성도 지니지 않으며, 그것은 그저 녹으로 표현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매우 미세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무시된다. 하지만 녹은 점점 더 쌓여가고, 마침내 녹은 조선소 마을 전체를 죽음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린다. 녹은 물질적이지만 그것에 대한 재현은 불가능하다. 마침내 마을 전체가 녹에 묻혀버릴 때까지 아무도 녹을 막을 수 없다. 소설 속에서 그것은 산업화가 내놓는 오염물질일 뿐만 아니라 언어가 되지 못한 수많은 노동자의 정동 혹은 느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고찰한 '유동하는 공포'의 생산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 정동 공동체(affective community)의 구성과 균열

도시의 정동적 분위기는 새로운 정동 공동체의 구성 혹은 재구성의 환경을 만든다. 실직과 해고라는 실존적 위험과 도시의 쇠퇴라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도시 전체가 복구 불가능한 폐허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문화-정치적 실천이 전개된다. 도시 전체에 유동하는 공포의 감정/정동들은 하나의 특정한 지리적 상상력과 결합하면서, 특정한 감정들을 공유하고 정동적으로 정렬된(aligned) 정동 공동체가 출현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정동 공동체는 사람들이 공포의 감정과 정

동을 공유하고 강화해 나아가면서 형성된 하나의 도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누구이며, 어떤 정동적 연합과 집적을 통해 구성된 것인지를 추적하는 것은 조선도시 사회의 변화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동 공동체로서의 조선산업 도시의 삶은, 이들이 특정한 지리-역사성을 공유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조선소 노동자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이들을 둘러싼 도시 연합은 상대적으로 특정한 공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선산업 도시 공동체의 구성 경로를 살펴보면, 조선소가 건설된 도시의 공간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거제나 울산이 대표적인데, 조선소는 도시 주변부에 형성되어 있으면서,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형 주거 공동체'가 형성된다. 김준(2005)은 울산 현대조선소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동쪽 해안지역에 건설된 것, 그리고 조선소가 건설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곳으로 이주했고, 이에 따라 주택과 사회 기반시설이 새로 구성되면서 조선도시가 형성되었음을 주목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대적으로 고립된 공간적 분리가 조선소 노동자의 삶을 분리시킴과 동시에 동질적인 노동자 주거 공동체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적 집적에 의해 형성된 삶의 동질성이 노동 공동체의 내적 응집력을 강화시켰다고 보았다.

공간적 분리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그것이 산업도시 노동자들의 삶에 동일성을 부여하는 조건이었다는 사실에 있다. 산업도시 사회는 비슷한 도시경험을 토대로 공통된 기억들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로서의 역사적 계층 의식을 공유해왔다.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조선소 특유의 산업 환경과 조건,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장치들이 공유되면서 만들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거대한 골리아스 크레인과 조선소의 주요한 산업시설, 이로부터 구성되는 경관, 그리고 조선산업 도시를 둘러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재현 장치들의 조합에 의한 효과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집단화된 노동자 공동체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그림자들의 섬》(2016)에서 보다 분명한 증언들을 확보할 수 있다. 다음은 1987년 한진중공업에서 일어난 노동파업 과정에 대한 증언들 중 일부를 발췌했다.

> 어느 날 갑자기 식사를 거부를 하자 하든지 유인물 그걸 처음에는 유인물을 뿌리는지 몰랐는데 김진숙이 이정식 이러더라고. 근데, 그게, 동참이 그렇게 많이 될 줄 몰랐는데, 하다보니까 동참이 많이 된 거죠. 회사가 그걸 굉장히 분노를 하고, 누가 또 대자보에다, 뭐, 우리의 요구 몇 가지를 적고 파업을 해야 한다고 뚜드리니까, 우리, 인제, 과장들이 실지로 나와가, 대자보를 뜯고, 이러한 도중에 현장직원이 싸움을 하고, 갑자기 서로가 참았던 게 **갑자기 울분이 터지면서 파업이 된 거지**(윤국성, 선각탑재파트, 1985년 입사, 인터뷰 내용 일부).

파업을 촉발한 것은 의외로 '식사'로 제공되는 도시락 때문이었다. 주동한 사람 역시 이때 발생한 '도시락 거부 투쟁'의 규모를 예상치 못했다고 한다.[11] 도시락 하나 때문에 파업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노동자의 삶에서 지리-역사적으로 축적되어 '고통스러운' 정동들이 하나의 대상(도시락)에 점착되었으며, 결국 '분노'의 감정으로 강렬화된 신체들로서의 노동자 집단이 구성된 것이다. 이 점에서 도시락 파업은 그야말로 하나의 '정동적 사건'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조선산업 노동자의 삶의 근접성과 유사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각기 다른 신체에, 다르지만 비슷비슷한 신체적 감응 상태들이 반복됨으로써, 그리고 그것이 흔적처럼 노동자의 신체에 축적되면서 서서히 오랜 기간에 걸쳐 서로 조음(調音)되어온, 집단적 분위기가 존재했다. 따라서 도시락 사건은 노동자의 신체에 각인되어 있던 정동적 느낌들이 일순간에 정치적인 사건으로 구성된 사례이다. 1987년 노동투쟁에서 소수가 아니라 대단위 집단 투쟁이 가능했던 것도 이러한 정동의 집적과 순환 과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통'의 개별적 정동들은 어떻게 '분노'의 감정으로 주체화될 수 있었을까. 아메드(2015)는 행복한 대상을 유지하고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한 집단 내 정

동의 동일성이 존재하며, 이를 정동적 정렬(aligned)이라고 부른 바 있다. 하지만 조선산업 도시에서 구성된 정동적 신체들은 이러한 행복한 대상으로 정향된 정동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의 '행복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정동들로 정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행복한 정동에 대한 소외(alienated)의 정동들이 축적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불만과 분노의 감정이 강화된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말할 수 없어 신체적 반응으로만 존재하던 정동들을 결합해갔다. 소외된 감정들이 강렬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변형되는 정동정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선소 노동에 대해 사회가 부여한 산업역군으로서의 정동적 가치와 그것을 경험하는 방식 사이에서 틈이 발생하면서 일련의 소외의 정동들이 출현한다. 노동자들이 구성했던 분노의 서사는 정동 소외자로서의 노동자의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처럼 견고해 보이는 도시 공동체의 내면을 진정으로 균열을 내는 이유들은 다른 곳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불균등한 정동의 분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그것은 기존의 주거 공동체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 공동체의 내파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12] 이는 앞서 살펴본 정동 공동체를 뿌리부터 흔드는 혹은 공간 자체를 변형시키는 보다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물음들을 환기시키는 장소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우선 조선산업 내부의 원청과 사내하청 사이에서 정동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자. 이미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증언들이 집적되어 있다(박종식 2014; 허환주 2016; 양승훈 2019). 양승훈(2019, 95)은 조선산업에서 철저한 이중노동시장화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조선산업의 위기는 산업 인구 중에서 원청보다는 사내하청업체에,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집중된다.

우선, 2016~2017년에 걸쳐 단행된 대규모 구조조정에서 직영 생산직 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을 지켜낼 수 있었지만 사내하청업체들은 줄도산하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동남권에서 3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실직으로 이어졌는데, 그 피해는 오롯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떠안게 되었다는 것이다(양승훈, 2019, 101). 한편, 해고자 중에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월등하게 높았다.[13] 그것은 취직률에서도 이미 나타나는 차별적 현상이었다.[14]

조선산업 도시에 편재하는 유동하는 공포는 이러한 차별선을 따라 다시 재생산된다. 이른바 그것은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이후 사내하청에 취직한 수많은 실직자들에게 조선소의 위험작업들이 배당되면서 발생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도 포함된다. 허환주(2016)는 현대조선에서 일어난 원청과 사내하청의 차별적 관행에 대해 쓰고 있는데, 여기 수록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에서 꺼려하는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일상적으로 느끼며 살아간다.[15] 위험과 공포의 정동이 어떻게 불균등하게 혹은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실제로 하청에게 지급되는 안전 장비까지도 제한이 있으며, 이러한 차별에서 오는 깊은 소외감이 사내하청 노동자와 원청 노동자 '사이의 공간'에 자리잡아가고 있다.

박종식(2014, 151)은 조선 노동자들이 중대형 조선소의 사내하청업체뿐 아니라 선박블록제작업체와 같은 외주제작 부품업체로도 자유롭게 옮겨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시급 수준에 따라서 조선업체들이 위치한 "(남해안의) 목포에서 울산까지" 어디든지 이동하고 있다. 그는, 일하던 사내하청업체의 일감이 줄어들어 쉬게 되는 경우 단기간 동안만 물량팀으로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경험은 사내하청 노동자 대부분이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조선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한 사업장에 머무르지 않으면서 잦은 이동을 하고 있는 양상을 포착하는 개념으로 '유체적인 노동시장'(liquid labor market)이라는 의미 있는 문제 틀을 제시한다(135).

말하자면, 조선산업도시에 구성된 유동적 공포 배후에는 이러한 유체화된 노동 시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의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포와 불안정, 소외감, 차별감 등의 정동이, 향후 어떻게 발전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명확한 것은, (원청) 노동자와 (사내하청) 노동자 사이에 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틈에서 발생되는 정동들은 기존의 정

동 공동체 안에서는 충분히 재현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조선 도시 사회의 정동적 분위기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신체를 관통하면서 재구성되고 있다. 강철과 용광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느낌들,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끊임없이 경험하는 죽음에 대한 사실적인 공포감, 불확정적인 미래에 대한 두려움, 구조조정과 반복되는 해고의 위험, 사회적 차별과 소외의 과정들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신체 안에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따라서 유동하는 공포를 단순히 도시의 희망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현재로선 거의 불가능하다. 그것은 이미 오랫동안 조선산업 도시 사회에서 건설되어온 노동자 공동체 자체에 균열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16]

이제 주거 공동체로서의 근접성과 노동환경의 유사성 개념만으로는, 조선산업 도시사회를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산업화 시대의 도시 공동체는 사실상,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 바우만이 지적했듯, 유동하는 공포는 개인화될 뿐 약자 간의 연대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조선소를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삶이 조선소 노동자를 전통적인 노동 공동체로 재현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균열 지점이라는 사실이다. 기존의 재현을 초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동적 신체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 정동의 재현과 새로운 정동의 생산 가능성

이제 이러한 정동이 매개하고 매개되어지는 재현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재현되고 의미화된 기호들 속에서 포함되지만 그것을 초과하는 비재현적 요소들을 추적하고자 한다. 우선, 소설 편혜영의 《죽은자로 하여금》(2018)에서 이러한 과정의 예시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조선도시의 분위기를 재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현된 것 이상의 도시 분위기를 그려내고 있는데, 이는 조선도시의 '유동하는 공포'의 비재현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소설에서 강조되는 것은, 사람들과 조선소 풍경, 도시 공간 사이에서 끊임없는 마주침과 조합에 의해 형성되는 관계적이고 감정적인 공간이다. 물론 작품의 주요 공간은 병원을 무대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체 도시 풍경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도시의 쇠락과 함께 병원을 자본 논리에 따라 재편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다. 소설 속 도시 풍경은 지금의 조선도시의 분위기를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17] 주인공은 조선소가 도시 사람들에게 어떤 꿈을 꾸게 했는지를 회고한다.[18] 하지만 설레임 속에서 그려보았던 미래는, 비통한 현재가 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결국 조선소 경관을 상징하는 골리아스 크레인이 해체된다.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조선소가 세워지고 해체되는 과정 전체를 지켜보면서도, 이를 화제로 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 처음 이인시 터미널에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도 천 톤이 넘는 몸체로 위태롭게 서서 이인시를 내려다보던 이 크레인이었다. 무주는 탄성을 내질렀지만 아내는 금세 시선을 돌렸다.
>
> 나중에 무주는 선도병원 사람들에게 크레인은 왜 아직도 남아 있는 거냐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그들은 모르겠다는 듯 어깨를 으쓱 들어 올리고는 그만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무주는 이곳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는 전혀 화제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편혜영, 2018, 200).

즉, 중요한 것은 바로 위의 예문처럼 '말해지지 않는 것', '재현될 수 없는 것'들이 도시 분위기의 본질적 차원이라는 것이다. 재현되지 않았으나 이미 물질성을 획득한 정동들이 도시의 구조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문제 틀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골리아스 크레인은 그 자체로 조선산업도시의 정동적 분위기를 상징한다. 그것은 도시의 안과 밖의 경계를 가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 즉 도시 바깥의 사람들에게 크레인은 하나의 기이한 풍경에 불과하다. 하지만 도시 내부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고통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정동적 대상이다. 사실 주인공 무주는 조선소가 폐업하면서 쇠락한 도시에서 '무서움'을 느낀다. 그러

나 그마저도 그 도시에서는 말해질 수 없었다. 이는 표현할 수 없는 것, 즉 의식 이전의 신체적 감응으로 각인된 어떤 것이 재현되지 않은 채 신체 안에 가라앉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도시의 분위기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살아 있는 마주침들이 제거되고 오로지 단일한 사물 안에 정동들이 점착되면서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포와 무서움의 정동이 언젠가 분노, 소외감, 무기력감 등으로 변하면서 정동의 공간 정치가 재구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갑작스럽게 출현하는 정동들은 단순히 신체의 자율적 반응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작가는 그것을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콘텍스트와 조합하면서, 새로운 정동들을 생산해 낸다. 예를 들어 이 소설은 조선산업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존경쟁의 풍경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작가는 또 이를 수도권 도시의 정동과도 비교한다. 수도권은 타인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으로 인한 게이트화된 안전한 공간을 구성한다. 예컨대, 주인공(무주)이 오랜만에 자신이 살던 서울에 돌아와, 그새 재개발된 고층 아파트 단지(반포)에 들어간다. 그가 있던 조선도시('이인市')의 '송곳 같은 무서움'이 없다는 점에서 순간 안정을 되찾는다. 하지만 그것은 그를 수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로, 아파트에서 나갈 줄 것을 권고 받기 전까지만 유지된다.[19] 이제 주인공은 조선도시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다른 또 다른 두려움을 느낀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조선도시의 유동하는 공포는 이러한 도시적 '안전함'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유령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산업 도시의 정동들이 중심과 주변의 위계화라는 지리적 통념들과 결합하면서 다시 새롭게 재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동하는 공포는 현대사회 어디에나 편재한다. 하지만 그것은 지리적으로 불균등하게 '분배'되며, 이는 정동의 공간적 분리화와 위계화라는 또 다른 결과들을 가져온다.[20]

따라서 조선산업 도시의 위기를 리스크화함으로써, 새로운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는 섣부른 희망을 고무시키는 것만으로는 현재 조선도시를 감싸고 있는 유동하는 공포를 충분히 다 해소할 수 없다. 그것의 뿌리를 파고들어 정동이 어떤 감응적 도시를 만들고 있는지를 추적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정동의 생산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그것을 정책입안자나 설계자의 의도적 해결책 (대부분의 산업도시에서 관광기획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제시만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도시의 정동들을 생산하기 위한 다른 방식의 아상블라주가 요구된다. 즉, 스리프트(Thrift, 2004)가 말한 도시의 파이프와 케이블이라고 부른 새로운 정동의 공학을 창조해야 한다. 스리프트는 한 예로 미학적 실험에 대해 소개한다. 미학적 공학을 통해 잠재적 신체 역량을 끌어올리는 실험이 필요하고 말한다. 이를 위해 산업도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비재현적 정동과 감정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 그 변화와 흐름을 충분히 사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땐뽀걸즈》(2017)는 그러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영화는 조선도시 거제를 중심으로 조선산업 도시 사회를 재현하고 있다. 《땐뽀걸즈》의 주인공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조선도시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의 댄스동아리 여학생들이다. 이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다. 주인공 모두 거제여상에 다니고 있으며, 아버지나 가족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조선소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실직이나 이직을 한 상태이다. 그녀들의 삶에서 '댄스'는 이러한 일상적인 삶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경험이다. 땐뽀걸즈에게 댄스라는 행위의 의미는, 거제여상을 나와 거제 조선소에 취직하는 정해진 삶을 부정하며 (그러나 불확실한 방식으로) 구성된다. 영화는 이러한 댄스를 통해 분출되는 신체적 힘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정동적 가치로 재현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노동의 소외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된 기존의 정동 공동체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다. 주인공 중 하나인 김현빈(당시 18세)은 고기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그녀는 이런 말을 한다.

> 여자들이 이런 일을 하나에서부터 손님들이 막 다양한 말을 하거든요? 왜 이런 일을 하냐, 학교는 다니냐, 일을 하면 학교에서는 안 피곤하나. 근데, 저는 뭔가 그런 말 들으면 더 하고 싶어요. 남자들이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요, 왠지.

이는 '땐뽀걸즈' 자체가 지니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기존의 조선산업도시에서 형성된 남자와 여자의 성적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반발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느낌들은 여전히 정동의 상태로 존재한다. 그럼에도 땐뽀걸즈가 댄스에 몰두하는 모습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도록 만든다. 춤이라는 비재현적 행위 속에는 땐뽀걸즈 각자의 삶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정동들이(가족들의 이산, 홀로 남겨짐, 비통함, 가난 등에서 오는) 연합한다. 마찬가지로 이 다큐에서 등장하는 그녀들의 아버지 역시 말들을 많이 하지 않는다. 아버지들은 재현되고 있지만 비언어적인 표정들로 재현될 뿐이다. 조선소에서의 삶에 대한 이들의 침묵(혹은 의도적으로 제거된 소리)은 조선산업 도시를 표상해온 중공업 사회의 정동 공동체만으로는 규정되지 않는 미시적인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역사적으로 조선도시에서 형성된, 그리고 형성되고 있는 정동 공동체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비언어적 차원들 때문에 새로운 '공간적 정동 정치'의 가능성이 생겨난다고도 말할 수 있다. 도시 사회의 건강성이 이질적인 정동들의 무한한 마주침들이 만들어낸 차이공간의 생산이라고 한다면, 다큐《땐뽀걸즈》가 보여준 것은 바로 이러한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도시 사회에서 뿜어져 나오는 새로운 정동적 가치는, 이 영화가 애초에 기획했던 바, 거제 조선소의 구조조정과 쇠락하는 도시 분위기를 담기 위해 시작된, 감독이 밝힌 최초의 연출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든다. 실제로 영화에서는 대화보다는 댄스 동작과 음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댄스는 언어가 아니지만, 충분한 정동적 전이를 이루어낸다. 땐뽀걸즈의 주인공들이 지닌 각기 다른 삶의 경험들은 댄스를 통해 조음되어간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댄스는 땐뽀걸즈와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리듬화된 동작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전염시킨다. 즉시적이고 순간적이어서 포착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그것은 분명히 다른 무언가의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마도 그것은 마수미(2018)가 말했던 차이들이 한순간 얽혀져 만들어지는 '미분적 조음'(differential attunement) 과정이자 새로운 '정동의 조율'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비재현적인 조율 과정을 스크린화하는 과정 또한 무시될 수 없다. 댄스 동작들을 담아내고 하나의 이해 가능한 이야기로 서사화하는 과정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땐뽀걸즈가 만들어내는 미시적인 정동의 생산은, 실제로는 재현적 요소와 상호 매개되면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영화에서처럼 실제 조선산업 도시에서도 새로운 정동적 생산이 가능한지는 미지수이다. 사실상 그것은 거시적인 도시의 재현 장치들 속에서 미끄러질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 기실 영화의 서사는 거제의 삶을 낭만화할 뿐만 아니라 젠더화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땐뽀걸즈는 이 도시에서 그동안 재현되지 못한 잠재적인 정동이 무엇인지를 사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숙고의 가치가 있다.

4. 산업도시의 정동 정치와 그 가능성

이 글은 정동적 도시론의 시각에서 한국의 조선산업 도시들에서 구성되고 있는 정동적 분위기에 대해 논하였다. 2010년대 이후 조선산업의 위기가 도시 사회를 어떻게 변형시켜왔는지, 조선산업 도시의 정동적 삶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선산업 도시에서는 경제적 위기를 실존과 사회, 그리고 세계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위험은 도시 전체를 흘러 다니면서 도시의 경관에 달라붙어 강화되어 갔다. 이 글에서는 조선산업 도시 사회의 정동/감정의 핵심을 '유동하는 공포'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유동하는 공포가 만들어내는 정동적 분위기 및 이 과정에서 균열이 만들어지고 있는 전통적인 노동자 공동체로서의 정동 공동체의 내면도 살펴보았다.

또한 본고는 이러한 정동의 생산이 향후 조선도시를 어떻게 변형시킬 것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논의를

전개했다. 조선산업 도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동들은 유동하는 공포와 함께 분노와 울분의 서사로 발전해가는 것을 확인했다. 재현할 수 없는 정동들이 다양한 아상블라주를 통해 재정렬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동적 사건은 하나의 정치적 사건으로 변환되어 갔다.

그런데 이 글은 이러한 정동의 정치가 사실은 결코 균일하지도 통합적이지도 않은 정동 주체들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즉, 조선산업 도시 사회를 구성해온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공동체는 일종의 파열 과정을 겪고 있었다. 이른바 유동하는 공포의 정동은 도시 전체에 흩어져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의 분배 과정은 결코 균등하지 않았다. 정동적 도시론의 관점에서 보면, 조선도시는 원청과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별선을 따라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공간으로 재구성된다. 이러한 분배의 불균등성은, 기존의 전통적인 정동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면서 해체시킬 수 있는 힘들을 축적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요한다. 따라서 조선산업 도시는 기존의 기업가와 노동자 사이의 미끄러짐뿐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동의 불균등한 분배의 과정에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것은 다른 맥락에서 보면, 기존의 노동 서사에서 누락되어왔던 도시의 정동적 장소에 대한 강조일 수밖에 없는데, 이 글은 이를 새로운 공간적 정동 정치의 중요한 변환점으로 재인식하고자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공간적 정동 정치가 단순히 자율적인 정동적 조율의 보편성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관점을 분명히 했다. 비재현적 정동과 감정, 그리고 느낌들을 서사화하고 재현할 수 있는 과정 또한 요구된다고 생각했다. 관건은 비재현적 정동의 힘들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재현의 장치들을 고안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아직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동 자체는 언제든지 조정되거나 조율될 수 있으며, 그것은 어떤 정치적 목적과도 조합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동을 출현시키는 것은 사회의 재현 장치들을 바꾸고 변형시키는 작업과 병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희망을 외삽시키는 것만으로 조선산업 도시에 구성되고 있는 부정적인 정동적 현실을 전환하기는 어렵다. 정동과 현실적 장치들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조합시킬 수 있는 도시의 정동 공학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러한 정동적 도시론의 관점을 좀 더 체계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아울러 분석 사례 역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산업도시 현장에서 그리고 도시에 축적된 경험론적 사례들을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한 점은 이 논문의 가장 큰 한계라고 생각한다. 논문의 한계들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해가면서, 향후 환동해지역(동북아시아)에 편재하는 산업도시들의 노후화와 쇠락화 과정에 대해서도 정동적 도시론의 관점에서 통합적인 논의를 시도해보려 한다.

주

1) 정동의 개념에 대해 마수미(2018)는 철학자 스피노자가 말한 “정동하고 정동되는 힘(역량)”에 뿌리를 둔다고 말하고, 그것이 심리적 규정이 아니라 몸체의 삶(생명력)에 대한 규정이라고 강조한다. 정동하고 정동되는 힘은 움직이고, 행동하고, 지각하고, 생각하는 일종의 잠재력이며, 존재의 역량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스피노자의 ‘정동되는’이라는 말이 몸체의 존재의 역량이 반드시 관계적이라는 것을 내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것들은 다른 신체들이나 다른 환경 요인과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동하는 힘과 정동되는 힘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그것은 능력들을 다른 것과의 그리고 외부와의 얽힌 관계에 묶는다. 정동은 본질적으로 초개체적(transindividual)이다.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브라이언 마수미의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전개되었다.

2) 양승훈에 의하면, 울산의 경우에는 조선산업의 중심지라고 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울산은 다양한 산업군을 보유한 도시이며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시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거제는 오로지 조선산업만을 위한 도시이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거제와 그 인근에서 기자재와 블록을 제작해 공급하는 광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거제시 취업자의 절반을 차지한다(46.3%)(양승훈, 2019, 43).

3) 앤더슨은 듀스베리(Dewsbury et al., 2002, 438)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인용한다. “재현은 파괴되어야 하는 하

나의 코드(a code)도 아니고 없애버려야 하는 환영도 아니다. 오히려 재현들은 그 자체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서 수행적인 것(the performative)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어진 의미로부터 재현의 물질적 구성과 행동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이다(Anderson, 2014, 60).

4) 2016년 상황을 살펴보면, 배규식 외(2016, 44-45)의 보고서에 의하면, 경남지역에서는 조선산업에서 2015년 말과 2016년 9월 말 사이에 24,232명의 인력이 감소하여 21.9%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사내하청 인력이 19,923명이 줄어들어 25.5%의 감소율을 보이고 직영인력은 4,338명이 감소하여 13.5%의 감소율을 보인다. 기업들 가운데에는 대우조선해양에서 13,999명이 줄어들었고 그 가운데 사내하청 인력이 13,385명이 줄어들었다. 그다음으로는 가장 극심한 인력조정을 겪었던 STX조선해양에서 전체 3,276명이 감소하였고, 그중 사내하청 인력이 2,416명 감소하였다. 비율로는 각각 41.4%, 44.6%가 감소하여 감소율로는 가장 높았다. 또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시군 지역별로는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 위치한 거제시의 고용감축 규모가 16,525명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창원시가 3,276명이었으며, 고성군 −1,900명, 사천시 −1,304명으로 천 명 이상의 대량 실직자를 방출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계했다. 이 기간 동안 중소 조선소가 밀집한 통영시의 고용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인데, 통영에 소재한 5개 조선소 중 3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 여건의 악화로 수주량 등이 급감하면서 이미 도산해 폐업했거나 매각되어 휴업 중이기 때문이다.

5) 김준(2005, 90-91)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소 도시는 하나의 회사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거주지가 지역적으로 집중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동자 주거공동체가 형성된다. 특히 회사의 주택공급에 따른 대규모 사택 및 단지의 조성과 그에 따른 노동자와 가족들의 공간적 밀집과 그에 따른 빈번한 상호 작용이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숙사들은 비좁고 개인생활이 보장이 되지 않았지만, 그 대신 비슷한 연령대의 젊은 노동자들의 공동생활경험은 자신들의 동질성을 확인하기에 좋고 빈번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유대감을 강화하기 좋은 환경이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로 하여금 노동, 주거, 소비, 문화, 사교 등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서 자신들의 동질성과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하나의 공간적 조건이다. 또 논자는 이러한 주거공간은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인접 계열사의 노동자들과 함께 살게 되므로 단위 기업을 넘어선 동질감이 형성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6) 조선소에 사는 생산계획담당 작업반장 김종배(50)씨는 "지난 구조조정 때 무렵 다들 불안해하는 와중에 '나는 이 회사에서 퇴직할 자신이 있다'고 말하면서 미친 듯이 일했는데 민영화 소식이 들려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금도 억울하고 불안해서 집에 가면 잠이 오지 않는다"며"산업은행은 구조조정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를 믿은 조합원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중앙일보, 2019.3.14).

7) 위험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이 발동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러한 권리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다음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 하창민의 인터뷰 내용이다. "현대중공업 노사 간 협상으로 작업 중지권이 2015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은 없다. 몇 명의 담당자들이 그 많은 공장 부지를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적재적소에 작업 중지를 할 수 있겠나. 큰 성과인 양 부릴 필요 없다. 지금도 안전 관리 요원들이 돌아다닌다. 그들이 돌아다니며 사내하청 노동자가 위험한 일을 하거나 작업환경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하다는 스티커를 발부한다. 하지만 그런다고 위험이 사라지 않는다. 스티커를 붙이면 잠시 작업이 중단될 뿐이다. 위험 요소가 제거되는 게 아니다. 모든 시설이 재정비된 뒤, 일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 안전 관리 요원이 나오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둘 중 하나다. 재수 옴 붙었다며 도망치거나 그들을 상대로 꺼지라며 렌치 같은 장비를 던진다. 경고 스티커를 세 번 받은 노동자는 출입증을 반납해야 한다. 개인이 벌금도 내야 한다. 게다가 작업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정해진 시간 안에 내 일을 끝내야 하는데 방해받는다고 생각한다. '니가 뭔데 내 일을 방해하느냐!' 이런 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작업 중지권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 실효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할지 계속 고민해야 한다."(허환주, 2016, 51%)

8) 다큐멘터리 《그림자들의 섬》(2016)에 등장하는 인터뷰이 박희찬은 아버지의 권유로 조선 일을 시작했으며, 부당 해고 이후 노동조합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그는 "대기업 다니는 것도 좋지만 한 달 정도 다니고 나니까 그만두고 싶더라구요. 주변 환경,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거 같습니다."라고 말한다. 그 이유로는 "조선소가 최고 힘들다고 하는 것은 주변 환경인 거 같습니다. 강철로 되어있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이러면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그만큼, 조선소 작업장에서 노동자가 느끼는 감정은 죽음에 대한 위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해고를 당한 이후, 이러한 공포와 위험의 정동들은, 그 이전과는 달리, 분명한 하나의 감정, 즉 억울함과 분노로 표출된다. 그는 이러한 변화 과정에 대해 스스로 의식이 바뀌었다고 인식했다. "아 이게 화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내가 왜 해고를 당해야 하는지 인정하게끔 회사가 설명해주는 것도 없었고 그냥 회사의 어느 정도 쯤 노동조합 활동이라든지 해왔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했고요"라고 말한다. 결국 이 모든 과정

은, 공포의 정동이 분노의 감정으로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9) 2019년 이른바 조선소 빅3에 해당하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구조조정안이 현대중공업에 의한 인수라는 결정이 났을 때, 거제시민의 불신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게재된다. "거제시민도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대규모 인력 재편으로 지역 경제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다. 대우조선 정문 앞에서 음식점을 하는 배모(34)씨는 "현대 측에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믿어달라는 것은 우리를 눈뜬장님 취급하는 행위"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옥포동에서 중국음식점을 하는 유경숙(47)씨도 "현대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다 같이 잘 산다는 느낌보다는 대우조선이 협력업체처럼 변할 것"이라며 "(대우조선 매각 소식에) 지역상인들 분위기도 안 좋고 어수선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19.3.14) "거제 사람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소식에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거리 곳곳에 '거제지역 몰락한다 매각 중단하라' 등의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경향신문, 2019.3.9).

10) 바우만은 무기력감이란 인식되거나 추정된 위협 자체에 있지 않다고 강조한다. "뽑어 나오는 공포가 주는 위협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대응 사이에 펼쳐진 거대한, 그러나 진저리날 만큼 제대로 갖춰진 게 없는 공간에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공포가 아무리 비슷해도, "그것을 극복하는 일은 각 개인에게 달려 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끌어 모은다고 해서, 또 해당자들 모두에게 공포와 싸울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부여한다고 해서 꼭 타당한 방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바우만이 무기력감을 공포가 가져오는 가장 두려운 영향이라고 말한 이유이다(바우만, 2009, 42-43).

11) "한 번도 아저씨들이 관리자 앞에서 부당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지를 못했던 사람들이거든 그때는 도시락을 딱 갖다 놓고. 그때는 사람들이 불만이 느끼는지 뭔지 그 싸움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직장 앞에다가 도시락을 확 엎으면서 '느그집 개나 갖다 믹이라' 그러고 나서 아저씨들이 거에다 다 엎은 거야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거야. 우리는 솔직히 하루만 하려고 했거든. 걷잡을 수 없이 나간 거야." (김진숙, 선각조립파트, 1981년 입사, 인터뷰)

12) 그런데 이러한 경계가 흐려지는 정동 공동체에 대한 증언은, 노동운동가 김진숙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난다. 김진숙이 2011년 한진중공업 부당해고에 저항해 골리아스 크레인에 (T85)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전개할 때의 일을 회고하는 과정에서 희망버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물론 인터뷰의 초점은 다큐의 제목처럼 '그림자들의 섬'에 갇힌 노동자들의 정동적 소외를 정치화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증언 가운에 끼어든 그녀의 말은 노동자 공동체를 조선소 안에 공간화 또는 영토화해온 전통적인 개념에 균열을 내는 것이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13) 양승훈은 거제 중공업 도시의 공동체 구조를 산업사회학적 관점에서 논의하면서, 소위 땐뽀걸즈로 상징화된 거제에서 태어난 딸들의 이야기를 조명한다. 그는 딸의 이야기가 중공업 가족의 여러 모순들을 폭로한다고 말한다; "스무 살이 넘은 딸들 다수가 섬을 떠난다. 대학 입학과 취업 때문이다. 거제에서 자라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딸들은 보통 스무 살이 되면 떠나는데,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거제로 잘 돌아오지 않는다. 거제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괜찮은 정규직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도시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취업 자체를 꺼린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일 것이다. 또한 예전처럼 남편의 벌이 하나만을 믿고 가계를 꾸려나기에는 조선산업의 사정이 어려워졌다. 다시 말해 젊은 남성들의 직영 정규직 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비정규직의 '뜨내기' 삶으로는 온전히 가계를 꾸려내기 어려워진 것이다."(양승훈, 2019, 87).

14) 산업도시에서는 남성 종사자 수가 여성 종사자 수를 압도한다. 제조업의 경우 남성종사자 비중이 광양(92.3%), 거제(89.3%), 울산(88.6%)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장철순 외, 2014, 61).

15) 다음은 김형균 현대중공업 노조 정책실장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사내하청이 위험과 공포에 노출되는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직영은 현장에 노조 대의원이 있어요. '이거 위험한데 안전하게 해줘, 물 먹게 해줘' 등을 쉽게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내하청은 그렇게 못하죠. 본인들이 요구할 수 있는 토대 자체가 없어요. 어디 이야기할 곳이 없으니 더 답답한 거죠. 차별받는다는 박탈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 이런 것이 불안정함을 더하죠."(허환주, 2016, 80%)

16) 《그림자들의 섬》의 주인공들은, '민주노조' 조합원과 임원 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의 인터뷰 분위기는 조합원 이탈에 대해 걱정과 함께 하고 있다. 과거의 노동자들끼리 어울려 노동자로서의 집단적 주체화과정에 대한 회고와 상반되는 감정을 드러낸다. 이들은 이러한 조합원 이탈을 심각한 공동체 균열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이 지적하는 근본 원인은 사측의 간교한 전략에 의한 복수노조 건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노조 간의 경쟁이 조합원 이탈을 가져온 주된 이유 중 하나라는 시각이다.

17) "시내에서 바닷가 쪽을 빙 돌아가는 버스 노선이 있는데, 나는 그 버스를 타는 게 좋았다.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건조 중인 배가 조금씩 보였거든. 그게 너무 설레는 거야. 심장이 막 뛰었어. 여기 조선소에서 처음으로 벌크선 진수식

이 있던 날 말이야. 그게 벌써 10년도 더 전인데, 갓난아이를 안고 아내랑 보러 갔어. 이 동네는 눈이 잘 안 오거든. 그런데 그날따라 엄청 눈이 많이 내렸어. 신났지. 가까이 가면 별크선이 안 보이니까 멀찍이 내려서 추운 줄도 모르고 걸어갔지. 그래도 한눈에 배가 다 보이지 않는 거야. 크기를 생각하면 그럴 만하지. 겨우 끄트머리만 보이다가 조금 더 가면 뭔가에 가려져 안 보이고 더 가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그런데 말이야. 나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세상에 내가 단숨에 볼 수 없는 게 있다는 거 말이야. 아무리 봐도 훤히 다 보이지 않고 한눈에 죄다 알 수 없다는 게 정말 좋았어. 면송리하고는 너무 달랐거든. 거기 너무 뻔했지. 동네 사람들 입속의 금니 개수까지 알고 지냈어. 시시하잖아. 그런데 배는 그렇지 않은 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게 여기 조선소에서 진수되는 배인 줄 알았지. 나중에 꼭 저 배에 타봐야지 결심했어. 누군가는 저렇게 큰 배를 타고, 배에 철강이랑 곡물 같은 걸 실어서, 별의별 걸 다 싣고 오대양 육대주로 가겠지 하고 생각하면 덩달아 흥분됐어. 그 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계속 살 작정을 했어. 배는 온데간데없고 술 마시는 인간하고 고철만 남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지."(편혜영, 2018, 23-24)

18) "원룸촌 끝에 서서 무주는 골리앗 크레인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한 빛으로 허공에 걸린 크레인을 보자 안전시설 같은 건 없다던 이석의 말이 실감 났다. 크레인은 곧 해체되어 루마니아로 팔릴 예정이라고 했다. 해체에만 석 달 넘게 걸린다고 하니, 이제 이인시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크레인이 조금씩 제 모습을 잃고 무너져가는 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편혜영, 2018, 198-201)

19) "죄송하지만 주민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단지는 외부인의 경우 출입에 자제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라는 사내의 말투가 하도 깍듯해서 무주(주인공)는 항의할 생각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선다(편혜영, 2018, 203-205).

20) "호황이던 조선 사업의 위기는 조선소 밀집 지역인 이인시에 직접적이고 재빠르게 영향을 미쳤다. 산업단지 인근 시설은 조선소를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어서 조선소가 폐쇄되자 모든 게 일시에 멈춰 섰다. 선박 수주 계약이 비눗방울처럼 일순간 사라져버리면서 폐업이 속출했다. 협력업체들은 부도를 내거나 적자를 감수하고 철수했다. 남은 업체는 규모를 대폭 줄여 근근이 유지했다. 체불 임금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시 이탈 인구수가 급증했다. 외지에서 온 근로자들은 다시 빈털터리가 되어 이인시를 떠났다. 이인시 출신 노동자들은 백수가 되어 주머니에 한 푼도 없이 거리를 배회했다. 도심에 빈집이 늘었다. 노동자의 숙소나 마찬가지였던 원룸 주택단지는 빈사상태나 다름없었다. 상가 매물이 쏟아졌다. 호황시에 우후죽순 개업한 가게와 식당 등의 폐업률이 높아졌다. 가동 중단이 결정된 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다.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고 그럭저럭 지내는 것은 공무원뿐이었으나 발령 인원이 줄고 조직 규모가 축소되었다."(편혜영, 2018, 20-21)

참고문헌

김숨, 2008, 철, 문학과지성사.

김정근 감독, 2016,《그림자들의 섬》.

김준, 2005, "잃어버린 공동체?: 울산 동구지역 노동자 주거공동체의 형성과 해체," 경제와사회, 68, 71-106.

마수미, 브라이언(조성훈 역), 2018, 정동 정치, 갈무리(Massumi, B., 2015, *Politics of affect*, Massachusetts: Polity).

바우만, 지그문트(함규진 역), 2009, 유동하는 공포, 산책자(Bauman, Z., 2006, *Liquid Fear*, Polity press Ltd., Cambridge).

배규식 외, 2016,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대책, 한국노동연구원.

박종식, 2014, "내부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재해 위험의 전가: 조선 산업 사내 하청 확산과 원하청 재해율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송원섭, 2015, "경관지리학에서 경치지리학으로: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 경관연구 패러다임의 전환," 대한지리학회지, 50(3), 305-323.

신동규, 2017, "산업 공동화 현상과 프랑스 노동조합의 대응: 1945-2010 -낭트의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통합유럽연구, 8(1), 61-88.

심승희, 2001, "문학지리학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토마스 하디의 소설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3(1), 67-84.

심승희, 2012, "지리학과 지리교육이 문학에 접근하는 방식," 문학교육학, 37, 87-124.

아메드, 사라, "행복한 대상," 그레그, 멜리사·시그워즈, 그레고리 J.(최성희 외 역), 2015, 정동 이론 : 몸과 문화·윤리·정치의 마주침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 갈무리(Gregg, M. & Seigworth, G. J. (eds), 2010, *The Affect Theory Reader*, Duke University Press).

양승훈, 2019,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오월의 봄.

염미경, 2003, "지방산업도시 성장정치의 현재와 미래," 경제와사회, 60, 67−100.

염미경, 2004, "철강대기업의 재구조화전략과 지역사회의 대응: 일본 키타큐슈와 미국 피츠버그의 비교," 한국사회학, 38(1), 131−159.

이승문 감독, 2017, 《맨뽀걸즈》.

이은숙, 1992, "문학지리학 서설: 지리학과 문학의 만남," 문화역사지리, 4, 147−166.

이혁진, 2016, 누운 배, 한겨레출판사.

장철순 외, 2014, 산업도시 진단 및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http://library.krihs.re.kr//dl _ image/IMG/02/000000007887/SERVICE/000000007887_01.PDF

조정환 외, 2005, 비물질노동과 다중, 서울:갈무리.

조주은, 2004, 현대가족 이야기, 이가서.

진종헌, 2013, "재현 혹은 실천으로서의 경관: '보는 방식'으로서의 경관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8(4), 557−574.

크레스웰, 팀(박경환 외 역), 2015, 지리사상사, 시그마프레스(Cresswell, T., 2012, *Geographic thought : A Critical Introduction*, John Wiley & Sons).

편혜영, 2018, 죽은 자로 하여금, 현대문학.

허환주, 2016, 현대조선 잔혹사, 후마니타스[e−book].

Ahmed, S., 2004, "Affective Economies," *Social Text*, 22(2), 117-139.

Ahmed, S., 2014,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2nd edition, Edinburgh : Edinburgh University Press.

Anderson, B. & Harrison, P. et al., 2016, *Taking-place : Non-representational Theories and Geography*, edited by Ben Anderson and Paul Harrison, Durham University, UK.

Anderson, B. & Holden, A., 2008, "Affective Urbanism and the Event of Hope," *Space and Culture*, 11(2), 142-159.

Anderson, B., 2017, *Encountering Affect : Capacities, Apparatuses, Conditions*, Farnham: Routledge.

Böhme, Gernot, 1993, "Atmosphere as the Fundamental Concept of a New Aesthetics," *Thesis Eleven*, 36(1), 113-126.

Bondi, Liz, 2005, "Making Connections and Thinking through Emotions: Between Geography and Psychotherap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0(4), 433-448.

Conradson, D. & Latham, A., 2007, "The Affective Possibilities of London: Antipodean Transnationals and the Overseas Experience," *Mobilities*, 2(2), 231-254.

Edensor, T., 2007, "Sensing the Ruin," *Senses & Society*, 2(2), 217-232.

Edensor, T., 2012, "Illuminated Atmospheres: Anticipating and Reproducing the Flow of Affective Experience in Blackpool,"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30, 1103-1122.

Hemmings, C., 2005, "Invoking Affect: Cultural theory and the Ontological Turn," *Cultural Studies*, 19, 548-567.

Herod, A., 2003, "Workers, Space, and Labor Geography," *International Labor and Working Class History*, 64, 112-138.

Latham, A., & McCormack, D., 2009, "Thinking with Images in Non-representational Cities: Vignettes from Berlin," *Area*, 41(3), 252-262.

Leach, R., 2010, "Engineering the Surface to Affect its Function," *Measurement and Control*, 43(9), 278-279.

Massumi, B., 1995, "The Autonomy of Affect," *Cultural Critique,* 31, *The Politics of Systems and Environments*, Part II, 83-109.

Michels, C., 2015, "Researching Affective Atmospheres," *Geographica Helvetica,* 70(4), 255-263.

Pile, S., 2010, "Emotions and Affect in Recent Human Geograph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5(1), new series, 5-20. Retrieved from http://www.jstor.org.openlink.khu.ac.kr:8080/stable/40647285

Thrift, N., 2004, "Intensities of Feeling: Towards a Spatial Politics of Affect,"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86(1), 57-78.

Thrift, N., 2004, "Movement-space: The Changing Domain of Thinking Resulting from the Development of New Kinds of Spatial Awareness," *Economy and Society*, 33(4), 582-604.

Tolia-Kelly, D., 2006, "Affect-An Ethnocentric Encounter? Exploring the 'Universalist' Imperative of Emo-

tional/Affectual Geographies," *Area,* 38(2), 213-217.

Wylie, J., 2007, *Landscape*. Routledge.

경향신문, "[커버스토리]제2의 고향요? 25년간 가슴에 붙인 하청 차별…나는 거제가 싫다!," 2019.3.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3090600045

중앙일보, "거제 이대로 추락할까 Ⅰ," 2017.6.13. https://news.joins.com/Digitalspecial/184

중앙일보, "거제 이대로 이대로 추락할까Ⅱ," 2017.6.14. https://news.joins.com/Digitalspecial/185

중앙일보, "전국 최고 실업률 '거제의 눈물'," 2019.3.14. https://news.joins.com/article/23410573

세계일보, "경남통영 폐조선소 민자 관광형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2019.4.3. http://www.segye.com/newsView/20190402502665?OutUrl=daum

교신: 신진숙,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이메일: kkamsse@khu.ac.kr, 전화: 031-201-2378)

Correspondence: Jin Sook Shin, Institute of Global Affairs, Kyung Hee University, 1732, Duckyoung-daero, Kiheung-gu, Yongin-si, Gyeonggi-do, 17104, Republic of Korea (e-mail: kkamsse@khu.ac.kr, phone: 82-31-201-2378)

최초투고일 2019. 3. 20
수정일 2019. 4. 29
최종접수일 2019. 4. 29

한반도 접경지역에서 나타나는 '안보-경제 연계'와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지정-지경학

박배균* · 백일순**

'Security-Economy Nexus' and Geo-political Economies of Territorization and De-territorializatin in the Border Regions of the Korean Peninsula

Bae-Gyoon Park* · Yilsoon Paek**

요약 : 본 논문은 한반도의 접경지역이 지니고 있는 다중적이고 복합적이며 혼종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경계와 영토에 대한 포스트 영토주의적 입장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접경지역을 국경을 둘러싸고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과 행위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역동적 실천들 속에서 구성되고 항상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회적 구성물이라 바라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경과 접경을 영토성과 이동성의 복합적 교차공간으로 인식할 것을 제안하면서, 한반도 접경지역이 영토성에 기반한 '안보'의 논리와 이동성을 지향하는 '경제'의 논리가 서로 경합하면서 결합되는 '안보-경제 연계'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주요어 : 경계, 접경, 포스트 영토주의, 안보-경제 연계, 개발, 한반도, 접경지역지원법

Abstract : This paper aims at highlighting the multi-dimensional, complex and hybrid nature of the borderland in the Korean peninsula. Relying on the post-territorialist view to the territory and border, it suggests to see the borderlands as a social product that has been created and re-produced through complicated interactions among, and dynamic practices of, various forces and actors who have been living and operating along the border line in the Korean peninsula. More specifically, with the suggestions of seeing the borders as a complex crossing space of territoriality and mobility, this research explores the ways in which the border regions of the Korean peninsular have been socially constructed on the basis of 'security-economy nexus', in which the logics of security and economy have competed and intertwined with each other.

Key Words : border, borderland, post-territorialism, security-economy nexus, development, Korean peninsula, Border Area Support Act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연구사업(SSK)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7S1A3A2066514).

* 제1저자,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eopbg@snu.ac.kr)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선임연구원(Research Fellow, Center for Asian Urban Socie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thinki01@snu.ac.kr)

1. 서론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이 접하고 있는 접경지역은 어떠한 공간인가? 많은 이들에게 접경지역은 향후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경제적 가치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할 곳으로 여겨질 수 있다. 사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평화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외부로부터 부동산 투자가 몰려 접경지역이 뜨고, 땅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접경지역이 안보의 위협 때문에 저평가되었지만,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오면 무한한 개발의 가능성을 가진 곳이라 투자할 만한 곳이란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접경지역이 이러한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희망의 공간으로만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남북 접경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력과 무기가 집중된 중무장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전투와 사상자가 발생한 불운의 지역이 현재 남북 사이의 접경지역이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접경지역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의 장소, 안보 불안의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은 한반도의 접경지역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다중적이고 중첩적이며 혼종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경계와 영토에 대한 포스트 영토주의적 입장을 바탕으로, 국경과 접경을 근대적 국가 영토성의 단순한 표현으로 보지 않고, 국경을 둘러싸고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과 행위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역동적 실천들 속에서 구성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사회-공간적 구성물이라 바라본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한반도 국경과 접경지역의 사회-공간적 구성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안보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가 서로 경합하면서 결합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 접경지역을 이해하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중앙과 지방의 언론(중앙일간지, 접경지역의 지역지)에서 접경지역이 재현되는 방식을 키워드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에 대한 언론의 접근방식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중앙일간지와 지방지 사이에는 어떠한 차별성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안보, 경제, 환경 등의 중요 이슈들이 접경지역 관련 언론 재현의 방식에서 어떠한 시공간적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어서 정부의 접경지역 정책, 특히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을 둘러싸고 다양한 세력들이 어떻게 경합하였으며, 이 와중에서 '안보'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는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접합되면서 '안보-경제 연계'의 복합체를 구성하였는지 전략관계적 관점에서 탐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은 1) 한반도의 접경지역은 수많은 다양한 논리와 가치들이 혼재하면서 서로 경합하고 때로는 상호결합되면서 만들어지는 사회-공간적 구성물임을 밝히고, 2) 이를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규정되는 안보의 논리만으로 접경지역을 규범화하여 추진되는 정책적 시도는 접경지역에 대한 관리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 질서를 구축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하려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영토와 경계에 대한 포스트 영토주의적 이해

전통적으로 경계 혹은 국경은 인접한 주권적 영토를 나누는 선으로 인식된다. 이는 국가의 경계와 영토에 관한 전통적 관점이 근대 정치체제의 기본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영토적 주권의 개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개별 국가는 명확히 구분되는 영토를 기반으로 엄밀하게 안과 밖을 구분하고, 영토 내부의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해 배타적 통치권을 가진다는 영토적 주권 개념은(이종수, 2009) 근대적 정치체제의 기본적 원칙으로 인정된다. 즉, 근대 국가의 영토성은 영토를 고정불변하고 완벽하게 울타리 쳐져 내,외부는 완벽히 구분되고, 내부는 특정의 단일한 질서를 기반으로 완전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관념과 상상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Elden, 2013). 그 결과로 국가의 경계는 가장 공식화되고 가장 견고하며 명확하

게 구분되도록 설정된 경계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즉, 국가의 경계는 해당 국가의 주권이 가장 구체화되어 드러나는 영토적 표현이자 수단으로 인식되고, 그러기 때문에 근대 국가의 영토적 경계는 명확한 선을 중심으로 매우 확고하고 정확하게 표현되고 구체화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진다(Newman and Passi, 1998: 187).

하지만, 경계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 인식과 달리, 국가의 경계는 그리 확실하고 명확한 의미와 물질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최근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실 영토적 주권에 기반을 둔 영토적 관념과 상상, 그리고 경계 만들기의 실천적 과정은 구체적 정치 현실에서 나타나는 영토적 실재(reality)와 많은 괴리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근대적 영토 개념에서 제시되는 이상형의 모습과 달리 실재의 영토는 고정불변한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통제되는 것도 아니며, 많은 경우 지속적인 갈등과 논쟁 속에 놓여 정치-경제적 상황과 실천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사회적 구성물인 것이다(박배균, 2017: 294; 지상현·이승욱·박배균, 2019: 214).

이처럼 국가 영토와 경계의 상대성과 구성적 성격을 강조하는 최근의 논의들을 포스트 영토주의 관점이라 지칭한다(박배균, 2017; 지상현·이승욱·박배균, 2019). 관련하여, Jessop(2016)은 국가 공간에 대한 전통적인 영토중심적 논의를 거부하고, 국가가 근대적 영토주권과 관련된 영토성 이외에 다른 다양한 공간성(예. 네트워크, 장소, 스케일 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국가가 영토를 안과 밖에서 가로지르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흐름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국가, 지역, 도시, 로컬 등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 사이에서 권한의 분배와 노동의 분업을 조직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Pauly and Grande(2005)는 근대적 국민국가가 절대적 경계선으로 구획된 특정의 영토 공간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면서 영토의 모든 공간에 대해 자신의 권력을 균질적으로 행사한다는 전통적 국가 영토성에 대한 개념에 도전하면서, 국가의 주권이 실제로 행사되고 표현되는 방식은 훨씬 복합적이고, 불균등하게 이질적이면서 다층적임을 강조하였다. 이 처럼 국가의 영토와 경계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은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국가 영토의 복합성과 다층성, 그리고 경계의 '다공성(porosity)'을 강조하는 포스트 영토주의적 인식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박배균, 2017).

국가의 경계와 관련하여 포스트 영토주의적 관점은 경계의 구성적 성격을 강조한다. 즉, 국가의 경계는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고정되고 자연화된 범주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과정의 구성물이라는 것이다(Newman and Passi, 1998: 187). 경계란 것은 국가와 같은 영토화된 정치체들 사이에서 다소 자의적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보니 항상 역사적인 우발성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항상 깊이 있는 상징적, 문화적,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게다가 그 의미들은 종종 경합적이기도 하다. 경계를 둘러싼 상징과 의미의 경합적 성격이 잘 드러나는 순간은 경계의 구성과정이 국가 정체성과 연결되면서 국가 영토의 외부와 내부를 가르는 타자화의 상황과 연결될 때이다. 전통적 경계론에서 경계는 동질적인 사회-정치적 질서를 가진 영토들을 날카롭게 가르는 명확한 선으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인식론은 경계 밖의 것들은 경계 내부의 영토화된 질서를 위협하는 '외부' 혹은 '타자'라고 간주하는 경향을 지닌다. 하지만, 최근의 경계 이론은 경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러한 자명한 타자성에 대한 인정을 거부하며, 경계의 형성을 둘러싼 배제와 포섭, 타자화, 그리고 정체성 형성의 경합적이면서 복합적인 과정에 주목한다. 또한, 경계에 인접한 접경지역에서 국가 영토의 중심과 주변 뿐 아니라, 국가 경계의 안과 밖에서 온 다양한 차별적 요소들이 모이고 접합되면서 만들어내는 혼합과 혼종의 과정에 주목한다(Delaney, 2005).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국가의 경계가 지니는 의미는 결코 단순하고 명확할 수 없다. 전통적 경계이론과 법치주의와 안보의 논리에 입각해서 경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국가의 경계는 국가라는 영토화된 권력이 정확하게 표현되는 절대적인 상징물이라 보겠지만, 최근의 경계이론에 따르면 경계의 의미는 매우 다중적이고 경합적이며, 심지어 태생적으로 모순적이고 문제적일 수밖에 없다(Delaney, 2005). 경계

는 '바깥 세계'와 연결되는 출입구이지만 동시에 장애물이기도 하고, 보호와 감금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기회와 위험, 접촉과 갈등, 협력과 경쟁 등의 상이한 의미와 상징이 교차하고 공존하는 공간이다(Anderson and O'Dowd, 1999: 595-596).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경계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영토와 경계의 유동성과 복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난민, 관광객, 밀수업자 등과 같이 경계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흐름과 이동의 주체들에 주목하여 이들의 초국경적 이동과 흐름의 과정 속에서 펼쳐지는 탈영토화와 영토화의 공간정치, 그를 둘러싼 권력 작동의 복잡한 과정을 살펴본다. 경계통과, 검문소, 세관 창구, 감시, 배제, 포섭, 추방, 규제 등과 같은 국가의 영토적 실천과 이에 대응하는 초국경적 주체들의 회피, 타협, 협상, 저항 등과 같은 다양한 전략과 실천들이 주요 분석의 대상이 된다(Delaney, 2005).

2) '안보-경제 연계(Security-Economy Nexus)'와 접경지역

포스트 영토주의적 입장에서 국가 영토와 경계를 다공성, 복합성, 유동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국경과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의 영토적 실천의 효력과 실효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국가의 경계와 그를 둘러싼 접경지역은 국가의 영토성과 안보의 논리에 기반한 고정성, 확실성, 안정성, 상호배타성이 작동하기 보다는 다양한 의미와 상징, 권력들이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만들어내는 유동성, 모호함, 상호구성성으로 특징지워지는 공간인 것이다. 따라서, 국경과 접경을 안보와 장벽이라는 영토화의 논리로만 설명해서는 안 되고, 여러 영토 공간들이 만나고 교차하면서 초국경적인 이동과 연결의 힘도 적극적으로 발현되는 공간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접경지역은 영토성과 이동성의 복합적 교차공간인 것이다. 국경과 접경지역에는 항상 이동과 연결을 지향하는 힘과 반대로 이러한 흐름을 저해하는 다양한 힘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공간정치가 작동하며, 이를 통해 국경과 접경지역의 현실적 모습과 의미가 구성된다.

접경지역에서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공간정치가 변증법적으로 접합되는 중요한 계기 중의 하나가 '안보-경제 연계(security-economy nexus)'이다. '안보-경제 연계'는 접경지역에서 안보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가 분리되어 따로 작동하기 보다는 서로 깊이 결합되어 작동함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이다(Coleman, 2005). 예를 들어, Andreas(2000: 11)는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과 접경지역에서 미국 정부가 안보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를 어떻게 동시적으로 결합하여 충족시키는 국경 정책을 펴는지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초국가적 이주와 교류를 한편으로는 국가 안보의 논리에 따라 통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의 논리에 따라 확대하고 장려하는 이중적 정책을 펴면서, 멕시코와의 국경을 닫혀있으면서도 동시에 열려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Andreas는 국경에서의 치안활동과 법집행 방식에 주목하는데, 미국-멕시코 접경지역에서 국경을 경비하고 순찰하는 행위를 "관객에 의해 연출된 공연"이라 바라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Andreas는 미국-멕시코 국경에서의 치안활동은 '법 집행의 도구적 목적(instrumental goal of law enforcement)' 보다는 '법을 집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적 역할(expressive role of law enforcement)'에 더 경도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국경에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논리에 따라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경을 통제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가시화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것이다. Andreas는 더 나아가 이러한 국경 치안의 공연적 효과는 미국 내에서 멕시코와의 국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을 안심시킴을 통해 미국-멕시코 간 초국경적 이주와 교역에 대한 실질적 제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어하여, 궁극적으로 미국-멕시코 국경이 보다 개방적이고 다공적인 성격을 띠게 하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미국-멕시코 국경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경과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안보와 경제의 논리가 복잡하게 뒤섞여 펼쳐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상반되고 충돌되는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안보와 경제의 논리가 어떻게 서로 결합되고 뒤섞이게 되는 것일까? '안보-경제 연계'의 구체적 메커니즘에 대해 Andreas는 보다 경제중심주의적 설명을 제공한다. Andreas(2000)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행한 국경 통제 및 치안,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각종 지정학적 실천들은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 신자유주의 체제를 구축하려는 보다 더 큰 지경학적 프로젝트에 봉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친다. 즉, "실질적인(real)"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안보의 "이미지"가 이용되는 (Coleman 2005: 187) 방식으로 '안보-경제 연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중심주의적 설명은 국가의 행위가 자본의 이해를 중심으로 매우 일관되게 결정되고 추진되는 것으로 전제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가에 대한 전략관계적 관점에 따르면, 국가는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통합성 높은 행위자가 아니다(Jessop, 1990). Jessop은 "국가를 정치적 전략(the state as political strategy)"이라고 인식하며, 국가의 권력은 국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에서, 혹은 국가를 통해서 작동하는 사회 세력들이 지니고 있는 권력에 기인하고, 이들 사회세력들이 특정한 국면에 특정한 방식으로 서로 연관되고 상호작용 함을 통해 국가의 제도화된 능력과 의무가 규정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국가조직 간에 혹은 국가의 구성원들 간에 항상 갈등과 이견이 존재하고, 국가가 내놓는 여러 정책들 사이에도 논리적 모순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국가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받아서, Coleman(2005)은 '안보-경제 연계'를 잘 조정되고 짜이 맞춰진 국가 행위의 결과라기보다는 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상충되는 이해관계와 전략들의 충돌이란 관점에서 설명한다. 특히, 미국의 국경 정책과 관련하여 Coleman(2005: 189)은 1) 국가 안보를 강조하면서 경계의 강화와 재구성을 주장하는 영역성의 논리와 2) 개방적 시장과 교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경계 해체의 지경학, 이 두 가지 힘 사이에 발생하는 구성적 긴장을 강조하며, 미국의 지정학과 지경학적 실천은 결코 다양한 안보, 경제적 의제를 조화롭게 관리할 능력이 있는 주권적 중심부에서 적절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조정된 결과물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적 디자인이 무질서하게 공간상에 펼쳐지고 실행되는 경합의 장이라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안보-경제 연계'와 관련된 국가의 무질서한 실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여러 다양한 메커니즘이 있겠지만, 본 연구는 경계와 접경이 재현되고, 의미가 부여되는 방식에 있어서의 스케일 간 불일치와 긴장이란 측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경계와 접경의 사회적 구성 과정은 지리적 스케일에 따라 차별적으로 벌어진다. 특히, 국가의 경계가 지니는 영토적 의미와 기능은 결코 보편적 특징을 지니지 않는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형성되는 지정학적 조건, 국민국가의 영토성, 지방적 차원의 일상생활과 삶의 경험 등이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표출되고, 동시적으로 작동하여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국가 경계의 의미와 기능에 영향을 준다. 특히, 접경이란 특수한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적 삶은 국가의 다른 곳과는 매우 다르며, 그러기 때문에 경계와 영토성은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Newman and Passi, 1998: 198). 국가 정체성이 국가적 차원에서 일반화되고 표준화된 사회-공간적 의식이라면, 지방적 수준에서 일상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정체성과 역사의 의미는 국가 정체성의 일반화된 의미 보다는 훨씬 복잡하다. 특히,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계와 국경은 그들의 활동과 일상적 삶의 담론을 구성함에 있어 핵심적 요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경에서의 삶의 경험이 국가적 차원에서 일반화된 사회-공간적 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와 행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접경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계란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어서 동원되는 일반화된 사회의식 속에 전형적인 모습으로만 존재하고, 그런 재현을 통해서만 인식된다(Passi, 1996). 따라서, 접경지역이라는 지방의 스케일에서 존재하는 맥락성을 이해하는 것은 경계의 실제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안보-경제 연계'의 문제도 경계의 사회적 구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스케일간 불일치와 긴장의 관점에

서 이해할 수 있다. 국가적 스케일에서 형성되는 안보와 경제의 논리와 접경지역이라는 지방적 스케일에서 구성되는 안보와 경제의 논리는 차별적일 가능성이 높다. 접경지역의 일상적 삶과 경험과는 거리가 먼 국가의 중심부에서 국가 전체의 영토성과 다른 국가와의 국제적 관계와 이를 둘러싼 지정-지경학이란 차원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안보와 경제의 논리는 접경지역에 일상적 삶과 지방적 맥락 속에 바로 뿌리를 두고 형성된 안보와 경제의 논리와는 많이 차이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 또한, 영토적 타자화와 '공포의 지정학(geo-politics of fear)'를 기반으로 한 안보의 논리는 타자화와 공포의 대상을 누구로 규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국가의 중심부와 국경에 바로 인접한 접경지역 사이에 상당한 차별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경 너머의 타자로 규정되는 대상들이 경계선이 그어지기 전에는 일상을 공유하던 생활공동체의 일원이었을 경우나, 혹은 반대로 극단적인 영토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참혹한 전쟁의 경험을 겪은 역사가 있는 경우에 접경지역의 지방 행위자들이 지니는 안보와 타자화의 감각은 국가 전체적 스케일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더불어 초국경적 교류와 이동이 불러올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희망의 지경학(geo-economics of hope)'에 대한 감각도 접경지역의 지방 행위자들과 국가 스케일의 행위자들 사이에는 상당한 차별성을 지닐 수 있다.

결국, 국경과 접경을 둘러싸고 안보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는 서로 뒤엉키고 결합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그 뒤엉킴은 특정의 일관된 틀과 방향성 속에서 질서있고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상이한 장소와 스케일에서 구성되는 차별적 이해관계와 정체성들이 만나고 경합하는 갈등적 과정 속에서 우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접경지역을 둘러싸고 어떻게 상이한 안보와 경제의 담론들이 구성되어 왔고,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담론들의 경합과 충돌 속에서 국가의 접경지역 정책은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 되어왔으며, 그 과정 속에서 '안보-경제 연계'의 구체적 모습은 어떠하였는지 살펴보려 한다.

3. 접경지역 재현의 공간적 차이와 시간적 변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이 장에서는 신문기사에서 언급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남북 접경지역의 '안보-경제 연계'의 전개 양상과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신문기사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은 언론인, 전문가, 정치인, 대중 등과 같은 행위자들에 의해 생산, 소비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고 장소와 공간의 구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심주영, 2017; 한승희, 2018). 이를 위해 1990년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고 있는 뉴스 분석 서비스 '카인즈(KINDS, 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를 활용하여 접경지역과 관련된 이슈, 사건, 동향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변화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남북 접경 이슈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1993년 김영삼 정권부터 접경 지역의 개발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현재 시점까지(2018년 12월 31일 기준)의 신문기사들을 대상으로 접경지역이 어떻게 묘사되고 재현되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접경지역 재현 방식의 시간적 변화와 공간적 차별성을 탐색하기 위해, 첫째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접경지역 여론 재현 방식의 과정적인 흐름을 정리하였고, 둘째,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일간지와 경기, 강원의 지역지들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여 지역적, 스케일적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의 신문은 전국에 발간되는 중앙일간지[1](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와 강원 지역지[2]인 강원도민일보와 경기(인천 포함) 지역지인 경인일보를 선택[3]하였다. 기사의 수집은 빅카인즈를 통해 1차적으로 수집하고, 북한-중국 접경 이슈 등을 포함하는 국제 지역의 접경 기사를 제거하여 2차로 유사성이 높은 자료들로 다시 필터링하였다. 카인즈의 기사 제공 시점인 1990년부터 2018년까지 '남북 접경', '접경지', '접경지역' 등과 관련된 보도자료의 수는 '6,792 건'으로 검색[4]되었으며 중앙일간지는 2,688건, 경인일보는 858건, 강원도민일보는 3,246건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기사를 바탕으로 1993년 김영삼 정권부터 현재의 문재인 정권(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권별로 접경지역 관련 기사에서 다루어지는 키워드의 빈도와 관련 토픽들을 분석하였다. 기사 출현 단어 중 유의미한 분석에 활용할 명사, 동사, 형용사를 추출하기 위하여 빅카인즈에서 '접경지역'으로 검색된 기사의 메타정보[5]를 활용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인 R 3.5.2를 이용하여 추출된 단어의 빈도 분석과 토픽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rcGIS 10을 이용하여 주요 접경 지역의 언급량 변화를 지도화하였다.

1) 신문기사 보도량에 대한 시공간적 분석

접경지역과 관련된 기사 건수의 경향을 보면 대체적으로 일정한 패턴이 나타난다. 첫째, 기사 건수의 차이가 있지만 강원지역지의 기사 변동량과 중앙일간지의 기사 변동량 추세가 매우 유사하다. 접경지역 이슈와 관련하여 경인 지역지보다 강원 지역지가 여론 형성의 측면에서 좀 더 활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중앙일간지와 강원 지역지가 접경 지역을 기사화하는 시점이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둘째, 기사량이 증가하는 시점은 주로 남북 간에 주요 이슈가 발생했던 때와 연동된다. 예를 들어, 2000년, 2007년, 2018년의 기사량의 급증은 남북정상회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접경 지역과 연관된 기사는 남북 관계의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셋째, 매우 불규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대남 도발이 접경 이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대남 도발 사건으로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해당 지역의 안보가 강조되면서 접경지역 기사가 증가하였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 '교전' 등의 발생은 남북관계의 악화 및 긴장 상황의 도래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투자, 개발 논의들을 중단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국가적인 이슈 뿐만 아니라 지방적 이슈들도 접경 관련 기사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지역지의 경우, 해당 지역의 개발에 대한 공약이 많이 나오는 선거 시즌에 기사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0년 강원도민일보의 기사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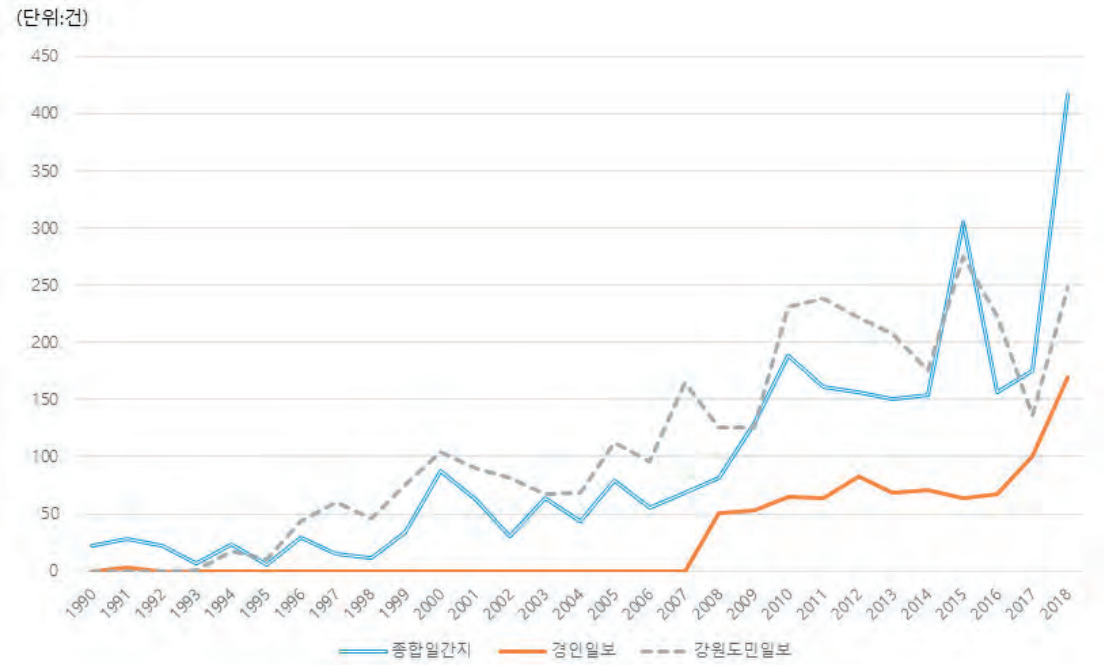


그림 1. '접경지역'으로 검색된 중앙일간지와 경기, 강원지역지의 기사건수

급증은 7.28 국회의원 재보선과 지방선거의 실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격상 등과 관련되어 있다. 경인일보의 경우, 2012년 대선과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실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접경지역의 기사는 경기와 강원을 아우르는 지역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접경 지역의 불안을 야기하고 국내의 정치적 사안들을 흡수하는 북한의 대남 도발 행위는 접경 지역 기사 내용을 부정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기사에 출현하는 단어와 그 빈도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 빈도 분석을 통한 정권별 접경 지역 이슈 분석

(1) 중앙일간지 상위 빈도 단어 특성

표 1은 1993년 김영삼 정권부터 2018년 문재인 정

표 1. 정권별 접경지역 관련 상위 30개 단어 빈도(중앙일간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1	주민	556	북한	1502	북한	2405	북한	5728	북한	13712	북한	7031
2	경제	531	정부	537	정부	1036	정부	2034	정부	4287	남북	2576
3	정부	520	계획	499	평화	611	주민	1325	미국	3783	평화	2307
4	정권	339	정권	464	정권	608	후보	1320	주민	3193	정권	2138
5	계획	250	지원	434	미군	601	정권	1283	정권	2489	정부	1666
6	회의	245	남북	409	문화	574	사업	1106	남북	2183	경제	1584
7	병력	228	추진	372	경제	562	평화	1034	평화	2096	사업	1279
8	사업	224	사업	344	지원	533	경제	1025	사업	2083	대북	1157
9	지원	224	경제	331	남북	492	남북	927	대북	2059	트럼프	1063
10	상황	216	주민	331	주민	490	전쟁	811	경제	2048	제재	1006
11	의원	212	평화	331	계획	489	지원	805	후보	1902	정상회담	977
12	주장	203	관광	256	시작	475	계획	728	상황	1857	주민	940
13	관계	198	전쟁	251	수도권	472	대북	666	지원	1674	협력	916
14	사실	198	조성	249	사업	466	추진	627	강화	1460	김정은	848
15	투자	192	미군	228	추진	444	강화	614	전쟁	1436	비핵화	801
16	이용	191	지정	214	전쟁	375	미군	582	가능성	1368	방문	743
17	김정일	174	건설	212	건설	374	김정일	577	추진	1284	평양	714
18	전쟁	174	DMZ	211	발전	347	한나라당	566	계획	1268	강화	688
19	개방	172	투자	210	관계	323	관계	560	사건	1239	상황	666
20	확인	167	국경	209	시장	320	정책	503	관계	1237	후보	657
21	배치	156	관리	208	규제	315	발전	492	DMZ	1197	관광	646
22	정책	155	관계	207	정책	303	천안함	492	훈련	1057	조성	643
23	역사	152	예정	204	조성	285	DMZ	449	안보	1034	선언	636
24	거리	151	방안	201	예정	280	주장	442	군사	1026	지원	603
25	안보	146	정책	199	공동	270	조성	441	도발	1023	계획	600
26	관광	145	환경	199	투자	267	선거	434	발전	948	군사	585
27	설명	144	수도권	197	강화	266	관광	429	관광	925	공동	584
28	해결	144	한나라당	183	대북	252	안보	419	중단	810	판문점	570
29	긴장	110	정상회담	178	한나라당	226	경계	340	제재	795	DMZ	569
30	군사	105	생태	149	DMZ	197	연평도	308	사태	744	전쟁	515

권까지 접경 지역으로 검색된 중앙일간지의 기사에서 추출된 상위 빈도 단어들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나타나듯이, 상위 10위에 포함된 단어들은 '북한', '정부', '정권', '남북' 등과 같은 국가 차원의 키워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북한'은 김영삼 정권 시기를 제외하고 모든 정권의 시기에서 접경 관련 언론 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이다. 또한, 이 단어는 박근혜 정권 시기에 언론에 의해 가장 높은 빈도로(13,712회) 언급되었다. 상위 30위 안에 포함된 단어들은 대체적으로 유사한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정권에서 '지원', '사업', '경제', '건설', '정책', '투자' 등과 같은 접경 지역의 발전을 위한 개발 계획과 관련된 이슈와 함께 대북 관계에 따른 '병력', '평화', '군사', '안보' 등의 키워드 등이 접경지역의 주요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북 관계의 긴장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전쟁'이라는 단어는 모든 정권에서 출현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권 시기에 가장 많이 언급된 것(1,436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정권 별로 언론의 사용 키워드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확인되는 부분은 북한의 대남도발 혹은 대내외 정세 변화로 인한 새로운 키워드의 등장이다. 이명박 정권 시기에만 등장하는 '천안함', '연평도', 박근혜 정권 시기의 '도발', '중단', 문재인 정권 시기의 '트럼프', '비핵화'가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권 시기에 언급된 '중단'은 2013년 개성공업지구가 중단되고 남한 근로자들이 철수한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단어들의 빈도 차이는 중앙일간지에서 다루는 접경 지역 기사들이 대북정책, 남북관계의 변동 등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2. 정권별 접경지역 관련 상위 30개 단어 빈도(강원도 지역일간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1	지원	291	사업	893	사업	959	지원	2539	사업	1574	평화	842
2	의원	290	계획	860	추진	833	사업	2458	주민	1237	사업	488
3	추진	244	지원	826	지원	703	법	1695	평화	1073	남북	444
4	후보	244	후보	780	주민	668	추진	1610	지원	947	추진	336
5	법	217	추진	693	발전	590	발전	1459	추진	820	주민	284
6	계획	190	관광	542	관광	541	특별	1381	DMZ	731	DMZ	252
7	정부	184	의원	460	계획	537	주민	1356	의원	672	경제	235
8	사업	179	주민	444	철원	527	의원	1328	조성	631	정부	231
9	주민	171	정부	422	평화	513	관광	1281	발전	601	관광	216
10	개발	159	철원	419	조성	489	평화	1194	계획	511	조성	212
11	특별	151	조성	331	수도권	410	계획	1174	관광	502	지원	209
12	관광	145	남북	308	유치	388	경제	1104	규제	475	후보	205
13	건설	135	마련	308	경제	383	조성	1103	정부	454	발전	202
14	제정	134	발전	303	DMZ	320	정부	1083	문화	438	올림픽	193
15	확충	130	법	302	법	311	현안	1049	경제	421	북한	188
16	마련	126	평화	295	정책	309	DMZ	978	공원	406	특별	164
17	철원	122	연계	270	공약	288	유치	783	후보	385	규제	154
18	유치	108	확충	270	남북	287	정책	766	동서	375	협력	154
19	제시	108	수도권	254	건설	275	한나라당	719	법	367	정책	144
20	규제	103	제정	244	규제	252	공약	712	특별	367	제한	144
21	지정	102	건설	235	활성화	243	예산	687	생태	337	개선	132

22	신한국당	100	행정	231	구축	235	해결	685	북한	326	문화	125
23	조성	100	관리	224	특별	226	마련	646	시설	326	국방부	122
24	공약	98	유치	220	대책	217	지정	608	개최	319	개최	121
25	통일	96	DMZ	217	육성	213	문화	598	마련	311	공동	120
26	발전	94	개발	200	협력	209	활성화	581	올림픽	302	활성화	120
27	보전	92	북한	199	전략	204	생태	579	남북	292	산업	115
28	북한	90	한나라당	197	연계	202	방안	575	체험	287	확대	114
29	대책	85	지정	189	확대	199	수도권	546	산업	286	정권	113
30	관리	83	대책	184	공동	189	규제	513	방안	281	폐지	110

표 3. 정권별 접경지역 관련 상위 30개 단어 빈도(경기도(인천포함) 지역일간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1	수도권	531	평화	467	평화	505
2	사업	529	주민	442	남북	451
3	지원	519	강화	320	사업	438
4	주민	408	지원	308	강화	314
5	법	397	DMZ	294	추진	304
6	추진	380	북한	287	북한	279
7	발전	373	추진	279	정부	277
8	정부	357	후보	237	주민	267
9	의원	344	발전	232	조성	206
10	계획	341	조성	229	대통령	184
11	규제	288	정부	227	발전	180
12	강화	266	공원	206	계획	179
13	조성	239	계획	199	후보	165
14	평화	231	남북	192	지원	161
15	특별	229	안전	164	협력	161
16	파주	225	법	160	경제	160
17	북한	189	파주	158	파주	146
18	정책	184	새누리당	152	공동	131
19	시장	179	특별	135	규제	128
20	경제	172	관계	128	정책	123
21	마련	172	관광	120	진행	115
22	방안	151	안보	117	특구	114
23	남북	150	마련	110	판문점	110
24	행정	148	정책	102	안전	102
25	협의회	134	규제	101	교류	97
26	연평도	130	시설	98	건설	96
27	시설	129	경제	94	공약	90
28	공동	124	도발	93	선언	90
29	법안	123	설치	91	방안	88
30	확대	122	예정	91	군사	85

(2) 지역지 상위빈도 단어 특성

강원도와 경인 지역지[6]에서 추출된 단어들은 국제정세나 남북 관계 등에 초점이 맞춰진 중앙일간지와는 달리, 접경지역의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표 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중앙일간지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법', '제정', '규제' 등과 같은 단어들이 그 예이다. 이는 접경지역의 개발 근거로 활용된 각종 지원법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경제', '산업', '유치', '예산' 등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단어도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반대로 중앙일간지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정권', '정부', '북한' 등의 단어들은 지방지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나타났다. 또한 군사, 안보 등과 연관되어 있는 '전쟁', '도발', '긴장' 등의 단어들은 거의 언급되지 않아 중앙일간지와 지역지가 접경지역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의원', '공약', '후보' 등과 같은 선거 관련 단어들이 상위 빈도 단어들에 포진되어 있다. 이는 지역의 접경 이슈를 만들어내고 개발 계획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암시한다. 즉, 지역 내 지방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에서 접경지역이 가지는 한계를 언급하고 낙후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공약으로 삼는다는 기사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접경지역에서는 개발이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주요한 이슈임을 의미한다. 즉, 지역지의 경우 군사, 안보 이슈 보다는 접경지역의 개발 이슈에 치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지역지에서 언급된 지역 빈도 분석

현재 남한의 접경지역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 양측에서 인접한 지역을 지칭하며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한 15개 시, 군[7]을 대상으로 한다. 중앙일간지의 경우 접경지역 기사에서 나타나는 지역명은 주로 '강원도',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언급되는 반면, 지역지의 경우 '파주시', '철원군' 등과 같은 기초 자치단체 단위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신문기사에서 추출된 단어 중 지역명의 빈도수를 지도화해 본 결과, 강원 지역지의 경우 평창올림픽 개최 때문에 이명박 정권과 문재인 정권 시기에 '평창'이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원'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즉, 철원을 중심으로 강원 지역지가 관심을 두는 접경 지역 이슈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권 시기 철원 지역의 언급 빈도 가 1,655건으로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은데, 이는 정권 공약으로 내세운 '통일특구개발촉진법'에 따른 특구 대상지로 철원이 주목을 받았고,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경기도 접경지역에만 혜택을 주어서 강원도 접경지역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반발이 경기도와 가장 가까운 철원을 중심으로 터져 나온 것이 중요한 배경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경인 지역지의 경우 '연평도'가 이명박 정권 시기에 많이 언급되다가 점차 감소하는 것과 '동두천'이 이명박 정권 시기에만 등장하는 것을 제외하고 인천의 '강화'와 경기도의 '파주' 가 각 지역의 주요 접경지역으로 언급되었다. 경인지역의 접경 지역 빈도와 관련하여 특이점으로는 문재인 정권 시기에 파주보다 강화가 더 많은 빈도를 보인다는 점, 파주의 경우 지속적으로 언급빈도가 감소하지만 강화는 언급 빈도가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인 지역의 접경 이슈가 인천 쪽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별 언급 빈도를 통해서 언론의 접경지역 재현이 강원과 경인 접경 지역의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강원도 지역의 경우 '철원', 인천 지역의 경우 '강화', 경기 지역은 '파주' 지역이 접경 지역 기사와 관련해서 주요 지역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지역에 접경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들이 집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철원 지역의 경우 「철원군 중장기 발전계획 2020」등을 통해 남북 교류 협력 기구 조성, DMZ 기반 관광 상품 개발, 금강산선 철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2월에 중앙정부가 발표한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서도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과 연계된 '남북문화체험관'의 설치 및 남북교류 거점으로 철원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볼 때, 향후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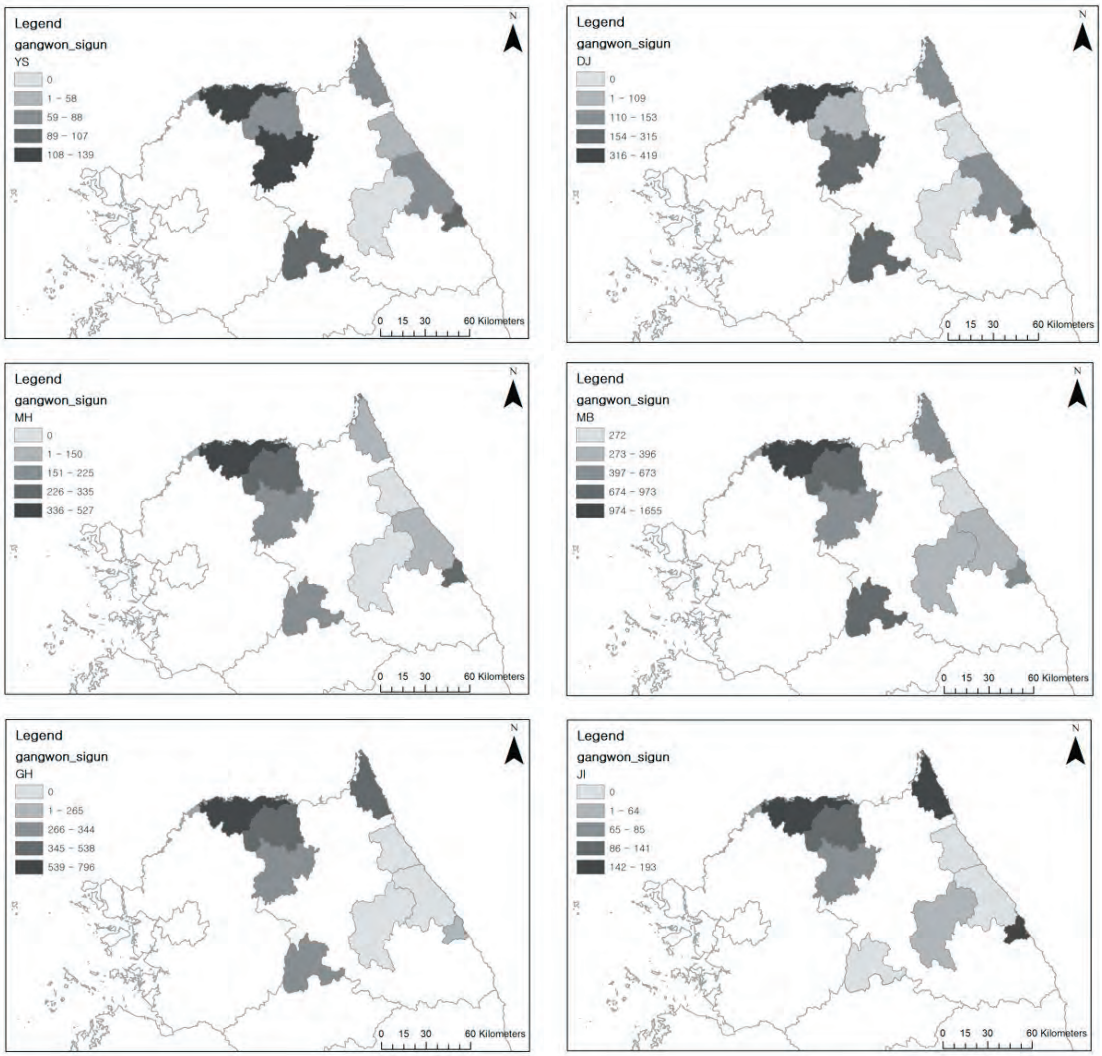


그림 2. 강원도 지역지 '접경지역' 언급 빈도

'철원', '파주', '강화' 등과 같은 주요 접경 지역은 개발 계획 논의 속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토픽 분석을 통한 정권별 토픽 변화

정권별 접경 지역 토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토픽 분석을 실시하였다. 토픽분석은 문서에 추출한 단어들의 행렬을 기반으로 잠재되어 있다고 가정된 토픽을 추정하는 통계 기법이다(백영민, 2017; 박승정 외, 2017). 본 분석에서 활용한 기법은 LDA 모형으로 이는 비정형 텍스트로부터 토픽을 추출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결과 해석이 용이한 기법이다(Blei, 2012). 토픽 분석은 토픽의 수를 먼저 지정하여 분석을 수행하는데, 보다 명확한 해석과 적합성을 고려하여 1) '지역', 2) '개발', 3) '안보', 4) '생태' 5) '제도 및 정책'을 주요 토픽으로 선정한 다음, 키워드들을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수도권, DMZ 등을 포함한 강원도와 경인 지역의 접경지역과 관련된 '지역'명을 제외한 4개의 토픽들

의 경우 단어의 의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개념으로 토픽의 이름을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개발'의 경우, 접경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낙후', '지역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단어 등이 포함되며, '지원법', '특별법', '시행령', '각종 규제' 등의 단어는 접경지역에 적용되는 '제도 및 정책'으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중앙일간지와 강원도 및 경인지역지의 토픽을 분류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도출되었다. 첫째, 중앙일간지와 지역지를 비교해보면 중앙일간지의 경우 '안보' 토픽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지역지는 '개발' 토픽이 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앞서 상위 빈도 단어에서 확인된 결과와 마찬가지로 지역지가 접경지역의 개발 이슈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과 관련된 토픽의 경우 '낙후'라는 키워드가 모든 정권에서 중요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1980년대부터 추진되어 온 낙후지역 발전 정책에 접경지역이 포함(변필성 외, 2013)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낙후'문제가 주요한 지역 이슈라는 사실과 관련된다.

둘째, '안보' 토픽의 경우 지역지 보다는 중앙일간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특히 박근혜 정권에서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 남북 관계의 긴장 고조와 각종 남북 협력 사업의 중단 등과 관련하여 접경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안보 이슈가 다른 토픽들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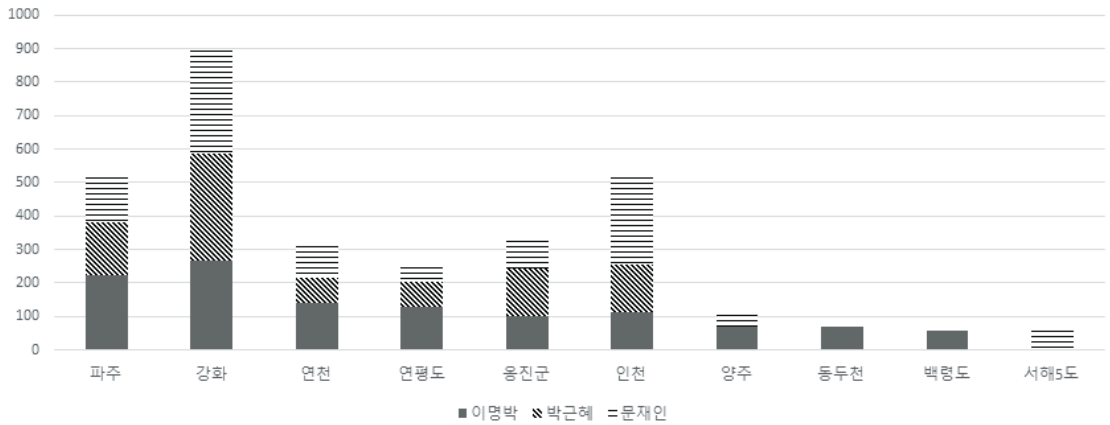


그림 3. 경인 지역지 접경지역 관련 언급 빈도

표 4. 접경지역 토픽 분류

토픽1 지역	토픽2 개발	토픽3 안보	토픽4 생태	토픽5 제도정책
강원도	낙후	남북정상회담	생태계	특별법
경기도	지역경제	휴전선	환경부	행정안전부
DMZ	지역발전	통일	유네스코	정비계획법
철원	군수협의회	국방부	자연환경	정비발전지구
파주	투기과열지구	군부대	보전지역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	활성화	평화누리길	자연보전권역	시행령
연천	땅값	대피소	지속가능	각종 규제
고성	숙원사업	포격도발	백두대간	입법
인천	통일경제특구	판문점	세계평화공원	개발촉진지구
연평도	기대감	대북전단	생물다양성	지원법

다 중요하게 다루어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재밌는 것은 문재인 정권 시기에도 안보 이슈가 접경지역 관련한 기사에서 박근혜 정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많이 언급되는데, 하지만 안보 이슈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키워드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권 시기에는 '불안감', '대피소', '추가 도발', '포격 도발', '긴장감' 등과 같은 위험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키워드 들이 안보 이슈 관련 기사들을 주로 구성한 반면, 문재인 정권 시기에는 '판문점 선언', '한반도 평화', '남북정상회담' 등이 안보 이슈 관련 기사들의 주요 키워드로 추출되었다. 이는 박근혜 정권 시기에 북핵 관련한 남북 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었던 반면, 문재인 정권 시기에는 북한의 핵실험이 중단되고 남북, 북미 간 대화가 진행되면서 남북간 긴장이 완화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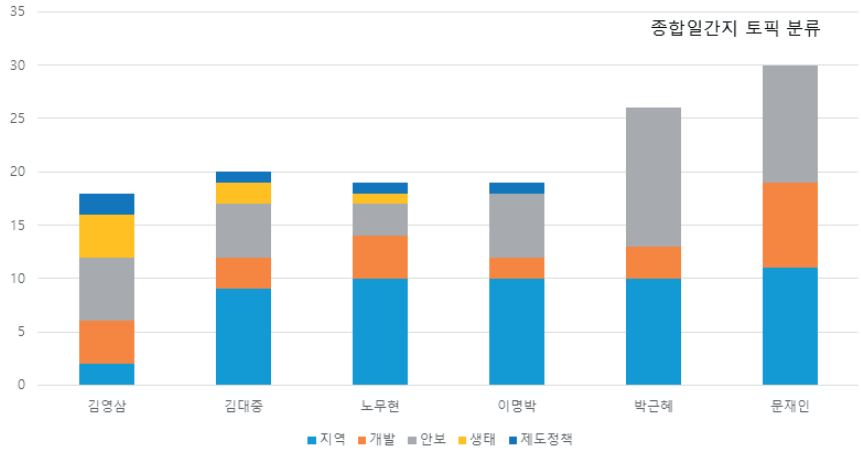
셋째, '생태'와 관련된 '보전', '지속 가능성'의 이슈들은 중앙일간지의 경우 이명박 정권부터 나타나지 않으며 강원 지역지는 박근혜 정권부터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인 지역지의 경우에는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되었던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시작으로 생태관광, 생태 박물관 등과 같은 개발 논의들과 맞물려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 접경지역의 생태와 환경보전과 관련된 활발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부터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접경지역의 안보 이슈가 강조되면서, 생태 관련 논의들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생태 이슈가 강원 지역지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경기 지역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두 지역 사이에 접경지역의 생태계 보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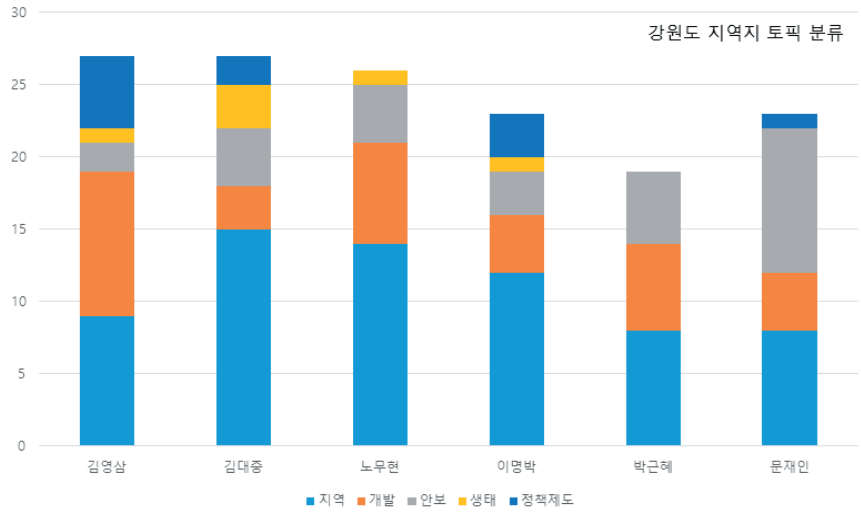
이상의 분석을 요약하면, 한국에서 접경지역이 언론에서 재현되는 방식의 중요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접경지역이 언론에서 거론되는 빈도는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남북 교류가 진전되거나, 남북 긴장이 강화되는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 접경지역 관련 기사의 숫자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패턴은 중앙일간지, 지방지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지의 경우는 선거 시기에 접경지역의 개발 이슈가 중요한 선거 쟁점이 되면서 선거와 맞물려 접경지역 기사의 빈도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둘째, 접경지역에 대한 기사의 이슈와 내용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중앙일간지와 지방지 사이에 차별성을 보인다. 중앙일간지의 경우, 대북정책 및 북한의 대남 도발 등과 같은 '안보' 이슈가 접경지역 관련한 기사의 중요 주제로 취급된 반면, 지역지의 경우 접경지역 지원법 제정을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 '개발' 이슈가 접경지역 관련 기사의 중요 관심사였다. 셋째, 접경지역 관련하여 '안보' 이슈가 언론에서 언급되는 정도, 그리고 안보 이슈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방식은 시기별로 차별성을 보였는데,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긴장될 때는 안보 이슈가 언론에 많이 노출된 반면,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던 시기에는 안보 이슈 보다는 개발 이슈가 언론에서 더 많이 다루어졌다.

언론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접경을 재현하고 묘사함에 있어서 안보와 경제라는 두 가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항상 복합적으로 결합되고 경합적으로 공존한다. 두 개 이상의 영토화된 정치조직이 만나고 접하는 경계와 접경에서 1) 영토 외부의 타자로부터 영토화된 내부를 지켜야 함을 강조하는 안보의 가치와 2) 영토화를 위해 이동과 흐름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인한 기회비용의 상실, 그리고 이 장벽을 뛰어넘는 이동과 흐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의 창출을 강조하는 경제(개발)의 가치는 항상 긴장 속에서 공존하면서, 충돌하기도 하고 서로를 견인하면서 강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안보-경제의 긴장 속 공존 관계는 영토화된 정치체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지정-지경학적 상황과 맥락 속에서 구체화되어, 시간적으로 변화하고, 공간적으로 차별화되어 구성된다.

4. 접경지역 지원제도의 변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안보-경제 연계'

이 장에서는 한국의 접경지역에서 '안보-경제 연계'가 구체화되는 방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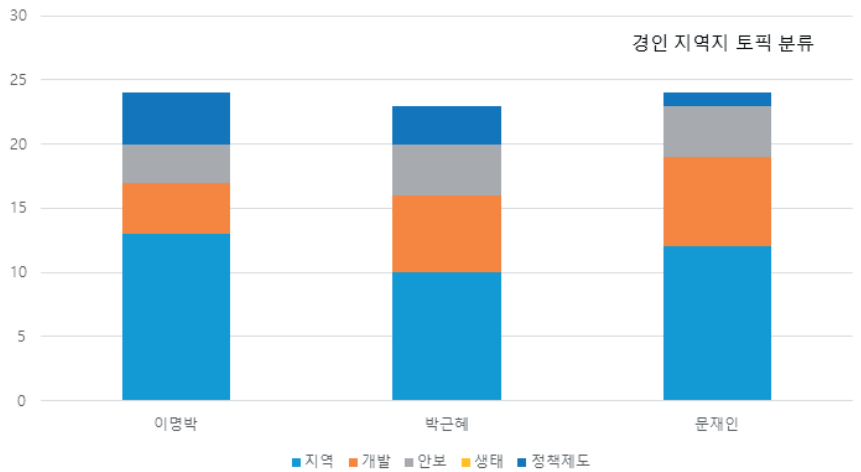


그림 4. 정권별 접경지역 토픽분석 결과

해, 1990년대 이후 접경지역 지원제도와 법률의 변화 과정에 초점을 두어 안보의 가치와 경제의 가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합하고 결합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0년과 2010년에 각각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과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에 초점을 두어, 그 입법 과정과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가와 사회세력들 간의 전략관계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2000년 이후 '접경지역지원법'의 제정 이후, 여러 가지로 변화된 국내, 국제적 상황 속에서 '안보-경제 연계'의 구성 특징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간략히 살펴보았다.

1) 한국전쟁 이후 1990년대까지 접경지역 정책의 변화

한국에서 접경지역에 대해 국가가 직접 정책적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북방정책과 남북 대화를 모색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로 그 이전의 시기에는 접경지역은 순전히 군사와 안보적 목적과 기능의 관점에서만 고려되었다. 1980년대 들어 남북 간의 긴장관계가 조금 완화되면서 접경지역 관리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처음으로 싹트기 시작하였다. 1982년 내무부는 민통선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민통선 지역 내 생활환경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의 반공정책의욕을 제고하며, 소득 증대와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김영봉, 1997: 59). 특히, 민통선 지역에 위민실을 설치,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민통선 지역에 대한 출입절차를 간소화하며, 소득기반을 조성(경지정리, 농업용수확대, 영농장비지원, 기계화 영농단지 운영)하는 등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주택개발사업, 상수도 보급 등의 문화복지시설 확충과 주민의 반공의식 제고가 이 사업의 공식적 목적 중의 하나로 언급된 것처럼, 이 시기 정부가 취한 민통선 지역에 대한 지원책은 해당 지역의 발전과 경제적 성장이 실제 목적이라기 보다는 북한에 대한 보여주기 식의 전시효과에 더 많은 강조점이 두어졌다(김영봉, 1997: 59). 즉, 여전히 안보적 가치를 우선으로 한 개발정책 이었던 것이다.

정부의 접경지역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2년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부터였다. 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을 기반으로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권위주의적 국가운영에 대한 도전이 거세진 상태에서 등장한 노태우 정권은 갖가지 민주화 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대북 정책에서도 일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소위 북방정책을 통해 대공산권 적대정책의 기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었고, 남북 간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 속에서 남북 간의 대화도 본격화되어, 1990년에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처음 열렸고, 1991년 12월에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8)]

이러한 변화된 지정학적 조건 하에서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대북한 안보의 최전선이란 개념으로만 접경지역을 대하지 않고, 남북 교류의 통로이자 통일 대비의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접경지역'이란 용어를 정부정책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에서 부터이며, 그 이전에는 '휴전선 인접지역', '민통선 인접지역', '비무장 접경지역' 등의 이름이 사용되었다(김영봉, 1997; 정영태, 2001: 41).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1) 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구축, 2) 접경지역의 개발관리, 3) 남북 교류망의 확충, 정비, 4) 남북한 공동협력사업의 추진 등이 제안되었다(대한민국정부, 1992: 12). 특히, 접경지역의 개발관리와 관련하여 '접경지역의 개발,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 언급되어 이후에 이루어질 '접경지역지원법'의 제정을 위한 초기 토대를 제공하였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영향 하에 국가의 여타 지역개발계획에서도 접경지역 개발과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강원도의 제2차 강원도 건설종합계획(1992-20010)에서는 접경지역에 남북교류공간을 조성하고, 남북교통망을 단계적으로 복원 및 확충하며, 접경지역 내 안보 및 역사적인 유적 등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국토부의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1997-2011)에서도 세계화, 지방화 및 통일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공간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수도권 북부지역에 북방교류기능을 배치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평화의 공간을 조성하며, 접경지역의 자연환경보존, 관광자원 활용,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이 언급되었다(김영봉, 1997: 59). 이처럼 1990년대부터 접경지역은 안보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공간을 넘어서, 남북 교류와 접촉의 통로라는 새로운 지정-지경학적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으로 재구성되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접경지역 거주 주민들의 생활과 정주환경의 개선도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접경지역의 개발과 관리, 그리고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2) '접경지역지원법' 입법 과정 속에 나타난 '안보-경제 연계'

1992년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접경지역 개발, 관리에 관한 법'의 제정이 제안된 이래로 접경지역의 개발을 관리하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화의 노력이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2000년에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 이었다. 접경지역지원법은 여러 행위자들의 상충된 이해와 가치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입법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려곡절을 겪으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었다. 특히, '안보 vs. 경제(혹은 개발)', '환경보전 vs. 개발' 등과 같은 상충되는 가치들과 이해관계들이 경합하고 결합되면서 형성된 법이다 보니,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접경지역에서 나타나는 '안보-경제 연계'의 구체적 모습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① 접경지역지원법 입법과정 개요

표 5는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이 이루어지는 중요 과정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후보는 접경지역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고, 1993년 11월부터 정부는 법률안의 마련에 착수하였다. 1996년에는 통일부 주관으로 추진된 법안이 국회 입법에서 좌절되었고, 1997년 9월에는 188명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입법 상정되었다. 하지만, 통일부를 제외한 정부 내 다른 부처의 반발과 접경지역의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들의 저항으로 인해 이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되었다. 더 이상 추진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던 이 법안의 입법은 정권이 바뀌어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로운 분위기 하에서 다시 추진되었다. 이전 김영삼 정권 시절에는 통일부가 주관부서로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행정안전부로 주관부서가 변경되어 입법이 추진되었고, 동시에 접경지역이 위치해 있는 경기, 강원, 인천의 3개 광역시도가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에 참여하였다. 정부 내 부처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반영한 수정입법안이 마침내 1999년 12월 국회의 행정안전위를 통과하고, 2000년 1월 제정 공포된다(경기개발연구원, 1999; 정영태, 2001).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이 시작된 것은 통일원이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계획'과 1991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에 의거하여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이의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비롯되었다(정영

표 5. 접경지역지원법 입법의 주요 과정

– 김영삼 신한국당 후보 공약 (1992년 12월)
– 김영삼 대통령 취임 (1993년 3월)
– 정부, 법률안 마련 착수 (1993년 11월)
– 통일부, 법률시안 발표 (1996년 10월)
– 법안의 국회상정 좌절 (1996년 11월)
– 국회의원 188명 발의로 국회상정 (1997년 9월)
– 국회 통일외교통사위원회 계류 (1997년 10월)
– 환경단체들, 입법반대 청원 (1997년 12월)
– 김대중 대통령 취임 (1998년 3월)
–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3개시도 접경지역 특별대책팀' 구성 (1998년 11월)
– '접경지역지원법' 입법 발의, 이전에 계류되었던 법안 철회 후 대체 입법 (1999년 10월)
– '접경지역지원법' 행정자치위 통과 (1999년 12월)
– '접경지역지원법' 공포 (2000년 1월)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1999; 정영태 2001.

태, 2001: 60).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도 1995년 4월의 도지사 선거과정에서 이인재 후보가 제기한 '접경지역 지원법' 제정 공약이 기폭제가 되어 법안의 입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기, 강원, 인천 등 접경지역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도 이 법안의 입법을 위해 나섰고, 1996년 10월 통일원과 접경지역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하나의 공동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을 시도하였다(정영태, 2001: 71). 하지만, 이 입법안은 보전 위주의 접경지역 관리 방침을 수립한 청와대 산하의 세계화추진위원회와 접경지역의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들, 그리고 국방부, 재경부, 건교부, 행자부, 환경부 등 주요 중앙부처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게 된다. 더불어 동해안의 북한 잠수정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이 입법안은 국회 상정마저도 유보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정영태, 2001: 63).

국회에서의 장기간 계류로 인해 사실상 폐기될 위기에 빠졌던 접경지역지원법은 1998년 말부터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입법을 위해 적극 나서기 시작하고, 더불어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입법이 재추진된다. 접경지역지원법의 국회 통과가능성이 미약해지자 경기, 강원, 인천의 3개 광역자치단체들이 전면에 나서, 1998년 11월 공동으로 '접경지역 특별대책팀'을 구성하여, 계류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 자체 수정법안을 마련하였다(정영태 2001: 64). 이와 함께 새로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주관부처를 통일원에서 행정자치부로 변경하고, 행정자치부로 하여금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였다(정영태, 2001: 90). 또한,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접경지역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2000년 4월의 총선을 앞두고 주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고자, 수정법안의 국회 상정과 상임위 통과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였다(정영태, 2001: 91). 1997년의 경우와 비슷하게 국방부, 재경부, 환경부, 건교부 등 관계 중앙부처는 접경지역 정책과 관련된 각 부처의 기존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였고, 전국 단위의 환경단체들도 반대하였다. 하지만, 법안 내용 수정에 있어서 행자부는 이들 반대 세력들의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여 반대를 완화시키는데 성공하여, 1999년 말 접경지역지원법이 국회의 주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하고, 2000년 초 제정될 수 있었다(정영태, 2001: 90).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과정에 몇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슈는 접경지역지원법이 접경지역의 개발을 촉진시켜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반발이었다. '보전 vs. 개발'이란 전통적 논쟁 이슈가 드러난 것이었다. 하지만, 1998년 이후 법안의 수정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환경부의 요구 사항(예, 종합계획 수립 시 환경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의 협의 의무화,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시, 도별 기초조사 실시, 자연환경 보전 대책의 수립과 시행의 명문화, 개발사업의 인허가 의제 조항 축소 등)이 상당 정도 관철되면서 반대의 수위도 낮아졌다. 또한, 중앙의 환경단체와 달리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방의 환경단체들은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의 개선과 발전에 대한 필요를 무시할 수 없어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을 지지하였고, 이로 인해 환경반대 세력의 연대가 약화되었다(정영태 2001: 103-105).

이 외에 주요 쟁점이 된 이슈들은 1) 접경지역의 범위 문제, 2) 재원확보 문제, 3) 다른 법 및 계획과의 관계 문제 등이 있었다(경기개발연구원, 1999). 첫째, 접경지역의 범위 문제는 접경지역지원법의 대상이 되는 접경지역을 어느 정도로 넓게 잡을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였다. 접경지역 관련 정책에서 기존의 권한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중앙 부처들은 접경지역의 범위를 최대한 좁게 정의하여 자신들의 권한 약화를 최소화하려 하였고, 반면에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 주체들은 접경지역의 범위를 최대한 크게 하여 입법의 효과성을 높이려 하였다(경기개발연구원, 1999: 281). 둘째, 재원확보 문제는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로 할 것인지, 특별회계로 할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였다.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 추진세력은 특별회계로 해야 지원법의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에 용이하다고 보았고, 입법 반대세력, 특히 예산을 담당하는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특정한 수입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사업에의 지출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였다(하혜수, 1999: 78; 경기개발연구원, 1999: 284). 셋째, 접경지역지원법을 다른 법률 및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위치 지울 것인가도 중요한 쟁점이었다. 이는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다른 법과 제도에 의해 규정된 규제들과 접경지역지원법 중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인데, 접경지역지원법의 찬성 세력은 접경지역지원법이 더 우위에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반면 접경지역지원법 반대 세력은 다른 법률과 규제가 더 우위에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경기개발연구원, 1999: 285).

이런 첨예한 쟁점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접경지역지원법 입법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97년에 계류된 법안을 새로이 수정하면서 입법에 반대하는 중앙 부처의 요구 사항을 상당 정도 수용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에는 성공하였지만, 그 이후 이 법이 접경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과 효력이 약하다는 불만들이 접경지역 지자체와 주민들로부터 줄기차게 제기되었고, 이는 이후 2010년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바탕이 된다.

② '안보-경제'의 경합적 공존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가치가 충돌하고 경합하였지만, 접경지역지원법의 제정에서 가장 근본적 수준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이슈는 안보의 가치와 경제(혹은 개발)의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이었다. 여기서는 '안보-경제 연계'의 관점에서 접경지역지원법 입법의 중요 쟁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앞서 논하였듯이, 한국전쟁 이후 1980년대까지 접경지역은 기본적으로 안보의 논리에 기대어 정의되고 재현되었다. 하지만, 민주화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서, 접경지역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와 인식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특히, 접경지역의 지방 행위자들은 더 이상 안보의 가치를 절대시하기를 거부하고, 안보와 군사적 이유로 강요된 규제에 의해 경제 활동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피해의식을 본격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행위를 추동하는 매우 중요한 동력이었다. 예를 들어, 1999년 5월 4일(화), 의정부 청소년회관에서 경기도가 후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주최하여 열린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상대 연구원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개발 및 보전전략'이란 발표에서 "남북대치에 따른 군사정책 및 군사시설 배치에 따라 경기북부·접경지역에 개발 규제지역"이 설정되어 "정주환경 및 기업 경영환경"이 열악하여 지역발전이 부진하다고 진단하였다(이상대, 1999: 7).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이상대(1999: 12)는 접경지역문제에 대한 접근의 원칙으로 "접경지역의 생활조건, 경제구조 및 사회구조가 수도권 전체 내지 최소한 국토 전체 지역과 최소한 동등하게 만들어져야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프라와 공공시설의 확충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해야함을 강조하였다.[9)]

국가의 접경지역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가치는 분단으로 인한 군사, 안보적 이유로 경제적 기회를 놓친 피해에 대한 보상이란 수동적 차원의 문제 뿐 아니라, 분단된 국토를 가로질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는 차원의 보다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미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접경지역지원법'을 입법하려는 접경지역의 지방 행위자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탈분단과 초국경적 연결과 관련된 접경지역의 긍정적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강조하며,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된 경기개발연구원의 공청회에서 노춘희 당시 경기개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21세기는 대도시권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면서, 경기북부·접경지역 개발도 국가 경쟁력의 강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경기북부·접경지역을 지식산업, 첨단산업, 생태관광산업 등 국가 및 수도권의 새로운 수요를 수용하는 공급기지로 개발하고 21세기 통일시대 남북협력의 거점으로 육성"하자고 주장하였다. 같은 공청회에서 경기

도의 임창열 지사도 "최근 활발해진 남북교류협력과 금강산 관광 등으로 남북통일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경기북부지역이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남북전진기지와 남북교류협력의 관문역할을 담당할 중요한 지역으로 통일기반조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남북 접경지역의 지방 행위자들은 접경지역이 남북교류와 협력의 거점으로서의 잠재적 경제가치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면서, 그 잠재력을 더욱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0)]

하지만, 여전히 강고하게 작동하고 있는 한반도의 분단체제와 냉전 지정-지경학의 조건 속에서 안보의 논리와 가치는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러한 경제적 가치에 기반한 접경지역 지원의 논리들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특히,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책과 개발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접경지역 공간의 군사-안보적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에 우려하고 저항하였다. 예를 들어, 1997년 '접경지역지원법'이 국회에 상정된 후 계류되었을 때 국방부는 이 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는데, 그 핵심 논리는 우리의 안보현실을 감안했을 때, 접경지역의 개발은 군작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었다(경기개발연구원, 1999: 280).

이 정도의 강경한 입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안보의 논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한 다른 주장들도 많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1999년에 나온 '접경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이란 보고서는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적 지원과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군사작전 수행과 지역개발이 어떻게 상충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김영봉, 1999).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보고서는 먼저 한국의 접경지역이 휴전협정, 민간인 통제선, 군사시설보호법 등 안보와 군사적 필요에 의해 규정된 규제와 통제에 의해 민간인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제한이 가해지는 지역임을 인정한다(김영봉, 1999: 20). 또한, 접경지역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한다(김영봉, 1999: 4).

하지만,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했던 경기, 강원, 인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원의 보고서와 달리, 안보 논리를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양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가지는 않는다. 군사작전의 수행과 지역개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북한과의 적대적인 대치 상황에 있는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지적한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의 정책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1) 군사작전과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의 금지, 2) 지역관리와 안보의 연계를 지적한다(김영봉, 1999: 85). 아래의 인용문들은 안보적 가치에 입각한 논리들이 중앙 정부의 접경지역 정책에서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고려되는지 잘 드러내어 준다.

> "접경지역 개발은 작전, 훈련, 보안에서의 저해 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국방이라는 국가 최고의 목표에 대한 민간인 통제선의 효과성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방상의 중요성은 이 지역 관리에 있어서 자연환경의 보전이나 지역개발의 차원을 뛰어넘는 특수한 상황인 것이다" (김영봉, 1999: 85).

> "현재 민통선 북방지역에는 72개의 정착마을과 75개의 출입영농이 적가시권 내에 있다. 이들 정착 마을들은 북한의 대남 방송과 각종 선전물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으로 매우 안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 지역에 대한 관리는 일차적으로 안보에 최우선을 두고 보전과 개발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김영봉, 1999: 85).

이처럼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 과정에서 안보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는 첨예한 대립의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실제 진행된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 과정에서 이 두 상반된 가치와 논리는 1)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를 어느 정도로 완화할 것인가, 2) '접경지역지원법'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이슈를 둘러싸고 주로 충돌하면서 타협과 협상이 이루어

졌다.

먼저, 경제와 개발의 가치를 바탕으로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을 추진한 쪽에서는 개발의 기회를 제약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를 상당한 정도로 완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1999년의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같은 각종 규제가 접경지역의 경제 활동과 개발 행위를 심각하게 제약하여 지역의 낙후를 초래한다고 보면서,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역이나 취락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안보와 군사작전 상의 이유로 반드시 필요한 구역이 아니고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경기개발연구원, 1999: 125).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는 민간에 의한 개발행위는 사전에 군과 협의를 통해서만 진행될 수 있는데, 군부대 마다 협의 기준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민원 처리 기간이 오래 걸려 지역주민의 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경기개발연구원, 1999: 125). 반면 국방부는 '접경지역지원법'에 대한 원론적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동시에 부득이 이 법률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군의 작전상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며 군사 관련 법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다(정영태, 2001: 76).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경기개발연구원, 1999: 280).

둘째, '접경지역지원법'이 안보의 논리에 입각한 군사시설보호법 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애초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 추진세력은 이 법을 특별법화 하여 다른 법률 보다 상위의 지위를 부여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보다 실효성을 가지도록 만들기를 원했으나, 국방부와 같이 안보의 관점에서 '접경지역지원법'에 우려를 가지고 있던 세력들은 '접경지역지원법'의 위상을 낮추어 안보의 가치에 기반을 둔 다른 법률과 제도들의 효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를 원했다(정영태, 2001).

'접경지역지원법'의 최종 입법은 이러한 쟁점에서 경합되는 논리들의 타협과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앞서 논하였듯이 '접경지역지원' 법률안은 1997년 이후 장기간 국회에서 계류되었다가 1998년부터 행정자치부가 주무부처로 나서면서 새로이 입법 추진되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는 입법을 원활히 완료하기 위해 이 법의 입법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요구 사항들을 적극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따라서, 안보 논리와 경제 논리가 충돌하는 부분에서도 안보의 가치를 중시하는 세력들의 주장을 상당 정도 수용하여 입법안이 수정되었다. 그 결과 '접경지역지원법'은 안보의 논리에 기댄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과 같은 규제와 법률에 비해 상위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채 입법이 되었다. 더불어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 접경지역에서의 안보적 고려가 약화되지 않도록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 국방부의 관련 부처장과의 협의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애초에 국방부가 요구하였던 1)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지역의 관할 부대장과 협의할 것과 2) 민통선 이북 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접경지역지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항은 최종 입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정영태, 2001: 94).

이처럼 '접경지역지원법'의 제정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안보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라는 경합적 가치가 타협을 통해 공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두 논리의 미시적 경합과 타협의 과정만으로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 과정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 방식의 '안보-경제 연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규정하는 보다 거시적 정치-경제적 변화와 조건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강고한 안보 세력의 반발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지원법'의 제정이 가능했던 것은 접경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제-개발 세력의 성장을 촉발한 거시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지방 차원에서 조직된 개발주의 세력의 영향력이 증가하였다.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 과정에서 경기, 강원, 인천 광역자치단체의 주체적 노력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는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함께 접경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개발 정책을 추진했음에 따른 것이었다(정영태, 2001: 116). 둘째는 1998년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도 접경지역에서 개발을 지향하는 경제적 가치가 더 중요해진 조건이 되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면 접경지역 개발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 접경지역 지원법 제정에도 유리해지지만, 반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선회하면 접경지역 개발과 지원법 제정도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예로 1996년에 통일원과 접경지역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법'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1996년 9월에 강릉 잠수함 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가 크게 경색되어 법안의 상정이 유보된바 있다. 반면, 1999년에 접경지역 지원법이 입법된 데에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의 분위기가 고양된 것이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정영태, 2001: 117).

3) 2000년 이후, 포스트 지원법 시기의 '안보-경제 연계'

2000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을 둘러싸고 형성된 '안보-경제 연계'의 특징은 국가적 스케일에서 규정되는 안보의 논리와 지방적 스케일에서 형성된 개발 논리 사이의 갈등과 경합, 그리고 협상과 타협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된 2000년 이후 '안보-경제 연계'의 특징은 남북관계를 둘러싼 국제적인 지정-지경학적 조건의 변화, 지방적 차원에서 개발주의 정치의 활성화,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른 시장주의 주체성의 강화 등과 같은 거시적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2000년 이후 포스트 지원법 시기의 '안보-경제 연계' 구조의 변화는 1) 전통적인 '국가 안보 vs. 지역 개발'이란 스케일 간 경합관계의 지속, 2) 국가적 스케일에서 '안보-경제 연계'의 새로운 시도 등장, 3) 지방적 차원에서 규정되는 안보 논리의 등장('안보-경제 연계'의 지방화)이란 3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① '국가 안보 vs. 지역 개발' 간의 경합관계의 지속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접경지역지원법이 2000년에 제정된 것은 여러 상이한 이해관계와 가치들의 경합과 충돌, 그리고 협상과 타협의 결과였다. 그러다 보니 접경지역지원법이 입법은 되었지만, 접경지역의 개발과 발전에 필요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여 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는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법안의 지속적 개정이 이루어졌다. 접경지역지원법은 2000년 1월 21일 제정된 이후 총 2011년까지 19번의 개정을 거쳤고, 결국에는 2011년 4월 29일에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격상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시키는 데 있어서 '접경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와 같은 개발이익을 지향하는 지방 행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2008년부터 '접경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 등과 같은 접경지역의 지방 행위자들은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핵심적 논리는 기존의 접경지역지원법이 군사시설보호, 수도권 규제 등과 같은 다른 규제들과 충돌하여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격상시켜 타법이 규정한 규제로 부터의 제약을 덜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었다. 예를 들어, 2010년 9월 3일,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가 후원하고 철원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의 한기호 의원이 주최한 '제대로 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란 정책토론회에서 김범수 강원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제정의 방향으로 1)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2) 현재 접경지역지원법이 국토기본법, 군사시설보호법의 하위법으로 규정되어 타법률과 상충되는 경우 실효성을 발휘하기 힘드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며, 3) 현 법률 하에서는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이 일반적인 낙후 지역 지원과 비슷하게 취급되고 있는데, 이를 통일 대비 차원의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김범수, 2010: 30-31).

안보와 개발 가치의 경합의 상황에서 '접경지역지

원법'의 입법을 위해 일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개발의 욕망들이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시 한 번 강하게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 차원의 개발주의 정치가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이에 덧붙여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소유자, 토건자본,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 언론 등의 토건적 개발연합이 강화되고 개발주의적 지방정치가 극도로 활성화되었다(박배균, 2009). 이런 상황은 접경지역에서도 나타나 개발주의적 경제 논리가 국가주의적 안보 논리를 압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서울 인근의 수도권 접경지역에서는 부동산 개발을 지향하는 개발주의 욕망이 폭발적으로 표출되면서, 안보적 규제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개발 행위에 대한 규제에 대한 공격이 본격화되었다.

이런 상황은 접경지역발전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하는 것을 국회에서 입법하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특별법으로 격상되면서 이루어진 법제적 변화의 핵심은 1) 개발 행위를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 접경지역의 범위를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읍、면、동 단위에서 민간인통제선 이북을 포함한 시、군 단위로 확대하고, 2)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계획수립과정의 민주성을 강화하며, 3) 연도별 사업계획에 자연환경 보전대책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도록 하여 접경지역의 개발과 자연환경 보전을 조화롭게 추진하고, 4)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접경지역의 발전과 개발사업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수립하며, 5) 접경지역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 및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 규정을 두어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확보한 것 등이었다(유현아, 이상준, 2016: 19-21).

이처럼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으로의 격상은 '안보-경제 연계'의 구조가 좀 더 경제와 개발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의 논리가 안보의 논리를 완전히 압도한 것은 아니었다. 특별법의 초안에서는 특별법을 국토기본법과 군사시설보호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관계 부처들의 강한 반대로 인하여 특별법을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기본법 등 보다 상위의 지위에 두는 것이 실제 입법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접경지역의 개발주의 세력들의 경제 논리에 입각한 규제 해제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었다. 이는 '접경지역발전 특별법'의 개정에 대한 요구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6년 8월 26일, '접경지역사랑 국회의원 협의회'와 '접경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가 주최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범수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접경지역의 토지이용규제가 대부분 산지규제(행정구역 면적 대비 79%)와 군사규제(행정구역 면적 대비 62.8%)로 구성되어 있어, 접경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산지와 농지 및 군사관련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며, 더불어 접경지역의 토지에 대해 여러 유형의 규제가 중복으로 지정되어있다(경기도 접경지역의 경우 행정구역의 58.9%의 면적이 2개 이상의 용도지역지구로 지정)고 하면서 과도한 중복규제의 완화와 규제 저감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김범수, 2016: 28). 이러한 요구가 지속되면서 '접경지역발전 특별법'도 2011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12번의 개정을 겪게 되었다.

접경지역지원법과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보면서 접경지역에서 개발주의에 입각한 경제의 논리가 안보의 논리를 완전히 압도하게 되었다고 쉽게 결론 내려서는 곤란하다. 한반도의 분단체제와 남북 간의 긴장이 지속되는 한 안보의 논리는 쉽게 약화되지 않는다. 특히, 2000년대 후반 이후 천안함 사건, 북핵 문제 등이 겹쳐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안보의 논리가 다시 중요해졌다. 게다가 2008년 정권 교체가 되면서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안보의 논리가 극도로 강화되었다. 특히 보수 세력은 안보의 논리를 강화하여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려 하였고, 그 와중에 남북 간의 영토적 관계에서 애매한 상태로 남아있던 NLL이 정치적 이슈화되어, NLL에 영토적 지위가 부여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접경지역의 안보 논리는 다시 강화되었고,

노무현 정권이 서해안 접경지역의 긴장 완화와 평화의 진작을 위해 추진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되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이 좌초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국가 안보'와 '지역 개발'이란 두 가지 가치는 1990년대 이후 정부의 접경지역 정책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두 요소였고, 이 둘은 여전히 갈등하고 경합 하면서 협상과 타협을 통해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② 국가적 스케일에서 '안보-경제 연계'의 새로운 시도 등장

한국전쟁 이후 분단체제와 남북 간의 적대적 관계가 구조화되면서 남한 사회에서 국가 안보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으로 부터의 위협에 대해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상존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안보의 논리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남북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 문제의 연장선으로 이해되었다. 통일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전제로 한 통일 이었고, 남북관계개선이란 것도 안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북한과의 교류와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잠재적 안보위협요인을 무력화시키자는 안보전략의 일종으로 이해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그 이전의 보수 정부와 달리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우선시하는 통일정책을 펴면서 이를 "햇볕정책"이라 이름 붙인 것도 '강한 바람(강경정책)' 보다는 '따뜻한 햇볕(유화정책)'이 겨울 나그네와 같은 북한의 마음을 녹여 남북관계개선과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 내고, 궁극적으로 잠재적인 안보 위협 요인을 없애겠다는 안보 전략적 측면이 강조된 것이었다. 따라서, 남북 간의 경제적 협력과 관계의 개선 등은 경제적 논리에 따른 지경학적 전략이었다기 보다는 국가 안보의 논리를 우선시한 지정학적 전략이었던 것 이었다. 즉, 남한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형성된 '안보-경제 연계'는 안보의 논리를 우선시 하면서, 그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경제의 논리가 이용되는 방식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형성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2000년대가 지나고 나면 국가 스케일에서 안보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를 새롭게 연결시키는 방식이 등장한다. 통일 혹은 대북 관계를 접근함에 있어서 경제의 논리를 보다 앞에 세우고 '안보-경제 연계'를 구성하는 방식이 등장한 것이다. 이전에도 통일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와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방식의 '안보-경제 연계'가 본격화되어 국가의 통일 담론으로까지 격상된 것은 박근혜 정권 시절의 '통일대박'론을 통해서 비롯되었다.[11] 통일대박론은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는데, 통일이 되면 남북 모두 큰 경제적 편익을 얻을 것 이라는 주장이다(안문석, 2015: 196). 즉, '통일대박'이란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 통일을 더 이상 경제적 부담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가져다 줄 추진력으로 인식하고 적극 준비에 나서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었다(변종헌, 2014). 특히, 성장 동력이 약화되어 위기에 빠진 우리의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보자는 인식이 '통일대박'론의 바탕에 깔려 있다. 이처럼 통일을 경제적 기회로 연결시킴으로서 통일은 더 이상 국가 안보의 이슈가 아니라, 위기에 빠진 국가 경제를 새로이 도약시킬 수 있는 경제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를 통해 경제의 논리와 안보의 논리가 새롭게 연결된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이 '통일대박'론을 통해 새롭게 제기한 '안보-경제 연계'는 정권 내부의 안보 논리 중심의 전통적이고 현실주의적인 통일관과 충돌하면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 정책의 핵심으로 강조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남북한이 신뢰를 바탕으로 통일기반을 구축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정작 북한에 대하여는 불신에 가득한 압박과 강경책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게다가 박근혜 정권 내의 강경한 안보주의자들은 북한붕괴론에 기반한 흡수통일론을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이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도 강경책 위주의 대응과 첨단 공격무기의 적극 개발 등과 같은 공격적 현실주의 대북정책으로 표출되었다(안문석, 2015). 이처럼 박근혜 정권은 한편에서는 통일이 경제적 기회이니 적극 준비하자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하여는 적대적 안보관에 기반한 정책으로 일관

하였다. 그 결과 통일이 주는 경제적 편익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 높였을 뿐 실제로 통일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전략이 부족하였다. 관련하여 안문석(2015: 196)은 "정작 필요한 것은 경제협력을 어떻게 재개하고, 이산가족 상봉은 어떻게 정례화시키고, 금강산 관광은 어떻게 다시 시작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은 전혀 제시되지 않아, 통일대박론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 쉽게 식어갔다고 평가한다.

물론 박근혜 정권에 의해 본격화된 이 새로운 '안보-경제 연계'의 구상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통일대박'론을 계기로 통일부, 국토교통부 등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비한 구체적 국토개발계획 마스트플랜 등이 만들어졌고(안문석, 2015: 196), 이런 영향으로 당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북핵 문제 등과 같은 안보적 긴장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엄청나게 경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지원하는 각종 법률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었다. 특히, '접경지역발전 특별법'과 관련해서, 접경지역의 개발 행위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줄이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통과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에 가능했다.

더구나, 지경학적(geo-economic) 접근에 기반한 새로운 '안보-경제 연계'의 구상은 문재인 정권 들어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서 대북 정책의 핵심적 논리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새로운 대북 정책의 기조로 제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반한 '지정학적(geo-political) 안보'를 통해 한반도의 경제적 발전 및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는 '지경학적(geo-economic) 계산'을 바탕에 두고 있다(지상현, 이승욱, 박배균, 2019). 지난 2018년 8월 15일, 73주년 광복절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생존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 분단의 극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정치적 통일은 당장 이루지 못하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12], 남북 관계의 개선이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이라는 지경학적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접경지역을 바라보는 국가의 관점에도 뚜렷한 영향을 미쳐, 앞에서 언급한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경기도 파주 일대의 상전벽해와 같은 눈부신 발전도 남북이 평화로웠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라고 강조하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구체적 사업으로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의 설치를 제안하기도 하였다(지상현, 이승욱, 박배균, 2019).

남북 관계를 지경학적 시선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이 새로운 방식의 '안보-경제 연계'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제공할 수 있는 희망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담론이지만, 여전히 '지정학적 안보'와 '현실주의 국제관계'의 틀 속에서 규정되는 '안보-경제 연계'의 담론이 강고한 상황에서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있다. 더구나 북한 비핵화와 제재를 둘러싼 북미 협상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냉전의 지정학이 강고한 상황에서 희망의 지경학에 기댄 '안보-경제 연계'는 여전히 미완의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란 차원으로만 축소해석 하여, 탈냉전 이후의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지나치게 경제과 이윤 중심적이라는 비난이 제기될 수도 있다. 즉, 새로운 '안보-경제 연계'는 여전히 경합 속에서 구성되는 과정에 있으며, 언제든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운명에 놓여있다.

③ 지방적 차원에서 규정되는 안보 논리의 등장: '안보-경제 연계'의 지방화(localization)

2000년대 나타나는 접경지역 '안보-경제 연계' 구조의 변형된 모습 중의 하나는 안보와 경제의 새로운 연결 방식이 지방적 스케일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전까지 접경지역의 '안보-경제 연계'는 '국가적 차원에서 규정되는 안보 vs. 지방적 차원에서 규정되는 개발'이란 경합적 구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오면서 접경지역의 지방적 이해를 '개발'의 차원에서만 규정하지 않고 '안보'라는 틀로 재규정하면서, '지방의 안보'와 '지방의 경제'를 연결시켜 설명하려는 시도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과정은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접경지역인 파주의 지방 행위자(예, 시민사회단체, 지역상인, 농민)들과 대북전단살포를 주도한 탈북자 단체 사이의 갈등에 대한 이승욱(2018)의 연구가 잘 보여준다. 접경지역의 안보-경제 연계를 둘러싸고 나타난 전통적인 지정학적 갈등과 충돌은 '국가 안보'의 논리를 강조하는 정부와 '지역 개발'의 논리를 앞세운 지역 주민 간의 대결 양상을 보였다면, 대북전단살포를 둘러싸고 파주 지역에서 나타난 갈등은 민-민 대립의 양상을 띠었다. 이승욱(2018: 634)에 따르면, 분단 체제 하에서의 한반도 접경지역은 전쟁의 기억, 군사 문화 등이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침투하여, 국가 안보의 논리가 지배적인 지정학적 공간이었다. 이는 정치적으로 보수화되고 경직된 주체성을 형성하여, 선거에서 보수 정당에게 거의 항상 몰표를 몰아주는 소위 '안보 벨트'로 나타났다. 하지만, 북한 인권을 주장하는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 행위는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안보벨트인 접경지역의 지역 정치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파주와 같은 한반도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북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장기간의 안보 위협은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 되어 접경의 주민들은 이러한 안보 위협에 대해 오히려 둔감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즉, 접경의 주민들은 한국 전쟁 이후 장기간의 분단과 대립의 경험 속에서 북으로 부터의 위협에 오히려 둔감해지고 익숙해지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단체들이 파주와 같은 접경지역에서 행한 대북전단살포 행위는 그동안 익숙해져서 둔감해졌던 지정학적 공포와 위협을 다시금 각성시켜준 계기로 작동하게 되었다(이승욱, 2018: 635-636).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파주의 지방 행위자들이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달살포 행위에 대해 반발하여 취한 대응 과정에서 그간 국가 안보를 강조하던 보수적 정치세력들이 사용하던 담론과 전술을 전용하였다는 것이다(이승욱, 2018: 636). 파주의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은 보수단체의 전달살포 행위가 지역 차원의 생명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정학적 안보와 경제안보의 담론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였다. 특히, 이들 지역 행위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임을 강조하면서, 전단살포가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는 정부와 군의 입장을 강하게 비난하였다(이승욱, 2018: 637).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 동안 국가적 스케일에서 주로 규정되고 강화되어 왔던 '안보'의 논리가 그 보다 작은 '지방'적 스케일에서, 혹은 그 보다 더 미시적인 '신체'의 스케일에서 다시 정의되면서, '안보-경제 연계'가 더 작은 공간적 스케일에서 새롭게 구성될 계기가 형성되었다.

접경의 주민들은 대북전달살포로 인한 지방적 차원의 안보 위기가 지역 경제의 위기로 연결된다는 주장을 펴면서 '안보-경제 연계'를 지방적 차원에서 구성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대북전달살포 반대 시위의 주축 중 하나였던 임진각과 오두산 통일전망대 인근 상인들과 식당 주인들, 그리고 민통선 지역의 농민들은 보수단체의 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의 안보 위기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역의 "경제안보에 대한 위협"이라 규정하면서 전단 살포에 대해 반대하였다(이승욱, 2018: 637). 즉, 접경지역에서 경험되고 인지되는 안보는 다른 곳과 달리 그 지역 주민들의 구체적 삶과 생계에 직결되는 의미를 지니며, 따라서 이 지방적 수준의 구체적 안보는 국가적 차원에서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는 안보와 달리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삶과 일상적 생계와 밀접히 연결된다. 이러한 지방적 차원의 '안보-경제 연계'의 구조 속에서 국가적 차원의 추상적 안보 논리에 바탕을 둔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삶과 일상적 생계를 위협하는 지정학적 폭력으로 인식되어, 주민들의 저항과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이승욱, 2018: 638). 이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규정되는 일반적이고 추상화된 안보의 논리는 지방적 차원에서 규정되는 다양한 안보 논리(예, 지역주민들의 삶과 생명의 안전, 지역의 경제안보, 생계 안전 등)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새로운 보다 미시적 차원의 '안보-경제 연계'를 구성하여 국가 안보의 논리에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5. 결론

최근 들어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의 접경지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평창올림픽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의 대화가 재개되면서, 접경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계에서 접경과 경계를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폭 넓은 연구와 논쟁은 부족한 형편이다. 여전히 많은 연구들은 근대적 영토 개념이 제시하는 이상형에 따라 영토와 경계를 고정불변하고 완벽하게 통제된 절대적 실체로 바라보는 관점을 기반으로 한반도 접경지역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이러한 전통적 관점과 거리를 두고, 한반도 접경지역이 지니는 다중적이고 경합적이며 복합적인 성격을 조명하려는 취지하에 작성되었다.

특히, 본 논문은 국가 영토의 복합성과 다층성, 그리고 경계의 다공성을 강조하는 포스트 영토주의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접경지역을 국경을 둘러싸고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과 행위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역동적 실천들 속에서 구성되고 항상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회적 구성물이라 바라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경과 접경을 영토성과 이동성의 복합적 교차공간으로 인식할 것을 제안하면서, 한반도 접경지역이 영토성에 기반을 둔 '안보'의 논리와 이동성을 지향하는 '경제'의 논리가 서로 경합하면서 결합되는 '안보-경제 연계'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크게 2단계의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중앙과 지방의 언론(중앙일간지, 접경지역의 지역지)에서 접경지역이 재현되는 방식을 신문기사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13] 이를 통해 접경지역에 대한 언론의 접근방식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중앙일간지와 지방지 사이에는 어떠한 차별성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언론의 접경지역 재현 방식의 중요한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접경지역이 언론에서 거론되는 빈도는 시기에 따라 차별성을 보이는데, 남북 교류가 진전되거나, 거꾸로 남북 긴장이 강화되는 때에 접경지역 관련 기사의 숫자가 급증하였다. 다만 접경지역에서 발행되는 지방지의 경우는 중요 선거 시기에 접경지역의 개발 이슈가 중요한 선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접경 관련 기사의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접경지역에 대한 기사의 내용에서 전국지와 지방지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전국지에서는 '안보' 관련 이슈가, 지방지에서는 '개발' 관련 이슈가 접경지역 관련 기사에서 보다 중요하게 취급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안보 이슈와 개발 이슈가 접경 관련 언론 기사에서 언급되는 방식에서 시기 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긴장될 때는 안보 이슈가 언론에 많이 노출된 반면,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던 시기에는 안보 이슈 보다는 개발 이슈가 언론에서 더 많이 다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국가의 접경지역 정책을 둘러싼 사회 세력들의 경합관계를 '안보-경제 연계'의 틀 속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국회 자료, 정부 기관의 보고서 등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통해, '접경지역지원법'과 '접경지역지원 특별법'과 같은 정부의 접경지역 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세력들이 어떻게 경합하였으며, 이 와중에서 '안보'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는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접합되면서 '안보-경제 연계'의 복합체를 구성하였는지 탐구하였다. 1980년대까지 남북 간의 대결국면이 지속되던 시기에는 '접경지역'이란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90년대 초반부터 남북 간의 대화가 시작되면서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0년대의 민주화로 인한 시민사회의 성장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의 본격화로 인한 개발주의 정치의 활성화는 접경지역에서 개발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접경지역의 발전과 개발을 지원하는 '접경지역발전법'이 2000년에 제정 되었는데, 그 제정과 개정의 과정에서 안보와 개발의 논리는 지속적으로 경합하면서도 타협을 통해 공존하고 결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접경지역지원법'과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은 '국가적 스케일에서 규정된 안보'의 논리와 '지방적 스케일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개발'의 논리 사이의 갈등과 경합, 그리고 협상

과 타협을 바탕으로 형성된 '안보-경제 연계'의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2010년 이후가 되면 새로운 방식의 '안보-경제 연계'가 출현한다. 하나는 분단이나 통일과 같이 전통적으로 안보의 논리에 의해 규정되던 이슈들을 경제의 문제로 바라보게 하는 '통일대박'론이나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같은 대북정책들이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 의해 추진된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을 더 이상 지정학적 문제만이 아니라, '통일경제' 혹은 '한반도 경제공동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기회로 보는 지경학적 상상이 등장하면서, '안보-경제 연계'의 구체적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또 다른 변화는 보수단체의 대북전단살포 행위에 대한 파주 지방 행위자들의 반대 운동에서 잘 보여지 듯, 국가적 차원에서만 정의되던 안보를 지방적 차원에서 규정하는 시도들이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면서, '안보-경제 연계'가 보다 지방적인 스케일에서 재구성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결국, 국경과 접경을 둘러싸고 안보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가 서로 뒤엉키고 결합되는 과정은 특정의 일관된 규칙과 방향성 속에서 질서있고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장소와 스케일에서 구성되는 차별적 이해관계와 정체성들이 만나고 경합하는 갈등적 과정 속에서 우발적으로 만들어지며, 동시에 복잡한 사회-공간적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변형되는 것이다. 이러한 '안보-경제 연계'는 한반도 접경지역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이 만나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의 핵심적 요소이며, 이를 중심으로 접경지역에서 나타나는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복합적 공간정치가 펼쳐진다. 접경지역이 지니는 이러한 다중성과 복합성, 그리고 사회구성적 성격을 이해한다면, 국가 안보의 논리에만 기댄 특정한 규범적 논리를 바탕으로 접경지역을 재단하고 이해하는 정책적 시도는 접경지역에 대한 관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 질서를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주

1) 중앙일간지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기사가 제공되고 있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강원도 지역지인 강원일보와 경기도 지역지인 경인일보의 경우 2008년 2월부터 기사가 제공되고 있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빅카인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문들 중 경제지(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 경제)와 방송사(MBC, OBS, SBS, YTN), 전문지(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은 중앙일간지와 지역지 간의 논조 및 담론 분석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위해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4) 빅카인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제 분류 중 관련도가 낮은 국제, 스포츠, IT 및 과학 영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중앙일간지의 경우 국제분야 기사건수는 305건, 스포츠 분야 기사건수는 8건, IT 및 과학분야는 19건으로 검색되었다.
5)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기사의 메타정보는 뉴스 식별자를 포함하여 뉴스일자, 언론사, 제목, 통합분류, 사건사고, 인물, 위치, 기관, 키워드, 특성추출, 본문, URL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형태소 분석 및 데이터 전처리가 완료된 '키워드'를 엑셀파일로 변환하였다.
6) 경인 지역지의 경우, 이명박 정권(2008년) 이전까지의 검색된 기사량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빈도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외하고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접경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한 단어가 주를 이루었다.
7)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인천(2): 강화군·옹진군/ 경기(7): 동두천시·고양시·파주시·김포시·양주시·연천군·포천군/ 강원(6):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이 접경지역에 해당된다.
8) 이 문서에서 남북한은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이라는 7·4 남북 공동 성명의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또한 남북한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군사적 침략을 하지 않으며, 상호 교류를 통해 민족의 공동 발전과 단계적 통일을 실현하자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핵개발이 국제적 이슈가 되고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이 합의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채 사실상 무효화되었다. 이후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뒤 남북 관계가 복원되고,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채택하면서 이 합의서의 이행이 다시 추진되었다(네이버 지식백과, 남북 기본 합의서).
9)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1999년 5월 4일(경기개발연구원 주최)

10)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1999년 5월 4일(경기개발연구원 주최)

11)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남북 관계에 있어 경제적 교류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었고 실제로 남북 경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를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의 연장선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후 나타나는 경제 논리를 앞세운 새로운 통일정책의 시작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는지 논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박근혜 정권의 통일 정책을 경제 논리를 앞세운 새로운 '안보-경제 연계'의 시작으로 본 것은 담론의 차원에서 경제의 논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통일과 남북 관계를 규정하는 논리가 전면화되고 본격화된 것이 박근혜 정권의 소위 '통일대박론'에 의해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무현 정권이 남북 경제교류를 강조하였지만, 보수 세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통일비용 문제에 대해 대항 담론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노무현 정권이 아직 새로운 '안보-경제 연계'의 담론적 틀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새로운 '안보-경제 연계'의 담론적 틀이 대북 강경책을 주도했고 보수적 성격이 강했던 박근혜 정권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참으로 역설적이다.

12)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4022)

13) 언론기사에 대한 본 논문의 실증연구에서 대표적인 보수지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중앙일간지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본 연구의 큰 한계이다. 이 한계는 추후 연구에서 진보지와 보수지 사이의 차이를 분석함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경기개발연구원, 1999,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발전전략, 경기도.

김범수, 2010,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 실태와 특별법의 수정 방향, 국회의원 한기호 정책토론회(자료집), 2010년 9월 3일.

김범수, 2016, 접경지역 규제해소를 통한 발전방안 제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2016년 8월 26일(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공동주최).

김영봉, 1997, 접경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국토개발연구원.

대한민국정부, 1992,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박배균 · 황성원 역, 2013, 영역, 시그마프레스 (=Delaney, D., 2005, *Territory: a short introduction*, Blackwell).

박배균, 2017, "동아시아에서 국가의 영토성과 예외적 공간: 동아시아 특구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2), 288-310.

박승정 · 전진오 · 김선우 · 김성태, 2017, "국내 주요일간지의 대통령 이슈소유권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을 중심으로," 정치 · 정보연구, 20(3), 25-56.

백영민, 2017, R를 이용한 텍스트마이닝, 한울아카데미.

변종헌, 2014, "통일대박론의 비판적 논의," 윤리연구, 99(0), 123-150.

변필성 · 이윤석 · 임상연 · 김진법 · 김광익, 2013,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국토연구원.

심주영, 2017, "용산미군기지 공원화 과정의 도시담론 분석: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신문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도시설계, 18(5), 37-52.

안문석, 2015,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동향과 전망, 통권 95호, 190-222.

유현아 · 이상준, 2016, 접경지역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이상대, 1999, 경기북부 · 접경지역의 개발 및 보전전략,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공청회(자료집), 1999년 5월 4일(경기개발연구원 주최)

이승욱, 2018, "접경지역의 도시지정학: 경기도 파주시 대북전단살포 갈등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53(5), 625-647.

정영태, 2001, 휴전선 접경지역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접경지역지원법'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지상현 · 이승욱 · 박배균, 2019, "한반도 경계와 접경지역에 대한 포스트 영토주의 접근의 함의," 공간과 사회, 29(1), 206-234.

하혜수, 1999, 접경지역 지원법률 제정 방안.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공청회(자료집), 1999년 5월 4일 (경기개발연구원 주최).

한승희, 2018, "뉴스 빅데이터를 이용한 우리나라 언론의 기록관리 분야 보도 특성 분석: 1999~2018 뉴스

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5(3), 41−75.

Anderson, J. and O'Dowd, L., 1999, Borders, Border Regions and Territoriality: Contradictory Meanings, Chanaing Significance, *Regional Studies*, 33, 593-604.

Andreas, P., 2000, *Border ga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Blei, D. M., 2012, Probabilistic topic models, *Communications of the ACM*, 55(4), 77-84.

Coleman, M., 2005, U.S. statecraft and the U.S.-Mexico border as security/economy nexus, *Political Geography,* 24, 185-209.

Elden, S., 2013, *The Birth of Territ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rande, E. and Pauly, L. W., 2005, *Complex sovereignty and the emergence of transnational authority, Complex sovereignty: Reconstituting political author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85-299.

Jessop, B., 2016, Territory, politics, governance and multispatial metagovernance, *Territory, Politics, Governance*, 4 (1), 8-32.

Newman, D. and Paasi, A., 1998, Fences and neighbours in the postmodern World: boundary narratives in political geography, *Political Geography,* 22(2), 186-207.

Passi, A., 1996, *Territories, boundaries and consciousness: the changing geographies of the Finnish-Russian border,* Chichester: Wiley.

교신: 백일순,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사회센터(이메일: thinki01@snu.ac.kr, 전화번호 02−880−2108)

Correspondence: Yilsoon Paek,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Center for Asian Urban Societies,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Tel: 82-2-8802108, E-mail: thinki01@snu.ac.kr

최초투고일 2019. 3. 28
수정일 2019. 4. 28
최종접수일 2019. 4. 29

대한지리학회지 제54권 제2호 2019(229~249)

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의 의미론적 조우(遭遇) :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 사례를 중심으로

송원섭*

The Semantic Encounter between Representationess and Non-representationess of Landscape: Cultural Geography of *Ahn'gŏ'ri-Bak'gŏ'ri* Folk Housing Landscape of Jeju Island

Wonseob Song*

요약 : 이 논문은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 경관연구의 핵심적인 두 가지 개념, 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의 의미론적 조우에 대한 탐색을 위한 논문이다. 이를 위하여,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의 공간적 구성과 제주해녀들의 몸적 정서(體的 情緖, bodily affect)로서의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가 각각 재현으로서의 경관개념과 비재현으로서의 경관개념에 상응됨을 논증해낸다. 더 나아가, 두 개의 경관개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분절되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개념의 비분절성(非分節性, suprasegmental feature)을 밝혀내고자 한다.

주요어 : 문화경관, 경관지리학, 재현, 비재현, 정서(情緖), 몸적 정서(體的 情緖)

Abstract :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semantic encounter between representationess and non-representationess of landscape in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By giving empirical buoyancy to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the spatial form of *Ahn'gŏ'ri-Bak'gŏ'ri* folk housing and liberal communitarianism as the bodily affect of Jeju haenyeo(women divers), this paper demonstrate that representationess and non-representationess of landscape are inter-locked in cultural landscape of *Ahn'gŏ'ri-Bak'gŏ'ri* folk housing. Through this, finally, the suprasegmental feature of the concept of landscape is emerged.

Key Words : Cultural landscape, Landscape geography, Representationess, Non-representationess, Affect, Bodily affect

1. 서론

본 논문의 목표는, 경관(景觀, landscape)의 재현성(再現性, representationess)과 비재현성(非再現性, non-representationess) 두 개의 문화지리적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에 대한 문화지리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주거경관에 대한 문화지리적 접근을 시도하는 주된 이유는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경관과 제주해녀문화'라는 실증사례를 통하여 문화지리학 경관연구의 주요 인식론이자 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 경관에 대한 재현적 접근

* 문화역사지리학 박사,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세계문화유산연구 총괄 (PhD in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Manager of World Cultural Heritage Studies, Centre for Jeju Studies, Jeju Research Institute, South Korea), culturalgeo@gmail.com

과 비재현적 접근에 대한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함이다. 이를 통하여, 경관의 핵심적 두 개념, 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이 분절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님을 논증해내고자 한다.

'경관'이라는 용어는 문화(文化, culture)라는 용어만큼이나 거시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하나의 포괄적 개념(an umbrella term)이다. 하지만, 경관지리학에서 활용되는 '경관'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명확하다. 경관지리학에서의 경관은 '환경과 문화 사이의 상호작용(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culture)' 그리고 그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양자(兩者, both sides: nature and culture) 모두에 새겨진 문화적·역사적·사회적 흔적'을 통칭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관의 의미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패러다임들의 전환 속에서 이어져 온 경관지리학 연구들을 관통하는 공통분모라 할 수 있다(진종헌, 2013).

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의 차이는 그러한 환경과 문화 사이에 새겨진 인문사회적 흔적들의 '서사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경관의 재현적 의미는 경관에 새겨진 인문사회적 흔적에 대한 거시서사(mammoth statements)에 연계되며, 경관의 비재현적 의미는 경관에 새겨진 인문사회적 흔적에 대한 미시서사(minimal statements)와 연계된다. 경관지리학사에서 '재현성-거시서사'와 '비재현성-미시서사'의 구분은, 경관이라는 하나의 실재에 대한 서로 다른 스케일의 관점에서 비롯된다(송원섭, 2015).

거시서사로서의 경관의 재현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신문화지리학의 경관연구들의 경우에는, 경관에 숨겨진 문화·사회·정치적 차원들에 초점을 맞춘 지리적 탐구가 이루어진다(e.g. Cosgrove, 2006, 1985; 1998; Jackson, 1989; Matless, 1998; Mitchell, 2003; Rose, 1993, etc.). 이와 같은 경관연구의 핵심적 특징은, 경관을 하나의 객관적 실재로 개념화하면서, 경관에 재현적 원리의 정립을 추구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문화역사적 관념의 재현으로서의 경관개념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반면에, 미시서사로서의 경관의 비재현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비재현지리학의 경관연구들에서는, 경관을 경험하는 주체와 경관 사이의 '미시적 관계(minimal assemblage)'에 초점을 맞춘 지리적 탐구가 이루어진다(e.g. Dewsbury, 2015; Jones, 2011; Macpherson, 2010; 2009; Wylie, 2005, etc.).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경관과 주체 사이의 관계의 중심에 '몸적 감응(感應)을 바탕으로 한 정서(bodily affect)'에 대한 고찰이 놓여있다는 점이다(송원섭, 2015). 이와 같은 경관연구에서는, 문화역사적 관념의 재현으로서의 경관개념을 잠시 보류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경관지리학사에서 주요한 두 가지 개념, 재현으로서의 경관개념과 비재현으로서의 경관개념이 분절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미론적 상호보완의 역할을 통하여 경관(景觀, landscape)의 온전한 의미가 완성됨을 논증해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재현으로서의 경관개념과 비재현으로서의 경관개념은, 마치 하나의 그림을 위한 각각의 퍼즐조각과 같아서, 상호대체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송원섭, 2015, 320)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의 의미론적 상호보완의 메커니즘은, 문화인류학자 기어츠(Clifford Geertz)의 대표저작, *The Interpretaion of Cultures*(1973)에서 제시한 문화 패턴 모델 이론의 참조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다. 기어츠에 따르면, 문화 패턴의 모델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Geertz, 1973, 93-94). 첫째는, 문화 패턴을 '위한' 모델이며, 둘째는 문화 패턴에 '대한' 모델이다. 문화 패턴을 **위한** 모델은, 특정한 문화 패턴이 언어를 통해 현시(顯示, emergence)될 수 있는 **형태**를 보여주는 모델이다. 문화 패턴에 **대한** 모델은, 그와 같은 문화 패턴이 언어를 통해 현시될 수 있는 형태가 되기까지의 사회적 혹은 심리적 **과정**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이를 통해 그가 논증해내고자 했던 것은 문화 패턴은 '가시적 형태'와 '그 형태가 나타나기까지의 비가시적 과정'이라는 두 가지의 층위로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Geertz, 1973, 92).

문화 패턴에 대한 기어츠의 위와 같은 논증은 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문화의 패턴 모델 이론에서, 문화 패턴을 위한 모델은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에서 나

타나는 '따로 또 같이'라는 공간구성의 물리적 형태에 상응하며, 문화 패턴에 대한 모델은 그와 같은 물리적 형태를 만들어 낸 수행적 과정(performative process)으로서 제주해녀들의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라는 몸적 정서에 상응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재현으로서의 경관개념은 가시적인 물리적 구성에 상응하는 것이며, 그것의 형성을 추동(推動, ignition)시킨 비가시적 과정은 비재현으로서의 경관개념에 상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위와 같은 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의 비분절성(非分節性, suprasegmental feature)에 대한 논의는 '재현을 넘어서(more-than-representational)'라는 명제 아래에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계에서 비재현지리학이 시작되던 당시부터 시도되었다(Lorimer, 2005). 그 이후, 영미권의 많은 문화역사지리학자들은 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의 비분절성에 대한 실증연구들에 도전해왔다(e.g. Greenhough, 2014; Hill, 2015; Vannini, 2015, etc.).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영미권에서 이루어진 그와 같은 도전적 연구들의 명백한 한계는 '재현을 넘어서'라는 명제가 지향하고자 했던 본래의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있다. 즉, 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의 비분절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제시되었던 '재현을 넘어서'라는 야심찬 기획의 의도와는 달리, 경관의 비재현적 차원에 대한 논의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을 '과정(몸적 정서)과 결과(물리적 구성)'이라는 의미를 통해 구조적으로 연결지음으로써, 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의 비분절성에 대한 균형 잡힌 분석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관지리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에 대해 이제껏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졌다는 데 지역연구(regional/local studies)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의 비분절성에 대한 논의를 위한 논지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의 문화역사적 구성원리가 '따로 또 같이'임을 제시하고, 그것이 제주해녀들의 반농반어 기반의 경제생활과의 사회문화적 개연성을 지니고 있었음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더하여, '따로 또 같이'의 재현으로서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의 작동기제는, 제주해녀들의 삶 속에서 몸적 감응을 바탕으로 한 정서(體的 情緖, bodily affect)로 존재했던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Liberal communitarianism)'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부에서는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의 재현성(따로 또 같이)과 비재현성(제주해녀들의 정서로서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의 문화지리적 공명(共鳴)이 지닌 경관지리학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즉, 경관지리학에서의 핵심적이면서도 대조적인 두 가지의 경관개념, 재현성과 비재현성의 의미론적 조우의 가능성 제시에 초점을 맞추면서, 본 논문의 경관지리학적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

전통적으로 제주도의 민가들은 하나의 울타리 내에 두 채의 독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주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다. 대문(출입구)을 기준으로 한 평면적 위치에 따라, 내측에 위치한 독채를 '안거리(內棟, inside unit)'라고 부르며, 대문을 기준으로 외측에 위치한 독채를 '밖거리(外棟, outside unit)'라고 부른다. 이는 다시 대지의 수직적인 높낮이에 따라 우녘거리(上棟, upper unit)와 알녘거리(下棟, lower unit)라 부르기도 한다(송성대, 1993). 안/우녘거리(內/上棟, inside/upper unit)는 생활공간규모가 큰 독채이며, 밖/알녘거리(外/下棟, outside/lower unit)는 생활공간규모가 작은 독채이다.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은, 제주도 중산간 지대(해발고도 200~500m)와 해안지역(해발고도 200m 이하) 전체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주거형태가 중산간 지대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전통주거문화경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문화적 원류는 제주도의 해안지역에서 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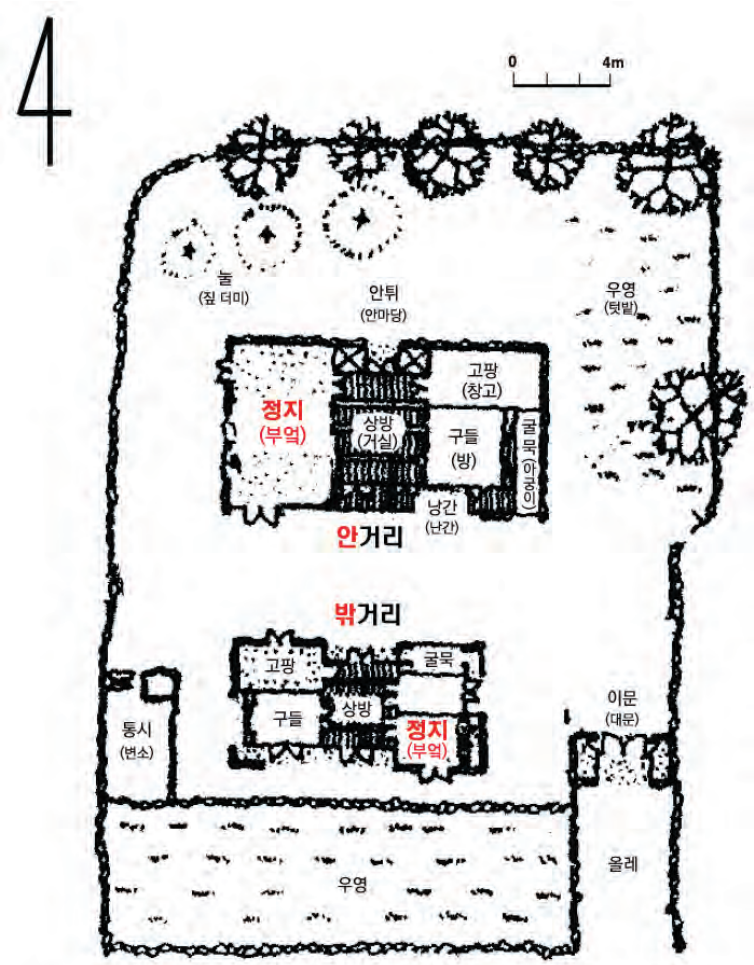


그림 1.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의 공간구성 (송성대, 1993, 128; 필자에 의한 수정)

아볼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제주도에서 취락(聚落, human settlement)이 해안지역에서 시작되어 중산간 지역으로 확대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고, 둘째는, 제주도 해안지역의 주거문화는, 제주해녀문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었다는 사실이다.

제주도 취락형성의 시작이 중산간 지대가 아닌 해안지역에서 이루어졌음에 대한 논증은, 제주도 ⓐ 해안지역의 용천수(涌泉水, spring water)-ⓑ 마을의 입지적 특성-ⓒ 용천수와 마을의 공간적 분포 패턴의 인문사회과학적 함수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미 밝혀진 바 있다(오홍석, 1969; 桝田一二, 1976; 泉 靖一, 1966; 高野史男, 1996; 정광중, 2016, 245 재인용). 사실, 제주도 취락형성의 기원을, 담수(淡水, freshwater)가 유일하게 풍부했던 지역, 즉 용천수가 풍부했던 해안지역으로부터 찾을 수 있음은 물과 문명 간의 보편적 법칙의 맥락에서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박원배, 2009; Solomon, 2011).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제주도의 안거리-밖거리 주거문화경관의 지역적 원류는, 제주도의 해안지역의 취락과 긴밀한 연관관계에 놓여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박원배, 2009, 229-232). 그런데, 제주도의 해안지역에 취락을 형성하고 살아왔던 제주인들의 문화는 제주해녀문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 이는, 제주해안지역의 마을들에서 제주해녀들에 대한 가계 경제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다는 사실로부터

추론해볼 수 있다. 한반도 지역의 다양한 경제지표에 대한 체계적 기록이 시작되었던 1900년대 초반의 자료들을 토대로 보자면, 제주도 해안지역의 핵심경제주체는 제주해녀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제주도청, 1939).

제주해녀들은 가정 경제의 약 75% 이상을 일구어 나갔다. 제주도 해안지역 경제생활의 기본구조는 반농반어였으며, 실제로 경제수입규모도 그에 준했다. 즉, 가정경제수입 전체를 100%으로 보았을 때, 농업으로 벌어들인 수입과 어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진관훈, 2004).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제주해녀들이 가계경제의 절반에 해당하는 어업수입(50%)을 전적으로 책임지면서도 동시에 농업수입의 절반(25%) 이상을 책임졌다는 사실이다(안미정, 2007). 이는, 제주해안지역 경제적 하부구조의 핵심주체는 제주해녀들이었음을 의미한다. 경제적 하부구조가 문화적 상부구조를 결정짓는다는 문화유물론적 접근방식(e.g. Harris, 1978; Harris and Ross, 1987; Jackson, 1996; Milner, 1993, etc.)에 기대어 생각해본다면, 제주해안지역의 경제적 하부구조의 핵심적 주축은 제주해녀들이었기 때문에 제주해안지역의 문화정치적 상부구조는 제주해녀문화에 기반한 문화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초점은, 제주해녀들의 반농반어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적 하부구조로부터 배태된 제주도 해안지역의 문화적 상부구조는, ⓐ '따로 또 같이' 공간적 구성원리의 재현으로서의 안거리-밖거리 주거문화경관과 ⓑ 제주해녀들의 몸적 감응을 바탕으로 한 정서,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간의 공명을 통해 드러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맞추어져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로는, '따로 또 같이' 공간적 구성원리의 재현으로서의 안거리-밖거리 주거문화경관과 제주해녀들의 반농반어 경제생활과의 문화적 개연성에 대해 논증하고, 둘째로는, 그러한 문화적 개연성이 가능했던 이유를,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라는 가치가 제주해녀들에게 '몸적 정서'로 존재했다는 사실로부터 찾아보고자 한다.

3.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의 재현성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은 '따로 또 같이(分开同居, separate but not alone)'의 공간적 구성원리가 재현된 경관이다. '따로 또 같이'라는 개념은, 저명한 사회언어학자인 데보라 태넌(Debora Tannen)의 저서, *You Just Don't Understand*(1990)에서 연인 혹은 부부관계에 있는 남성과 여성의 감성세계가 다름에 초점을 맞춘 논의의 과정에서 소개되었다. 휴식과 자유(경쟁)를 원하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지나친 결속을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에 '따로'를 좋아하지만, 여성들은 너무 독립적으로 생활하다가 관계가 위태로워질까 두려워 결속, 즉 '같이'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분석하면서, 남녀관계는 남성의 독립성과 여성의 결속성이 공존하는 '따로 또 같이'라는 의미로 개념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Tannen, 1990, 34-45).

문화지리학자 송성대는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논증하는 그의 저서, 『제주인의 해민정신』(1996)과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2001)에서 '따로 또 같이'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주사람들의 문화정체성에 적용시킨 바 있다. 특히, '따로 또 같이'의 개념에 담긴 의미, 독립과 결속의 결합이라는 의미를, 개인이 주체성을 잃지 않고 독립된 하나로 있으면서 대동(大同, solidarity)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개체적 대동주의'로의 개념적 확장을 이루어냄으로써, 제주사람들의 정신문화를 깊이 있게 논증하였다.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의 공간적 구성원리는, **독립의 지향성과 결속의 지향성이 공존하는 '따로 또 같이'의 개념**과 의미론적으로 정확하게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송성대(2001)가 제시한 은거분가제(隱居分家制)와 분가공조가족제(分家公助家族制)로서의 안거리-밖거리 주거문화에 대한 논의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는 안거리-밖거리 주거문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안거리-밖거리 주거형태는 자가족과 부모가족은

완전히 분립된, 그러나 고립되지 않은 경제생활을 해 나가는 문화가 반영된 것이다. 이것이 소위 제주도의 은거분가제인 것으로 부모와 자식 간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도 정적인 교류**를 끊임없이 할 수 있다는 다핵적 직계가족제, 즉 분가공조가족제인 것이다." (송성대 2001, 370; 볼드체는 필자에 의한 강조)

이것은 안거리-밖거리 주거형태 속에 노부모와 기혼자(旣婚子, married son) 가족 간의 완전히 분립된, 그러나 고립되지 않은 공존의 삶을 살아가는 문화가 반영된 것임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에 대한 핵심적 문화현상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는, **노부모와 기혼자(旣婚子, married son) 가족과의 생활공간의 완전한 분리**이다. 이는,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이 각자의 부엌을 두고, 취사(炊事, cooking)의 완전한 분리를 기반으로 한 생활공간의 분리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둘째는,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 간 생활공간의 상호교환**이다. 부모가 나이가 들어 가정경제생활에서 은퇴하는 시기에 다다르게 되면, 안거리에 거주하던 노부모는 안거리에서 밖거리로 옮겨가고, 밖거리에서 거주하던 기혼자녀는 밖거리에서 안거리로 옮겨가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나, 노부모와 기혼자녀는 각자의 부엌을 두고, 취사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각자의 생활을 영유하게 된다.

이와 같은 주거문화는,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확인되는 주거문화와는 확연하게 상반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제주도 이외의 지역, 한반도부 전통주거문화에서는,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 각자가 자신들만의 부엌을 두고 생활공간을 독립시키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반도부 주거문화에서는, 단 하나의 부엌을 두고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의 취사가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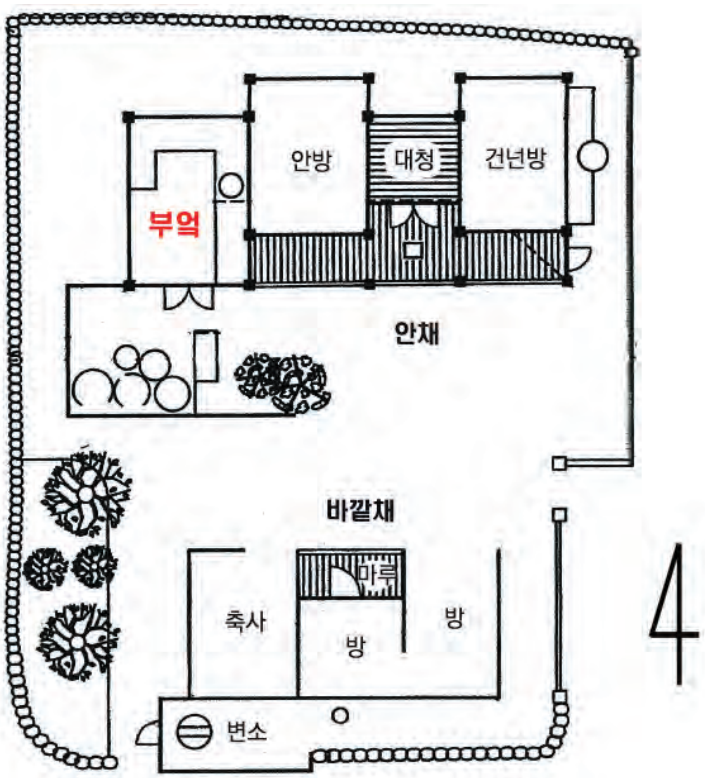


그림 2. 한반도부 전통주거의 공간구성 (박영순, 1999; 필자에 의한 수정)

전히 통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 간 생활공간의 실질적 통합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노부모는 안방(주거의 핵심공간)을, 기혼자의 가족은 건넌방(주거의 부수적 공간)을 각각 그들의 생활공간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제주도와 같은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 간 생활공간의 상호교환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Song, 2017).

1) 독립지향성('따로' 또 같이)의 문화

제주도의 주거문화가 한반도부의 주거문화와는 확연하게 다른 이유는 매우 다층적일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것을 제주해녀들의 반농반어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적 하부구조로부터 배태된 '따로 또 같이'의 공간적 구성원리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주거경관의 첫 번째 문화적 특징인 '노부모와 기혼자(旣婚子, married son) 가족 간 생활공간의 완전한 분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 간 생활공간의 완전한 분리'란 곧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 간 부엌/취사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한다. 전통제주사회에서 부엌/취사의 분리는 취사를 전담했던 여성들, 즉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생활 분리를 의미한다. 이것의 문화생태적 개연성은, 시어머니 해녀와 며느리 해녀의 연령주기 차이에 따른 노동활동시간대의 변화와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주해녀들의 생활리듬의 측면에서 보자면 연로하여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시어머니 해녀와 물질(잠수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놓인 며느리 해녀의 노동활동 시간대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연로한 시어머니 해녀들은 비록 물질을 할 여력이 없더라도 거동할 여력만 있다면, 며느리들이 물질을 하러 나간 사이에 어김없이 그들의 노동력을 밭농사에 투입하였다. 물질활동이 왕성한 며느리 해녀들이 일상노동활동의 주기를 물때(潮水干滿, tide time)에 맞추었던 반면에, 물질활동이 줄어든 시어머니들은 일상노동활동의 주기를 자신의 건강상태 혹은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맞추었음을 의미한다. 제주해녀사회가 고령의 여성노동협력에 기반한 반농반어 경제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다음의 민족지적(ethnographic) 분석은, 시어머니 해녀들과 며느리 해녀들 간 일상노동활동주기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물질을 함께 하면서 농사도 보살피는 친정어머니들이 있다 함께 사는 아들의 밭일을 거들면서 혼인한 딸의 밭일도 거들었다. 자신이 물질을 하지 못하는 날에는 자녀들의 밭을 돌아보고 작물의 상황을 전달해 주고 언제쯤 무엇을 해야 할지 조언



그림 3. 밭으로 향하는 연로한 해녀의 모습 (1960년대/사진촬영: Leory Smoothers)

을 해주었다. 이처럼 마을 안에서 친정어머니가 딸들의 밭일을 거드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다 딸들의 친정어머니들은 동시에 자신이 시어머니에 위치에 있으므로 함께 사는 아들의 밭일(곧 며느리의 일)을 같이 거든다. 고령의 여성노동의 협력과 더불어 **잠수들의 어로와 농사를 병행하는 생활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안미정, 2007, 142; 볼드체는 필자에 의한 강조)

시어머니 해녀와 며느리 간 일상노동활동의 주기가 달랐다는 것은, 또한 그들의 취사활동 주기가 서로 달랐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 해녀가 오전 5시에 식사를 마치고 오전 6시에 밭에 나가게 되는 상황과, 며느리 해녀가 오전 7시에 식사를 마치고 오전 8시에 바다에 나가게 되는 상황이 맞물려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제주해녀들은 취사활동의 시간차이가 발생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어머니 해녀는 며느리 해녀의 취사활동의 주기를 자신들의 취사활동의 주기에 억지로 끼워 맞추도록 하는 대신에, 시어머니 해녀 자신들 스스로 취사를 해결함으로써, 자신들과 며느리들의 취사활동주기를 철저하게 분리시키고자 했다.

한반도부, 제주도 이외 지역의 문화적 관점에서 보자면, 전통제주사회의 이와 같은 모습은 아주 낯설게만 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삼남지방 동족취락의 주거문화경관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삼남지방의 유교문화적 관점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여지없이 며느리의 취사활동주기를 자신의 취사활동주기에 맞추도록 했을 것이며, 며느리도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따랐을 것이기 때문이다(Song, 2017).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이 제주도 이외의 지역(특히, 삼남지방)의 전통주거문화경관과 상반되는 핵심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 간 생활공간의 완전한 분리' 문화는, 제주해녀들의 **독립의 지향성**(**'따로'** 또 같이) 문화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제주해녀들의 독립의 지향성은 '자존적 경쟁'이라는 그들의 삶의 궤적으로부터 기인한다. 개인의 능력에 의해 생산량이 극히 좌우되는 해산활동(海産活動)은 제주해녀사회로 하여금 자유롭고 평등한 그래서 공정하고 건강한 경쟁의 문화를 항존할 수 있도록 하였다(송성대, 2001). 제주해녀들은 경쟁배타의 원리(competitive exclusion principle)가 적용되는 환경, 즉, 경쟁에서 이기면 살아남고, 경쟁에서 지면 도태되는 환경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가장 확실하면서도 효율적이었던 방법이 바로 개인의 능력에 기초한 철저한 경쟁과 독립이었다. 자신의 노력과 능력만큼 자원의 획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딸에게조차 전복이 있는 장소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제주해녀사회의 핵심적인 문화적 율법은, 제주해녀들이 개인능력에 기반한 철저한 경쟁을 통해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 할 수 있다. 물론, 위와 같은 율법이 문자 그대로 어머니와 딸 사이의 치열한 경쟁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어머니 해녀가 딸 해녀로 하여금 전복이 많은 곳을 찾는 노하우를 몸으로 직접 터득하고, 그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확을 가능하도록 딸 해녀를 키워내고자 했던, 어머니 해녀의 애틋한 모성이 담긴 문화에서 기인한 것이다.

바로 여기서 ⓐ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 간 생활공간의 완전한 분리'라는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의 첫 번째 문화적 특징과 ⓑ 제주해녀들의 **독립의 지향성**(**'따로'** 또 같이) **문화** 간의 개연성이 드러난다. 전통제주사회에서 시어머니들은 해녀로서, 삶의 기반을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을 통해 일구어낸 사람들이었다. 경쟁배타의 원리가 적용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능력만큼만 인정받고 또 살아왔던 그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며느리 해녀에게 기대어 자신들의 취사와 끼니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들이 평생을 지녀왔던 '경쟁과 독립의 가치'와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더욱이, 그들은 딸에게 조차 전복이 있는 장소를 가르쳐 주지 않는 문화적 율법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전복이 있는 장소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치열하게 생존하도록 가르쳤던, 제주바다의 개척자였던 그들이, 연로한 자신의 취사활동주기에 억지로 조율

하도록 함으로써, 며느리 해녀로 하여금 자신들의 끼니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 간 생활공간의 완전한 분리'라는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의 첫 번째 문화적 특징은, 시어머니 해녀와 며느리 해녀의 연령주기 차이에 따른 노동활동시간대의 변화와 차이에서 그것의 문화적 개연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어머니 해녀와 며느리 해녀의 연령주기 차이에 따른 노동활동시간대의 변화와 차이'라는 생활환경이 제주해녀들의 독립의 지향성('**따로**' 또 같이)으로 이어졌으며, 그것의 '경관적 재현'이 바로 안거리-밖거리 주거문화경관인 것이다.

2) 결속지향성(따로 또 '같이')의 문화

다음은,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의 두 번째 문화적 특징인,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 간 생활공간의 상호교환이다. 전통제주사회에서는 부모가 나이가 들어 가정경제생활에서 은퇴하는 시기에 다다르게 되면, 안거리에 거주하던 노부모는 안거리에서 밖거리로 옮겨가고, 밖거리에 거주하던 기혼자 가족은 밖거리에서 안거리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와 같은,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 간 생활공간의 상호교환은, 제주해녀들의 **결속의 지향성**(따로 또 '**같이**') 문화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것은 '안거리-밖거리' 공간의 상징적 위계의 맥락에서 볼 때, 그 의미가 드러난다. 우선, 공간에 대한 구조인류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 간 생활공간의 상호교환의 생활양식은 분명 그릇된 문화라고 볼 수 있다. 구조인류학적 관점에서 보면, 공간이라는 것은 균질하지 않으며, 질적인 분화와 방향성을 갖는다(Levi-Strauss, 1992, 123-132). 즉, 안쪽은 좋은 공간으로서의 의미, 바깥쪽은 나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각각 부여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앞서 언급한바 있듯이, 제주도의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에서, 평면적 위치에 따라 내측에 위치한 독채는 '안거리(內棟, inside unit)'라고 부르며, 대문을 기준으로 외측에 위치한 독채는 '밖거리(外棟, outside unit)'라고 부른다. 이는, 다시 대지의 수직적인 높낮이에 따라 우녘거리(上棟, upper unit)와 알녘거리(下棟, lower unit)라 부르기도 한다. 즉, 제주도 전통주거의 공간구조인, '안거리-밖거리'는 '안/우녘거리(內/上棟, inside/upper unit)-밖/알녘거리(外/下棟, outside/lower unit)'로 불리며, '**안쪽/위쪽-바깥쪽/아래쪽**'이라는 공간위계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의 비균질성에 대한 이와 같은 구조주의적 관점과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적 관점의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노부모와 기혼자 가정 간의 공간 배분을 생각해보면, 안쪽 공간은 당연히 부모의 공간이 되어야 하며, 바깥쪽 공간은 당연히 자녀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언뜻 보자면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은 반구조(反構造, anti-structure)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 간 생활공간의 상호교환이라는 생활양식에 "숨겨진 차원(The Hidden Dimension)" (Hall, 1990)인 제주해녀들의 결속의 지향성(따로 또 '같이') 문화를 통해, '안거리-밖거리' 공간구조는 분화와 방향성을 갖지 않는 균질한 공간구조의 상태로 중화(中和, neutralisation)된다.

제주해녀들의 삶의 주거공간에서 '안/위-바깥/아래'의 공간은, 좋고 나쁨의 공간이 아닌, 질적인 분화와 방향성을 갖지 않는 균질한 공간으로 존재한다. 필자는 이것을 '공간상징위계의 중화(Neutralisation of spatio-symbolic hierarchy)'라고 부르고자 한다.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주거문화에서 공간상징의 위계가 중화되는 문화지리학적 기제는, 제주해녀들의 **결속의 지향성**(따로 또 '**같이**')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주해녀들에게 있어 결속의 지향성(따로 또 '같이') 문화란, 개인의 능력만큼만 인정받고 살아감과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완수하는 독립지향적 생활양식 속에서 배태되는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의미한다. 제주해녀사회에서의 '사회적 결속'이 그들의 '독립지향적 생활양식' 속에서 배태된다는 다소 역설적인 상황은, 경쟁 배타의 원리가 적용되는 척박한 환경에서의 필사적인 생존전략과 연결된다. 이것은 안거리-밖거리 주거문화에서의 노부모와 기

혼자 가족 간 생활공간의 상호교환의 사회적 의미를 밝히는 핵심단서가 된다.

자신의 생활공간을 공간적 위계가 낮은 바깥쪽/아래쪽에 위치한 밖거리로 이동시켰던 것이 노부모의 절대적으로 자발적인 선택과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기혼자 가족의 선택과 요청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노부모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생활공간을 바깥쪽/아래쪽의 영역에 해당하는 밖거리로 이동시킨 이유는 명확하다. 경쟁배타의 원리가 적용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가족 전체의 생존가능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제활동이 왕성한 기혼자 가족을 가정의 중심에 위치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제주해녀사회에서 노부모들은, 경쟁배타의 원리가 적용되는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합리적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이들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연로해짐에 따라 노동활동시간이 축소되는 상황과 가장권을 기혼자에게 이양시키는 상황에서, 주거공간 내의 핵심부에 해당하며 생활공간규모가 큰 '안거리'에 거주할 이유가 없었기에,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생활공간의 위계를 격하시켰던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결속의 지향성(따로 또 '같이') 문화가 사회적 부력(social buoyancy)을 지니게 된다.

한국의 유교적 전통의 맥락에서 보자면, 노부모들은 노부모라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도 평생을 가정 내의 안쪽/위쪽의 영역에 해당하는 '안거리'에 거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공간을 안거리에서 밖거리로 옮겨야 하는 그 어떤 사회적 의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Song,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해녀사회의 노부모들은 척박한 환경에 내던져진 기혼자 가족에 대한 지지와 응원으로서, 자발적으로 그들의 생활공간을 안거리에서 밖거리로 이동시켰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 간의 결속력은 더욱 견고해지는데, 이는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 간의 '배려의 역학(ethical dynamics of care)'이라는 사회정치적 기제에 의해 이루어진다.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 간의 배려의 역학이란,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각자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는 사회정치적 과정을 의미한다.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의 공동목적은 척박한 환경 속 일가(一家) 전체의 성공적인 생존이다. 노부모의 능력은 척박한 환경에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누적된 삶의 지식과 지혜에 해당되며, 기혼자 가족의 능력은 가족구성원의 확장과 노동경제활동의 수행에 해당된다.

노부모의 핵심역할은, 자신이 지닌 삶의 지식과 지혜를 기혼자 가족들에게 전승시키는 것과 기혼자 가족에 의한 가족구성원 확장과 노동경제활동 수행에 대한 지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부모는 자신의 외형적인 위신을 위하여 생활규모가 큰 공간이자 주거공간의 핵심부에 해당하는 '안거리'에서의 생활을 고집하지 않고 오히려, 생활규모가 작은 공간이자 주거공간의 주변부에 해당하는 '밖거리'로 자발적으로 물러났던 것이다. 이것은, 기혼자 가족에 대한 노부모의 '배려'였다.

이와 같은 노부모의 배려에 대한 기혼자 가족의 보은(報恩, reciprocation)으로서의 '배려'는, 노부모를 울타리 외부의 다른 공간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내부의 같은 공간에 모시면서 동시에 가정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제공하는 현자(賢者, sage)로서의 위신을 세워주고 모시는 일이었다. 이것이 바로,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 간의 배려의 역학인 것이며, 이를 통해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 간의 **결속**(따로 또 '**같이**')은 강화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안거리-밖거리 주거문화에서의 공간상징위계가 중화되는 결정적 기제이기도 하다.

노부모는 자신들의 생활공간을 바깥쪽/아래쪽의 영역에 위치한 밖거리로 옮겨가지만, 그것은 기혼자 가족을 위한 자발적인 배려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통해 노부모의 가정 내 위신은 더욱 견고해진다는 사실은 밖거리의 바깥쪽/아래쪽이라는 공간위상을 중화시킨다. 동시에, 기혼자 가족은 자신들의 생활공간을 안쪽/위쪽의 영역에 위치한 안거리로 옮겨가지만, 그것은 노부모의 자발적 배려에 의해 성립된 호혜라는 사실, 그리고 노부모의 생활공간을 울타리 내부의 같은 공간에 위치시키면서 가정의 현자로서의 위신을 공고하게 해주었다는 사실은 안거리의 안쪽/위쪽

이라는 공간위상을 중화시킨다.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은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적 관점의 맥락에서 볼 때만 반구조(反構造, anti-structure)적이라고 볼 수 있을 뿐, 제주해녀문화의 고유한 맥락에서 보자면 결코 반구조적인 것이 아니다. 즉, 달리 표현하자면, "반구조적이라는 사유는 구조의 관점이나 시각(전통적 유교적 관점)에서 본 함의에서만 부정적일 뿐"(Turner, 1975, 50)이며,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에서 '안과 밖'의 공간은 구조주의적 관점이 적용되지 않는 균질한 공간이라는 것이다.

4.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의 비재현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은, 제주해녀들의 경제활동리듬과 척박한 환경에서의 생존전략이 서로 맞물리면서 나타난 독립지향성과 결속지향성이 결합된 '따로 또 같이' 문화의 재현물(再現物, representational mediation)이라 할 수 있다. 즉,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의 재현적 구성원리가 '따로 또 같이' 문화라는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사실은, '따로 또 같이'라는 재현적 구성원리는 제주해녀들의 몸적 감응을 바탕으로 한 정서로서의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라는 비재현적 작동원리를 통해 현현(顯現, manifestation)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가 제주해녀들의 몸적 감응을 바탕으로 한 정서로 존재하였다는 것은, 그것이 제주해녀들 사이의 구체적 관계에 대한 감각에 기초해 있었음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또는 어떠한 가치관을 지향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도덕적 믿음에 선행해서 존재하는 직접적 관계에 대한 감각에 근거"(Blum, 1988, 476)해 있다는 것이다. 제주해녀들에게 있어서, '도덕적 믿음에 선행해서 존재하는 직접적 관계'란 '물질(잠수)작업 - 개인으로서의 제주해녀 - 공동체로서의 제주해녀사회'라는 세 가지 요소의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가 위와 같은 세 가지 요소의 상호관계에 대한 감각에 근거하여 제주해녀들의 몸적 감응을 바탕으로 한 정서로 존재할 수 있었던 사회적 기제는 제주해녀들의 고유한 문화로부터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제주해녀문화를 자유주의적 가치와 공동체주의적 가치라는 두 가지 층위로 구분하고, 각 층위의 정서적 의미(affective meaning)가 어떻게 성립하고 서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란 '개인에 대한 관념(conceptions of oneself)의 보장에 기반한 공동체의 공동선(the common good)을 추구하는 사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물론, 수많은 자유주의 철학자들은 '공동체의 공동선'이라는 것은 자유주의사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장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수많은 공동체주의철학자들은 '개인에 대한 관념'은 공동체주의사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장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라는 사상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양측 각자에 있음을 역설하고자 할 것이다(Hampton, 1970).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각각은 모두 단일한(singular) 방점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는 개인에,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에 각각 방점을 찍는다. 반면에, 제주해녀문화에서 드러나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 방점이 찍혀있어, 개인과 공동체 간의 사회-정치적 우선순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제주해녀문화가 개인과 공동체의 사회정치적 동등성을 기반으로 개인주의적 이해관계의 기초 위에(자유주의적) 이타적 사회관계의 구축(공동체주의)이 이루어졌던 문화였음을 의미한다.

1) 제주해녀문화의 자유주의적 가치

먼저, 제주해녀문화의 자유주의적 측면은, 제주해녀문화의 정수(精髓, essence)를 보여주는 '**질루지만썩 살아산다**'는 사회적 격률의 문화적 함의를 통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질루지만썩'이란 어

구는, '**자기의 능력/책임에 따라** 자기가 알아서 각자'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자기의 능력/책임에 따라 자기가 알아서 각자 살아가며 절대로 남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격률이 제주해녀문화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은, 제주해녀문화가 자유주의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주도에는 "***혼 돌에 개역 시번, 조베기 시번허민 집안 망헌다***(한 달에 미숫가루 세 번, 수제비 세 번 해서 먹으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것은, 쉴 새 없이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여러 단계의 조리과정을 거쳐야 하는 분식(粉食, grain powder-based-food)이, 제주해녀들에게 시간낭비였음을 의미한다. 다만, 분식을 할 경우는 밭에나 물질하러 나가지 못하는 장마철과 같은 궂은 날씨에 한하여 행해졌고, 그것도 식량을 불리려는 차원에서 행해졌다. 이는 제주해녀들의 삶의 환경이 척박함을 여실히 보여준다(송성대, 2001, 147).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제주해녀들 모두가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개척해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질루지만썩(자기의 능력/책임에 따라 자기가 알아서 각자) 살아가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능력과 책임**'을 본질적 가치로 두고 있는 **질루지만썩문화**는 제주해녀들의 자유주의적 가치와 직결되며, 그것은 상군(上軍, High rank), 중군(中軍, Middle rank), 하군(下軍, Low rank)으로 구분되는 위계문화를 통해 설명된다. 제주해녀들의 상·중·하군 위계문화가 제주해녀문화의 자유주의적 측면과 연결되는 지점은, 자유주의사상의 핵심이 되는 '자기소유권(self-ownership)'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자유주의사상에서 좋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최우선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바로 자기소유권이다(Nozick, 1974, 242-264). 자기소유권이란 자기 자신을 소유할 권리(ownership rights over oneself)를 의미한다. 여기서, '자기 자신'이라는 용어는 순수하게 재귀적인(reflexive) 의미를 가지며, 그것은 소유자와 피소유자가 하나이며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Cohen, 1986, 110). 제주해녀들의 상·중·하군 위계문화가 자유주의사상에서의 '자기소유권' 개념과 연결되는 부분은, 위계의 기준 상에서 개인의 '능력'이 '연령'을 밀어낸다는 사실에 있다.

제주해녀들의 상·중·하군 위계문화의 핵심적 특징은, '연령'을 기준으로 위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물질경험과 물질기량'의 기준에 따라 그 위계가 결정된다. 이것은, 비록 나이가 적더라도 물질경험과 물질기량이 풍부하다면 상군해녀가 될 수 있고, 그와 반대로 나이가 많더라도 물질경험과 물질기량이 부족하다면 하군해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나이가 많음에 따라 물질경험과 물질기량이 풍부해지기에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레 상군의 범주에 속할 확률도 증가하기는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연령'이 상군의 범주에 속하기 위한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개인의 능력을 절대적 기준으로 하는 제주해녀의 위계문화는 제주해녀들의 사회적 준칙인, '***나 하뎅 우이 앚곡, 나 족뎅 아레 앚이라***(나이가 많다고 해서 윗자리에 앉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아래 앉는 법은 없다)'에서 드러나는데, 이는 '불턱'의 공간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송성대, 2001, 335). 불턱은 해안가에 있었던 해녀들의 옛 탈의장이자 휴식터의 공간을 일컫는데, 그 중심에는 몸을 녹이기 위한 화톳불이 있었다. 불턱은 "해녀들이 작업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일상사가 오가는 곳으로서 해녀집단의 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 사회적 공간" (안미정, 2007, 88)으로 여겨져 왔다.

제주해녀들이 바다에 나가 물질작업을 하다가 잠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물 밖으로 나와 불턱에 앉을 때, 상군해녀는 바람을 등지게 되는 상석에 앉는다. 또한, 불턱 내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만약 해녀들 간 의견이 상충되는 상황이 되면 상군해녀가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송성대, 2001, 335). 이것은, 제주해녀공동체 내에서 나이가 적지만 물질기량이 뛰어난 해녀가 나이가 많지만 나이가 많은 중·하군해녀에 비해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암묵적으로 인정받게 됨을 의미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중·하군 위계문화는 '자기소유권' 개념을 통하여 자유주의적 가치와 연결된다. 이



그림 4. 해안가 암반을 이용한 불턱(1970년대_좌측)과 돌담을 이용한 불턱(2000년대_우측)
출처: 제주해녀박물관

미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유주의사상의 핵심개념으로서 자기소유권이란, 자기 자신을 소유할 권리를 의미하고, 여기서 '자기 자신'이라는 용어는 순수하게 재귀적인 의미를 가지며, 그것은 소유자와 피소유자가 하나이며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전통적 유교문화로부터 기형적으로 파생된 나이에 따른 위계문화 논리의 맥락에서는, 소유자와 피소유자의 동일성 원리가 적용될 수 없다. 나이에 따른 위계문화에서는 자기 자신의 존재론적 의미가 자기 스스로에게로 재귀(再歸)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의지와 능력과는 무관한 '연령'을 통해 드러난다. 즉, 나이에 따른 위계문화가 지배적인 공동체에서는 특정한 사회구성원의 나이가 많으면 그 사람이 공동체의 유지에 피해만 주는 무능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은 충분히 존중 받아야만 한다(Song, 2017).

공동체의 유지에 피해를 주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지/능력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사회적 실체인 '연령'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암묵적으로 차지하고자 할 것이다. 이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 그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이를 소유하는 것이 됨으로써 소유자와 피소유자의 동일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제주해녀의 상·중·하군 위계문화는 소유자와 피소유자의 동일성의 원리가 완벽하게 적용되는 자기소유권 기반의 문화라 할 수 있다.

자신의 물질경험과 물질기량은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의 의지/능력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부터 기인한 물질경험과 물질기량을 기준으로 위계가 결정되는 제주해녀들의 상·중·하군 위계문화는, '자기소유권의 완전한 보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사상에서는, "자기 개인의 능력만큼만 소유하고,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범위의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자기능력 이외의 것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며, 그와 같은 도덕적 행위를 실천에 옮기는 개인(moral agency)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곧 좋은 공동체(a good community)"이다(Waldron, 1987, 145).

상·중·하군 위계문화에서 보여지듯이, 제주해녀들은 '연령'을 그들의 사회적 위계의 기준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능력과 책임을 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의 중심에 위치시켜 왔다. 상·중·하군의 위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능력과 책임 이외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인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에 대한 침해"(Nozick, 1974, 174-178)를 유발하는 행위임을 경계해왔던 자유주의사상과 정확히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2) 제주해녀문화의 공동체주의적 가치

제주해녀문화의 탁월성은 자유주의적 가치와 공동체주의적 가치의 완전한 균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제주해녀문화의 자유주의적 가치와 공동체주의적 가치는 문화적 순환구조 속에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놓여 있다. 제주해녀문화의 자유주의적 가치와 공동체주의적 가치의 완전한 균형의 작동원리는,

'상·중·하군'이라는 제주해녀의 위계문화 속에 숨겨진 공동체주의적 의미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다.

앞서, 상·중·하군의 위계문화의 본질은,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과 책임' 중심적인 자유주의적 가치에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가치가 역설적으로 공동체주의적 가치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은, '공동체가 정의원칙들의 원천으로 보는 관점'을 통해 드러난다. 공동체가 정의원칙들의 원천이라는 말의 의미는, 정의원칙의 사회적 기준이라는 것은 비역사적인 외재적 규범이 아닌 역사적이고 내적 규범을 통해 정립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해당 사회 구성원들의 선(善, the good)이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특정한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역할과 밀접하게 엮여 있는 방식에 따라 설정된다는 것이다(Hegel, 1949). 이것은, 공동체의 공동선(the common good)의 보편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공동체의 특수한 기준을 통해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해녀들의 상·중·하군의 위계문화는 명백하게 자유주의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제주해녀공동체의 고유한 맥락에서 배태되는 제주해녀사회의 공동선 달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주의적 가치도 함께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제주해녀들의 상·중·하군의 위계문화는 제주해녀공동체의 공동선에 부합하는 문화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제주해녀공동체의 공동선이란, '제주해녀공동체 구성원들 전체의 이익증진'을 의미한다.

개인주의 기반의 자유주의적 가치의 추구 속에서 공동체 전체 이익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위와 같은 제주해녀문화의 역설은, 전장(戰場, battle field)에서의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군인들의 비유를 통해 보다 명확해진다. 모든 순간이 생사와 직결되는 치열한 전장에서, 군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개개인의 탁월한 전투능력 외에 학력 따위 등의 부수적 배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전장환경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단 하나의 조건인, 탁월한 전투능력은 개인의 생존만이 아니라 전쟁에 함께 참여한 동료 전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유일한 요소이다.

공동체주의적 맥락에서 볼 때 제주해녀사회에서 상·중·하군의 위계문화가 존재했던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없는 구성원의 존재는 곧 공동체의 악(惡, evil)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제주해녀들이 인지해왔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제주해녀들은, '노력 없는 무능력자'는 제주해녀공동체의 "공동선의 공유감(the shared sense of the common good)"(Taylor, 1985, 410)을 침식시키는 위험인자(risk factor)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상·중·하군의 위계문화는 '노력 없는 무능력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제주해녀들의 공동체적 노력의 사회적 증거이다.

공동체 내에서 노력 없는 무능력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성장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만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스로 내린 선택의 비용에 대한 책임은 철저하게 개인 스스로가 지도록 만드는 것"(Rawls, 1982, 168−169)이다. 제주해녀공동체 내에서, 만약 어떤 해녀가 자기 자신의 노력 부족으로 인한 무능력함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면, 그 해녀는 하군이라는 사회경제적 지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 제주해녀들은 공동체 내의 위계구분의 기준을 철저하게 개인의 능력과 책임에 둠으로써, 공동체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노력 없는 무능력자들에 대한 사회적 긴장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제주해녀공동체에서는 '노력 없는 무능력자'에 대한 경계심이 분명했던 만큼 능력은 부족하지만 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포용도 분명했는데, 그것은 제주해녀의 **계석문화**로부터 확인된다. 계석문화는 생산량이 많은 해녀가 자신이 채취한 해산물을 생산량이 적은 해녀의 망사리(그물)에 집어 넣어주는 문화이다. 일반적으로 상/중군(上/中軍, High/middle rank)해녀가 생산량이 많은 해녀에 해당하며, 하군(下軍, Low rank)해녀가 생산량이 적은 해녀에 해당한다.

얼핏 보면 제주해녀의 계석문화는 하군해녀에 대한 상·중군해녀의 시혜(施惠, dispensation)적 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시혜적 행위가 아니다. '계석'은 상·중군해녀와 하군해녀 간의 호혜(互

惠, reciprocity)적 행위이다. 북아메리카 북서해안의 인디언들의 문화인 포틀래치(potlatch)의 사회적 기제는 게석문화가 상·중군해녀와 하군해녀 간의 호혜적 행위에 기반한 것임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단서를 제공한다.

포틀래치는 일종의 선물교환의 문화이다. 북아메리카 북서해안의 인디언 부족 추장들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높이기 위해 다른 추장으로부터 받은 선물보다 더욱 귀한 것을 경쟁적으로 선물해야 한다. 추장은 그가 정령과 재산에 사로잡혀서 그것들의 비호를 받고 있으며, 또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또 그것을 증명할 때에만 자기부족과 마을, 즉 자기 가족에 대해서 권위를 간직하게 됨과 동시에 다른 추장들 사이에서 그의 지위를 유지한다(Mauss, 2002, 50). 이와 같은 포틀래치의 본질은 주어야 하는 의무와 받아야 하는 의무에 있다.

> "(포틀래치에서) 주어야 하는 의무와 받아야 하는 의무 모두 강제적이다. 증여를 거부하거나 포틀래치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답례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또한 답례하지 않으면 '코가 납작해진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때에는 이미 '코가 납작해진' 것이다. 그것은 그의 이름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이기도 하며, 또한 자기가 먼저 졌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승리자이며 무적(無敵)이라고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다." (Mauss, 2002, 51)

제주해녀의 게석문화는 북아메리카 북서해안의 인디언 부족들의 포틀래치의 사회적 기제와 유사하다. 제주해녀의 게석문화의 본질은 상·중군해녀의 주어야 하는 의무와 하군해녀의 받아야 하는 의무에 있다. 이와 같은, 상·중군해녀와 하군해녀 간의 호혜적 의무는 해녀들의 물질(잠수)활동의 버디시스템(Buddy system)의 사회정치적 의미로부터 기인한다. 제주해녀들은 반드시 둘씩 짝을 지어 물질을 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제주해녀의 버디시스템이다.

제주해녀들은 혼자서 물질하는 것을 금기시한다. '벗이 없으면 물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물질활동의 원칙으로 세워놓을 만큼, 제주해녀들은 반드시 동료와 함께 물질활동을 한다. 특히, 상·중군해녀와 하군해녀가 서로 한 조가 되어 물질을 하도록 하면서 상·중군해녀가 물질을 할 때 하군해녀는수면에서 상·중군해녀의 물질기술을 학습하고 동시에 동료가 안전한지를 지켜본다. 여기서, 상·중군해녀와 하군해녀 간의 호혜적 의무가 발생한다.

수확물이 적은 하군해녀는 상·중군해녀의 물질기술을 학습하여 자신의 물질기량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몫과 상·중군해녀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한 몫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상·중군해녀는 자신의 수확물 중 일부를 하군해녀에게 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동시에 하군해녀는 그것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상·중군해녀가 자신의 수확물의 일부를 주어야 하는 의무를 져버리거나, 하군해녀가 그것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져버리게 된다면, 각자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제주해녀사회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에서 발췌한 다음의 인용문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 "… 상군들은 제각기 물질하기 시작하였다 소라가 하나둘씩 그녀들의 망사리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나(하군해녀)의 망사리에도 소라를 집어넣었다. **나는 그것을 받기가 미안하여 사양하였으나** 주는 상군들은 응당해야 하는 것처럼 **내 손을 뿌리쳤다** … 그것은 이들 사이에 관습화되어 있는 것 같았다." (안미정, 2007, 113−114; 볼드체는 필자에 의한 강조)

민족지연구를 수행하는 해당 연구자는, 바다에 나가 하군해녀로서 상군해녀들의 물질활동을 예의 주시하면서, 상군해녀들의 물질활동을 학습함과 동시에 상군해녀들이 안전한지를 살폈다. 상군해녀들은 해당 연구자가 하군해녀이기는 하지만, 상군해녀들과 함께 바다에 나와 상군해녀들의 물질기술을 학습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책임을 완수하였기에 그에 대한 사회적 보답으로 자신들의 소라를 나누어 주었던 것이

다. 따라서, 하군해녀는 게석을 받는 것을 수치스럽거나 비굴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또한 게석을 주는 상군해녀도 우쭐하거나 자랑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공동체주의적 맥락에서 보자면, 이것은 제주해녀공동체가 박애(博愛, benevolence)와 연대(連帶, solidarity)로 구성된 공동체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박애라는 덕목은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의 배려의 마음이 형성됨을 의미하며, 연대라는 덕목은 구성원들 간의 배려의 마음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견고한 결속력이 구축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동체주의철학자인 샌델(Michael Sandel)에 따르면, 박애와 연대라는 덕목의 상호연관관계가 사회적 가치로서 정립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박애와 연대라는 공유된 목표에서 우러나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자발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에 따라 누군가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Sandel, 1982, 28–35).

이와 같은 공동체주의적 가치는 제주해녀들의 게석문화의 사회적 기제와 정확하게 부합한다. 제주해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게석'은 상·중군해녀와 하군해녀 각자가 공동체의 필요에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문화적 행위이며, 그에 따라 상·중군해녀와 하군해녀 각자가 서로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것은 게석이라는 문화적 행위가 제주해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각자에게 빚지고 있는 책무(obligation)이라기보다는, 구성원들이 물질작업이라는 공적 관계에 참여하는 덕성을 통해 갖게 되는 공적 책임감(public responsibility)임을 의미한다(Kohlberg, 1981, 358; Nunner-Winkler, 1984).

3) '몸적 정서(bodily affect)'로서의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제주해녀들은 바다를 주무대로 하는 생활세계 속에서 개인능력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liberalism)와 공동체의 공동선에 기반한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모두를 그들 삶의 "실천적 지혜(phronesis)"(Kenny, 2004, 164)로 착근(着根, embededness)시켜왔던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자들이었다. 여기서,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가 삶의 실천적 지혜로 착근되었다는 것은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가 생활세계 속에서 '무의식적 습관화'의 반복과정을 통하여, 의식적 사고의 영역이 아닌 몸적 감응을 기반으로 하는 정서의 영역에 내재되었음을 의미한다.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가 제주해녀들의 몸적 감응을 기반으로 하는 정서의 영역에 내재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체현(體現, embodiment)의 과정을 거쳐 제주해녀들의 정서(情緖, affect)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제주해녀들은 생활환경의 주무대인 바다에서의 물질경험을 통해,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로 정의되는 삶의 지혜를 머리가 아닌 '몸으로 체득'했던 것이다. 여기서, '몸으로 체득하여 정서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비재현지리학(非再現地理學, Non-representational geography) 경관연구의 핵심명제이다(Anderson, 2016; Thrift and Dewsbury, 2000; Thrift, 1996; 2005; 2006; 2008; 2009).

'무엇인가를 머리가 아닌 몸으로 체득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예시는 '수영하는 방법의 학습'일 것이다. 수영하는 방법은 머리로 배울 수 없다. 그것은 언어적인 혹은 시각적인 설명 및 학습을 통해 배울 수 없으며, 오직 몸적 감응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수영을 하는 방법은, 수영이라는 행위의 과정(performative process)에서 발생하는 '물과 신체 사이의 감응'을 통해 몸에 내재화되며, 결국, '몸'은 수영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a unique conduit)가 된다.

수영하는 방법은 '몸적 정서(Bodily affect)'의 형태로 터득된다. 몸적 정서는, 몸이라는 통로를 통해 수없이 흘러 들어가고 흘러 나왔던 몸적 감응의 지문(指紋, finger print) 그 자체로서, 사고과정 혹은 의식과정 보다 앞서 존재한다. 수영하는 방법의 학습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수영하는 행위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과 신체 사이의 감응의 반복은, 신체에 감응의 흔적을 남기게 되고, 그러한 흔적의 누적은 결국 몸에 정서의 형태로 자리잡게 되어 수영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말의 맥락에서 보자면, 수영하는 방법이 '몸에 정서의 형태로 자리잡게 된다'는 말보다 '몸에 느낌의

형태로 자리잡게 된다'는 말이 덜 어색해 보일 수 있지만, 비재현지리학에서는 느낌(feeling)과 정서(affect)를 엄밀하게 구분한다. 비재현지리학의 맥락에서 보자면, 느낌이라는 것은 언어를 통해 현시(顯示, emergence) 되는 감각(感覺, sensation)의 개념과 직결된다. 느낌이라는 것은 붉음, 푸름, 뜨거움, 차가움 등과 같은 감각들의 묶음이다. 즉, 수영을 함에 있어서, 조류의 흐름이 거세다, 몸이 한쪽으로 기운다, 몸이 무겁다 등의 감각들의 묶음이 '느낌'이다(Thrift, 2008, 116). 수영하는 방법은 이러한 느낌으로 체득되는 것이 아니다.

수영하는 방법은 느낌에 대한 몸적 감응을 통해 체득된다. 수영을 하면서 조류의 흐름이 거세며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에 몸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반응은 분석적 사고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조류의 속도가 초속 0.5m에 이르고 있으며 몸은 오른쪽은 1.23°의 각도로 기울어져 있으니, 팔의 움직임의 속도는 초속 0.232m의 속도로 움직여 주어여 하며, 다리는 초속 0.317m의 속도로 움직여 주면서, 폐활량은 최소 5000ml를 유지해주어야 한다는 판단 따위의 분석적 사고과정을 통해 수영하는 방법이 체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Merleau-Ponty, 1968).

수영하는 방법은 그러한 분석적 사고과정 없이, 두뇌가 아닌 몸에 누적된 기억, 즉, 물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감응을 통해 몸에 새겨진 지문으로서, 몸적 정서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Thrift, 2008, 208). 이것이 바로, 비재현지리학의 핵심개념인 '몸적 정서'의 의미이다. 이와 같은, 비재현지리학의 '몸적 정서'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주요 논점인 '제주해녀들의 몸적 정서로서의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의 의미를 파악해보자.

제주해녀들에게 있어서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라는 가치는 몸적 정서의 형태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 제주해녀들에게 있어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라는 가치는 분석적 사고과정이 아닌 그것에 대한 반복적 몸적 감응을 통해, 그들에게 정서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라는 가치가 제주해녀들의 몸적 감응의 반복을 통해 정서로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가 모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응당 그냥 그래야만 했던' 삶의 지혜들이 몸에 배고, 또 그것이 전승되어 왔기 때문이다. 선대(先代, foregoer)의 해녀들은 척박한 환경을 개척하는 과정(performative process)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개인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공동선의 지향'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터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마치, 수영하는 방법이 몸적 정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처럼, 척박한 환경에 살아남기 위한 지혜로서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라는 가치가 제주해녀들의 몸적 정서로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다. 위에서 인용되었던 '게석문화'에 대한 민족지적 기록은,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라는 가치가 제주해녀들의 몸적 정서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가 된다.

> "… 상군들은 제각기 물질하기 시작하였다 소라가 하나둘씩 그녀들의 망사리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나(하군해녀)의 망사리에도 소라를 집어넣었다. 나는 그것을 받기가 미안하여 사양하였으나 주는 상군들은 **응당해야 하는 것**처럼 내 손을 뿌리쳤다 그것은 이들 사이에 **관습화**되어 있는 것 같았다." (안미정, 2007, 113-114; 볼드체는 필자에 의한 강조)

필자가 위의 인용문에 강조해놓았듯이,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응당해야 하는 것'과 '관습화'이다.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가 '응당해야 하는 것'으로서 '관습화'되었다는 말은, 곧 그것이 몸적 정서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주해녀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분석적 설명 그리고 얼만큼의 자원을 공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량적 통계 따위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주해녀들은 그들의 몸에 새겨진 정서(affect)대로, 그저 그 문화를 수행(performance)할 뿐인 것이다.

그런데 비재현지리학의 맥락에서 보자면, 몸적 정서라는 것은 결코 비가시적 영역에 존재하여 영원히 숨겨져 있는 실체가 아니라, 반드시 가시적 형태를 통해 드러난다(Thrift, 2008, 175). 특히, 몸적 정

서가 가시적으로 드러남에 있어서, 핵심적인 매개물(medium)은 공간이다(Thrift, 2008, 229). 제주해녀사회에서, 척박한 환경에 대한 개척의 과정 속에서 몸적 정서로서 존재하게 된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가치가 가시적 공간형태를 매개로 나타난 것이 바로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전반부에서,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은 '따로 또 같이'의 공간적 원리에 기반하여 구성되어 있음을 분석한 바 있는데, 그러한 공간구성원리는 제주해녀들에게 몸적 정서로 존재해왔던,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가치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개인에 대한 관념의 보장에 기반한 공동체의 공동선 추구'를 본질로 하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가 제주해녀들의 몸적 정서로 존재하고 있었기에, 제주해녀들이 그들의 주거공간을 '따로 또 같이'의 형태로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의 능력에 기반한 자존이라는 자유주의적 가치와 공동선에 대한 순응과 기여라는 공동체주의적 가치가 결합된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가 제주해녀들의 몸적 정서의 형태로 존재하였기에, 독립의 지향적 가치와 결속의 지향적 가치가 융합된 '따로 또 같이' 문화가 나타날 수 있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안거리-밖거리'라는 주거형태로 재현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은 재현적 차원과 비재현적 차원의 상호연결을 통해 경관의 의미론이 완성된다. 본 논문의 서두에서도 언급한 기어츠의 문화 패턴 모델 이론에 빗대어 생각해보자면,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은 각각 '경관을 **위한** 모델(a model **for** landscape)'과 '경관에 **대한** 모델(a model **of** landscape)'에 상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과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은 각각 물리적 형태로 나타나는 '따로 또 같이' 문화의 공간적 재현과, 그러한 물리적 재현이 나타나기까지의 비가시적 과정에 해당하는 제주해녀들의 몸적 정서로서의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의 재현성은 '실재(reality)'의 영역에 존재하며 그것의 비재현성은 실재가 존재하기까지의 '과정(process)'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에 대한 경관지리학적 분석이 지니는 함의는 바로 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의 관계를 '실재와 과정'이라는 의미론적 관계를 통해 밝혀냄으로써, 분절되어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두 개념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논증해낸다는 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문지리학에서의 경관연구는 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이 조우(遭遇, encounter)하는 연결점들(nodes)을 찾고 서로를 연결해주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보기에, 경관이라는 것은 문화의 현재 상태를 이미 지나간 모든 조건들과 연결시키는 상호인과(reciprocal causality)의 연쇄로 함께 묶여 있는 개념이다. 즉, 경관이라는 것은, 문화적 특징을 지닌 재현적 실재와 그것이 물리적으로 구현되기까지의 비재현적 과정을 연결시키는 상호인과의 고리로 묶여있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경관의 이와 같은 두 가지 층위, 재현적 실재와 비재현적 과정이라는 구조에 대한 철학적 사유는, 영국의 철학자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의 현실/물리적 실재의 생성과 그것의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다 견고해진다.

화이트헤드는, 현실/물리적 실재와 그것이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을 여건(datum), 과정(process), 만족(satisfaction), 결단(decision)이라는 네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각 과정은 현실/물리적 실재의 생성을 위한 연결점들의 역할을 수행한다(Whitehead and Sherburne, 1957, 149-151). 첫째, '여건'의 단계는, 현실적 존재가 그것을 둘러싼 환경에 경험이 이루지는 단계이다. 둘째, '과정'의 단계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 환경에 대한 반응의 양태(樣態, pattern)가 형성되는 단계이다. 셋째, '만족'의 단계는, 환경에 대한

반응의 양태가 수정/보완되어, 가장 적절한 혹은 탁월한 양태로 확정되는 단계이다. 넷째, '결단'의 단계는 확정된 양태가 현실/물리적 실재로 생성되는 단계이다.

위와 같은, 현실/물리적 실재의 생성과정 네 단계를 경관에 그대로 적용해보자면, 처음의 두 단계는 경관이 생성되는 비재현적 과정(경관에 **대한** 모델)에 해당하고, 끝의 두 단계는 경관이 생성되는 재현적 과정(경관을 **위한** 모델)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위의 네 단계, 즉 네 개의 연결점들의 연쇄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경관의 개념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각각의 단계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관연구의 학제적 목적(문화/역사/사회/정치)에 따라 연결점들의 성격들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그것의 영역과 성격을 불문하고, 경관의 연구는 바로 그와 같은 연결점에 대한 연구, 즉 각 단계의 연결방식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것은, 재현으로서의 경관을 연구하는 신문화지리학과 비재현으로서의 경관을 연구하는 비재현지리학 간의 징검다리가 어떻게 배열되고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김숙진, 2016, "아상블라주의 개념과 지리학적 함의," 대한지리학회지, 51(3), 311-326.

박영순, 1999, 우리 옛집 이야기: 한국 전통주택의 실내공간, 열화당.

박원배, 2009, "제주도 물 문화의 소고: 용천수를 중심으로," 제주발전연구, 13, 227-244.

손명철, 2017, "한국 지역지리학의 개념 정립과 발전 방향 모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4), 653-664.

송성대, 2001,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도서출판 각.

송성대, 1996, 제주인의 해민정신, 제주문화.

송성대, 1993, "제주도의 풍토주가: 초옥민가를 중심으로 하여," 제주도연구, 10, 99-174.

송원섭, 2015, "경관지리학에서 경치지리학으로: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 경관연구 패러다임의 전환," 대한지리학회지, 50, 305-323.

안미정, 2007, 제주 잠수의 어로와 의례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화전략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한양대학교.

양보경, 2009, "상징경관으로서의 고지도 연구," 문화역사지리, 21(1), 95-104.

오홍석, 1969, "제주도의 취락입지에 관한 연구: 변천과정과 입지요인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 41-54.

이정만, 1998, "도시문화지리학에 있어서 '문화'와 '환경'의 개념, 대한지리학회지, 33, 677-684.

전종한, 2009, "문화적 구성물로서의 촌락경관 비교연구: 반촌과 민촌적 배경의 촌락 간 비교," 문화역사지리, 21(3), 81-103.

정광중, 2016, "제주도 생활문화의 특성과 용천수 수변공간의 가치 탐색," 국토지리학회지 제50권, 253-270.

제주도청, 1939, 濟州島勢要覽, 제주도.

진관훈, 2004,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도서출판 각.

진종헌, 2006, "코스그로브의 경관 이론," 현대공간이론의 사상가들, 한울.

진종헌, 2009, "경관연구의 환경론적 함의," 문화역사지리, 21(1), 149-160.

진종헌, 2013, "재현 혹은 실천으로서의 경관: '보는 방식'으로서의 경관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8, 557-574.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1, 한국역사지리, 푸른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3, 현대 문화지리의 이해, 푸른길.

홍금수, 2009, "경관과 기억에 투영된 지역의 심층적 이해와 해석," 문화역사지리, 21(1), 46-94.

桝田一二, 1976, 濟州島の集落の地誌學的研究(桝田一二地理學論文集刊行會, 桝田一二地理 學論文集), 東京: 弘詢社.

泉 靖一, 1966, 濟州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高野史男, 1996, 韓國濟州島-日韓をむすぶ東シナ海の要石, 東京: 中公新書.

Anderson, B, 2016, *Taking-place: non-representational theories and geography*, London: Routledge.

Blum, L., 1988, Gilligan and Kohlberg: Implications for Moral Theory, *Ethics*, 93, 472-491.

Cohen, G.A., 1986, *Self-Ownership, World-Ownership, and Equality, in: Justice and Equality: Here and Now*,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pp. 108-135.

Cosgrove, D., 1985,Prospect, Perspective and the Evolution of the Landscape Idea.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New Series, 10(1), 45-62.

Cosgrove, D., 1998, *Social formation and symbolic landscape*. Lond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Cosgrove, D., 2006. Modernity, Community and the Landscape Idea. Journal of Material Culture 11, 49-66.

Dewsbury, J.D., 2015, Non-representational landscapes and the performative affective forces of habit: from 'Live' to 'Blank.', *cultural geographies*, 22, 29-47.

Geertz, C.,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 selected essays*, London: Hutchinson.

Greenhough, B., 2014, More-than-human-geographies, In: *The SAGE Handbook of Human Geography*,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Hall, E.T., 1990, *The Hidden Dimension*, New York: Anchor.

Hampton, J., 1970, *Political Philosophy*, New York: Routledge.

Harris, M., 1978, *Cows, pigs, wars, & witches : the riddles of culture*, New York: Vintage Books.

Harris, M., Ross, E.B., 1987, *Food and evolution : toward a theory of human food habits*,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Hegel, G.W.F, 1949, *Philosophy of Righ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Hill, L.J., 2015, More-than-representational geographies of the past and the affectivity of sound: revisiting the Lynmouth flood event of 1952, *Social & Cultural Geography*, 16, 821-843.

Jackson, P., 1989, *Maps of meaning: an introduction to cultural geography*, London: Unwin Hyman.

Jackson, W.A., 1996, Cultural Materialism and Institutional Economics, *Review of Social Economy*, 54, 221-244.

Jones, O., 2011, Geography, Memory and Non-Representational Geographies, *Geography Compass*, 5, 875-885.

Kenny, A., 2004, *Ancient Philoso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ohlberg, L., 1981, *Essays on moral development: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San Francisco: harper & row.

Levi-Strauss, C., 1992, *Tristes Tropiques*, London: Penguin.

Lorimer, H., 2005, Cultural geography: the busyness of being 'more-than-representational,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9, 83-94.

Macpherson, H., 2010, Non-Representational Approaches to Body-Landscape Relations, *Geography Compass*, 4, 1-13.

Macpherson, H., 2009, The intercorporeal emergence of landscape: negotiating sight, blindness, and ideas of landscape in the British countryside, *Environment and planning A*, 41, 1042-1054.

Matless, D., 1998, *Landscape and Englishness*, London: Reaktion.

Mauss, M., 2002, *The Gift*, London: Routledge.

Merleau-Ponty, M., 1968,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Evanston, Il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Milner, A., 1993, *Cultural Materialism*, Carlton: Melbourne University Press.

Mitchell, D., 2003, *Dead labor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landscape - California living, California Dying, in: Handbook of Cultural Geography*, London: SAGE,pp. 233-248.

Nozick, R., 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s.

Nunner-Winkler, G., 1984, Two Moralities?, In: *Morality, Mor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Rawls, J., 1982, Social Unity and Primary Goods, In: *Utilitarianism and Beyo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se, G., 1993, *Feminism and geography: the limits of geographical knowledge*, Cambridge: Polity Press.

Sandel, M., 1982,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olomon, S., 2011, *Water: the epic struggle for wealth power and civilization*, New York: Harper Perennial.

Song, W., 2017, *Localised Modernities: Modernization, Gene-*

alogy and Landscape Change in South Korea (PhD), UK: Queen's University at Belfast.

Tanne, Deborah, 1990, *You just don't understand: Women and men in conversation*, New York: Morrow.

Taylor, C., 1985, Alternative futures: legitimacy, identity and alienation in late twentieth century Canada, *Constitutionalism, citizenship and society in Canada*, 33, 183-229.

Thrift, N., 2009, Space: The fundamental stuff of geography, In: *Key Concepts in Geography*, London: SAGE, pp. 86-96.

Thrift, N., 2006, Space, *Theory Culture Society*, 23, 139-146.

Thrift, N., 2005, From born to made: technology, biology and space,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0, 463-476.

Thrift, N., 1996, *Spatial Formations*, London: SAGE.

Thrift, N., Dewsbury, J.D., 2000, Dead geographies and how to make them liv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8, 411-432.

Thrift, N.J., 2008, *Non-representational theory: space, politics, affect, International library of sociology*, London: Routledge.

Turner, V., 1975, *Dramas, Fields, and Metaphors: Symbolic Action in Human Society*,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Vannini, P., 2015, Non-representational ethnography: New ways of animating lifeworlds, *cultural geographies*, 22, 317-327.

Waldron, Jeremy, 1987, Theoretical Foundations of Liberalism, *Philosophical Quarterly*, 37, 127-150.

Whitehead, A.N., Sherburne, D.W., 1957, *Process and reality*, New York: Macmillan.

Wylie, J., 2005, A single day's walking: narrating self and landscape on the South West Coast Path,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0, 234-247.

교신: 송원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제주학연구센터 (이메일: culturalgeo@gmail.com, 전화: 064-747-6137)

Correspondence: Wonseob Song, Centre for Jeju Studies, 51, Dongkwang-ro, Jeju cit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mail: culturalgeo@gmail.com, Phone: +82-(0)64-747-6137)

최초투고일 2019. 4. 1
수정일 2019. 4. 28
최종접수일 2019. 4. 29

대한지리학회지 제54권 제2호 2019(251～269)

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를 적용한 초등 사회과 지리 영역의 내용 체계 개발

장의선*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ntents Framework for Elementary Geography Education Applying The Five Big Ideas of Geography Education

Eui-Sun, Jang*

요약 : 이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를 적용해 초등 사회과 지리 영역의 내용 체계 개선 방안을 탐구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현행 초등 사회과 지리 영역의 내용 체계가 지리학의 분류 체계와 환경확대 원리의 모호한 결합이라는 점 외에 어떤 명료한 교육적 근거와 논리가 미흡하다고 진단하였다. 연구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우리나라 지리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것이 갖는 교육적 의미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는 초등 지리 영역의 내용 체계와 충분히 상응하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연구자는 5대 빅아이디어와 내용 체계를 호응시키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보수적 관점에서 현행 초등 사회과의 내용 체계 안에서 반영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지리교육의 내용 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이다. 끝으로 초등 지리교육의 내용 체계 개발을 위해서는 내용 조직자에 대한 연구와 그것을 내용 체계와 호응시키는 연구, 그리고 초등 사회과의 다른 두 영역인 역사 및 일반사회의 내용 체계와 어떻게 조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연구가 차후의 주요 연구 주제임을 언급하였다.

주요어 : 초등 지리교육, 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 내용 체계, 내용 조직자, 스코프와 시퀀스

Abstract : This study explored ways to improve the contents framework of elementary geography education by applying the five big ideas of geography education presented i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irst of all, the author diagnoses that the contents framework of the current elementary geography is an ambiguous combination of the classification of geography as a discipline and the expanding environments sequence, and that there is a lack of clear educational grounds and logic. The author notes that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specifies five big ideas of geography education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geography education in Korea and summarizes their educational significances and that, but, five big ideas of geography education present in the curriculum have some problems which do not fully correspond to the contents framework of elementary geography. The author proposed two ways of interworking between the five big ideas and curriculum framework: one is to reflect in contents framework of the current elementary social studies from a conservative point of view and the other is to reconstruct the contents framework of the geography education. Finally, the author mentions that it is major research themes to research on the contents organizer of geography education, to develop the contents framework compatible with the contents organizer, and to research on how to correspond to the contents framework of history and civics as two other areas of social studies.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Research Fellow)

Key Words : Elementary Geography Education, Five Big Ideas of Geography Education, Curriculum Framework, Content Organizer, Scope and Sequence

1. 머리말

지리학은 지표에서 전개되는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의 다양성을 위치, 분포, 장소와 지역, 공간과 환경,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등의 지리적 개념들을 통해 탐구한다. 지리교육은 학생들이 친숙한 주변 장소나 낯설 수 있는 먼 지역의 사례들을 활용해 지표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의 다양성,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의 다양성에 대한 지리적 이해력과 감수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리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 지역 및 지표 세계에 대한 이해력과 감수성을 길러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길러진 지리적 이해력과 감수성은 지리교육 및 사회과교육을 넘어 모든 교육적 실천들의 궁극적 지향인 '바람직한 시민성의 함양'에 기여하게 된다.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와 과목들은 각기 고유한 내용 체계를 통해 각자의 교육 목적에 도달하려 한다. 그리고 지리과를 비롯한 많은 교과목들의 내용 체계는 모학문의 분류 체계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과거에는 각 교과목을 모학문의 하위분야로 간주하고 '작은 학자'를 길러내는 데 힘써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때도 있었을 만큼, 교과교육이 내용 체계나 주요 개념, 학습 요소 등에 있어서 모학문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 역시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과교육은 모학문의 영역을 넘어 '다음 세대의 교육'이라는 추가적 목적을 추구한다. 이점에서 교과교육을 특정 모학문에 종속된 관계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지리교육은 모학문인 지리학과 주요 이론, 개념, 기법, 사례 등을 공유하지만 학교급에 따라 사회과의 일부 과목으로, 때로는 보다 독립적 성격의 교과목으로서 지리학적 콘텐츠를 교육적 관점에서 가공하고 변환한다. 이러한 교수학적 작업 중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내용 체계를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역대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지리교육의 내용 체계는 지리학의 분류 체계를 좀처럼 넘어서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지리교육에서 하나의 커다란 진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리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1]를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적시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개발 연구진(온정덕 외, 2015, 84-88)에 따르면 빅아이디어란 한 교과나 과목이 '학생들에게 길러주려는 궁극적이고도 핵심적이며 본질적인 아이디어'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빅아이디어는 한 교과나 과목의 교육과정 내용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원리이자 기본적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빅아이디어는 단순한 지식과 기능을 뛰어넘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가진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추구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각 교과에서는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교과마다 추구하는 근본적인 사고방식 즉 빅아이디어를 추출하고자 하였고, 지리교육과정 연구자들의 논의 결과는 5대 빅아이디어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5대 빅아이디어의 관점에서 교육과정 시기별 초등 사회과 지리 영역의 내용 체계를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가 갖는 교육적 의미를 살펴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를 적용한 내용 체계의 개발 방안과 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물론 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가 그 자체로 완벽하다거나 온전히 정착한 것은 아직 아니며, 통합적 관점을 가미하고 있는 현행 초등 사회과에서 지리 영역을 명확히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초등 사회과 지리 영역의 내용 체계는 '지리학의 분류 체계를 환경확대법과 모호하게 결합'시키고 있는 것 외에 그 어떤 원리나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이 지점에서 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는 기존의 초등 사회과 지리 영역의 내용 체계가 교육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그리고 추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적어도 기존의 초등 사회과 지리 영역의 내용 체계를 발전적으로 성찰함에 있어 유용한 관점을 제공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2.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초등 지리 영역의 내용 체계상 특징과 문제점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선행 초등 지리 영역의 내용 체계상 특징에 대해서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학년을 크게 3~4학년군과 5~6학년군으로 구분하고 있고, 내용 면에서는 대주제와 중주제, 그리고 각 중주제 아래에 2개씩의 성취기준을 제시하는 형태이다. 3~4학년군의 경우 영역 통합적 대주제를 제시한 다음 그 아래에 지리, 역사, 일반사회로 구분되는 분과적 중주제를 편성하고 있고, 5~6학년군의 경우에는 대체로 대주제를 포함해 그 이하를 모두 분과적 수준에서 편성하고 있다(은지용 외, 2015, 80). 지리 영역에 한정하여 내용 체계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리 영역의 핵심 내용을 중주제 수준에서 확인해 보면, 우리 고장의 모습, 교통과 통신수단의 변화,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 지역의 위치와 특성,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이상 3~4학년군), 국토의 위치와 영역(이하 5~6학년군), 국토의 자연환경, 국토의 인문환경,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 지속가능한 지구촌 등으로 확인된다.

둘째, 학년에 따른 스코프-시퀀스는 큰 틀에서 환경확대법을 준용하면서 지도학, 촌락지리, 도시지리, 국토지리, 세계지리와 같은 지리학적 분류 체계를 학년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미한 구조라 할 수 있다. 가령 3~4학년군에서는 지도학, 교통지리, 촌락지리, 도시지리 등에 관한 내용을, 5학년에서는 국토지리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6학년에서는 세계지리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고 있다.

셋째, 주요 지리적 개념 혹은 주제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지도, 장소감, 교통, 통신, 위치, 중심지, 촌락, 도시, 상호 의존, 자연환경, 인문환경, 국토, 지구, 대륙, 삶의 모습, 갈등과 공존, 환경문제, 지속가능성 등이 확인된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과 비교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 지리 영역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 학년을 크게 3~4학년군과 5~6학년군으로 구분한다는 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와 동일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교육과정의 대강화 취지에서 중주제 없이 대주제(대단원)만을 제시하고 그 아래에 바로 성취기준 4개씩을 진술하는 형태였다.[2] 그리고 3~4학년군과 5~6학년군 구분 없이 모든 대주제와 그 이하 내용들이 대체로 분과적 수준에서 편성되었다(표 1).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 지리 영역의 내용 체계상 구체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리 영역의 핵심 내용을 대주제 수준에서 확인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 이동과 소통하기, 사람들이 모이는 곳, 우리 지역 다른 지역, 도시의 발달과 주민 생활, 촌락의 형성과 주민 생활(이상 3~4학년군), 살기 좋은 우리 국토(이하 5~6학년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우리 이웃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등이었다.

둘째, 학년에 따른 스코프-시퀀스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경확대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리학의 내용 체계가 부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구조였다. 즉 3~4학년군에서는 주로 지도학과 지역 사례를 제시하는 도시지리, 촌락지리에 관한 내용을, 5~6학년군에서는 국토지리와 세계지리에 관한 내용을 연이어 편성하고 있다.

셋째, 주요 지리적 개념 혹은 주제로 분류되는 것들

표 1. 2009 및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 지리 영역 내용 체계 비교

구분	2009 개정 초등 지리 영역 (교육과학기술부 제 2009-41호)		2015 개정 초등 지리 영역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대주제(대단원)	성취기준*	대주제	중주제**
3~4 학년 (군)	(1) 우리가 살아가는 곳	(가), (나), (다), (라)	(1) 우리가 살아가는 곳	① 우리 고장의 모습 ③ 교통과 통신수단의 변화
	(2) 이동과 소통하기	(가), (나), (다), (라)		
	(3) 사람들이 모이는 곳	(가), (나), (다), (라)	(2)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①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
	(5) 우리 지역, 다른 지역	(가), (나), (다), (라)	(3) 우리 지역의 어제와 오늘	① 지역의 위치와 특성
	(6) 도시의 발달과 주민 생활	(가), (나), (다), (라)	(4)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①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7) 촌락의 형성과 주민 생활	(가), (나), (다), (라)		
5~6 학년 (군)	(1) 살기 좋은 우리 국토	(가), (나), (다), (라)	(1) 국토와 우리 생활	① 국토의 위치와 영역 ② 국토의 자연환경 ③ 국토의 인문환경
	(3)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가), (나), (다), (라)		
	(5) 우리 이웃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가), (나), (다), (라)	(7) 세계의 여러 나라들	①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 ②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 ③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
	(7)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가), (나), (다), (라)	(8)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①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가) ②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가) ③ 지속가능한 지구촌-(가)

* 중주제 없이 4개씩의 성취기준이 진술되어 있음(이 표에서는 지면 관계상 각 성취기준의 기호만 제시함).
** 각 중주제 아래에는 2개씩의 성취기준이 진술되어 있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9), 교육부(2015).

을 찾아보면 지도, 이동, 소통, 중심지, 지역, 촌락, 도시, 국토, 환경, 세계 등을 들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와 비교할 때 명료한 지리적 개념이나 주제보다는 이를 쉽게 풀어쓰는 수준의 용어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초등 지리 영역 내용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7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의 운영상의 문제점[3]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개정된 것으로 기본적 교육 철학과 체제상 7차 교육과정과 거의 동일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303). 따라서 2007 개정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의 지리교육 내용 체계상 특징을 대동소이한 것으로 간주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2007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학년군이 아니라 개별 학년 단위로 제시되고 있는데, 교육과정의 대강화 취지에서 중주제나 소주제 없이 대주제(대단원)만을 제시하고 그 아래에 바로 성취기준[4]을 진술하는 형태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동일하였다. 3학년은 각 대주제를 특정 영역이 주도하되 영역 간 통합성을 부분적으로 가미하는 방향에서 편성되었고, 4~6학년은 분과적 대주제 위주로 편성되었다(표 2).

2007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지리 영역[5]에 한정시켜 내용 체계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리 영역의 핵심 내용을 대주제 수준에서 확인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 고장의 정체성,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동과 의사소통,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 우리 지역과 관계 깊은 곳들, 여러 지역의 생활, 아름다운 우리 국토, 환경을 생각하는 국토 가꾸기,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등으로 확인된다.

둘째, 학년에 따른 스코프-시퀀스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 2. 2007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 지리 영역 내용 체계 비교

구분	2007 개정 초등 지리 영역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 - 79호)		2009 개정 초등 지리 영역 (교육과학기술부 제 2009-41호)	
	대주제(대단원)	성취기준*	대주제(대단원)	성취기준**
3학년	(1) 우리가 살아가는 곳	①, ②, ③, ④, ⑤	(1) 우리가 살아가는 곳	㈎, ㈏, ㈐, ㈑
	(2) 우리 고장의 정체성	①, ②, ③, ④, ⑤	(2) 이동과 소통하기	㈎, ㈏, ㈐, ㈑
	(4) 사람들이 모이는 곳	①, ②, ③, ④, ⑤, ⑥	(3) 사람들이 모이는 곳	㈎, ㈏, ㈐, ㈑
	(5) 이동과 의사소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학년	(1)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5) 우리 지역, 다른 지역	㈎, ㈏, ㈐, ㈑
	(3) 우리 지역과 관계 깊은 곳들	①, ②, ③, ④, ⑤, ⑥	(6) 도시의 발달과 주민 생활	㈎, ㈏, ㈐, ㈑
	(5) 여러 지역의 생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7) 촌락의 형성과 주민 생활	㈎, ㈏, ㈐, ㈑
5학년	역사[6]		(1) 살기 좋은 우리 국토	㈎, ㈏, ㈐, ㈑
			(3)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 ㈏, ㈐, ㈑
6학년	(1) 아름다운 우리 국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5) 우리 이웃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 ㈏, ㈐, ㈑
	(3) 환경을 생각하는 국토 가꾸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 ㈏, ㈐, ㈑
	(5)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중주제 없이 성취기준이 진술되어 있음(이 표에서는 지면 관계상 각 성취기준의 기호만 제시함).
** 중주제 없이 4개씩의 성취기준이 진술되어 있음(이 표에서는 지면 관계상 각 성취기준의 기호만 제시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교육과학기술부(2009).

환경확대법과 지리학의 내용 체계를 결합한 구조였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3학년에서는 주로 지도학, 4학년에서는 촌락지리와 도시지리, 6학년에서는 국토지리와 세계지리에 관한 내용을 차례로 편성하고 있다.

셋째, 주요 지리적 개념 혹은 주제로 분류되는 것들을 찾아보면 지도, 이동, 자연환경, 지역, 지역 간의 관계, 촌락, 도시, 국토, 세계 등을 들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와 비교할 때 무엇보다 지역의 자연환경, 지역의 생활 모습, 지역과 관계 깊은 곳들, 여러 지역의 생활 등 지역에 관한 학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6차 교육과정과 그 이전 시기의 교육과정은 성취기준 혹은 성취목표를 진술하지 않고 학년별 대단원, 중단원 등의 단원명과 단원별 내용을 개조식으로 제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6차 교육과정 이전의 주요 시기별 초등 지리 영역 내용 체계를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따라서 지리 영역의 학년별 상세 내용을 국가교육과정 문서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내용 체계의 특징만 대략 살펴본다면 6차 교육과정의 경우 '3학년-우리 고장의 생활 환경(시·군)', '4학년-시도 지역의 공동 생활(시·도)', '5학년-우리나라의 생활과 문화(국가)', '6학년-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국가·세계)'라는 학년별 내용 범위를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조직함으로써[7] 지리 영역(인간과 환경)에서는 '3학년-고장(시·군·구) 수준', '4학년-시·도 지역 수준', '5학년-국가 수준', '6학년-우리나라와 세계 수준'으로 '학년에 따른 공간 확대의 원칙'이 큰 틀에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저학년일수록 기초 개념과 생활 중심 사례가 고려되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문적인 개념과 국가 사회적인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는 주제 중심 접근이

표 3. 교수요목기 ~ 제6차 교육과정까지 주요 시기별 초등 지리 영역 내용 체계 비교

구분	교수요목기 (초·중등학교 각과 교수요목집 (1))	제2차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119호 별책)	제4차 교육과정 (문교부 고시 제 442호 1981. 12. 31.)	제6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2-16호)
2 학년	둘째 학년 고장 생활 (四) 우리 고장에서의 여행	4. 여행과 물건의 수송	나) 우리 고장의 자연환경	〈1·2학년 통합 교과〉
	(六) 그 밖의 사회생활을 서로 돕는 이들			
3 학년	셋째 학년 여러 곳의 사회생활 (一) 우리 지방	1. 고장의 자연환경	가) 자연의 이용과 우리 생활	〈우리 고장의 생활 환경(시·군)〉 (1) 우리 고장의 모습
	(二) 각 지역(地域)의 생활양식의 다름	3. 고장에서 나는 것	나) 여러 고장의 생활	
	(三) 사람의 자연에 대한 적응(適應)	4. 여러 고장의 생활	다른 고장 사람들의 생활	
4 학년	넷째 학년 우리나라의 생활 (一) 우리나라의 지도 공부	1.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가) 시·도 및 지역의 생활	〈시·도 지역의 공동 생활(시·도)〉 (1) 우리 시·도의 모습과 내력
	(二) 우리나라 생활의 자연환경	2. 산림녹화	나) 우리나라의 자연과 생활	(2) 우리 시·도 사람들의 생활
	(三) 우리나라의 자원과 산업			
	(四) 우리나라의 교통	4. 우리나라 여러 지방의 생활	다) 지역 개발과 국토의 활용	(3) 여러 지역의 생활
	(五) 우리나라의 도시와 촌락			
	(八)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관계			
5 학년	다섯째 학년 다른 나라의 생활 (四) 아시아와 그 주민	2. 자원의 이용	나) 우리들의 경제생활	〈우리나라의 생활과 문화(국가)〉 (1) 산업과 경제생활
	(五) 유우롭과 그 주민			
	(六) 아프리까와 그 주민	5. 교통과 상업	다) 우리가 사는 세계	(2) 살기 좋은 우리 국토
	(七) 남북 아메리까와 그 주민			
	(八) 대양주와 그 주민			
	(九) 우리나라와 세계			
6 학년	여섯째 학년 우리나라의 발달 역사 영역, 일반사회 영역	3. 세계 여러 나라의 생활	다) 세계와 우리나라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국가·세계)〉 (4) 가까워지는 세계와 우리나라

자료: 군정청·문교부(1946), 문교부(1963), 문교부(1981), 교육부(1992).

고려되는 것이 교수요목기부터 지속적으로 적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등 지리 영역의 내용 체계가 환경확대법과 지리학의 내용 체계를 혼합한 구조라는 점은 2015 개정, 2009 개정, 2007 개정, 7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선행 교육과정에서 보이는 지리 영역의 내용 체계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3~6학년의 학습 내용이 분과적 형태로 제시된 2009 교육과정을 제외하면, 주요 학습 내용의 제시 형태면에서 저학년에서는 통합적 성격의 대주제를 제시한 다음 중주제나 성취기준 차원에서 지리, 역사, 일반사회 등의 분과적 내용을 배우도록 하고 있고, 고학년에서는 국토의 미래나 국제 협력 등의 일부 마무리 단원을 제외하면 대체로 대주제 수준에서 분

과적 내용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둘째, 내용조직의 원리에 있어서 우리나라 초등 사회과 지리 영역의 교육과정은 교수요목기 이래 현행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큰 틀에서 지속되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바로 3~4학년에서는 주로 지도학, 교통지리, 촌락지리, 도시지리에 관한 학습을, 그리고 5~6학년에서는 국토지리와 세계지리를 배우도록 하는 환경확대법과 지리학의 분류 체계 간의 모호한 결합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교수요목기부터 4차 교육과정시기까지는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과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내용에서 고장과 다른 나라 스케일의 사례가 함께 활용되는 내용이 일부 등장하기도 하였다.[8)]

셋째, 지리교육의 핵심 용어나 개념들이 제시되기는 하였지만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과 같은 극히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면 주제 혹은 빅아이디어로 볼 만한 것들이 거의 없었으며, 설령 단편적 핵심 개념들을 아주 넓은 의미에서 일종의 빅아이디어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명확한 정의가 무엇이며 그들 사이의 어떤 연관성 혹은 어떠한 상호맥락성을 전제하여 내용 체계를 구성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3. 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와 교육적 의미

1) '빅아이디어' 개념의 등장 맥락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리교육의 주된 콘텐츠는 모학문인 지리학의 사실, 개념, 법칙과 모델 등을 토대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리교육사를 개관할 때 지리교육의 초창기로 갈수록 지리교육의 내용 체계는 모학문인 지리학의 분류 틀을 강하게 반영하였고 현대로 올수록 지리학의 분류 체계를 그대로 차용하기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려 시도해왔음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84년 미국의 국가지리교육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Geographic Education, NCGE)와 미국지리학회(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AAG)가 공동으로 고안한 지리교육의 5대 주제(The Five Themes of Geography)를 들 수 있다. 여기서 5대 주제란 지리학의 새로운 조류나 하위 분류 체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리적 문제의식과 아이디어에 공통적으로 내재하는 개념을 가리키는 것으로, 위치, 장소,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이동, 지역의 다섯 가지를 말한다(AAG, 1985). 5대 주제는 1980~90년대를 지나면서 미국의 지리교육계 및 사회과교육계에서 지리 영역의 주된 내용 조직자(content organizer)로 채택되었고, 지리적 사실을 암기하는 과목이라는 인상이 짙었던 이전의 학교지리가 개념 중심의 지리교육, 고차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지리교육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Boehm and Petersen, 1994, 211-218).

미국 지리교육의 5대 주제는 이후 교육적으로 보다 확장되고 발전된 6대 필수 요소(six essential elements)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개념적 바탕이 되었다. 6대 필수 요소란 공간적 관점에서 바라본 세계, 장소와 지역, 자연 시스템, 인문 시스템, 환경과 사회, 지리학의 응용을 말한다. 이들 6대 필수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해 보면 표 4와 같다.

요컨대 6대 필수 요소는 지표에서 전개되는 자연과 인문 요소의 상호작용과 그 결과에 초점을 두는 지리학의 전통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오늘날 지구촌이 직면하고 있는 긴박한 문제들을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해결 혹은 개선을 도모하고 응용적 차원으로 풀어내기 위한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삶의 질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에 이러한 성격의 6대 필수 요소를 근간으로 조직된 지리교육 내용은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 이전과 다른 세계의 요구에 바람직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수준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늘날 미국 지리교육은 6대 필수 요소를 내용 조직자로 삼고 그 아래에 우리의 성취기준에 상응하는 18개 스탠다드(standards)를 두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Vender, 2003). 이들 6대 필수 요소와 18개

표 4. 미국 지리교육의 6대 필수 요소와 정의

6대 필수 요소	정의
1. 공간적 관점에서 본 세계 (The World in Spatial Terms)	지리(학)는 사람과 장소와 환경 사이의 공간 관계를 연구한다. 지도는 모든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공간적 상호작용을 잘 드러내준다.
2 장소와 지역 (Places and Regions)	개인과 사람들의 정체성과 삶은 특정한 장소와 지역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각각의 장소와 지역은 자연 및 인문적 측면에서 독특하고도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다.
3. 자연 시스템 (Physical Systems)	자연(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지표면의 형상을 만들고 식생 및 동물들의 생활과 상호작용하며, (이 과정에서) 문화환경과 자연환경을 만들어내고 지속시키며 또 수정을 가한다. 자연 체계는 바람과 대양의 흐름, 지각(판)의 이동, 침식, 퇴적, 수리와 같은 현상들을 포함한다.
4. 인문 시스템 (Human systems)	지표면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도) 그 형상이 만들어진다. 사회의 공간 조직이란 곧 인구 이동, 취락 패턴, 경제 활동, 교통, 통신, 정치 조직 등의 조합으로 된 모자이크이다.
5. 환경과 사회 (Environment and Society)	자연환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변형을 겪는다. 전통적 의미에서, 초기 정착자들은 삼림을 벌채하여 작물을 키우고 가축을 사육하였다. 오늘날에는, 대기와 수질 오염, 토양 황폐화, 유해 물질 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반대로 자연환경이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양의 유형과 수자원의 이용 가능성 여부는 어떤 작물이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데 지대한 요인이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자연재해(예. 지진, 허리케인, 홍수 등)는 삶과 재산의 상실을 가져오기도 한다.
6. 지리학의 응용 (The Uses of Geography)	지리 내용과 지리 연구에 필요한 도구와 기법의 이용 방법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제공된다. 개인과 기업과 정부 기관은 거의 일상적으로 지리와 다양한 종류의 지도를 이용한다. 지리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흥미와 보수를 기대할 수 있는 보다 넓은 선택의 기회를 갖는다.

자료: GESP, 1994, 34-35의 내용을 재구성.

표 5. 미국 지리교육의 18대 스탠다드와 6대 필수 요소의 관계

스탠다드	정의	6대 필수 요소
1	지도를 비롯한 지리적 표현, 지리/공간적 기법, 공간적 사고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	1. 공간적 관점에서 본 세계
2	심상지도를 활용하여 공간적 맥락에서 사람, 장소, 환경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조직하는 방법	
3	지표 세계에 분포하는 사람, 장소, 환경의 공간 조직을 분석하는 방법	
4	각 장소의 자연적, 인문적 특징	2 장소와 지역
5	지표 세계의 복잡성을 구명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6	문화와 경험이 사람들의 장소 및 지역 인지에 영향을 주는 방법	
7	지표 세계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자연적 과정	3. 자연 시스템
8	지표 세계의 생태계와 식물계의 공간 분포와 특징	
9	지표 세계의 인구 특징, 분포, 이동	4. 인문 시스템
10	지표 세계의 문화 모자이크의 특징, 분포, 복잡성	
11	지표 세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패턴과 네트워크	
12	취락의 (형성)과정, 패턴, 기능	
13	사람들 간의 협력과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지표 세계의 분화와 통치에 미치는 영향	
14	인간의 행위가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과정	5. 환경과 사회
15	물리적 시스템이 인간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과정	
16	자원의 의미, 이용, 분포, 중요성이 변화하는 과정	
17	지리는 과거를 해석하는 데 어떻게 이용될 수 있나	6. 지리학의 응용
18	지리는 현재와 미래의 계획을 해석하는 데 어떻게 이용될 수 있나	

자료: Vender, C., 2003, 6의 내용을 재구성.

스탠다드는 미국만이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지리교육의 내용 체계를 위한 기본 틀이 되고 있다(The Royal Canadian Geographical Society, 2001).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6대 필수 요소가 여러 개의 핵심적 스탠다드를 서로 이어주거나 묶어주는 일종의 보다 커다란 아이디어라는 의미에서 6대 필수 요소 각각을 빅아이디어(big idea)로 간주한다(표 5).

한편 영국에서는 1988년 시행된 교육개혁에 따라 1991년부터 국가 수준의 지리교육과정이 편성되었고 지금까지 수차례 개정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영국은 국가지리교육과정을 통해 지리교육의 필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지리교육의 필수 내용은 지금까지 수시로 개정되어 왔는데,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위치, 지도와 야외조사 그리고 지리적 기능, 장소, 자연지리, 인간과 환경, 인문지리의 여섯 가지가 그것이다(Department of Education, 2014).[9] 영국 지리교육의 필수 내용은 미국과 캐나다의 6대 필수 요소와 상당 부분 유사성을 보인다.

영국의 경우 지리교육의 6대 필수 내용(essential subject content)은 학생들에게 '지표 세계에서 다양한 공간 규모로 나타나는 현상과 사건들이 어떻게 발생한 것이고, 상호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 것인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리적 지식(geographical knowledge)이나 지리적 이해(geographical understanding) 혹은 지리적 기능(geographical skills)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위치'와 '장소'는 지리적 지식에 관한 내용이고, '자연지리', '인간과 환경', '인문지리'는 지리적 이해에 해당하며, '지도와 야외조사 그리고 지리적 기능'은 지리적 기능에 관련된 것이다.

이들 6대 필수 내용은 5~16세에 이르는 교육과정, 즉 우리의 학령에 비유하면 유치원 과정(Key Stage 1, 5~6세), 초등학교 저학년 과정(Key Stage 2, 7세~10세), 초등 고학년~중학교 과정(Key Stage 3, 11세~13세)의 지리교육과정에서 기본 내용 체계를 이루고 있다. 영국의 지리교육이 이들 6대 필수 내용을 통해 도달하려는 교육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지리적 자료를 알게 하고(지식), 지리학자와 같이 사고하도록 하며(이해), 지리학자처럼 탐구하게 하고(기능), 지리를 일상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4, 3-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1980~90년대를 지나면서 영어권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개혁과 함께 지리교육이 보다 체계화되면서 교육적으로 한 단계 진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상을 대변하는 성과를 한 가지 거론한다면 지리교육의 주요 빅아이디어들이 도출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어권에 비해 한참 뒤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와서야 비로소 국가 수준에서 교과목별 빅아이디어가 개발되고 교육과정 문서에 최초로 적시되었다.

2) 우리나라 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 지리교육사적 의미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연구팀이 의도했던 주요 목적의 하나는 교과목별로 빅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초·중등학교를 관통하는 내용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었다.[10] 그러나 교과목에 따라 빅아이디어의 도출 양상은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결국에는 각 교과목의 다양한 결과물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애초의 '빅아이디어'라는 용어 대신 '영역'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를 교육과정 문서에 수록하는 선에서 그쳤다.

가령 사회과 내에서도 빅아이디어로 제출된 결과물은 영역에 따라 다양한 수준을 보였다. 역사 영역은 시대사를 관통하는 빅아이디어 대신에 대체로 '시대사' 명칭에 준한 것들을 제시하였고, 일반사회 영역 역시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관통하는 빅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대신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등 기존의 학문 분류 체계 내지 과목 분류 체계를 그대로 제출하였다. 이에 비해 지리 영역에서는 지리학의 분류 체계가 아닌 이를 관통하는 5대 빅아이디어를 도출하였는데 그 결과물은 역대 국가 수준의 초·중등 지리교육과정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물론 우리나라 지리교육사에서 지리교육의 주요 개념이나 주제가 연구되거나 제안된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개별 학자 수준에서 연구 혹은 제안된 것이었을 뿐

다수의 지리교육자와 지리학자가 공식적으로 협의하여 5대 빅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수록한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가 최초이다. 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와 각각의 핵심개념 및 일반화된 지식을 정리하면 표 6의 내용과 같다.

그러나 과제도 남아 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각 교과목의 빅아이디어와 내용 체계가 충분히 상응하지 못한 과도기적 단계의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1~9학년에 이르는 공통교육과정에서 교과목별 빅아이디어를 반영한 내용 체계를 구현했어야 하지만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다수의 과목들에서 교과목별 빅아이디어와 내용 체계는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가 많다. 지리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리

표 6.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등 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

5대 빅아이디어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지리인식	지리적 속성	지표상에 분포하는 모든 사건과 현상은 절대적, 상대적 위치와 다양한 규모의 영역을 차지하며, 위치와 영역은 해당 사건과 현상의 결과이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간분석	다양한 공간 자료와 도구를 활용한 지리 정보 수집과 지리 정보 시스템의 활용은 지표상의 현상과 사건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며 추론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지리사상	지표상의 일정한 위치와 영역을 차지하는 인간 집단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주변의 장소와 지역, 다양한 세계에 대한 고유하고도 지속적인 경험, 인식, 관점을 갖고 있다.
장소와 지역	장소	모든 장소들은 다른 장소와 차별되는 자연적, 인문적 성격을 지니며, 어떤 장소에 대한 장소감은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다양하다.
	지역	지표 세계는 장소적 성격의 동질성, 기능적 상호 관련성, 지역민의 인지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구분되며, 이렇게 구분된 지역마다 고유한 지역성이 나타난다.
	공간관계	장소와 지역은 인구, 물자, 정보의 이동 및 흐름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한다.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기후 환경	지표상에는 다양한 기후 특성이 나타나며, 기후 환경은 특정 지역의 생활양식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지형 환경	지표상에는 다양한 지형 환경이 나타나며, 지형 환경은 특정 지역의 생활양식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자연 – 인간 상호작용	인간 생활은 자연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고, 자연환경은 인간 집단의 활동에 의해 변형된다.
인문환경과 인간 생활	인구의 지리적 특성	인구는 지표상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분포하며, 인구 밀도와 인구 이동, 인구 성장 단계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동시에 지역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생활공간의 체계	촌락과 도시는 인간의 생활공간을 이루는 기본 단위이고, 입지, 기능, 공간 구조와 경관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한다.
	경제활동의 지역구조	지표상의 자원은 공간적으로 불균등한 분포를 보이고, 인간의 경제활동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나타내며,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한다.
	문화의 공간적 다양성	인간은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에 적응하거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장소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고, 문화는 여러 요인에 의해 변동된다.
지속가능한 세계	갈등과 불균등의 세계	자원이나 인간 거주에 유리한 조건은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이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한다.
	지속가능한 환경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는 인간의 신념 및 활동은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공존의 세계	인류는 공동의 번영을 위해 지역적 수준에서 지구적 수준까지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상호 협력 및 의존한다.

자료: 교육부, 2015, 7–10; 이간용, 2016, 30; 전종한, 2016, 74에서 재인용.

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를 적용한 초·중등 지리교육의 내용 체계 개발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5대 빅아이디어가 학계와 교육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각 빅아이디어의 명명과 정의에 대해서도 정교화 내지 보완 작업이 요구될 것이다. 예를 들면 '지리인식'이라는 빅아이디어는 위치와 영역, 지리 사상, 공간 분석 등을 포괄하기 위한 빅아이디어인데, 이러한 용어 표현은 기존의 지리교육계에서 좀처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관련 논의를 통한 점검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환경, 지구촌의 평화와 공존 등을 담아내기 위해 사용한 '지속가능한 세계'라는 빅아이디어 역시 표현이나 정의 면에서 보완 수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를 적용한 내용 체계 개발 방안

1) 내용 체계 개발의 근거와 원리

빅아이디어 중심의 내용 체계 개발이 임의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근거가 분명해야 하고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 먼저 빅아디이어 중심의 내용 체계를 개발해야 하는 근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적시된 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영어권의 주요 국가들을 사례로 참고할 때, 필수 요소, 필수 내용 등등의 이름으로 도출된 지리교육의 빅아이디어가 먼저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수록되고, 다음 수순으로 초·중등 교육과정의 학년별 혹은 단계별 반복적 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내용 체계에 반영된다. 각 교과목의 빅아이디어가 상급 학년이나 상위 단계로 올라가면서 반복적으로 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내용 체계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표 7은 캐나다의 6대 필수 요소를 사례로 지리교육의 빅아이디어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반복적으로 심화 학습 되는, 일종의 나선형 내용 체계의 전형을 보여준다. 학년별로 동일한 빅아이디어가 반복되지만 내용상으로는 심화되는 시퀀스를 이루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빅아디이어 중심의 내용 체계 개발을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원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첫째, 환경확대법에 구속되지 않고 빅아이디어의 성격에 따라 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간 스케일의 사례가 자유롭게 접목되어야 한다. 그간 환경확대법의 교육적 효용성을 놓고 이견이 종종 제기되곤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확대법은 우리나라의 역대 교육과정에서 초등 사회과의 내용 체계를 구성해온 강력한 틀로 존속해왔다. 그것은 아마도 환경확대법이 지리, 역사, 일반사회에 걸치는 사회과의 광범위한 내용 영역들을 묶어줄 수 있는 유일한 틀로 여겨졌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환경확대법은 이미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부터 초등 사회과에서 온전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사 영역은 초등 사회과 고학년 과정에 우리나라 통사를 집중적으로 편성함으로써 환경확대법에 따르기보다는 연대기적 구성 원리를 반영한 역사 이해를 도모해왔다(김동국, 2014, 22).

환경확대법은 지리교육의 몇몇 주제를 학습함에 있어서도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면 3~4학년에 편제되어 있는 위치와 방위 등 지도의 기본 요소에 대한 학습은 나침반의 작동 원리나 동서남북 개념의 효과적 습득을 위해 지구 규모의 접근과 지구본이나 세계지도를 활용한 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환경확대법에 구속되어 마을이나 고장의 사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와 달리 영국의 경우에는 이미 유치원 단계(Key Stage 1)에서 세계지도와 지구본을 이용한 동서남북의 방위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고 연구자가 지리 영역의 이해에 있어 환경확대법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빅아이디어의 성격에 따라 환경확대법의 틀에 구속되지 말고 다양한 공간 규모의 사례를 동원해야 함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선행 교육과정기에서는 일부 주제에 따라 고장과 다른 나라 스케일의 사례를 동시에 접목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지리적 사고 함양의 효율성을 위해 이제는 환경확대

표 7. 6대 필수 요소의 학년에 따른 반복적 심화 학습 내용 체계: 캐나다의 사례

학년 수준시퀀스 ⇨ 지리의 6대 필수 요소 ⇩	K–1 PERSONAL / LOCAL Province, Canada, World	2–3 LOCAL / PROVINCE Canada / World	4 – 5 PROVINCE, CANADA World	6 – 8 CANADA, WORLD	9 – 12 WORLD Patterns, Issues, Problems, Interdependence
1. 공간적 관점에서 본 세계 (The World in Spatial Terms)	• 개인 차원의 방향(예. 왼쪽/오른쪽, 위/아래, 앞/뒤) • 집이나 교실에서의 위치 • 지구의 모형인 지구본 • 주변 지역의 장소와 먼 지역의 장소들을 보여주는 지도 • 학교와 동네의 지명과 위치 • 상대적 위치(예. 근처/멀리, 위/아래) • 대륙과 바다의 위치	• 지구의 모델인 지구본(반구, 양극, 적도) • 지도 요소(제목, 축척, 기호, 범례, 경위선, 방위) • 점, 선, 면적의 공간적 요소 • 상대적, 절대적 위치 • 자연적, 인문적 특징의 위치와 분포 • 고장(시·군)과 지역(시·도)의 지도 • 지역(시·도)의 주요 도시	〈이하 내용 생략〉		
2 장소와 지역 (Places and Regions)	• 자연적 특징의 개념(산, 평원, 언덕, 대양, 섬 등) • 인문적 특징의 개념(도시, 건물, 농장, 도로와 철도 등) • 장소, 전통적인 것, 새로운 것에 대한 설명 • 지역의 자연환경	• 형식 지역의 개념 • 이웃 지역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 • 나를 둘러싼 장소와 지역이 갖는 다른 장소 및 지역과의 유사성과 차이점 • 시간에 따른 장소와 지역의 변화			
3. 자연 시스템 (Physical Systems)	• 날씨 • 계절	• 지구의 자연환경적 시스템의 기본 요소(지표, 물, 기후 등) • 생태계(식물과 동물의 상호의존성) • 지구와 태양의 상호작용(낮/밤, 낮의 길이) • 물순환의 소개			
4. 인문 시스템 (Human systems)	• 우리 지역사회 및 다른 지역사회의 문화(음식, 의복, 주택, 명절, 스포츠, 놀이 등) • 지역사회의 토지이용(농장, 공원, 공장, 주택, 상점 등) • 사람이 일하는 장소 • 일상생활의 교통망	• 문화적 특성(언어, 종교, 가족구조 등) • 지역사회의 토지이용 및 경제활동의 특성(농업, 공업, 상업, 주거, 교육, 여가) • 정치적 단위와 계층(지역사회, 도시, 지방자치제, 지방, 촌락 간 차이) • 교통(여객과 화물)과 통신 네트워크 • 인구 분포 • 인간 거주 패턴(촌락, 도시, 교외 등) • 문화 변동(사상, 사람, 상품의 확산)			
5. 환경과 사회 (Environment and Society)	• 자원 소개(농산물, 임산 자원 광물 자원, 수산물 등) • 날씨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 환경문제 (쓰레기 처리, 재활용 등)	•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물의 가용성, 기후, 토양의 비옥도 등) • 인간 활동과 지구의 변화(농업, 교통, 산업 등) • 지구의 천연 자원 (광물, 공기, 물, 땅 등) • 환경문제(고형폐기물, 수질 등)			
6. 지리학의 응용 (The Uses of Geography)	• 과거의 장소에 대한 설명 • 현재와 미래의 환경문제	• 시간에 따른 장소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의 변화 • 지리적 문제의 공간적 양상			

자료: The Royal Canadian Geographical Society, 2001, SCOPE AND SEQUENCE IN GEOGRAPHIC EDUCATION: GRADES K–12

법의 문을 열어젖히고 다양한 공간 규모의 사례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지리교육의 기본 원리로 고려되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둘째, 지리적 사고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의 다양한 주장이 있어 그것들을 모두 섭렵하고 수용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차라리 다양한 학자들의 주장을 반영하면서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어온 미국과 영국 지리교육계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미국의 지리교육자들은 지리적(공간적) 사고의 발달 단계에 있어서 위치, 거리, 지역에 관련된 기초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공간적 계층성, 공간적 추론, 공간적 상관성에 관련된 고차적 사고력이 발달한다는 견해를 대체로 공유하는 편이다(Gersmehl and Gersmehl, 2007; Golledge et al., 2008; Janelle and Goodchild, 2009). 영국의 초등 지리 교육과정에서는 위치와 장소의 지리적 사실에 대한 학습과 지도 읽기 중심의 지리적 기능에 대한 학습을 지리적 개념과 일반화를 비롯한 지리적 지식의 학습보다 선행하도록 내용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3). 이러한 경향과 사례를 참조한다면 우리나라 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 중 지리적 기능과 사실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는 '지리인식'과 '장소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학년에, 지리적 추론과 일반화에 대한 내용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인문환경과 인간 생활', '지속가능한 세계'는 고학년에서 배우도록 편성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내용 체계(안)의 제안

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를 초등 지리 영역에 반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3~6학년에 이르도록 학년마다 5대 주제를 반복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의 구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초등 교육과정에서 지리 영역이 독립 교과로 존재한다면 가능한 일일지 모르지만, 현행 교육과정에서 지리 영역은 초등 사회과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그 내용 체계는 초등 사회과의 다른 두 영역인 역사 및 일반사회 영역의 내용 체계와 조율되고 적절히 변용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첫 번째 방안(A안)은 현행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지리 영역에 해당하는 대주제 및 중주제 제목을 5대 빅아이디어 중 하나와 관련지어 수정하는 안이다(표 8).

현행 교육과정에서 3~4학년군의 중주제 제목은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 중 하나를, 그리고 대주제 제목은 지리, 역사, 일반사회의 3대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이와 달리 5~6학년군에서는 대주제와 중주제 제목이 사회과의 3대 영역을 포괄하는 표현이 아니라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 중 하나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A안에서는, 3~4학년군의 지리 영역 중주제, 그리고 5~6학년군의 지리 영역 대주제 및 중주제에 한해서 5대 빅아이디어 중 적절한 하나와 연관 지은 다음, 이에 맞게 그 제목 표현을 수정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빅아이디어 '장소와 지역'에 연관된 중주제 및 대주제의 경우 장소, 장소감, 지역 간 관계 등을 반영하는 선에서 제목 표현을 수정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빅아이디어 '인문환경과 인간 생활'이나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에 연관된 중주제 및 대주제의 경우에는 환경에 따른 인간 생활의 다양성이나 환경과 인간의 상호 작용에 학습의 초점을 둘 수 있도록 제목 표현을 수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빅아이디어 '장소와 지역'에 연관된 중주제 '(4)-①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은 '(4)-①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과 상호 관계'로 수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빅아이디어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에 연관된 대주제 '(7)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7)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삶의 모습'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리 영역에 해당하는 주요 대주제와 중주제 제목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 표 8이다.

더 나아가 A안에서는 학년군이 올라감에 따른 학습 내용의 심화·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3~4학년군의 학습 내용과 5~6학년군의 학습

표 8. A안: 현행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안에서 반영하는 방안

학년(군)		2015 개정 교육과정		A안		빅아이디어
		대주제	중주제	대주제	중주제	
3~4학년군	3	(1) 우리가 살아가는 곳	① 우리 고장의 모습	(1) 우리가 살아가는 곳	① 우리 고장의 모습	지리인식
			③ 교통과 통신수단의 변화		***③ 교통·통신의 발전과 우리 고장의 변화***	인문환경과 인간 생활
		(2)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①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	(2)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①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4	(3) 우리 지역의 어제와 오늘	① 지역의 위치와 특성	(3) 우리 지역의 어제와 오늘	① 지역의 위치와 특성	지리인식
		(4)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①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4)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① 촌락과 도시의 생활과 상호 관계***	장소와 지역
5~6학년군	5	(1) 국토와 우리 생활	① 국토의 위치와 영역	***(1) 국토의 환경과 우리 생활***	① 국토의 위치와 영역	지리인식
			② 국토의 자연환경		***② 국토의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③ 국토의 인문환경		***③ 국토의 인문환경과 생활 모습***	인문환경과 인간 생활
	6	(7) 세계의 여러 나라들	①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	***(7)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삶의 모습***	***① 세계의 주요 대륙과 국가들***	지리인식
			②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		***② 세계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삶의 모습***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③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		***③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국가들***	인문환경과 인간 생활
		(8)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①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 – (가)	***(8)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지구촌***	***① 미래가 기대되는 통일 한국***	지속가능한 세계
			②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 – (가)		***②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구촌의 평화***	지속가능한 세계
			③ 지속가능한 지구촌 – (가)			

* ***기울어진 볼드체***로 표시된 곳은 2015 개정 교육과정 대비 A안에서 수정된 내용임.

내용이 심화·확대의 원리에 따라 조직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빅아이디어 '인문환경과 인간 생활'은 3~4학년군과 5~6학년군에서 반복 학습되지만 단순 반복이 아니라 심화·확대의 원리에 따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중주제 및 대주제 제목을 적절히 수정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문환경과 인간 생활'에 연관된 3~4학년군의 '(1)–③ 교통통신의 발전과 우리 고장의 변화'는 5~6학년군의 '(1)–③ 국토의 인문환경과 생활 모습', 그리고 '(7)–③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국가들'로 시퀀스가 이어지도록 수정하는 것이다. 요컨대 먼저 우리 고장의 인문환경과 삶의 모습을 공부한 다음, 우리 국토의 그것을 학습하고, 더 나아가 우리와 인접한 국가나 우리나라와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사례로 지구적 규모에서 인문환경과 삶의 모습을 학습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이다.

빅아이디어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의 경우에는 3~4학년군에서 고장의 자연환경과 의식주 생활 모습을 살펴본 후, 5~6학년군에서 국토의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 그리고 세계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그에 따른 의식주 생활 모습뿐만 아니라 나아가 문화적 다양성까지 학습 내용이 심화·확대 되도록 조직하였다. 이외에 다른 빅아이디어들도 반복되는 범위 안에서 심화·확대의 시퀀스를 갖도록 조직하고자 하였다. 그

러나 초등 사회과에서 지리 영역에 할당된 비중을 고려한 구조화에서는 체계적이고 완벽한 사이클을 구현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추후에 시퀀스의 심화·확대를 유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두 번째 방안(B안)은 현행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주어진 지리 영역의 비중 안에서 5대 빅아이디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내용 체계를 재구성하는 방안이다. 역대 교육과정을 개관할 때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은 대주제 분량을 기준으로 볼 때 학년별 평균 2~3개씩의 대주제 분량으로 제시되어 왔다. 따라서 3~6학년에 이르는 동안 학년별 2~3개의 빅아이디어를 대주제 수준에서 제시하는 방안 역시 가능할 수 있다(표 9).

현행 초등 사회과 지리 영역의 비중을 유지하되 내용 체계의 재구성을 통해 5대 빅아이디어를 반영한 B안의 경우 먼저 지리적 사고 발달 단계에 근거하여 3학년에서 6학년에 이르는 동안 '지리인식→장소와 지역→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인문환경과 인간 생활→지속가능한 세계'순으로 5대 빅아이디어를 배열하였다. 다음으로 각각의 빅아이디어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대주제(안)을 설정하였다. 대주제(안) 설정 시 내

표 9. B안: 초등 사회과 지리 영역의 내용 체계를 재구성하여 반영하는 방안

학년 (군)	빅아이디어	대주제(안)	핵심 내용 요소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
3 학년	지리인식	1. 세계의 대륙과 바다	• 위치, 분포, 지도의 기본 요소(방위표, 기호와 범례, 축척, 등고선) • 세계지도, 지구본, 대륙, 바다, 주요 대륙 및 국가의 위치 특성
	장소와 지역	2. 우리 고장의 여러 장소들	• 장소감, 고장의 중심지, 고장의 주요 지형지물, 고장의 실제모습
		3. 우리 지역의 여러 장소들	• 지역의 중심지, 배후지, 교통·통신의 발달, 환경에 따른 생활 모습의 다양성, 경관
4 학년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4.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삶의 모습	• 국토의 위치와 영역(독도의 지리적 특성 등), 국토애, 국토의 기후와 지형, 국토의 자연재해와 대책
		5. 세계의 자연환경과 삶의 모습	• 세계의 주요 기후 지역의 특성 및 인간 생활과의 관계, 세계의 식생 지역
5 학년	인문환경과 인간 생활	6.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과 삶의 모습	• 촌락과 도시(공통점과 차이점, 문제점과 해결 방안, 상호 의존) • 남부지방, 중부지방, 수도권 지역, 호남지역, 영남 지역, 충청 지역, 강원 지역(주제별 특화된 국토의 각 지역별 내용 구성: 인구 분포 및 구조 변화, 도시 발달 과정, 산업구조 변화, 국토의 교통 발달 과정 등)
		7. 세계의 인문환경과 삶의 모습	• 세계의 대륙 구분, 세계의 문화권, 세계의 종교 분포, 세계의 경제 블럭 •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국가들의 지리적 특성과 상호 의존
6 학년	지속가능한 세계	8. 국토의 통일과 북한 지역의 이해	• 북부 지방, 통일 국토의 우리 영토, 통일 국토의 이웃 나라
		9. 세계 속의 우리나라	• 국제기구에 기여하는 우리나라, 한류의 세계화, 한국인의 세계 진출
		10.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노력들	• 지구촌의 갈등과 해결 방안, 지구촌 환경문제,다양한 국제기구, 세계시민의 자세

범례: 역환경확대방향; 환경확대 방향

용 범위의 설정은 어떤 경우는 환경확대법을 따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역환경확대법'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빅아이디어의 성격을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공간 규모의 사례를 활용하여 좀 더 효율적인 지리적 사고 함양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핵심 내용 요소의 경우에는 현행 초등 지리 영역의 비중을 고려하여 제시한 내용 체계인 만큼 2015 개정 초등 사회과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리 영역의 학습 내용 요소가 대부분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B안 역시 초등 사회과 지리 영역에 할당된 비중의 한계 안에서 3~4학년군과 5~6학년군을 재구조화하여 5대 빅아이디어를 배치하다보니 학년군마다 5대 빅아이디어 전체 사이클이 반복되도록 구조화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 제한된 비중 안에서도 지리 영역의 교육과정이 시퀀스를 갖추고 편성될 수 있도록 최소 수준에서라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능한 시퀀스의 심화·확대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빅아이디어 중 첫 단계인 '지리인식'을 제외하면 나머지 '장소와 지역',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인문환경과 인간 생활', '지속가능한 세계'의 빅아이디어별 대주제(안)들은 자체적으로 시퀀스의 심화·확대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빅아이디어 '장소와 지역'에 연관된 대주제(안)은 고장에 대한 학습에서 지역에 대한 학습으로 심화·확대 되었고, 빅아이디어 '지속가능한 세계'와 연관된 대주제(안)은 국토 통일 및 북한과의 관계 이해에 대한 학습을 시작으로 세계와 우리나라의 관계를 살펴본 다음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학습으로까지 나아가도록 시퀀스를 구조화할 수 있었다.

특히 환경과 인간 생활에 대한 주제가 지리교육의 핵심 주제인 만큼 가장 중요하면서도 심화 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인문환경과 인간 생활'이라는 두 빅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스케일에서 시작하여 글로벌 스케일로 심화·확대 되도록 자연 및 인문환경에 따른 삶의 모습을 기후, 지형, 식생, 자연재해, 촌락과 도시, 인구와 산업, 문화권, 경제 블록, 상호 의존에 이르기까지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조직하고자 하였다.

5. 맺음말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현행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지도(地圖)에 관한 학습은 3학년 또는 3~4학년군에 편성되었다. 하지만 지도 학습은 환경확대법에 의거하여 주변 지역이나 고장이라는 한정된 공간 규모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어린이들의 흥미를 자극하지 못하는 '교실 안의 앞쪽, 뒤쪽, 옆쪽을 익히는 활동'을 비롯해 방위 개념을 익히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접하면서 어린이들은 지도라는 흥미진진한 매체를 오히려 어렵게 여겼다. 방위, 축척 등의 지도의 기본 요소에 대한 학습이나, 지도 그리기, 지도 읽기를 주제로 한 학습은 지구 규모에서 작동하는 나침반의 원리를 바탕으로, 지구본이나 세계지도를 활용할 때 흥미를 더하고 학습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그렇다고 지도 학습을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배우도록 하는 것은 더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지도의 기본 요소와 지도 읽기와 같은 내용은 지리 영역의 학습을 위한 기초 기능이므로 저학년에서 익히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초등 지리 영역의 내용 체계를 위한 원리로서 환경확대법이 옳지 않다거나 소위 '역환경확대법'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환경확대법의 탄력적 적용을 옹호하려는 것도 아니다. 환경확대법의 탄력적 적용 역시 약간의 여지를 둘 뿐 결국 환경확대법을 준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지리인식'이라는 빅아이디어처럼 글로벌 규모에서 배우기 시작해 공간 규모를 좁혀 들어와야 학습의 효과를 기할 수 있는 학습 주제가 있고, '장소와 지역'처럼 주변 지역으로부터 시작해 공간 규모를 넓혀 나가되 단순한 환경확대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친숙한 지점과 낯선 지점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익힐 때 효과적인 학습 주제가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환경확대법의 적용 여부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빅아이디어의 성격에 따라 그에 적절한 공간 규모의 사례를 자유롭게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렇게 특정 공간 규모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공간 규모를 넘나드는 것은 그 자체로 지리교육이 길러주어야 할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다.

이처럼 현행 초등 사회과의 내용 체계 안에서 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작업은 단순하지가 않다. 초등 사회과라는 하나의 교과 안에서 연대기적 원리를 선호하는 역사 영역이나 공동체 중심의 환경확대법에 익숙한 일반사회 영역과의 관계 속에서 지리 영역에 적절한 내용 체계를 구상해야 한다는 것 역시 작업의 복잡성을 더할 것이다. 그렇다고 빅아이디어의 도출 그리고 이것을 내용 체계에 반영하는 작업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내외 지리교육과정의 발전 추세에 비추어 그것은 필연적인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빅아이디어 중심 내용 체계의 이상형을 제시하기보다는 현행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안에서 소극적으로 구현하는 방법(A안)과 현행 교육과정 안에서 지리 영역의 대주제 및 중주제를 재편성하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방법(B안)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구자가 제시한 두 가지 방안은 어디까지나 예시에 불과하며 문제 인식과 과제 공유를 위한 출발점일 뿐이다. 한편으로는 현재의 5대 빅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초·중등 지리교육의 적절한 내용 조직자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용 조직자를 적용한 내용 체계의 개발 연구가 호응해야 한다. 국내외의 초·중등 지리교육은 때로는 독립 교과목으로, 때로는 사회과의 일부로, 때로는 역사 과목과 결합된 교과로서 다양한 양태로 존재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의 일부로 존재하는 만큼 사회과의 다른 두 영역인 역사나 일반사회 영역의 내용 체계와 어떻게 조응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연구 주제일 것이다.

주

1)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빅아이디어'라는 용어 대신 '영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2015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총론 연구팀은 각 교과와 과목 연구진에 '빅아이디어'를 도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교과별 상황에 따라 기존의 내용 체계나 모학문 분류 체계를 그대로 제출한 과목들도 있었다. 결국 이렇게 다양한 결과물을 아우르는 용어로 '빅아이디어'라는 표현은 한계가 있었고 그 대안으로 채택된 것이 '영역'이었다. 그러나 사회과의 경우 '영역'의 의미는 사회과의 전통적인 3대 내용 영역, 즉 지리, 역사, 일반사회 중 하나를 지칭하는 용어일 뿐 아니라 지리 영역에서 개발한 5대 빅아이디어는 '지리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길러주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이고도 본질적인 아이디어'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의미상 혼동의 여지가 있는 '영역'이라는 표현 대신 '빅아이디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2) 지리와 일반사회 영역에서는 대주제(대단원) 아래에 모두 4개씩의 성취기준을 진술하였지만 역사 영역에서는 일부 대주제(대단원)를 5개의 성취기준으로 구성한 경우도 있었다.

3) 제7차 교육과정이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1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10년 동안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교육부, 1997, 14) 하였지만 초등학교 사회과 지리교육과정의 내용 계열화의 원리는 제5차 및 제6차 교육과정의 특징으로 제시되었던 환경확대법과 나선형의 원리를 일관되게 적용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 두드러졌던 수준별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기본과 심화 과정의 분류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과 함께 개선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온 환경확대법에 대해 '각 학년별로 지구촌적 관점을 고루 반영하여 환경확대법의 제한점을 보완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1999, 212)'라고 밝힘으로써 환경확대법의 기계적인 적용을 비판하고, 보완하고자 노력한 점은 이후 초등 지리교육내용의 계열화 논의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었다(남호엽, 2002, 61).

4) 7차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의 제시 방식에 있어서 활동 중심, 문제 해결 중심의 학습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년별 내용을 기본적 지식, 기능과 이의 습득을 위한 학습 활동을 결합한 '성취 목표'의 형태로 제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1999, 202−203). 그러나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는 '성취기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5) 초등 사회과에서 지리 영역을 지칭하는 용어는 6차 교육과정에서는 '인간과 환경',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인간과 공간',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는 '지리 영역'으로 표현하였다(교육부, 1992; 1997; 교육인적자원부, 2007).

6) 2007 개정 교육과정 초등 사회과는 2학년의 통합 과목과 4학년 이후의 사회과를 고려하여 3학년은 통합적 단원, 4학년은 지역화 교과서를 고려한 단원 배정, 5학년은 역사

교육 강화 방침에 따른 역사 내용 확대 배치, 6학년은 지리와 일반사회 영역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304)

7) 학년별 주제 설정을 통해 내용 범위를 제한한 시기는 표 3에 제시한 6차 교육과정기를 비롯하여 교수요목기의 '첫째 학년 가정과 학교, 둘째 학년 고장 생활, 셋째 학년 여러 곳의 사회생활, 넷째 학년 우리나라의 생활, 다섯째 학년 다른 나라의 생활, 여섯째 학년 우리나라의 발달'(군정청·문교부, 1946)과 제1차 교육과정기의 '1학년-우리 집 우리 학교, 2학년-이웃 생활, 3학년-고장 생활, 4학년-우리 생활의 내력, 5학년-산업의 발달, 6학년-우리나라의 발전과 세계'(문교부, 1955)로 분석되었다.

8) 이와 관련하여 심승희(2008, 361)는 4차 교육과정기까지는 다른 나라의 고장, 다른 나라의 지역, 다른 나라의 사례가 지리 영역과 지리 외 영역을 망라하여 기술되어 왔고, 교수요목기부터 4차 교육과정기에 이르기까지 외국의 사례를 기술한 빈도나 내용이 꾸준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고 제시하고 있다.

9) 6대 필수 내용을 구체적으로 원문과 함께 제시하면 위치(location), 지도와 야외조사 그리고 지리적 기능(maps, field work and geographical skills), 장소(place), 자연지리(physical geography), 인간과 환경(people and environment), 인문지리(human geography)이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4, 3-4).

10)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개발 연구진은 교과 교육과정을 소수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자 하였고, 이때 핵심 개념이란 교과의 성격을 드러내는 기초 개념과 원리를 포함하는 근본적인 아이디어라고 하였다. 또한 이는 학습 내용의 구조를 드러내며 그 교과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일반적 아이디어(general ideas), 빅 아이디어(big idea)와 유사한 의미라고 제시하였다(온정덕 외, 2015, 88).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2008,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Ⅲ) 국어, 도덕, 사회.

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과학기술부 제2009-41호, 2009.12.23.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1992, 교육부 고시 제1992-16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1997,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1999,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Ⅲ) -국어, 도덕, 사회-.

교육부, 2015,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군정청·문교부, 1946, 초·중등학교 각과 교수요목집(Ⅰ).

김동국, 2014, "초등역사교육에서 주제 중심 내용구성 방안," 역사교육연구, 19, 7-50.

남호엽, 2002, "초등학교 지리교육과정의 쟁점과 대안의 모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0(1), 53-64.

문교부, 1955, 문교부령 제44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문교부, 1963, 문교부령 제119호 별책 국민학교 교육과정.

문교부, 1981, 문교부 고시 제442호 별책 2 국민학교 교육과정.

심승희, 2008, "우리나라 초등 지리교육과정의 변화: 환경확대법의 적용과 지역 기술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6(4), 347-364.

온정덕·김경자·박희경·홍은숙·황규호,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초등학교) 개발 연구. 교육부.

은지용·이간용·최병택·한춘희, 2015,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의 기본 방향과 주요 특징 및 변화 양상," 사회과교육, 54(4), 65-83.

이간용, 2016,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지리 영역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반성적 고찰,"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1), 15-32.

전종한, 2016, "2015 개정「세계지리」교육과정의 개발 과정과 내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1), 71-85.

AAG(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1985, *Guidelines for Geographic Educatio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National Council for Geographic Education, Washington, DC.

Boehm, G. and Petersen, F., 1994, An Elaboration of the Fundamental Themes in Geography, *Social Education, 58*(4), 211-218.

Department for Education(UK), 2014, *Geography – GCSE*

subject content(자료: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01253/GCSE_geography.pdf).

Department for Education, 2013,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Geography Programmes of Study* (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ational-curriculum-in- england-geography-programmes-of-study/national-curriculum-in-england-geography-programmes-of-study).

Gersmehl, J. and Gersmehl,A., 2007, Spatial thinking by young children: neurologic evidence for early development and "educability", *Journal of Geography, 106*, 181-91.

GESP(Geography Education Standards Project), 1994, *Geography for life: National Geography Standards 1994*, National Geographic Research & Exploration, Washington, DC.

Golledge, G., Marsh, M. and Battersby, S., 2008, Matching geospatial concepts with geographic educational needs, *Geographical Research*, 46(1), 85-98.

Janelle, G. and Goodchild, F., 2009, Location across Disciplines: Reflection on the CSISS Experience. In: Scholten, J., Manen, N. and Velde, R.(ed.), *Geospatial Technology and the Role of Location in Science*, 15–29. Dordrecht, Netherlands: Springer.

Vender, C., 2003, *Teaching to the Standards: A k-12 scope and sequence in geography*, The Geographic Education National Implementation Project, Washington, DC.

The Royal Canadian Geographical Society, 2001, *Canadian National Standards for Geography: A Standards-Based Guide to K-12 Geography*, Canadian Council for Geographic Education, Ottawa(자료: www.ccge.org).

교신: 장의선, 2787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교학로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평가본부(이메일: esjang@kice.re.kr, 전화: 043–931–0377)

Correspondence: Eui-Sun Jang,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8, Gyohak-ro, Deoksan-myeon, Jincheon-gun, Chungcheongbuk-do, 27873, Korea(e-mail: esjang@kice.re.kr, phon: +82-43-931-0377)

최초투고일 2019. 3. 9
수정일 2019. 4. 10
최종접수일 2019. 4. 15

대한지리학회지 제54권 제2호 2019(271～284)

Estimating Housing Prices through a Spatial GAMLSS Modeling Approach

Changro Lee* · Keyho Park**

공간 GAMLSS 모형을 활용한 주택가격 추정

이창로*·박기호**

Abstract : Estimation of housing prices is of great importance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property tax assessment and collateral valuation. The multi-household house (MHH) is an emerging property type for the application of the automated valuation method in South Korea. Thus we choose Seoul, the capital of South Korea, as our study area, and apply the hedonic price model to MHH, a common tool in property valuation. We suggest an alternative approach to estimate housing prices – generalized additive models for location, scale, and shape (GAMLSS) –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inherent in the traditional hedonic price model, those limitations being: lack of theoretical background for a functional form, assumption of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explanatory and response variables, and little account of spatial autocorrelation in model building. We employ the GAMLSS with the spatial autocorrelation of the data being taken into account. We show that a non-normal distribution could give a better fit for house prices and illustrate nonlinear effects of the explanatory variables, as well as the spatial effect of house locations on the price of MHH. We hope that the spatial GAMLSS modeling approach in this study will lead to better property tax assessment and collateral valuation.

Key Words : Housing prices, Multi-household house, GAMLSS, Spatial autocorrelation, Non-normal distribution, Nonlinear effects

요약 : 과세평가, 담보평가 등 주택가격의 추정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파트에 비해 상품 표준화 정도가 낮은 다세대주택의 경우 최근 자동평가모형의 적용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따라 주택가격 추정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헤도닉 모형을 적용하여 서울 소재 다세대주택의 가격을 추정하였다. 함수형태의 이론적 근거 부재,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관계의 선형성 가정, 공간적 자기상관성의 미고려 등 전통적 헤도닉 모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간 GAMLSS 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주택가격은 정규분포 이외의 분포를 가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고, 설명변수와 종속변수는 비선형 관계의 형태로 설계함이 타당하며, 마지막으로 주택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공간적 자기상관성 고려가 필수적임을 보였다. 공간 GAMLSS 모형 활용을 통해 과세평가나 담보평가에 있어 주택가격 추정의 정확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주택가격, 다세대주택, GAMLSS, 공간적 자기상관성, 비정규분포, 비선형 효과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Researcher,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spatialstat@naver.com

**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er,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khp@snu.ac.kr

1. Introduction

A residential building built for sale in units is generally referred to as 'a multi-unit house' in South Korea. The multi-unit house has several unique characteristics, such as the option of co-owning a site and forming a residential community composed of inhabitants in the building. The housing type obverse of the multi-unit house is the detached house, which is generally composed of one building and its corresponding site. The multi-unit house has enjoyed great popularity in South Korea in the past due to the scarcity of urban land available for buildings, and has taken a firm position as a representative housing type in urban areas. The multi-unit house comprises an apartment and a multi-household house (hereafter, MHH). According to the Building Act in South Korea, if the floor area of the multi-unit house is over 660m^2, then it is classified as an apartment; otherwise it falls under the category of MHH.

The valuation of housing is of great importance for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Accurate assessment of properties is key in enhancing the taxation equity, and reliable estimation of housing collateral by financial institutions plays a core role in keeping the collateral loans undoubtful. Since the apartment is the most standardized property type, it is relatively easy to apply an automated valuation method and obtain a reliable estimate of the apartment market value. In contrast, the detached houses vary in terms of location, site characteristics, construction workmanship, etc. Thus, their valuations remain a realm for single-property appraisal, which is usually conducted by a licensed expert, and thus it would be premature to apply the automated valuation method.

MHH is situated between the apartment and the detached house in terms of applicability of a quantitative valuation technique, since it is a standardized property in part, but also shows unique characters such as lo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financial banks, they tend to invest as little resource as possible to estimate the market value of MHH, since they think it is easy to evaluate the price of MHH. However, MHH is not the perfectly standardized property product, and has considerable risk that its estimated price deviates from its market value severely. Recently, methods such as the hedonic price model have slowly begun to apply to them in the South Korean real estate market.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the automated valuation method to MHH is of great issue in valuation practices. We decide to choose MHH as a target property for applying the hedonic price model in this context.

The hedonic price model is generally used in property valuation, and is usually fitted by using regression analysis. Property price is broken down into its constituents such as land area, building area, presence of elevators, and others under the hedonic price model framework, and it produces estimates of the contributing value of each constituent, ultimately providing the whole value of the property by summing up each contributing value. Although the hedonic price model is the most commonly used method in a quantitative property valuation, it has its own limitations and criticisms. The oldest and most severe criticism is that the appropriate functional form cannot be guided on theoretical grounds (Halvorsen and Pollakowski, 1981). In practice, the Gaussian distribution is commonly assumed for the response variable, and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explanatory and response variables is implicitly presumed in specifying the hedonic price model, leading to inefficiency and inaccuracy in price estimation.

We explore various functional forms for the response variable and try to specify an optimal form for the hedonic model. In addition, we step from the practice of assuming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explanatory and response variables, and instead try to capture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in the model specification.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we estimate the price of MHH under the framework of generalized addi-

tive models for location, scale, and shape (GAMLSS).

Since the hedonic price model has been sophisticated in economics since its proposal, the spatial component in model specification often went unnoticed in many previous studies. However, it is well known that house prices are not distributed independently over space, but rather tend to show similar values in neighboring areas, which is often referred to as spatial autocorrelation (Basu & Thibodeau, 1998; Tu *et al*., 2007). It indicates that even identical houses can be sold for vastly different prices depending on location, and thus the house price cannot be estimated reliably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of house locations. It is the first law in property valuation, though it is frequently ignored when modelling house prices. We try to incorporate the spatial effects into the GAMLSS model specification in the study.

This study is organized as follows. The second section reviews the GAMLSS and relevant literatures, and the third section explains the data used and model specification. Model calibration and main results are provided in the fourth section, and finally, we present a discussion on the results and our conclusions.

2. Literature review

Literary volumes on the hedonic price model are vast in number, ranging from the seminal paper of Rosen (1974) to more recent studies (Mei *et al*., 2018; Michelson and Tully, 2018), but most of them bear the limitations given above: the conventional assumption of the Gaussian distribution for property price without the due attention to the functional form, the presumption of linear relationships between the explanatory variables and property price, and the absence of explicit accounts of the spatial effects on the property price.

GAMLSS could be a suitable tool to overcome these traditional limits inherent in the hedonic price model. GAMLSS were developed by Rigby and Stasinopoulos (2005) to deal with non-normally distributed data: for example, a highly skewed distribution. They also have a flexible statistical framework to capture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e.g. as non-parametric smoothing functions of explanatory variables).

GAMLSS have been applied in various areas, from medicine to the prediction of annual precipitation. Rigby and Stasinopoulos (2006) provided two examples to show the flexibility of GAMLSS. The first example modeled the blood flow measured by tomography, which has been estimated frequently by a normal and a t family distribution. They fitted the blood flow by using a log power exponential distribution, which is proven to be a substantially better fit than the traditional distributions. The second example in their study estimated the head circumference of males with explanatory variable age, in which the box-cox t distribution provides the best fit to head circumference, indicating that the traditional distribution such as a t family distribution is not efficient to model the data in the study. Gilchrist *et al*. (2009)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being admitted to a hospital as following a Beta binomial distribution, and the length of stay in hospital was modelled by using a series of continuous distributions, such as Gamma, generalized Gamma, inverse Gaussian, and generalized inverse Gaussian. De Castro *et al*. (2010) described the GAMLSS framework to the fitting of long-term survival models assuming that the survival rate follows the 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

In the field of ecological science, Kiffner *et al*. (2011) applied the GAMLSS assuming a 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 and analyzed whether body mass and host sex affected individual tick burdens. Hudson *et al*. (2010)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lowering intensity of four eucalypts and air temperature, and the GAMLSS were used in the study assuming that the flowering series follows Poisson counts with lagged dependencies of current with past flowering considered as auto-regressive

lags.

Hu *et al*. (2015) used GAMLSS for the analysis of speech intelligibility tests and proposed an alternative distribution: a zero-and-one inflated Beta distribution to model the data. Zhang *et al*. (2015) developed a GAMLSS-based framework to estimate the annual maximum daily precipitation records in the Beijing-Tianjin-Hebei region of China. They employed cubic spline functions to capture the non-linear effects of explanatory variables, and utilized six widely used distributions to model the precipitation: Gumbel, Lognormal, Weibull, Gamma, Logistic, and generalized Gamma.

All the studies given above showed that GAMLSS could provide a flexible model for non-normally distributed response variables, especially with highly skewed distribution data. In addition, these studies concluded that various distribution parameters such as scale and skewness could be modeled efficiently through non-linear smoothing functions of explanatory variables. These findings provide a good insight for modeling a response variable > 0 with highly right-skewed distribution (positive skewness), the good example being a house price.

In the field of property valuation, the application of GAMLSS is rare, with an exception being the study of Florencio *et al*. (2012) and Cajias (2018). Florencio *et al*. performed land appraisal using GAMLSS and showed that the models are more appropriate for estimation of land price rather than the conventional regression models. Cajias (2018) showed that the asking rents were more accurately predicted by the GAMLSS than the ordinary GAM. The two studies introduced property valuation based on the GAMLSS, but their models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spatial autocorrelation of land prices or rents explicitly. We try to augment this deficiency in their studies. There are huge volumes in studies that tried to incorporate the spatial autocorrelation of property prices into the model specification under the framework of the ordinary regression approach, and a few studies employing the GAMLSS to predict property prices were already reported. However, this is the first study to the best of the authors' knowledge to specify the spatial autocorrelation under the GAMLSS approach to predict property prices in applied real estate research area.

The following improvements in the hedonic price model are worth noting in our study. First, we try to find a functional form more appropriate than Gaussian distribution to describe the property price, which is characterized by highly right-skewed distribution. Second, we try to capture the nonlinear relationships between property price and the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property age in the model building process. Third and most notably, we take into explicit account of the spatial effects on the property while specifying the GAMLSS model. GAMLSS could provide an efficient environment to achieve these improvements, and we take full advantage of the flexibility of GAMLSS to better predict the property price.

3. Data and model specification

1) Data

We estimate the price of MHH in Seoul, South Korea. The total housing stock in Seoul is made of 2,830,857 units as of 2016, with 815,552 MHHs making up about 29 percent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6).

The data were sampled in a random manner between January and December of 2015 from the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RTMS). The government-operated RTMS discloses the sale prices of houses on a monthly basis.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s are provided in Table 1 and Figure 1.

As shown in Table 1, a typical MHH in Seoul has a room area of 54 m^2 and an allocated site area of approximately 33 m^2. The average distance to the nearest subway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1] (n=3,254)

Variables	Min.	Mean	Median	Max.
Room area (m^2)	12	54	51	238
Allocated site area (m^2)	4	33	29	268
Distance to subway station (m)	50	649	559	3,493
Age (year)	0	15	13	47
Unit price sold (million KRW per room area)	1.0	6.4	6.0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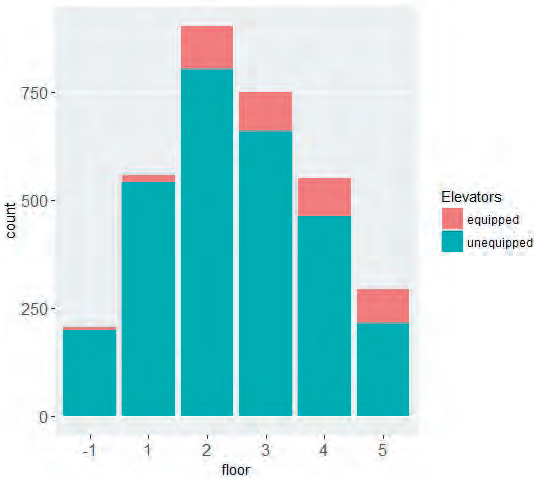


Figure 1. Bar chart for floors and elevators

station is about 649 meters, and the typical property age of MHH is about 15 years. The average unit price of sold MHHs is 6.4 million KRW per room area (m^2), and thus, the total price sold is roughly 345.6 million KRW (6.4 million KRW multiplied by 54 m^2). As indicated in Figure 1, the floor level of MHH goes from the basement to the fifth floor, and units on the second floor are the most common in the MHH sales market. As for the presence of elevators, 12% of the samples (377 out of 3,254 houses) are elevator-equipped MHHs. Finally, Figure 2 shows the administrative map of Seoul with sample locations. The spaces where samples are not distributed are business districts or mountainous ar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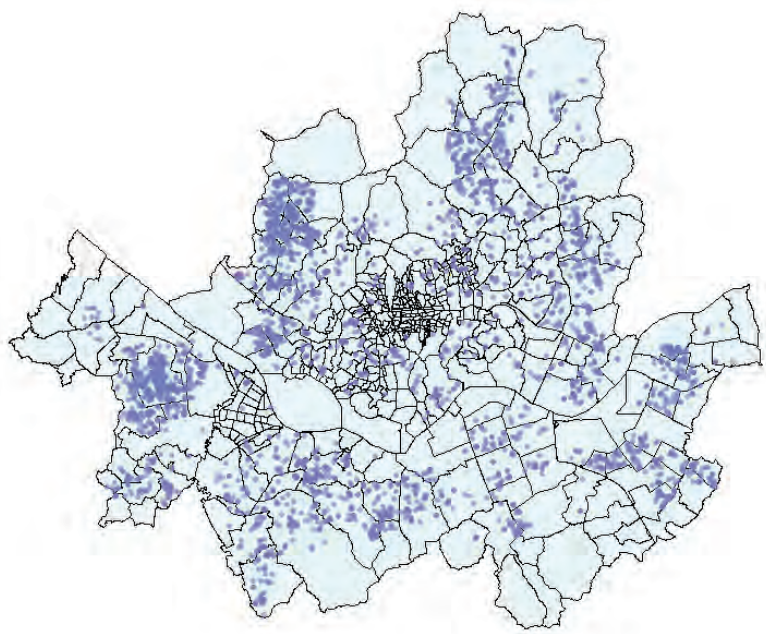


Figure 2. Multi-household house locations (samples)

2) Explanatory variables

Variables affecting the house price could be enumerated endlessly. From the perspective of housing demand, some important variables could include purchaser's income, mortgage interest rate, and credit regulations. For housing supply, land zoning and construction costs could have a strong influence. Therefore, selecting explanatory variables must be a compromise between theory and data availability.

We employ the area of each unit which is referred to as room area (*barea*), the area of the site allocated to the unit (*larea*), the floor on which the unit is located, age of the house, the month on which the unit is sold, a dummy variable of whether an elevator is equipped in the house, and the distance to the nearest subway station as explanatory variables (seven variables total). We believe that we include relevant variables affecting house prices in the model specification under the constraints of data collectability.

3) GAMLSS models

With response vector $\mathbf{Y}$, and sample size n, the linear model is defined as

$$\mathbf{Y}\sim N(\boldsymbol{\mu}, \boldsymbol{\sigma}^2) \qquad (1)$$
$$\boldsymbol{\mu}=\boldsymbol{X\beta}$$

where $\boldsymbol{X}$ is the $n\times p$ design matrix, $\boldsymbol{\beta}$ is the coefficient vector, $\boldsymbol{\mu}$ is the mean vector and $\boldsymbol{\sigma}^2$ is a vector of constant variance.

The generalized linear model (GLM) was introduced by Nelder and Wedderburn (1972), and the normal distribution for the response variable is replaced by the exponential family of distributions (denoted here as D). It includes many important distributions, such as the normal, Poisson, Gamma, inverse Gaussian, etc. The GLM can be written as:

$$\mathbf{Y}\sim D(\boldsymbol{\mu}, \Phi) \qquad (2)$$
$$\boldsymbol{\eta}=g(\boldsymbol{\mu})=\boldsymbol{X\beta}$$

where Φ is the dispersion parameter, $\boldsymbol{\eta}$ is the linear predictor and g(·) is the link function. The normal distribution, used frequently to fit empirical data, might be replaced by more flexible distribution, and in our study is replaced by the exponential Gaussian distribution, which has a characteristic positive skew, and thus, is suitable for modeling the positively skewed data such as property price. The selection of optimal distribution for the response variable from different distributions is explained in section IV.

Smoothing techniques can be incorporated within the GLM framework, resulting in the term generalized additive models (GAM). The GAM can be written as:

$$\mathbf{Y}\sim D(\boldsymbol{\mu}, \Phi) \qquad (3)$$
$$\boldsymbol{\eta}=g(\boldsymbol{\mu})=\boldsymbol{X\beta}+s_1(x_1)+\cdots+s_J(x_J)$$

where s_j is a non-parametric smoothing function applied to explanatory variable x_j, for j=1,…, J. The advantage of the non-parametric smoothing is that the data deter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dictor $\boldsymbol{\eta}=g(\boldsymbol{\mu})$ and the explanatory variables, rather than enforcing a linear relationship. Examples of different smoothers are numerous, and we implement a P-splines smoother in GAM.

Our chosen distribution, the exponential Gaussian distribution, has three parameters: μ, the mean of the distribution; σ, a scale parameter which is related to the variance; and ν, a shape parameter which is related to the skewness of the distribution. Up til now we have modelled only μ as a function of the explanatory variables, but there are occasions in which the assumption of a constant scale parameter is not appropriate; on those occasions, modelling σ as a function of the explanatory variables could be a good option. It is also true of other parameters including ν. With enough data at hand, a model with more flexibility to deal with variance and

skewness would be preferred. Thus, we can now consider a GAMLSS model and model (3) can be extended as follows:

$$\mathbf{Y}\sim D(\boldsymbol{\mu}, \boldsymbol{\sigma}, \boldsymbol{\nu}, \boldsymbol{\tau}) \quad (4)$$
$$\boldsymbol{\eta}_1=g_1(\boldsymbol{\mu})=\boldsymbol{X}_1\boldsymbol{\beta}_1+s_{11}(x_{11})+\cdots+s_{1J_1}(x_{1J_1})$$
$$\boldsymbol{\eta}_2=g_2(\boldsymbol{\sigma})=\boldsymbol{X}_2\boldsymbol{\beta}_2+s_{21}(x_{21})+\cdots+s_{2J_2}(x_{2J_2})$$
$$\boldsymbol{\eta}_3=g_3(\boldsymbol{\nu})=\boldsymbol{X}_3\boldsymbol{\beta}_3+s_{31}(x_{31})+\cdots+s_{3J_3}(x_{3J_3})$$
$$\boldsymbol{\eta}_4=g_4(\boldsymbol{\tau})=\boldsymbol{X}_4\boldsymbol{\beta}_4+s_{41}(x_{41})+\cdots+s_{4J_4}(x_{4J_4})$$

where $D(\boldsymbol{\mu}, \boldsymbol{\sigma}, \boldsymbol{\nu}, \boldsymbol{\tau})$ is a four-parameter distribution and where τ is a shape parameter related to the kurtosis of a distribution. In the case of the exponential Gaussian distribution, there is no parameter τ, and thus it is defined as a three-parameter distribution, $D(\boldsymbol{\mu}, \boldsymbol{\sigma}, \boldsymbol{\nu})$. As for parameter link functions of the exponential Gaussian distribution, the identity function for μ and the log function for σ and ν are generally utilized, and thus we follow this practice in the study.

Spatial phenomena, such as house price, cannot be analyzed accurately without due attention to property location. Identical houses can be sold for different prices depending on their specific locations. Location is the first element that comes into appraiser's mind when valuing properties, though it is frequently ignored or underestimated when modeling the house price. In order to incorporate locational elements into the model specification, we use the strategy employed by De Bastiani *et al*. (2016) in which relevant models for μ and other parameters are selected first without taking into account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data, and then we fit the intrinsic autoregressive model (IAR) for μ. The IAR model is suitable for explaining house prices observed in geographical areas. When we model a house price, we expect that neighboring areas are priced at more similar price levels than areas further away. The IAR model captures this expectation by bringing the fitted prices of neighboring areas closer to each other.

A pure IAR model with no explanatory variable can be written as:

$$\mathbf{y}=\boldsymbol{Z}\boldsymbol{\gamma}+\boldsymbol{\varepsilon} \quad (5)$$

where $\boldsymbol{Z}$ is an incidence matrix (Z_{ji}=1 if data point i belongs to area j and Z_{ji}=0 otherwise), $\boldsymbol{\gamma}$ is a vector of spatial random effects for the areas, and where $\boldsymbol{\gamma}\sim N(\mathbf{0}, \sigma_b^2\boldsymbol{G}^{-1})$ for a precision matrix $\boldsymbol{G}$ and $\boldsymbol{\varepsilon}\sim N(\mathbf{0}, \sigma_e^2\boldsymbol{W}^{-1})$ where $\boldsymbol{W}$ is a diagonal matrix of prior weights (De Bastiani *et al*., 2016). The precision matrix $\boldsymbol{G}$ can be made by using the geographical coordinates of the areas. The effect of the matrix $\boldsymbol{G}$ is to bring fitted values from neighboring areas closer together. Formula (5) is incorporated additionally into the GAMLSS formula (4) to estimate $\boldsymbol{\mu}$, the mean of the distribution (a linear predictor $\boldsymbol{\eta}_1$), more accurately. The spatial random effects $\hat{\boldsymbol{\gamma}}$ can be calculated by using the weighted penalized least square solution

$$\hat{\boldsymbol{\gamma}}=(\boldsymbol{Z}\boldsymbol{W}\boldsymbol{Z}'+\lambda\boldsymbol{G})^{-1}\boldsymbol{Z}'\boldsymbol{W}\boldsymbol{y}, \text{ where } \lambda=\sigma_e^2/\sigma_b^2 \quad (6)$$

For further details, see De Bastiani *et al*. (2016).

4) Fitting algorithms

Rigby and Stasinopoulos (2005) suggested two basic algorithms for fitting GAMLSS. The first, the CG algorithm, is a generalization of the Cole and Green (1992) algorithm, and the other is the RS algorithm, which is a generalization of the algorithm used by Rigby and Stasinopoulos (1996). The RS algorithm is generally faster and far more stable, so it is used in this study to find relevant parameters in the model.

4. Model calibration and the results

1) Model Selection

We start from a simple model; that is, a Gaussian linear model with the seven explanatory variables mentioned above (M1 in Table 2). Then we specify a non-

Gaussian distribution for the response variable. We compare the fitted models with no explanatory variable from different distributions, and the distribution with the lowest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score, in this case the exponential Gaussian distribution, is chosen. We specify the exponential Gaussian distribution with the same seven explanatory variables and the fitted model is notated as M2 in Table 2. We refine M2 by introducing a non-parametric smoothing function applied to explanatory variables (M3). Up til M3, we have modelled only μ as a function of explanatory variables, but other distribution parameters such as a scale σ and a shape ν can also be modelled efficiently under the framework of GAMLSS. Thus, we can now consider a full GAMLSS model, M4. And finally, we arrive at M5 in which the spatial autocorrelation is taken into account additionally. The response variable is the unit price (million KRW per room area), and all the candidate models are defined by the same seven explanatory variables.

The models are fitted by the RS algorithm, and we choose the generalized R^2 and the AIC as model selection measures. The generalized R^2 is defined as:

$$R^2=1-\left(\frac{L(0)}{L(\text{fitted})}\right)^{\frac{2}{n}} \quad (7)$$

where L(0) is the null model (only an intercept is included in the model) and L(fitted) is the current model. A model with the highest R^2 is usually chosen as a better model. Models can also be compared by selecting the model with the lowest generalized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GAIC=$-2\hat{l}$+k·df, where $\hat{l}$ is the fitted log-likelihood function, df is the effective degrees of freedom used in the fitted model, and k is a required penalty, e.g. k=2 for the AIC. Table 2 shows the values of the generalized R^2 and AIC for each model.

As we go from the simple model to the spatial GAMLSS model, the generalized R^2 goes up, and AIC values continue to drop. This is demonstrated visually in Figure 3 where the goodness of the fit improves as it goes from M1 to M5. Therefore, we choose M5 as our final model, the specifications of which are provided in formula (4) to (6) of the section III.

As indicated in the two bottom panels of Figure 3, fitted values in M5 do not show a noticeable divergence from observed values, and the residuals of M5 appear to have no striking pattern. Therefore, we believe that we have no serious problem in leading a discussion based on the results of our final model.

2) Model results

We present in Table 3 the parameter estimates resulting from the final model, jointly modeling the location (μ), variance (σ) and skewness (ν), as well as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data.

The response variable (the unit price of MHH) follows the exponential Gaussian distribution with parameters μ, σ and ν. Parameter link functions for μ, σ, and ν are iden-

Table 2. Model selection and criteria

	Model name	Response variable distribution	Generalized R^2	AIC
M1	Linear model	Gaussian	0.32	11,234
M2	Generalized linear model	Exponential Gaussian	0.38	9,768
M3	Generalized additive model	Exponential Gaussian	0.45	9,389
M4	Location, scale and shape additive model(GAMLSS)	Exponential Gaussian	0.47	9,333
M5	Spatial GAMLSS	Exponential Gaussian	0.80	6,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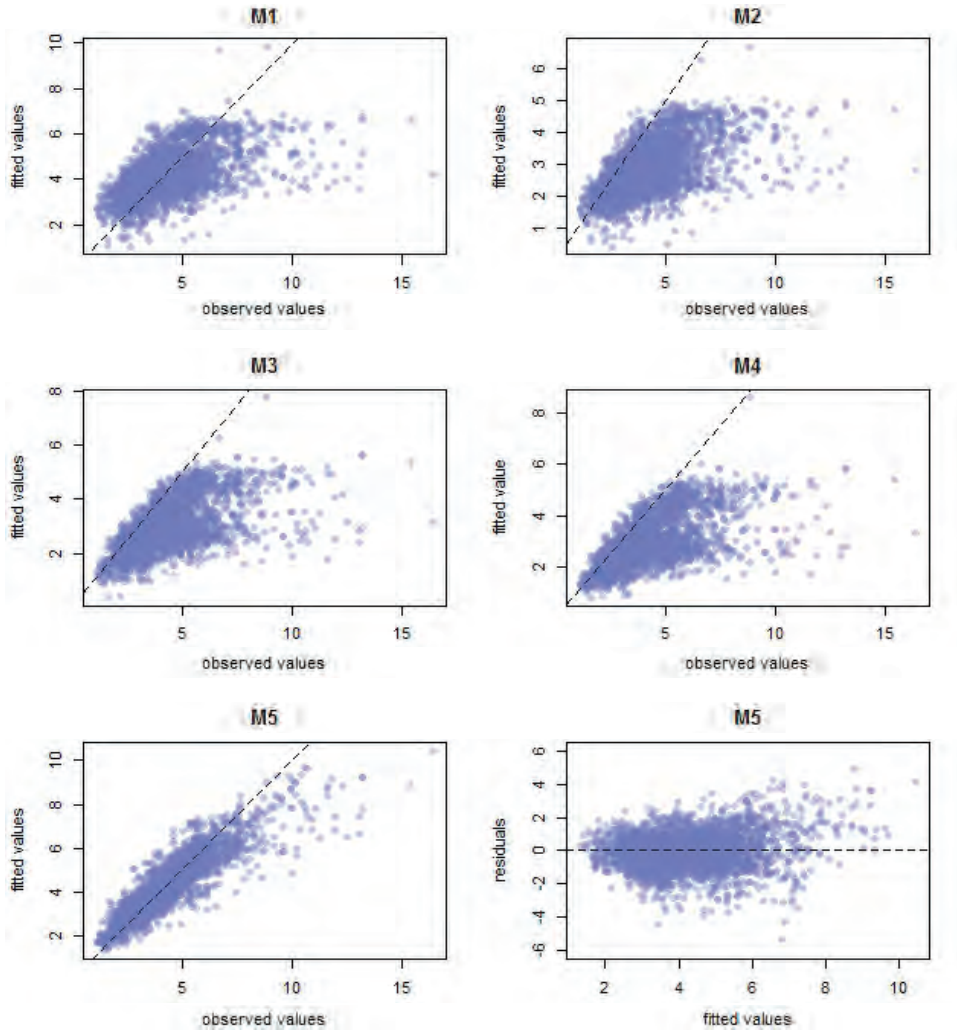


Figure 3. The goodness of the fit from M1 to M5

tity, log, and log, respectively, and hence the final model can be represented as

$$\mu=\beta_0+pb(barea)+\beta_1 larea+pb(floor)+pb(age)+\beta_2 month+\beta_3 elevator+\beta_4 dist_to_subway$$
$$\log(\sigma)=\gamma_0+\gamma_1 barea+\gamma_2 dist_to_subway$$
$$\log(\nu)=\delta_0+\delta_1 age+\delta_2 dist_to_subway$$

The μ coefficients depend on seven explanatory variables ranging from room area (*barea*) to distance to the nearest subway station, and the *pb* in front of *barea*, *floor* and *age* represents a P-splines smoother. These smoothing terms were employed to capture a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response variable and the explanatory variables, and their validity and meaning will be discussed in the next section. Contrary to the μ coefficients, the σ coefficients are explained by only two explanatory variables – the room area (*barea*) and the distance to the nearest subway station – to relax the assumption of constant scale (variance). The ν coefficients are modelled with the help of the age of the house and the distance to the nearest subway station to describe the skewness of the distribution.

Table 3. Results from the final model

	Estimate	Standard error	t-value	p-value
		μ coefficients		
Intercept	5.0585	0.0424	119.4	0.0000
pb(barea)	-0.0365	0.0005	-66.4	0.0000
larea	0.0214	0.0006	36.0	0.0000
pb(floor)	0.0554	0.0071	7.8	0.0000
pb(age)	-0.0656	0.0012	-53.5	0.0000
month	0.0126	0.0026	4.8	0.0000
elevator	0.3611	0.0253	14.3	0.0000
dist_to_subway	-0.0003	0.0000	-16.7	0.0000
		σ coefficients		
Intercept	-0.0477	0.0462	-1.0	0.3019
barea	-0.0153	0.0005	-30.4	0.0000
dist_to_subway	-0.0001	0.0000	-2.1	0.0403
		ν coefficients		
Intercept	-0.7370	0.0392	-18.8	0.0000
age	0.0166	0.0016	10.4	0.0000
dist_to_subway	-0.0003	0.0000	-6.6	0.0000

5. Discussion and conclusion

1) Linear effect

As shown in Table 3, the intercept for μ is 5.0585, which can be roughly interpreted as the average unit price sold of MHH in Seoul being about 5 million KRW. The coefficient for the allocated site area (larea) is estimated at 0.0214, which means that as the site area increases by one square meter, the unit price increases by about 0.02 million KRW. The coefficient for the month is estimated at 0.0126, indicating that there existed an upward trend in the sales price of MHH in 2015. The coefficient for the presence of an elevator is 0.3611, denoting that the MHH equipped with an elevator commands 0.36 million KRW premium for the unit price. As for the distance to the nearest subway station, the coefficient is estimated at -0.0003, meaning that the unit price decreases by about 0.3 million KRW as the distance to the nearest subway station increases by about one kilometer (1,000 meters).

2) Nonlinear effect

We employ a P-splines smoother for some of the explanatory variables (the room area, the floor on which a unit is located, and the age of the house) in describing the location parameter μ. We utilize these three smoothing terms to capture a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 price and the given explanatory variables. Degrees of freedom for a smoothing term represent a level of nonlinearity in relationship, and those degrees of freedom for *pb*(*barea*), *pb*(*floor*) and *pb*(*age*) are 12.9, 5.4, and 9.4, respectively.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is relatively linear, then degrees of freedom for a smoothing term are close to the value of 1.0; otherwise, degrees of freedom increase as the relationship becomes more

nonlinear. Thus, degrees of freedom close to 1.0 indicate that the model does not need a smoothing term to reflect a nonlinear relationship, and the linear effect is enough to model the response variable. In our study, degrees of freedom for the three variables are high enough, and hence it is essential to employ smoothing terms for modeling the location parameter μ.

Figure 4 shows relationships between the unit price and the seven explanatory variables used for the location parameter μ, and especially, the nonlinear effects for the three smoothing terms are apparent. As shown in the first panel of Figure 4, the unit price shows a downward trend as the room area *pb*(*barea*) goes from 0 m^2 to 200 m^2, but it rises abruptly after 200 m^2. Diminishing unit prices for increasingly larger houses are a well-known phenomena in the property sales market, and we can see that the unit price shows a decreasing pattern until the house reaches a room area of 200 m^2. When an MHH's room area is over 200 m^2 in Seoul,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MHH is not an ordinary house but rather a luxurious one, and hence the unit price jumps up sharply after an MHH's room area surpasses 200 m^2.

The third panel of Figure 4 shows a nonlinear effect of the floor on the unit price. A unit located at the bas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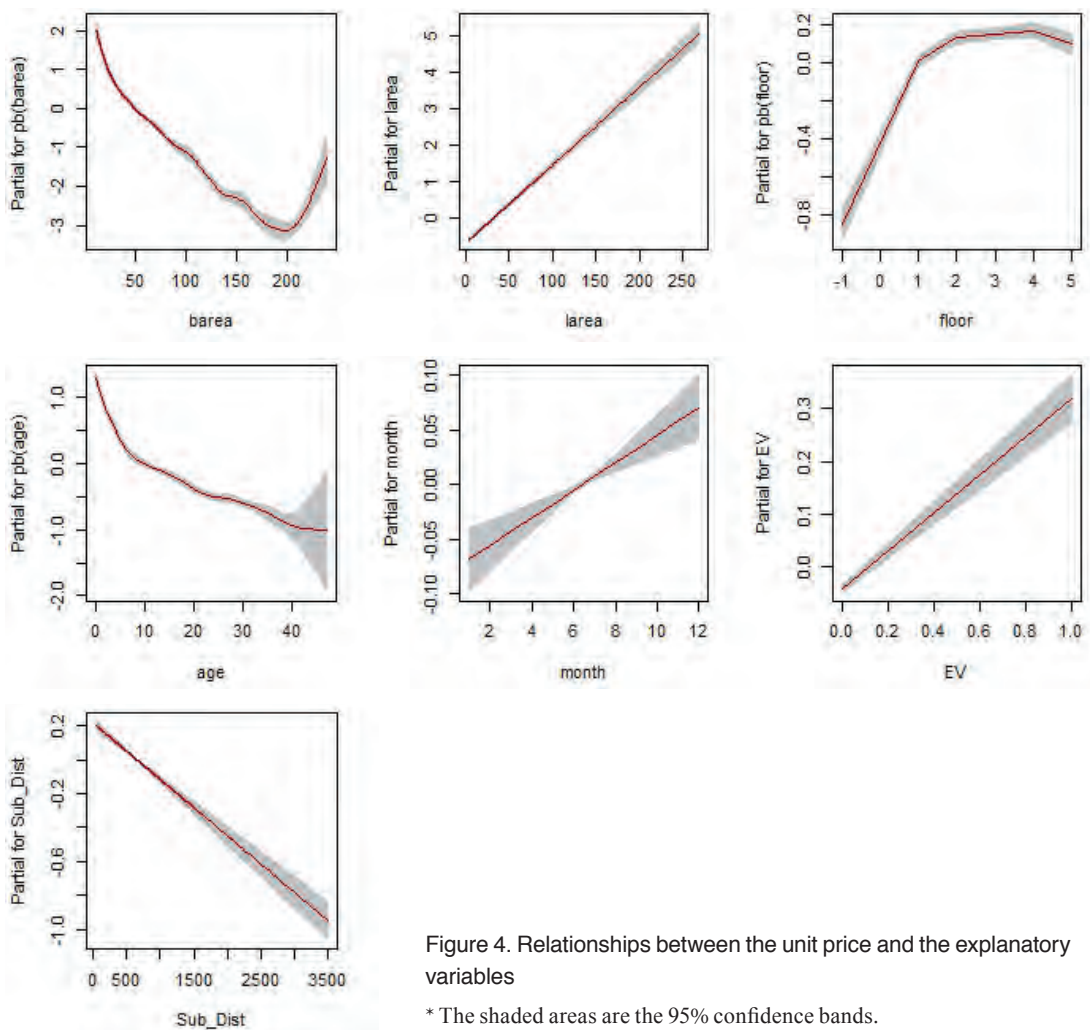


Figure 4. Relationships between the unit price and the explanatory variables

* The shaded areas are the 95% confidence bands.

generates a considerable discount in the sales price, and a unit on the first floor shows a slight discount in sales price compared to those at the higher floors than the first floor. There is little variation in the sales price among MHHs located between the second and fifth floor, though the units on the fifth floor show a slight downward trend. We suspect that this trend at the fifth floor might be due to 5-story MHHs that lack elevators.

The fourth panel of Figure 4 indicates a nonlinear effect of the house age on unit price. It shows an accelerating depreciation in sales price over the first 10 years, and then a relatively gentle downward trend after that. It denotes that MHH experiences a drastic decrease in market value over the first period since construction, and a gradual decline in value after about 10 years. In Figure 4, the rest panels not mentioned up til now show a linear effect of each explanatory variable on the unit price.

3) Spatial effect for μ

We added a spatial effect into the final model (M5) for estimating μ, the mean of the response variable distribution. As indicated in formula (5) and (6), the pure error effect is notated as σ_e, and estimated at 32.38 in our analysis. The spatial random effect is represented as σ_b, and estimated at 1.07. The spatial effect might be interpreted more intuitively by visualizing the fitted spatial effect, rather than inspecting random effect variances. The fitted spatial effect for μ in the final model is demonstrated visually in Figure 5. The southeastern region of Seoul shows relatively high values of the fitted spatial effect, which is consistent with a general expectation in the property sales market, since those areas correspond with *Three Gangnam districts*, an area of real estate known to be extremely expensive.

GAMLSS is well known for its capacity of not on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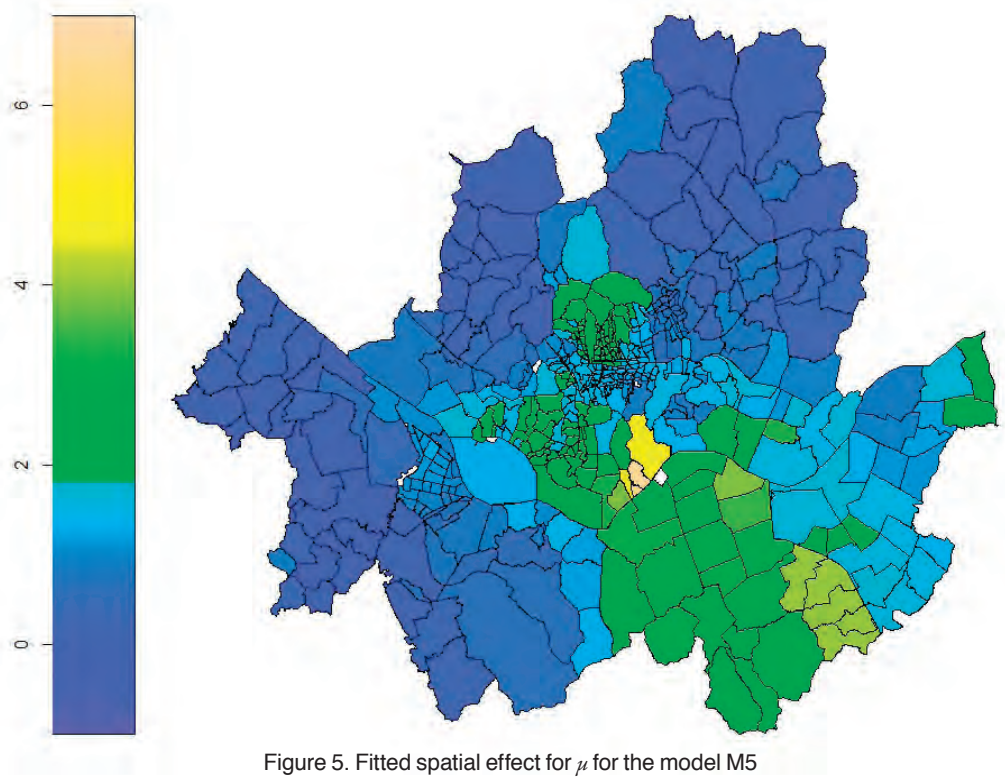


Figure 5. Fitted spatial effect for μ for the model M5

modeling the expected mean but also every distribution parameter (ex. scale, skewness and kurtosis) to a set of explanatory variables. However, Figure 5 showed that considerable part of property prices still remain unexplained even after modeling all the distribution parameters. The remaining component is the spatial effect, and this was efficiently captured in the spatial GAMLL model.

4) Concluding remarks

Since MHH is an emerging property type for the application of the automated valuation method in South Korea, we chose MHH as a target property for applying the hedonic price model. The hedonic price model is a common tool in estimating the property price, but it has limitations such as the lack of theoretical background for choosing a functional form, the assumption of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nd little account of spatial autocorrelation in model building. We suggested an alternative approach, a spatial GAMLSS model, to overcome these deficiencies in the hedonic price model fitted by regression analysis.

Our study area is Seoul and the samples obtained are 3,254 MHHs sold in 2015. We employed the room area, the allocated site area, the floor, the age of the house, the month on which the house is sold, the presence of an elevator, and the distance to the nearest subway station as the explanatory variables. We specified a GAMLSS model with the exponential Gaussian distribution for the response variable. The exponential Gaussian distribution used has three parameters μ, σ and ν, and each of them was modelled as a function of some or all the explanatory variables given above. We also utilized a P-splines smoother for some of the explanatory variables including the room area, the floor, and the age of the house. Finally we incorporated the IAR structure into our GAMLSS model specification in order to take into account the spatial autocorrelation inherent in the house price. Using the generalized R^2 and AIC values, we confirmed that all the measures we took served to improve the model fit to the data. The interpretation of the effects of the explanatory variables on unit price were provided in terms of three aspects: linear, nonlinear, and spatial effect.

This study examined the prices of MHH in Seoul, and three contributions are worth noting. First, we showed that a non-normal distribution could give a better fit to the data, indicating that choosing an optimal functional form in the hedonic price model can be a quantified task free of subjective judgment. Second, we graphically illustrated the nonlinear effects of the explanatory variables on the price of MHH, and thus suggested that capturing the nonlinear relationships in model building could give rise to a substantial benefit in the model fit results. Third, we included the IAR structure in a GAMLSS model specification, and thus proved that accounting for the spatial effect is an essential step in estimating the house price. We hope the spatial GAMLSS modeling approach provided in this study will be accepted on a wider scope, including property assessment and collateral valuation sectors, in the near future.

Note

1) The population of MHHs are 815,552 units as of 2016, and the 3,254 samples represent about 0.4% of the population. The data from the RTMS were matched with the building registry data to obtain additional information such as elevators, and illogical records (ex. an MHH unit located on the 10th floor) were removed.

References

Basu, S. and Thibodeau, T. G., 1998, Analysis of spatial autocorrelation in house prices, *The Journal of Real Estate Finance and Economics*, 17(1), 61-85.

Cajias, M., 2018, Is there room for another hedonic model?

The advantages of the GAMLSS approach in real estate research, *Journal of European Real Estate Research*, 11(2), 204-245.

Cole, T. J. and Green, P. J., 1992, Smoothing reference centile curves: the LMS method and penalized likelihood, *Statistics in medicine*, 11(10), 1305-1319.

De Bastiani, F., Rigby, R. A., Stasinopoulous, D. M., Cysneiros, A. H. and Uribe-Opazo, M. A., 2016, Gaussian Markov random field spatial models in GAMLSS.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1-19.

De Castro, M., Cancho, V. G. and Rodrigues, J., 2010, A hands-on approach for fitting long-term survival models under the GAMLSS framework, *Computer methods and programs in biomedicine*, *97*(2), 168-177.

Florencio, L., Cribari-Neto, F. and Ospina, R., 2012, Real estate appraisal of land lots using GAMLSS models, *Chilean Journal of Statistics*, 3(1), 75-91.

Gilchrist, R., Kamara, A. and Rudge, J., 2009, An insurance type model for the health cost of cold housing: an application of GAMLSS, *REVSTAT – Statistical Journal*, 7(1), 55-66.

Halvorsen, R. and Pollakowski, H. O., 1981, Choice of functional form for hedonic price equations, *Journal of urban economics*, 10(1), 37-49.

Hu, W., Swanson, B. A. and Heller, G. Z., 2015, A statistical method for the analysis of speech intelligibility tests, *PloS one*, *10*(7), e0132409.

Hudson, I. L., Kim, S. W. and Keatley, M. R., 2010, Climatic influences on the flowering phenology of four Eucalypts: a GAMLSS approach, In *Phenological Research* (pp. 209-228). Springer Netherlands.

Kiffner, C., Lödige, C., Alings, M., Vor, T. and Rühe, F., 2011, Body-mass or sex-biased tick parasitism in roe deer (Capreolus capreolus)? A GAMLSS approach, *Medical and veterinary entomology*, 25(1), 39-45.

Korea, S., 2016,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www.kosis.kr.

Mei, Y., Sohngen, B. and Babb, T., 2018, Valuing urban wetland quality with hedonic price model, *Ecological Indicators*, *84*, 535-545.

Michelson, H. and Tully, K., 2018, The Millennium Villages Project and Local Land Values: Using Hedonic Pricing Methods to Evaluate Development Projects, *World Development*, *101*, 377-387.

Nelder, J. A. and Wedderburn, R. W. M., 1972, Generalized linear model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135: 370-384.

Rigby, R. A. and Stasinopoulos, D. M., 1996, A semi-parametric additive model for variance heterogeneity, *Statistics and Computing*, *6*(1), 57-65.

Rigby, R. A. and Stasinopoulos, D. M., 2005, Generalized additive models for location, scale and shape,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C (Applied Statistics)*, *54*(3), 507-554.

Rigby, R. A. and Stasinopoulos, D. M., 2006, Using the Box-Cox t distribution in GAMLSS to model skewness and kurtosis, *Statistical Modelling*, *6*(3), 209-229.

Rosen, S., 1974, Hedonic prices and implicit markets: product differentiation in pure competi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1), 34-55.

Tu, Y., Sun, H. and Yu, S. M., 2007, Spatial autocorrelations and urban housing market segmentation, *The Journal of Real Estate Finance and Economics*, 34(3), 385-406.

Zhang, D. D., Yan, D. H., Wang, Y. C., Lu, F. and Liu, S. H., 2015, GAMLSS-based nonstationary modeling of extreme precipitation in Beijing–Tianjin–Hebei region of China, *Natural Hazards*, 77(2), 1037-1053.

Correspondence: Key-Ho Park,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e-mail: khp@snu.ac.kr, phone: +82-2-880-6453)

교신: 박기호,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이메일: khp@snu.ac.kr, 전화: 02-880-6453)

Received February 15, 2019
Revised April 9, 2019
Accepted April 15, 2019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 34대 임원(2019.1.1 ~ 2020.12.31)

회 장	이용우(국토연구원)		
부 회 장	최재헌(건국대)	강병수(부산남고)	이영아(대구대)
감 사	이정훈(경기연구원)	정희선(상명대)	
지리연구소장	김용창(서울대)		
지리교육특별위원장	정성훈(강원대)		
지리올림피아드추진위원장	이영아(대구대))		
지리학발전위원장	남기범(서울시립대)	박정재(서울대)	
총무이사	진종헌(공주대)	최진무(경희대)	이정섭(경상대)
학술이사	이승철(동국대)	전병운(경북대)	김화환(전남대)
국제이사	정현주(서울대)	박선엽(부산대)	이종호(경상대)
홍보이사	김영훈(한국교원대)	박지훈(공주대)	신혜란(서울대)
편집이사	이자원(성신여대)	오충원(남서울대)	임은진(공주대)
이 사	강영옥(이화여대)	구동회(부산대)	구자용(상명대)
	권정화(한국교원대)	기근도(경상대)	김선기(㈜푸른길)
	김선배(산업연구원)	김오진(제주 추자중)	김종근(동북아역사재단)
	김진석(전북발전연구원)	김태호(제주대)	노영순(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연택(충북대)	문미성(경기연구원)	박숙희(한국여성지리학자회)
	박지만(국토정보공사)	백선혜(서울연구원)	서봉만(인천연구원)
	안영진(전남대)	오정준(대구대)	윤영수(백악미술관장)
	윤정현(태릉고)	이간용(공주교대)	이경한(전주교대)
	이상율(대구가톨릭대)	이상일(서울대)	이승욱(카이스트)
	이용균(전남대)	이우평(인천 부광고)	이의한(강원대)
	이지선(한국교통연구원)	임은선(국토연구원)	장영진(한국교원대)
	정치영(한국학중앙연구원)	조남제(옥센)	조대헌(가톨릭관동대)
	조성욱(전북대)	조철기(경북대)	조혜영(한국산업단지공단)
	최영은(건국대)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홍금수(고려대)
	황상일(경북대)		
고 문	권용우(전 성신여대)	권혁재(전 고려대)	김일기(전 한국교원대)
	류우익(전 서울대)	박삼옥(전 서울대)	박영한(전 서울대)
	박찬석(전 경북대)	서찬기(전 경북대)	손 일(전 부산대)
	양보경(성신여대)	이기석(전 서울대)	이민부(한국교원대)
	이승호(건국대)	이정록(전남대)	이철우(경북대)
	이현영(전 건국대)	장보웅(전 전남대)	최형규(성지문화사)
	허우긍(전 서울대)	형기주(전 동국대)	황재기(전 서울대)
사 무 장	황선영		

• 이 학술지는 2018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학회비 납부 및 회원 가입 안내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비납부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은행 : 841-25-0006-810 [예금주 : (사)대한지리학회]

본 학회의 회원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한지리학회 사무실(geography77@hanmail.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위원회

위 원 장	임석회(대구대)		
부위원장	이자원(성신여대)	오충원(남서울대)	임은진(공주대)
	류호상(전북대)		
편집위원	구동회(부산대)	김숙진(건국대)	김영훈(교원대)
	백선혜(서울연구원)	신혜란(서울대)	이광률(경북대)
	이용균(전남대)	이정훈(경기연구원)	장동호(공주대)
	정성훈(강원대)	정현주(서울대)	최광용(제주대)
	홍금수(고려대)	Heejun Chang(Portland State University)	
	Robert Hassink(Kiel University, Germany)		
	Jeong Chang Seong(University of West Georgia)		

대한지리학회지 제54권 제2호(2019년 4월 30일)

발 행 인 : 이용우

발 행 처 :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

㉾ 04376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213-12, 1413호

전화 : 02) 875-1463, 팩스 : 02) 876-2853

e-mail: geography77@hanmail.net

http://www.kgeography.or.kr

조판·인쇄 : (주)푸른길

전화 : 02) 6942-9570~2, 523-2907 팩스 : 02) 523-2951

Copyright ⓒ 2019,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

본지에 게재된 논문, 기사, 도표 등의 저작권은 본 학회가 갖는다.